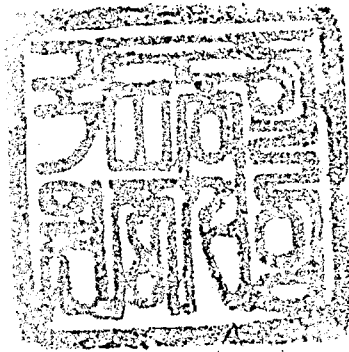


북한 체제 연구

연구 책임 : 崔 明

(서울대 교수,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장)



國土統一院

차 례

제 1 부 체제와 정치 문화

1. 북한 헌법과 통치 구조 최송화 7
2. 정권의 수립과 변천 과정 서대숙 37
3. 주체 사상의 형성과 사상 체계 분석 고병철 65
4. 정치 문화와 정치 사회화 도흥렬 89

제 2 부 사회주의 경제 건설

1.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계획 연하청 119
2.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와 '딜레마' 김세원 147
3. 북한 주민의 경제 생활 강광하 175
4.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북한의 반응 하용출 210

제 3 부 대외 관계와 정책

1. 북한의 외교 정책 전인영 237
2. 북한의 군사 사상과 정책 이석호 296
3. 북한의 통일 정책 김세균 322

제1부 정치 체제와 정치 문화

* 본문 중의 표는 각 장의 끝에 두었음.

1. 북한 헌법과 통치 구조

최송화(서울대 공법학과 교수)

1. 서론

북한은 1948년 9월 8일에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을 채택하여, 다음 날인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언하였으니 그것은 동년 7월 17일 대한 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8월 15일 대한 민국 정부가 수립된 며칠 후의 일이었다. 이로써 같은 민족이 국토를 남북으로 분단 점유하여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면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한민족의 현대사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고찰하려고 하는 북한 헌법은 1972년 12월 28일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 대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헌법은 한 국가의 통치 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모든 법질서상의 최고 규범으로 다른 법규범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근거가 된다.¹⁾ 북한 헌법의 경우에도 이것은 예외가 아니며, 총 11장, 149조의 조문 안에 정치·경제·문화 등의 기본 원리,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의 통치 기관으로서 최고 인민 회의·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주석·중앙 인민 위원회·정무원·지방 기관 및 재판소와 검찰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²⁾

그런데 현재 지구상에는 수많은 국가가 존재하고 있으며, 따라서 헌법도 2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많은 헌법은 그 헌법의 제정자, 존재

적 성격 및 사회 경제 체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된다.

먼저, 헌법의 제정자를 기준으로 볼 때 북한 헌법은 국민에 의해 제정된 민정 헌법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때의 ‘국민’이라는 개념은 매우 넓기 때문에 그 속에는 시민 계급이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노동자 계급이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경우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³⁾ 다음에, 헌법을 존재론적으로 분류할 때에는 규범적인 헌법, 명목적인 헌법, 그리고 장식적인 헌법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장식적인 헌법이란 “완전히 적용되고 또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헌법 규범의 내용이 사실상의 권력자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서 현재의 정치적 권력 상황을 그대로 문서화한 것”⁴⁾으로 북한 헌법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 이외도 정부 형태나 제도에 따라서 다양한 분류 방법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북한 헌법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국가 형태 또는 사회·경제 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크게 자본주의적 헌법과 사회주의적 헌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⁵⁾ 북한 헌법은 사회주의적 헌법에 속한다.⁶⁾ 이 사회주의적 헌법의 특징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체제를 부정하고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중심으로 하는 데 있다. 앞으로 북한 헌법의 상세한 고찰을 통하여 잘 드러나겠지만 이 점에서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 유의하면서 앞으로 북한 헌법이 속하고 있는 사회주의 헌법과 법에 대한 이론, 북한 헌법의 변화와 그 특징, 북한 헌법의 기본 원리 그리고 북한 헌법상의 통치 구조를 차례로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북한의 헌법과 통치 구조에 대한 고찰은 그들의 헌법 조문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다. 통치 구조에 대한 완전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헌법상의 조직과 권한뿐만이 아니라 실제 운용과 정치 행태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하겠으나, 이 글에서의 연구는 주로 북한 헌법의 해석을 위주로 했음을 미리 밝혀둔다.⁷⁾

2. 사회주의 법이론과 북한 헌법

앞에서 우리가 헌법을 크게 자본주의 체제의 헌법과 사회주의 체제의 헌법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을 때 북한 헌법은 그 내용이나 이념으로 미루어 보아 사회주의 헌법 유형에 속하였다.

사회주의 법이론은 마르크스-레닌(Marx-Lenin)주의로부터 연원하며 이것이 나중에 스탈린에 의하여 변화되었는데, 북한 헌법은 성립 당시에 이것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법을 보는 시각은 계급 도구주의와 법 고사설(枯死說)로 요약된다.

먼저, 마르크스의 법이론의 첫번째 특징인 계급 도구주의 법이론에는 온건론과 강경론이 있는데, 온건론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법체계는 기존의 재산 소유 형식을 비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시킴으로써 현행 생산 양식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보다 강경한 입장에서는 법의 도구적 성질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법체계는 지배 계급의 독점적인 통제 아래 있으며, 또한 지배 계급은 계획적으로 법을 사용함으로써 종속 계급을 희생시켜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주장한다. 강경론이 모든 종류의 법을 대중에게 자기 의지를 강요하는 지배 계급의 모델에 끼워 맞추는 데 비해 온건론은 지배 계급의 직접적인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고려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두 가지 입장 모두가 법의 강제적 성격을 인정하는 데는 일치한다.⁸⁾

마르크스주의 법이론의 두번째 특징인 법 고사설은 엥겔스(F. Engels)의 '반뉘링론(Anti-Dühring)'에서 나타난다. 엥겔스는 부르주아 국가에 관하여 그것은 두 가지 기능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즉, 국가는 단순히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여기에는 반드시 계급 억압의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가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장악하면 국가는 이제 계급 억압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생산과 재화의 분배를 지도함으로써 계획 경제를 관리

하는 역할을 한다. 즉, 엥겔스는 부르주아적 국가는 그것이 담당하는 제1차적 기능이 불필요하게 됨으로써 고사하고 만다는 결론을 내린다.⁹⁾

한편 레닌(Lenin)은 국가와 법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재래의 부르주아 국가와 폭력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국가를 구별하고, 마르크시즘의 국가 소멸론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 국가이며 재래의 부르주아 국가는 폭력 혁명으로 타도될 대상이라고 하였다.¹⁰⁾ 레닌은 또한 공산주의 발전 단계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공산주의가 완성되는 것은 후기인데, 전기에는 그 준비의 단계로서 법이 발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이 때 법은 세 가지 기능을 가진다. 첫째로 법은 이미 타도된 유산 계급의 반항을 억압, 제거하는 진압 기능을 가지며, 둘째로 새로운 공산주의적 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경제 조직자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셋째로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하등의 법적 강제를 받지 않고서도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형의 인간을 만들어 내는 인간 개조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레닌의 법이론을 요약하자면, 공산주의에 도달하기까지 법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유효하며 그 기능은 진압적, 경제적, 교육적인 측면의 세 가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스탈린(Stalin)은 사회주의 국가는 소멸하는 순간까지 더욱 강고해지는 강력한 국가 체제를 지닌다고 하면서, 레닌의 과도기 국가와는 다르게 설명한다. 즉, 그에 따르면 공산주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회 국가는 새로운 생산 관계와 그 위에 기초를 두고 있는 무산 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부 구조이기 때문에 그 힘은 강력해야만 하며, 특히 '자본주의의 포위' 아래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포위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는 모든 반발 세력을 진압하고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국가는 불가결하다는 것이다.¹¹⁾

그런데 북한이 성립할 당시의 한 북한 법학자는 헌법의 본질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북한 헌법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¹²⁾

헌법과 그 본질적 구성요소가 무엇인가에 관하여서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다. 그러나 국가에 관한 부르주아 이론이 헌법과 그 본질적구성요소에 대한 과학적

이것도 정확한 개념규정을 내리지 못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원래 헌법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constatuere*에서 온것으로 《창설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결국 국가를 창설하는것을 말한다.

그리하여 통상 헌법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기본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어쨌든 레닌이 지적한 바와도 같이 헌법은 계급투쟁에 있어서 계급간에 존재하는 현실상의 상호관계를 표현한 법임에 틀림이 없는것이다. 레닌의 위대한 업적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헌법의 현실적인 계급적특성을 연구하여 이를 명백히 한데에 있다.

또한 김일성은 헌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¹³⁾

오늘 우리가 요구하고있는 법은 어떤 법인가?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적경제제도에서 살고 있으며 노동자, 농민, 기타 광범한 근로인민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지주, 자본가들의 반혁명적반항을 진압하는 인민정권하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이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전취물을 수호하는 무기로 되어야 하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로 되어야 할것은 명백하다.

사회주의권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헌법은 1918년 7월의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헌법’을 든다. 그러나 부르주아지의 완전한 억압,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폐지 및 계급의 차별도, 그로 인한 국가의 강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주의의 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빈농을 포함한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의 독재를 확립(동 헌법 제9조에서)하는데 목표를 두었던 이 헌법은 내란의 와중에서 채택된 혁명적 과도기의 정치 체제에 상응한 것으로서, 곧 1924년 1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연방의 성립에 의한 연방과 구성 공화국 사이의 권한에 관한 윤곽을 제시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다음에 1936년에는 사회주의 헌법으로서의 ‘스탈린 헌법’이 제정되고, 이것이 1977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¹⁴⁾ 또한 중국에서는 1954년의 헌법이 세 차례의 개정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고, 기타 사회주의 헌법으로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루마니아, 동독, 불가리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알바니아, 베트남, 몽고, 쿠바, 캄푸치아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 헌법은 관점에 따라서 그 유형을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겠으나 사회주의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보통 인민 민주주의 헌법, 사회주의 헌법, 그리고 발전된 사회주의 헌법으로 나눈다.¹⁵⁾ 먼저 인민 민주주의 헌법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 단계인 과도기의 헌법으로 사회주의로의 지향을 나타내는 것이며, 다음에 사회주의 헌법은 인민 민주주의 헌법이 발전한 것으로 자본주의적 착취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자 계급이 국가의 전권력을 장악하여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에 성공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이를 유지·강화하는 것이다. 1972년의 북한 헌법도 이 유형에 속한다. 발전된 사회주의 헌법은 성숙한 사회주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1977년의 소련 헌법이 대표적이다.

사회주의 발전 단계에 따르는 헌법 유형의 변화는 동시에 헌법 이론의 변화를 수반한다. 처음의 공산주의 헌법 이론에 의하면 헌법이란 강령적 의미를 지니기보다는 국가 내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질서를 공식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의 헌법에 있어서는 소련의 헌법은 국가 형태의 미래 발전을 보장한다는 점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기술함으로써¹⁶⁾ 종래의 이론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서의 헌법에 관한 이론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헌법의 창조적 역할로서 이른바 조직 동원적, 교양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헌법의 단순한 체제의 반영이라는 입장에서 한 걸음 나아간 입장을 보여 준다.¹⁷⁾ 어쨌든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법이란 사회의 물질적 생활 조건에 기초하여 근로 계급의 이익을 표현하는 것이자 또한 국가의 의사이기도 하다. 법의 목적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나아감에 있어 유리한 정치적 조건을 제공함에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헌법에 대한 이론도 결국은 근로 계급의 이익을 표현하는 최고의 법체계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북한 헌법의 변화와 그 특징

해방 후 북한에서 전국적인 지배력을 가진 통치 기구가 창설된 것은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조직과 함께이다. 김일성이 위원장이 된 이 위원회의 과제는 친일적이며 반민주적 요소를 내포한 지방행정 기구의 숙청, 산업과 무역, 그리고 교통의 정상화 회복, 재정 제도의 개혁, 수공업의 발전 강화, 노동 조합 운동의 활성화와 공장 위원회의 창설, 교육 제도의 개선, 반일적이고도 진정한 민주 정신을 인민들 사이에 함양하는 교양 교육의 확장 등이었다.¹⁸⁾

이러한 임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하여 김일성은 사회 개혁을 시작하도록 고안된 이른바 ‘20개 정강’을 1946년 3월 23일에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하루 8시간의 노동과 고정된 최저 임금,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고용 금지, 완전한 남녀 평등의 보장, 강제 결혼 및 축첩의 금지, 전반적인 의무 교육, 모든 정치적 지위에 대한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자유 선거, 대기업 및 은행, 광산 그리고 산림의 국유화, 일본인의 재산과 관개 시설의 몰수, 과거에 일본인 매국노 등 기타 제거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속하였던 토지의 분배 등이 규정되었다.¹⁹⁾ 이러한 규정들을 보면 자유주의 헌법에서의 국민의 기본권과 경제 질서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항을 망라한 것으로 가히 헌법적인 내용을 가진 것이다. 그들도 이 20개 정강이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분야에서 모든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보장하는 민주 전선에 기초를 두고 있는 동시에 한국민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민주 전선을 명백히 설명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래서 강령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헌법 이전에 토지 개혁에 관한 법령,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 법령, 중요 산업 국유화 법령 등이 바로 이 강령에 기초하여 제정·공포된 것이다.

초기의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는 1947년 북조선 인민 위원회로 계승된다. 여기에서 헌법 초안 작성을 위한 ‘31인 위원회’가 구성되고, 북한의 민주 개혁을 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한반도 전체에 적용되는 헌법

의 기초라는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하여 31인 위원회가 작성한 헌법 초안은 인민 전체의 토론에 부쳐진 끝에 일부 수정되며, 결국 제1기 제1차 조선 최고 인민 회의에서 채택된다. 이 회의의 ‘의의와 성과’에 대하여 <조선중앙년감>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²⁰⁾

회의에서는 헌법승인과 그 실시에 관한 결정이 승인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구성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

인민공화국의 창건은 남조선 예속을 기도하는 미제식민지정책과 미국관리하의 괴뢰정권(대한민국을 지칭한 것임)을 분쇄할 담보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을 제외한 아세아 대륙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국가로 되었다.

이 헌법에서는 나라의 이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하였으며(1948년 북한 헌법 제1조), 주권의 소재는 인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동 제2조) 주권의 대표 기관은 ‘리인민위원회’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 인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선거하며, 선거 방법은 공민의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한 비밀 투표이다(동 제3조).²¹⁾

통치 구조는 당시 존재하던 조직을 공식화한 것으로 정상에는 최고 주권 기관으로 인민 회의가 있고(제32조), 국가 주권의 최고 집행 기관으로 내각이 있으며(제52조), 재판은 최고 재판소 및 도·시·군 재판소 그리고 특별 재판소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제82조). 공민의 기본권은 평등권,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두드러지는 점은 친일 분자에게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한 부분이다(제12조).

이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의 발전 단계 가운데 인민 민주주의 헌법에 속한다는 것을 앞서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 헌법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이 분명하지만 또한 지적되는 것은 압도적인 스탈린의 영향이다.²²⁾ 그런데 스탈린은 사회주의의 목적을 생산력의 향상과 경제적·정치적 권력의 강화를 위한 생산 시설의 건설로 파악하고, 그 방법은 이해와 설득에 의한 인민의 자발적 동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정당인 공산당의 ‘철의 규율’에 의한 강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국가 권력의 인격성과 통제의 테러적 경향으로 나타난다.²³⁾ 그런데 당

시에 풍미하던 조류에 따라 1948년 북한 헌법이 스탈린주의의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1936년 소련 헌법과 같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1948년 북한 헌법은 인민 민주주의 단계의 헌법이며, 1936년 소련 헌법은 사회주의 단계의 헌법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해방 후 사회적·경제적 조건이 미성숙했던 데 연유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1948년 북한 헌법을 살펴보면 그 특징은 인민 민주주의 원리, 노동당의 최고성, 민주 기지론 그리고 민주적 중앙 집권제의 네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인민 민주주의가 구현되어 있는 조항은, 제1조에서 국명을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하였으며, 제2조에서 주권이 인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제5조에서 생산 수단에 대한 국가, 협동 단체, 개인 자연인 혹은 개인 법인의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광산, 주요 기업, 철도, 수도 및 기간 시설을 국가의 소유로 한 것을 예시할 수 있다.

다음에 민주 기지의 원리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한 지역이 다른 지역을 사회주의화하는 근거가 된다는 뜻으로 해방 직후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 중앙 제3차 확대 집행 위원회에서 ‘북조선을 통일적민주주의 독립국가건설을 위한 강력한 정치·경제·문화적 민주기지’로 전변시킬 것을 결의한 바 있다.²⁴⁾ 1948년 헌법에서 이 원리를 직접 언급한 것은 없으나 제7조에서 아직 토지 개혁이 실시되지 아니한 조선 안의 지역에 있어서는 최고 인민 회의가 규정하는 시일에 이를 실시한다고 한 것과 제103조에서 수도를 서울시로 한 것에서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다. 이 원리는 헌법에 대한 김일성의 강연에서 핵심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에 당의 헌법적 지위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제13조의 민주주의 정당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스탈린 헌법에서 당과 국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서 연유하며, 또한 제1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가운데 공산당(조선 노동당)의 비율이 27%에 그치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그러나 당의 우위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이후 사회주의의 불변의 원칙으로 노동당의 의사는 입법, 행정 및 사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이것을 우리는 당에 대한 절대적 의무를 강조하는 노동당 규약과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들의 정당별 소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⁵⁾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는 모든 국가 기관들이 하급은 상급

에 복종하고, 지방은 중앙에 복종하여 결국에는 모두 최고 주권 기관에 복종하는 한편, 하급 기관과 지방 기관들이 자신의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한다는 원리로서,²⁶⁾ 1948년 북한 헌법 제 50조에서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의 최고 인민 회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점, 제 60조에서 내각이 최고 인민 회의에 복종하도록 한 점, 제 75조에서 각급 인민 위원회는 자기 사업 활동에 있어서 당해 인민 회의 및 상급 인민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모든 인민 위원회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를 받으며 그에 복종한다고 규정한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948년 북한 헌법의 성격에 대하여 요약하자면, 그것은 전반적으로 스탈린 헌법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인민 민주주의 단계의 헌법으로, 소자본가 지주적 사유 제도 및 사적 기업 체제가 인정되며, 또한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지 또는 제국주의적 식민지 지배 체제를 타파하고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1948년 헌법은 다섯 차례에 이르는 개정을 겪고 난 후에 1972년에는 전면적인 변화를 맞는다. 그것이 바로 북한 최고 인민 회의 제 5기 제 1차 회의가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다. 이 헌법이 제정되는 동기는 그들 나름대로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면서 인민 민주주의 원리가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고, 그 가운데 ‘주체사상’의 등장이라는 이념적 변화를 겪었으며, 국가 기관의 규정과 당에 대한 조항의 미비성 때문에 구헌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데 있다.²⁷⁾ 1948년 헌법과 비교할 때 신헌법이 가지는 특징은 노동당의 지위 명시, 사회주의적 소유 제도 확립, 주체 사상의 헌법 규범화, 국가 주식제 도입, 집단주의 원칙의 강조 등이다. 이 신헌법은 사회주의 헌법 유형상 정치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완성하고 경제적으로는 생산 수단의 국유 및 전인민적 계획 경제 제도의 완성을 의미하는 ‘사회주의 헌법’으로 설명되는데,²⁸⁾ 이러한 원리가 북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장을 바꾸어서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4. 북한 헌법의 기본 원리

그들 스스로 “가장 인민적인 헌법이며 가장 혁명적인 헌법”²⁹⁾이라고 평가하는 지금의 북한 헌법은 1972년 12월 27일 최고 인민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헌법은 모두 11장 149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성의 순서를 보면 제1장에서 제3장까지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제4장에서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제5장에서 제10장까지는 각종의 국가 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제11장에서 국장, 국기 및 수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문 구성상의 특징은 전문과 부칙이 없다는 점이다.³⁰⁾

사회주의 헌법에 해당하는 이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체제의 확립을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 정치, 경제, 문화 및 국방 등의 모든 부문에 침투하고 있는 주체 사상을 들 수 있다. 먼저 북한 헌법 제1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가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에 의거한다.”(제2조)고 함으로써 국가의 기초를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주의 체제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다. 기본 원리 가운데 다른 하나인 주체 사상은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³¹⁾고 하여 주체 사상을 지도 원리로 밝히고 있다.

체제로서의 사회주의와 그 지도 원리인 주체 사상은 정치 부분에는 계급적 대립의 해소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없어졌음’을 선언하면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제8조). 즉, 주권은 이제 전체 인민이 아니라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 있으며(제7조), 모든 국가 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운영된다(제9조). 이것은 결국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한다(제10조). 국가의 사업은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의 의견을 존중하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을 불러 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관철되며'(제12조), '사회주의의 건설에는 천리마운동이 적용된다'(제13조). 주체 사상은 또한 국가 방위의 측면에서는 자위적 군사 노선으로 나타나고, 대외 관계에서는 자주 외교로 나타난다(제16조).

경제면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나타내는 특징은 생산 수단이 국가 및 협동 단체의 소유인 점이다(제18조).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라고 설명되며 특히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중요공장과 기업소,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기관은 국가만이 소유한다'(제19조). '협동단체의 소유는 협동경영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며 토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공장, 기업소는 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제20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소비를 위한 소유로,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지며 국가는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제22조). 경제면에서 '국가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이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이며 사회의 물질적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제23조). 또한 노동간의 차이를 없애며(제25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제26조). 근로 대중은 조국과 인민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도록 동원되며(제27조), 국가의 관리 운영 방법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에 의하도록 한다(제30조). 경제 정책의 형태는 계획경제이며, 국가는 '사회주의적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잡고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한다'(제31조). 이로 미루어 볼 때 경제면에서 궁극적 목표는 물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계획 경제가 실시됨을 알 수 있다. 소유 형태는 국가 소유, 협동 단체의 소유, 그리고 개인 소유가 있는데 협동 단체의 소유는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이 제시된다. 관리 경영 방식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는 대중 노선에 입각한 사회주의적 경제 관리 체계라는 것으로 북한 헌법에 독특한 것이다.³²⁾

문화면에서는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의 발전(제 35조)이 주창되고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드는(제 36조) 등의 계몽적 성격을 띤다. 생활 양식 또한 사회주의적인 것이며(제 38조), 후세들의 교육 문제에 대하여 특히 배려하고 있다(제 41조, 제 42조, 제 43조). 물론, 이 때의 교육 목표로서의 인간상은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이며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어야 한다(제 39조). 과학 연구에 있어서도 주체가 강조되며(제 44조), 예술 분야에서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것이 요구된다(제 45조), 또한 우리말의 보호(제 46조), 체력의 증진(제 47조) 및 '무상치료제와 예방의학적방침'(제 48조)이 문화면의 헌법 규정에 포함된다. 말하자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문화적 욕구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충족시키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첫째로 막대한 경비를 어디서 충당하는가 하는 문제(헌법 제 33조에 의한 세금의 폐지)와, 다음에 과연 그 질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가 의문으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보아 북한 헌법의 기본 원리로 볼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의 장은 대한 민국의 헌법으로 말하자면 헌법의 전문과 총강, 그리고 경제 및 기본권의 일부까지도 포함하는 혼합적인 내용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기본 원리는 크게 나누어 사회주의 체제를 선언한 것과 그 지도 방법으로 주체 사상이 강조되는데, 이것은 외관상 북한 헌법만이 지니는 독특한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드는 3대 기술 혁명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표현에서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의 건설에 있어서 보편적인 내용을 가진 것이라 한다.³³⁾ 또한 문화의 장에서 규정된 여러 규정들이 단순히 종이 위의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달성된 제성과에 입각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³⁴⁾

그러나 북한 헌법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내용 및 국가 기관 체계 등의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동당의 독재를 확립하기 위한 이념으로 나타난다. 즉, 우리가 앞에서 든 헌법의 존재론적인 분류 방법에 의하면 북한 헌법은 헌법

규범의 내용이 사실상의 권력자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서 현재의 정치적 권력 상황을 그대로 문서화한 장식적 의미의 헌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

5. 북한 헌법상의 통치 구조

(1) 국가 기관 체계

1948년 북한 헌법은 최고 인민 회의와 수상, 그리고 최고 재판소라는 3권 분립의 형식을 취하면서 합의제적인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하였으나, 1972년 신헌법의 채택으로 국가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 지도 체제로 전환하였다. 즉, 종래 최고 인민 회의 및 이것의 상임 위원회, 그리고 내각의 주요 권한을 신설된 국가 주석과 중앙 인민 위원회에 배분하였으며, 중앙 인민 위원회도 국가 주석이 지도·통제하는 체계를 이룬다. 재판 기관 또한 최고 재판소에서 중앙 재판소로 바뀌면서 중앙 인민 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3권 분립이 사실상 무시된 것이다.

북한에서는 국가의 권력 기구를 국가 기관 체계라 하고, 그 기능에 따라서 주권 기관, 행정 기관, 재판 및 검찰 기관으로 나누며, 활동 범위에 따라 중앙 국가 기관과 지방 국가 기관으로 나눈다.³⁵⁾ 이하에서는 북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각 국가 기관의 조직과 작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의 주권 기관 체계는 최고 인민 회의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주석, 그리고 국가 주권의 최고 지도 기관인 중앙 인민 위원회가 있으며, 지방에는 인민 회의와 인민 회의의 휴회중에 지방 주권 기관으로 작용하는 인민 위원회가 있다.

(2) 주권 기관

1) 최고 인민 회의

최고 인민 회의는 북한의 최고 주권 기관으로 입법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한다(제 73조). 최고 인민 회의는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되며(제 74 조),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제 75 조).

최고 인민 회의가 가지는 권한은 헌법 및 법령의 채택 또는 수정, 국가 대내외 정책의 기본 원칙 정립, 주석의 선거, 각 기관의 위원 선거 및 소환, 중앙 재판소·중앙 검찰소 소장의 선거 및 소환(중앙 검찰소 소장은 임명),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승인, 국가 예산의 승인 등이다(제 76 조 1~11항 참조).

최고 인민 회의 상설 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장, 의원들로 구성된다(제 86 조). 최고 인민 회의 상설 회의의 임무와 권한은 최고 인민 회의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을 심의 결정하거나 현행 법령의 수정과 해석, 최고 인민 회의의 소집 및 중앙 재판소 판사의 선거 등이다(제 87 조).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 인민 회의는 입법권, 국가 주석 선거권 등의 강력한 권한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행정권의 우위 현상, 예산 심의권의 결여 등과 아울러 대의원의 선거에 있어 후보의 지명권이 노동당에 있는 점이 지적된다.³⁶⁾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국가 주석은 국가의 수반으로 국가 주권을 대표한다(제 89 조). 주석은 최고 인민 회의에서 선거하며 임기는 4년이다(제 90 조). 주석은 중앙 인민 위원회를 직접 지도하며(제 91 조), 정무 위원회를 소집하고 지도한다(제 92 조). 또한 주석은 무력을 지휘·통솔하고(제 93 조), 각종 법령의 공포권과 명령을 발하는 권한을 가진다(제 94 조). 특사권(제 95 조), 조약의 비준 및 폐기(제 96 조)와 사신의 신임장·소환장의 접수(제 97 조) 등의 권한을 가지는 주석은 최고 인민 회의 앞에 책임진다(제 98 조).

국가 주석제는 1972년 북한 헌법에서 신설한 것으로, 이것은 집단 지도 체에서 1인 지도제로 전환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주권의 최고 지도 기관으로 중앙 인민 위원회가 있으나, 이는 주석의 보조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주석은 최고 인민 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으나, 최고 인민 회의는 주석에 대한 소환권은 없다.

3) '중앙인민위원회'

중앙 인민 위원회는 국가 주권의 최고 지도 기관이며(제 100조), 수위(首位)는 주석이다(제 101조). 구성은 국가 주석, 부주석, 중앙 인민 위원회 서기장으로 이루어지며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제 102조). 중앙 인민 위원회의 권한은 국가 대내외 정책의 입안, 정무원과 지방 인민 회의 및 인민 위원회 사업의 지도, 사법 검찰 기관 사업의 지도, 국방 및 국가 정치 보위 사업의 지도, 각종 법령의 집행에 대한 감독, 기타 행정 구역의 신설 또는 폐지를 맡는다(제 103조). 또한 정령과 결정의 채택권이 있고(제 104조), 최고 인민 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제 106조).

이 중앙 위원회는 국가 주석과 함께 신설된 기관으로 종래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정령 제정권, 내각이 가지고 있던 정책 결정권을 가진 데다 사법과 검찰을 지도하는 권한까지 가지는 3권 통합적인 헌법 기관이다. 중앙 인민 위원회와 주석과의 관계를 보면 수위가 국가 주석이고(제 101조), 국가 주석은 중앙 인민 위원회를 직접 지도하며(제 91조), 중앙 인민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하여 선출 및 소환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중앙 인민 위원회가 국가 주석의 보조 혹은 자문 기관이다. 중앙 인민 위원회와 최고 인민 회의의 관계를 보면, 전자가 후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수위인 국가 주석은 소환당하지 않으며, 노동당의 핵심 간부가 중앙 인민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4) 지방 주권 기관

지방 주권 기관으로는 각급 인민 회의와 인민 위원회가 있다. 지방 인민 회의의 종류로는 도, 시, 및 군 인민 회의가 있으며(제 115조),³⁷⁾ 일반적·평등적·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고(제 116조), 도 인민 회의의 임기는 4년, 시·군 인민 회의의 임기는 2년이다(제 117조).

지방 인민 회의의 권한과 임무는 지방의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의 승인, 지방 예산의 승인, 인민 위원회 간부의 선거 및 소환, 행정 위원회 위원

장의 선거 및 소환, 재판소의 판사·인민 참심원의 선거 및 소환, 인민 위원회와 하급 인민 회의 및 인민 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의 폐지 등의 권한을 가진다(제 118조).

지방 인민 회의는 중앙 인민 위원회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권한이 대폭 약화되었다. 이것은 말하자면 지방의 권한이 약화되고 중앙의 지시에 따르는 중앙 집권 체계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방 인민 위원회는 지방 인민 회의의 휴회중의 지방 주권 기관이다(제 123조). 즉, 종래의 행정 기능은 지방 행정 위원회에 이관된 것이다. 지방 인민 위원회의 종류에는 도·시·군 인민 위원회가 있고, 임기는 해당 인민 회의 임기와 같다. 지방 인민 위원회는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내리고(제 126조),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 회의와 상급 인민 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제 127조). 지방 인민 위원회는 인민 회의를 소집하고, 행정 위원회와 하급 인민 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하고 해당 지역 내의 국가 기관, 기업소 및 사회 협동 단체들의 그릇된 결정·지시의 폐지와 하급 인민 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 정지를 명하는 등의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제 125조). 또한 결정을 채택하고 지시를 발표한다(제 126조).

북한의 국가 기구에서 특징적인 것은 중앙 인민 위원회와 지방 인민 위원회 같은 주권 기관을 상설시키고 있는 점이다. 이에 대응하여 행정 기관도 조직되어 있는데, 정무원과 지방 행정 위원회로 되어 각각 중앙과 지방의 행정 사무를 관장한다.

(3) 행정 기관

1) 정무원

정무원은 구헌법상의 내각이 바뀐 것으로 중앙 인민 위원회에 권한을 대부분 빼앗기고 정책 집행권만을 행사한다. 헌법상 정무원은 최고 주권 기관의 행정적 집행 기관으로, 주석과 중앙 인민 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제 107조). 그 구성은 총리, 부총리, 부장들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이루어지는데(제 108조), 총리는 주석의 재의에 의하여 최고 인민 회의에

서 선거 및 소환되며(제 76조 제 6호), 기타의 구성원은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중앙 인민 위원회가 임명 및 해임한다(제 103조 제 7호). 정무원의 임무와 권한은 각부, 정무원 직속 기관, 지방 행정 위원회 사업의 지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의 작성, 국가 예산의 편성, 각종 행정 업무의 집행, 신용 제도의 관리, 조약 체결, 하부 기관 감독 등이다(제 109조). 정무원은 전원 회의와 상무 회의를 가지며(제 110조), 부문별 집행 기관으로 부(部)가 있다(제 114조). 정무원은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인민 회의, 국가 주석 및 중앙 인민 위원회 앞에 책임진다(제 113조).

2) 지방 행정 기관

지방 행정 기관으로 각급의 행정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 주권 기관의 행정적 집행 기관으로 도·시·군 행정 위원회로 나누어진다. 지방 행정 위원회의 권한과 임무는 지방 행정 사업의 조직과 집행, 인민 회의, 인민 위원회 및 상급 기관의 결정, 지시의 집행, 지방의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의 작성과 실행 대책의 수립, 지방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 대책의 수립, 지방의 사회 질서 유지, 하급 행정 위원회의 지도 등이다(제 130조). 지방 행정 위원회는 활동에 대하여 해당 지방 주권 기관 앞에 책임지며 동시에 상급 행정 위원회와 정무원에 복종한다(제 132조).

(4) 재판 기관 및 검찰 기관

북한의 사법 기관에는 중앙 재판소, 도 재판소, 인민 재판소 및 특별 재판소가 있으며, 판결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제 133조). 중앙 재판소의 판사와 인민 참심원은 최고 인민 회의 상설 회의에서 선거하며 도 재판소, 인민 재판소의 판사와 인민 참심원은 해당 인민 회의에서 선거한다(제 134조). 재판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세워진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가, 사회협동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권리 및 생명재산을 온갖 침해로부터 보호한다.

- ②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수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 ③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중사업을 한다(제 136 조).

이것을 보면 재판소의 임무는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이 우선시되고 분쟁에 대한 심판 기능은 약화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 활동을 법에 의하여 수행한다는 규정(제 140 조)의 의미는 축소된다.

중앙 재판소는 최고 재판 기관으로(제 141 조)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인민 회의, 국가 주석 및 중앙 인민 위원회 앞에 책임지며, 도 재판소·인민 재판소는 해당 인민 회의 앞에 책임진다(제 142 조).

검찰 기관은 사회주의적 준법성의 감시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것을 검찰 사업이라 하는데, 중앙 검찰소, 도·시·군 검찰소 및 특별 검찰소가 한다(제 143 조). 검찰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 기관, 기업소, 사회 협동 단체 및 국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② 국가 기관의 결정이나 지시가 상위의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③ 범죄자와 법 위반자를 적발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국가, 사회 협동 단체 재산과 인민의 헌법적 권리 및 생명, 재산을 옹호한다(제 144 조). 검찰 사업은 중앙 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 검찰소에 복종한다(제 145 조) 중앙 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 인민 회의, 국가 주석 및 중앙 인민 위원회 앞에 책임진다(제 146 조).

이로써 헌법상 규정된 국가 기관 체계에 대하여 북한 헌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것을 그림으로 간략히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5) 노동당의 지위

북한 헌법 제 4 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

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고 한 것에서 보듯이 노동당은 북한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점한다. 이것은 노동당이 북한 헌법상 규정되고 있는 국가의 최고 기관을 ‘지도한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즉,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기본 원리이며, 또한 당의 전위 이론에 의하여 사실상 노동당의 독재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노동당과 국가 기관과의 관계를 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역시 북한 헌법 제4조에 의한 노동당의 ‘지도’를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노동당이야말로 북한 헌법상 실질적 최고 통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최고 인민 회의는 헌법상 최고 주권이나, 실제로 그 대의원의 단일 후보의 추천을 노동당이 하기 때문에 노동당의 최고 위원회와 마찬가지로이다.³⁸⁾ 당과 국가 주석과의 관계를 보면, 노동당 일색의 최고 인민 위원회에서 선출되는 국가 주석은 바로 당의 최고 실권자인 총비서이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중앙 인민 위원회 및 정무원은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의 원리에 따라서 상급 기관인 국가 주석과 최고 인민 회의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그 구성원들이 노동당의 고위 간부인 점을 감안하면 부연의 여지가 없이 노동당의 통제에 종속된다. 재판소나 검찰소도 결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수호자이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강력한 무기, 즉 노동당의 독재를 강화하는 수단이자 인민을 교육시키는 기관으로서의 작용을 한다.

(6) 결 론

이상에서 정리한 북한 헌법에서의 통치 구조의 특징을 요약하면 1인 독재, 노동당의 우월, 그리고 권력 분립의 배제로 나타난다. 1인 독재는 신설된 국가 주석 제도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으며, 노동당의 우월성은 그 자체가 사회주의의 이념과도 이어지는 뿌리 깊은 원리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자유주의적 정치 원리인 삼권 분립은 설 땅이 없다. 그 대신에 북한의 통치 구조는 하급 기관이 상급 기관에 대하여 철저히 복종하고 또 책임지는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의 원리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다. 북한 헌법상 통치 기구의 정점은 최고 인민 회의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 헌법 제4조에는 국가 자체가 노동당의 주체 사상을 자기 활동의 기본 지침으로 삼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당의 정책 결정이 국가 기관의 의사에 우월하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 노동당의 의사를 충실히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이 중앙 인민 위원회인데, 중앙 인민 위원회는 입법, 행정 및 사법에 대한 통합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다. 따라서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권리 구제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역할은 제 기능을 못한다.

따라서 북한 헌법에서 다양한 기본권을 규정하고 그것을 보장하도록 하는 선언적인 조항들이 있지만 그 기본권들이 침해당했을 때에는 구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나아가 그 기본권 자체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의 하위에 있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을 존중하는 기본권 보장은 기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북한의 헌법상 기본권은 허구적인 것이라고 지적된다.³⁹⁾

6. 결 론

북한 헌법을 관통하고 있는 법원리는 자유주의 법원리의 가장 큰 테두리인 법치주의, 혹은 법의 지배와는 무엇인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 법치주의란 형식적으로는 법의 준수를 요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인권의 보장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권의 보장이라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강조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법을 정치의 외부적 표현으로 보고,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본권 자체의 설명에 있어서도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북한 헌법 제49조).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 규범, 사회주의적 행동 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한다(제67조). 국가 자신은 법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공민에게는 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치주의의 또 하나의 원리인 권력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철칙에서 나왔기 때문이다.⁴⁰⁾ 즉,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누구나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 내에서 자신의 운명 결정에 똑같이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논의의 공개성을 말할시킬 커다란 위험을 배제하는 방법이다.⁴¹⁾

이것은 또한 민주주의의 원리와도 통하는 것이다. 레닌은 그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원리를 발전시키면서, “그것은 국가와 공적 사무의 경영에 광범하게 참여하는 노동자 의사의 표현을 함축하는 진정한 인민의 주권”⁴²⁾이라고 하였으며, 브레즈네프는 1977년 소련 헌법에 즈음하여,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의 행로를 따라서 전진하면 할수록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거대한 잠재력은 더욱 더 발현되며, 권력은 인민의 손에 놓여지고 그 권력은 인민을 위해서 행사되는 것이 헌법에 반영된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⁴³⁾라고 하였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보다 많은 공개성과 개혁을 요구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주장되는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가 무엇인가 맹점이 있는 까닭이다.⁴⁴⁾

북한과는 달리 중국에서 사회주의적 적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일지라도 헌법 및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⁴⁵⁾고 하는 것은 헌법 및 법률이 가지는 평등의 요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발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헌법이나 법률 자체로서도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에게든지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을 초월하는 특권을 줄 수는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었는지 궁금하다.

북한의 헌법을 두고 보면, 북한 사회는 두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로는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보다 발전된 단계로 이끌어올리는 일이고, 다음으로는 사회주의 이념 자체를 포함하는 국가 체계를 어떻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 적응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과제는 또한 서로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헌법이라는 것은 그들의 표현대로 사회주의를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일정한 목표를 위하여 잘 조직될 때 보다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명백하게 보장된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서는 그들의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헌법 규범을 창출해 낸 데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북한 헌법의 검토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통치 구조는 국가 주석을 머리로 하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이러한 기대는 무산되고 갖가지의 병폐가 나타나고 있음이 지적된다. 그것은 비합리성과 창의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형식주의, 조직의 구조적 기능 장애, 권위주의에다가 구성원의 자질 부족이라는 짐까지 중첩된다.⁴⁶⁾ 여기서 조직의 구조적 기능 장애는 무엇보다도 당과 국가 기관의 이원적 체제에서 온다. 당이 실질적인 국가의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 모든 결정을 하고, 국가 기관은 지시에만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기관의 독자성은 무시되는 것이다. 나아가 하급의 국가 기관은 당과 상급 국가 기관이라는 이중의 지도 체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개개인의 책임만을 벗어나기에 바쁜 실정이 되는 것이다.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자각적열성과 창발성’(북한 헌법 제27조)을 요구하는 헌법 조항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더욱이 헌법에서 이미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계획 경제와 ‘대안의 사업체계’ 혹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 체계마저도 기술적인 측면이나 전문성을 무시하고 정치 사상 교육의 무대로 전락하기 때문에 실제의 효과는 그다지 많지 않다고 지적된다. 여기에서 볼 때,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활동의 최고 목표로 삼는다.”(동 제23조)는 북한 헌법의 원칙은 바로 그것을 위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통치 기구 혹은 통치 원리에 의해서도 큰 곤란을 겪고 있다.

이것을 야기하는 통치 구조상의 결함은 무엇보다도 국가 권력의 집중을 통한 상명하달식의 통치 구조에 있다. 말하자면 북한의 김일성은 정치, 경제 및 군사적인 실권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적으로도 국가 최고 주권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김일성은 ‘국가권력의 화신’, 혹은 ‘인격화된 국가권력’으로서 북한 주민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그의 의사는 바로 중앙 인민 위원회를 통하여 전달되고 집행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북한 헌법을 사회·경제 체제를 기준으로 할 때에 사회주의 헌법으로 분류하면서도, 로벤슈타인(K. Loewenstein)에

의한 헌법의 존재론적(효력적)인 분류 방법에 의할 때에는 장식적 헌법(die semantische Verfassung)으로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북한 헌법상의 통치 구조는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김일성)의 지배를 안정시키고 그것을 영구화하기 위한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 참고 문헌

1. 자료

국토 통일원, 〈북괴 헌법〉.

_____, 〈북괴 노동당 강령·규약〉.

국회 도서관, “소련헌법”(전문), 〈공산권문제〉 1979년 여름호.

《김일성선집》 제 5 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법무부 간, “북한법 연구”(1), 〈법무자료〉 60, 1985.

〈북한 법령 연혁집〉,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69.

〈북한 전서〉, 극동 문제 연구소, 1980.

2. 논문

장구진, “북괴법에 대한 소련 및 중공의 영향”, 국토 통일원, 〈국토통일〉, 1975.11.

_____, “북한헌법상 기본권의 허구성에 관한 고찰”, 북한 연구소, 〈북한학보〉, 1983,

_____, “북괴법에 대한 소련 및 중공의 영향”, 국토 통일원, 〈국토통일〉, 1971.2.

강성윤, “조선 노동당의 성격 변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안보 연구소, 〈안보연구〉, 1980.

구병삭, “북한·중공 헌법상 기본적 인권”, 고려대 법률 행정 연구소, 〈북한 법률 행정 논총〉, 1979.12.

김공열, “북한의 신헌법 해부—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국토 통일원, 〈국토통일〉, 1973.1.

김기선, “남북한 법제도의 비교 분석”, 국토 통일원, 〈국토통일〉, 1970

김남식, “북한의 새 헌법과 권력 개편”, 동아일보사, 〈신동아〉, 1973.2.

김병문, “새 ‘북한헌법’의 특징과 배경”, 시사·내외 문제 연구소, 1973.

- 김운용, “북한의 헌법 개정”, 북한 연구소 〈북한〉, 1973. 2.
 _____, “북한의 헌법 이론과 통치 구조”, 북한 연구소, 〈북한학보〉, 1978.
- 김창순, “‘주체사상의 역사과학’ 비판”, 북한 연구소, 〈북한학보〉, 1984. 8.
- 김철수, “북한 헌법과 공산 제국의 헌법과의 이동(異同)에 관한 연구”, 국토 통일원, 1978.
- 김철수·최송화·김효진, “남북한 체제의 비교 연구”, 국토 통일원, 1972
- 김택현, “북한 노동당 강령 및 규약 해설”, 북한 연구소, 〈북한〉 1973. 4.
- 김행선, “주체 사상의 기능 분석”, 북한 연구소, 〈북한학보〉 제 6 집, 1982.
- 박일경, “북한의 신헌법—그 특징과 기본성격”, 국토 통일원, 〈국토통일〉, 1973. 10.
 _____, “북한 헌법상의 권력 구조”, 국토 통일원, 〈국토통일〉, 1974. 9.
- 박동운, “헌법 이론으로 본 북한의 권력 구조와 기본권 문제”, 북한 연구소, 1984.
- 신광휴, “북한 헌법의 특색과 구성 원리”, 북한 연구소, 〈북한학보〉 제 11 집, 1987.
- 이기건, “새로 제정한 북한 헌법 해설”, 〈통일생활〉, 1973. 2.
- 박현각, “북한 법이론과 실제”, 북한 연구소, 〈북한〉, 1972. 7.
- 윤회경, “북한 신헌법의 기초와 특성”, 〈경기대 논문집〉, 1975. 11.
- 이세진, “북한 헌법의 실상과 허상”, 자유공론사, 〈자유공론〉, 1982. 7.
- 장명봉, “공산권 헌법의 이론과 헌법 질서—소련 헌법과 북한 헌법을 중심으로”, 국민대, 〈법정 논총〉, 1980.
 _____,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 관한 연구”, 성곡 학술 문화 재단, 〈성곡 논총〉, 1980.
- 정규서, “북한 신헌법과 중공 신헌법의 비교 연구”, 〈통일생활〉 1975. 4.
- 장명봉, “공산권 헌법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학위 논문), 1984.
- 도희근,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 질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 논문), 1984.
- 최영택, “현대 사회주의 헌법의 구조 원리와 특색”, 북한 연구소, 〈북한학보〉 제 9 집, 1985.

- 한상범, “공산주의 헌법관과 법치의 문제”, 동국대 안보 연구소, 〈안보연구〉 제 15 호, 1985.
- 한태연, “사회주의 헌법의 현대적 상황”, 〈고시연구〉 제 6·7 호, 1985.
- 福島正夫,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社會主義新憲法”, 〈法律時報〉, 1973. 4.
- 新美治一, “ソ連邦七七年憲法”, 〈法律時報〉, 제 51 권 제 2 호.
- 토포르닌, 早川弘道譯, “ソ連新憲法と憲法學の諸問題”, 早稻田大學比較法研究所, 〈比較法學〉 제 15 권 제 2 호, 1981. 7.
- 董成美, 西村幸次郎·通山昭法譯, “中國憲法學の今日的課題”, 〈比較法學〉, 1988. 1.

3. 저서

-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박영사, 1975.
-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1988.
- _____, 〈비교 헌법학〉, 법문사, 1981.
-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1989.
- 국토통일원, 〈북한 행정 체계에 관한 연구〉, 1983. 12.
- 김갑철·고성준, 〈주체 사상과 북한 사회주의〉, 문우사, 1988.
- 김갑철, 〈북한 공산주의 실상〉, 한국 승공 연구원, 1979.
- 박동운, 〈북한 통치 기구론〉,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64.
- 이상우 외 공저, 〈북한 40년〉, 을유문화사, 1988.
- 이항구, 〈북한의 현실〉, 신태양사, 1988.
- 한재덕, 〈한국의 공산주의와 북한의 역사〉, 《공산주의 비판전서》 제 5 권, 내외문화사, 1965.
- Collins, Hugh, *Marxism and Law*, Oxford, Clarendon press, 1982; 홍준형 역, 〈마르크스주의와 법〉, 한울, 1986.
- Cain, M., & Hunt, A., *Marx and Engels on Law*, New York, Academic press, 1979.
- Connor, James E., ed., *Lenin on Politics and Revolution*, New York, Pegasus 1968.
- Kelsen, Hans trans. by Max Knight, *The Pure Theory of Law*, Univ. of California press, 1970.
- Hitskaya Lenina, trans., *The Fundamental Law of the USSP*, Progress

- Publishers, 1980.
- Berman, Harold J., *Justice in the USSR*, New York, 1963
- Loewenstein, K., *Verfassungslehre*, 3. Aufl., Tübingen, 1975.
- Paige, Glenn D., *The Korean people's Democratic Republic*, Hoover Institution press, 1968.
- Scalapino Robert A., & Lee, Chong-sik, *Communism in Korea 2vol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각 주

- 1) Hans Kelsen, trans. by Max Knight, *The Pure Theory of Law*, Univ. of California press, 1970, p.221.
- 2) 북한 헌법의 조문을 찾아보려면 다음의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1948년 헌법은 법무부 간 “北韓法研究(1)”, 《법무자료》60, 1985; 차낙훈·정경모 공편, 《북한 법령 연혁집》,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69, pp.3~13, 1972년 헌법은 법무부 간, 앞의 책; 권영성, 《비교 헌법학》, 법문사, 1981, pp.770~776; 福島正夫,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社會主義新憲法”, 《法律時報》, 1973. 4, pp.137~144; Willim, B. Simons, *The Constitutions of the Communist World*, Sijthoff & Noordhoff, 1980, pp.232~254를 참조할 것.
- 3) 북한 헌법 제 7조에 따르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 인텔리에게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근로 인민으로 통칭된다.
- 4) K. Loewenstein *Verfassungslehre*, 1975, S.144.
- 5) 자본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헌법을 나누는 데 있어서 김철수 교수는 국가 형태와 사회 체제를 기준으로 하며, 권영성 교수는 사회·경제 체제의 형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1989, p.10;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1988, pp.23~24를 참조할 것.
- 6) 사회·경제적 기준을 채택할 때에도 影山日出彌는 발달한 자본주의형 헌법, 미 발달한 자본주의형 헌법, 그리고 사회주의형의 셋으로 나누며, 黒田了一은 자본주의형 헌법, 사회주의형 헌법, 후진국형 헌법의 셋으로 나눈 후에 사회주의형 헌법을 다시 과도기의 헌법과 순사회주의 헌법으로 양분한다. 이 때 북한 헌법은 순사회주의 헌법에 속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권영성, 《비교 헌법학》, 법문사, 1981, pp.75~77 참조.
- 7) 우리와는 체제가 다른 사회주의 헌법을 연구하는 데는 자료 부족과 이데올로기의 장벽이라는 문제에 봉착한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법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 또한 북한 사회를 연구하는 데 있어 그곳의 헌법과 법체도를 연구하는 일은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8) Hugh Collins, *Marxism and Law*, Oxford, Clarendon press, 1982, p.29 참조; 번역으로는 홍준형 옮김, 마르크스주의와 법, 한울, 1986, pp.40~41.
- 9) M. Cain & A. Hunt, *Marx and Engels on Law*, New York, Academic press,

- 1979, pp.103~104.
- 10) James E. Connor ed., *Lenin on Politics and Revolution*, New York, Pegasus 1968, p.220.
- 11) 장명봉, “공산권 헌법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학위 논문), 1984, p.27 참조.
- 12) 1948년 2월 19일자 평양 방송에서 허거정이 말한 내용인데, 당시에 그는 북조선 노동당 법률 고문이었다. 출전은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박영사, 1975, p.25.
- 13) <김일성선집> 제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448.
- 14) 보다 상세하게는 도회근,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 질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 논문), 1984, pp.7~17 참조.
- 15) 김철수, “북한 헌법과 공산 제국의 헌법과의 이동(異同)에 관한 연구”, 국토 통일원, 1978, pp.3~7; 장명봉, “공산권 헌법의 이론과 헌법 질서, 국민대 법학 연구소, <법정 논총> 제3집, p.151.
- 16) Lenina Hitskaya trans., *The Fundamental Law of the USSR*, Progress Publishers, 1980, p.55 참조
- 17) 장명봉, “공산권 헌법에 관한 연구”, p.48 참조.
- 18)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p.12 참조.
- 19) <김일성 선집> 제4권, p.258 이하 참조.
- 20) <조선중앙년감>(1949년 판), p.44.
- 21) 차낙훈·정경모 공편, <북한 법령 연혁집>,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69, pp.3~13 참조.
- 22) 김운용, <북한 헌법 질서의 이론과 실제>,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 연구소,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2, pp.36~37 참조.
- 23) 한태연, “사회주의 헌법의 현대적 상황”, <고사연구> 1985년 6월호, pp.48~49 참조.
- 24) 박동운, <북한 통치 기구론>,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64, p.3 참조.
- 25)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의 정당별 소속표**

정당별	기 별	제 1 기(1948년)	제 2 기(1957년)	제 3 기(1962년)
노동당	노동당	157명(27%)	178명(83%)	372명(97.25%)
기타정당 및 사회단체		295명(50%)	32명(14.6%)	11명(2.75%)
무소속		120명(23%)	5명(2.4%)	
계		572명(100%)	215명(100%)	383명(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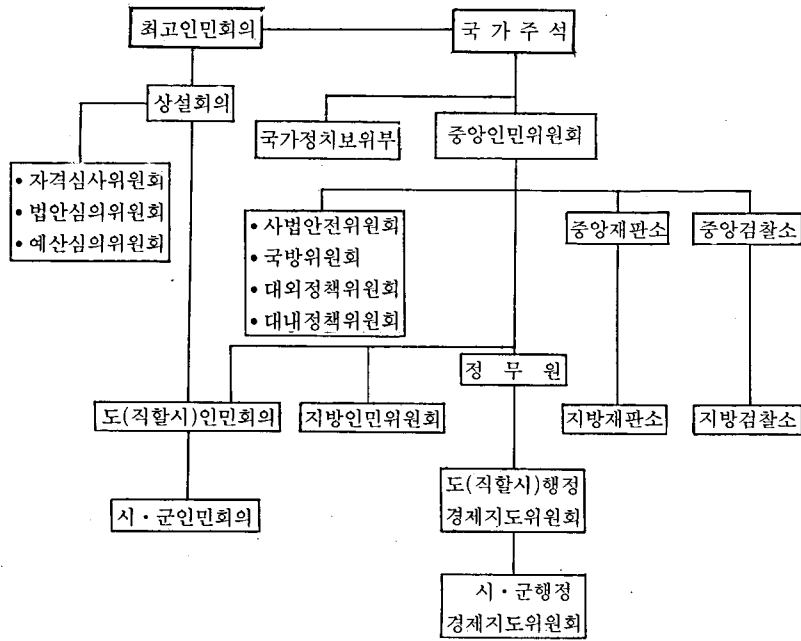
* 출처: 박동운, <북한 통치 기구론>, p.46에서 인용. 노동당의 명칭은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1945)→북조선 공산당(1946.4)→북조선 노동당(1946.7)→조선 노동당(1949)으로 바뀌었다.

↑ 조선 신민당

↑ 남조선 노동당

- 26) 김운용, <북한 헌법 질서의 이론과 실제>, 참조.
- 27) 신광휴, “북한 헌법의 특색과 구성 원리”, 북한 연구소, <북한학보> 제 11 집, 1987, p.29 참조.
- 28) 福島正夫,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の社會主義新憲法”, <法律時報>, 1973.4, p. 137.
- 29) 신광휴, 앞의 글, p.33 참조.
- 30) 북한 헌법상 또 하나의 특징은 순한글로 표시되어 있으며, 우리의 어법과는 틀리는 단어가 간혹 눈에 띄는데, 원문을 살리기 위하여 이를 그대로 표기하였다.
- 31) ‘주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1950년 후반이며, ‘주체사상’으로 통치 이데올로기화한 것은 1967년 ‘정부정강’에서 나타나고, 1970년 노동당 규약에 삽입되었다가 헌법에 명시된다. 주체 사상에 한 보다 상세한 것은 김행선, “주체 사상의 기능 분석”, 북한 연구소, <북한학보> 제 6 집, 1982; 김창순, “주체 사상의 역사 과학 비판”, <북한학보> 제 8 집, 1984 참조.
- 32) 보다 자세한 것은 신광휴, 앞의 글, pp.34~35 참조.
- 33) 福島正夫, 앞의 글, p.137 참조.
- 34) 위의 글, p.138 참조.
- 35) 법무부 간, 앞의 자료, p.19 참조.
- 36) 법무부 간, 앞의 자료, p.22 참조.
- 37) 1948년 헌법에는 리(노동자구)의 인민 회의가 있었으나 신헌법에서 폐지되었다.
- 38) 노동당의 성격에 대해서는 강성윤, “조선 노동당의 성격 변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안보 연구소, <안보연구>, 1980, p.71 이하 참조.
- 39) 강구진, “북한 헌법상 기본권의 허구성에 관한 고찰”, 북한 연구소, <북한학보> 제 7 집, 1983 참조.
- 40) Montesquieu, *De l'esprit des lois*, 1748; 신상초 역, <법의 정신>, 을유문화사, 1964, p.160 참조.
- 41) Konrad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계획열역, <헌법의 기초 이론>, 삼영사, 1985, p63 참조.
- 42) Lenina Hitskaya trans., 앞의 책, p.50.
- 43) 위의 책, p.52.
- 44) 소련 헌법상 민주주의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로는, 토포르닌, 早川弘道譯 “ソ連新憲法と憲法學の諸問題”, 早稻田大學比較法研究所, <比較法學> 제 5 권 제 2 호, 1981.7, pp.145~146 참조.
- 45) 한상범, “공산주의 헌법관과 법치의 문제”, 동국대 안보 연구소, <안보연구> 제 15 호, 1985, p.169 참조. 중국 헌법의 해석상 문제점은 董成美, 西村幸次郎·通山昭治譯, “中國憲法學の今日的課題”, 早稻田大學比較法研究所, <比較法學> 제 21 권 제 2 호, 1988.1.30 참조.
- 46) 김용재, “북한 행정 체계에 관한 연구”, 국토 통일원, 1983, pp.117~132 참조.

<표 1> 북한 헌법상 통치 구조



* 참조 : 국토 통일원 통일 연수원, <민주 통일론>, 국토 통일원, 1988, p.273.

2. 정권의 수립과 변천 과정

서대숙(하와이대 교수)

1. 서론

분단된 우리 나라의 두 정권은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과 소련의 힘의 대결에 기인한다고 하지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의 대결에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소련은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그곳에 사회주의 정권을 세웠고, 김일성을 지도자로 내세워서 북한을 공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김일성은 소련의 지시를 따라 해외에서 돌아온 혁명가들과 국내에서 투쟁한 혁명 세력을 통합하여 북한에 정권을 세우고 사회주의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가지 사상적 대립과 혁명 지도자들과의 권력 투쟁을 겪고 북한에 사회주의 독재 정권을 세운 지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북한의 유일한 '수령'으로 나섰다. 그러나 그가 이끌어 온 북한의 정권은 사회주의 정권이라기보다 그의 개인 왕국으로 발전해 왔고 정권 말엽에 들어와서는 그의 아들을 후계자로 내세워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 수립과, 소련군이 어떻게 김일성을 선택해서 북한을 소비에트화했는지, 그리고 김일성이 다른 혁명 그룹들과 어떠한 이념 투쟁과 권력 투쟁을 통해서 오늘날의 완전한 독재 정권을 수립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가 해방된 후 북한에 들어온 혁명 그룹은 보통 네 개로 분석되고 있다. 즉, 만주 별판에서 중국 '동북항일 연군'과 함께 싸운 김일성의 빨치산, 중국 본토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싸운 연안파, 소련에서 소련군과 함께 돌아온 소련파, 그리고 국내에서 싸우던 조선 공산당원들이다. 이 네 그룹의 권력 투쟁에서 결국 김일성의 빨치산이 성공하지만 이러한 투쟁은 김일성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김일성은 이 권력 투쟁을 1950년대 말엽까지 정리하고 1960년 말에 가서는 자기의 빨치산 그룹의 군인들까지 숙청하여 완전한 독재 정권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투쟁과 숙청끝에 세워진 것이 지금의 북한 정권이며, 여기에는 김일성의 후계자로 그의 아들 김정일이 나서서 자기 아버지의 혁명 전통과 정치 사상을 받들고 정권을 물려 받으려고 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발전 과정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고 숙청 일변도로 권력을 유지해 온 것은 아니다. 김일성은 자기 나름대로 정권 쟁취하는 데 다른 사람이 받지 못했던 소련의 도움을 받았으며, 다른 그룹들과의 권력 투쟁에서 다른 그룹이 장악하지 못했던 조선 인민군과 조선 노동당을 장악하여 이것을 기반으로 투쟁하여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투쟁에서 김일성은 자기 이념을 살리고 주체 사상을 세워서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주체의 나라로 발전하였다.

2. 정권 수립 과정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은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성립되었다. 1945년 8월부터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였고 북한 공산 정권의 수립은 소련군의 감독 아래 진행되었다. 1948년 12월에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3년 4개월 동안 그들은 직접적인 군정의 형태를 배제하면서도 공산주의 체제를 북한에 성공적으로 이식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맥아더(D. MacArthur) 장군은 1945년 9월 7일에 발표한 포고문 제1조에서, 남한의 영토와 국민에 대한 정부의 모든 기능은 '나의 권한아래' 행사될 것이라고 선언하고,¹⁾ 남한에 군정을 실시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련 점령군은 1945년 8월 26일 평양에 들어와서 발표한 첫 포고문에서,²⁾ 조선 사람은 해방되었으며 그들의 장래의 행복은 조선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고 선언했다. 조선에는 독립이 주어졌고 조선 사람은 자신들의

행복을 스스로 가져와야 하며, 점령 당국은 이러한 조선 사람의 노력에 대해 모든 방법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밝히면서 직접적인 군사 통치를 삼가하였다. 그러나 소련 점령 당국은 김일성을 선택하고, 그를 새 조선의 정치 지도자로 전면에 내세운 채 북한의 공산화, 즉 소비에트화를 추진해 갔던 것이다. 김일성은 소련의 지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점령 당국의 대리인 노릇을 훌륭히 해냈을 뿐 아니라 소련의 보호 아래 경쟁자들의 도전을 제치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져 나갔다. 따라서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북한의 공산 정권 수립 과정은 소련 점령군과 김일성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북한의 소비에트화는 소련의 점령 정책에 따라 대략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³⁾ 제1 단계는 1945년 8월부터 1946년 1월까지의 ‘순수한 협력(genuine cooperation)’ 단계이고, 제2 단계는 1946년 2월부터 1948년 초까지로 ‘사이비 연립(bogus coalition)’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제3 단계는 1948년 2월부터 공산주의 국가의 수립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9월까지 ‘단일 체제(monolithic regime)’ 수립 시기에 해당된다.

제1 단계의 ‘순수한 협력’은 북조선 5도 행정국의 구성으로 시도되었다. 소련 당국은 북한을 통치하는 데 민족주의 지도자들과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명령했다고 한다.⁴⁾ 이와 같은 협력은 신탁 통치 문제에 관하여 소련계 한인들과 북한의 민족주의 지도자들의 의견이 심각하게 대립함으로써 붕괴되었다. 제2 단계인 ‘사이비 연립’기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된 1946년 2월부터 시작된다. 민족주의자들도 이 위원회에 참가했으나 이는 소련 점령 당국이 수립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했던 기구로서 ‘사이비 연립’의 좋은 본보기였다. 사이비 연립을 위한 또 다른 조치로서, 신민당과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합당이 추진되었고, 북조선 노동당이 1946년 8월 소련 당국의 지도 아래 결성되었다. 소련 당국은 이러한 사이비 연립하에서 허가이, 박일우와 같은 소련파와 연안파 사람들을 대폭 기용하고 북한의 공산화를 조종해 나갔다.⁵⁾ 제3 단계의 ‘단일 체제’ 수립은 1948년 2월 소련의 도움으로 김일성이 조선 인민군을 창설했을 때 이미 확실해졌다. 김일성은 단독 정부 수립에 북한이 앞장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고, 남한이

정부 수립 선언을 먼저 발표한 것도 사실이지만, 북한에서 새로운 공화국 성립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 작업은 그들의 공식적인 선언이 있기 전에 완료되어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소비에트화 과정은 주로 로마넨코(Andrei A. Romanenko) 소장과, 그의 밑에서 민간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이그나티에프(Alexandre M. Ognatiev) 대령의 지도와 감독 아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⁶⁾ 특히 이그나티에프 대령은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구상한 중심 인물이었으며, 로마넨코 소장과 함께 김일성을 최고 권력자의 자리로 끌어올린 사람이다. 로마넨코 소장은 4만여 명의 점령군 주력 부대를 이끌고 북한을 해방시켰던 소련 극동군 제 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Ivan M. Chistiakov) 대장의 휘하에서 점령 당국의 민정 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인데, 그는 해방 직후 북한에서 정치 지도자들을 다루는 일을 맡았고, 조직 업무에 매우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스차코프 대장의 주장을 따르면, 로마넨코 소장은 프리모리(소련 연해주) 지역에서 북한 점령을 준비했고, 각 분야에 유능한 전문가들을 데리고 북한에 들어왔다고 한다.⁷⁾ 이그나티에프 대령도 로마넨코 소장이 선발한 전문가들 중의 한 사람으로 주로 민사 문제를 다루었다. 이그나티에프 대령은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그들과 함께 행정 기구의 수립에 관해 밤새워 토의하면서 일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소비에트화 과정을 직접 지도하였을 뿐 아니라, 김일성의 권력 장악과 유지를 지원하기도 했던 것이다. 치스차코프 대장과 로마넨코 소장이 차례로 북한을 떠난 뒤에도 그는 북한에 계속 남아 김일성을 도와주었고, 북한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후 1948년 10월에 소련 대사관이 설치되자 슈티코프(Terentii F. Shtykov) 대사⁸⁾의 고문으로서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에서 일하게 되었다.

북한의 공산 정권 수립을 주관했던 로마넨코 소장이나 이그나티에프 대령 같은 소련 점령 당국의 지도부는 왜 북한의 지도자로 김일성을 선택하였는가. 이는 소련 점령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김일성이 최상의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소련 점령 당국이 필요로 한 것은 그들의 명령을 시행할 사람, 우두머리 한 명이었고 그 당시로서는 김일성이 그 적임자로 판단되었던 것이다. 해방 당시 국내에는 김일성의 빨치산들 외에도 소위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 등으로 알려진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국

내파는 박헌영을 우두머리로 하여 국내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전개했던 사람들이고,⁹⁾ 연안파는 무정 장군처럼 중국 공산당과 함께 중국 대륙에서 활동하다가 귀국한 공산주의자들을 일컫는 것이고, 그리고 소련파는 소련 점령군과 같이 북한에 들어온 소련계 한인들을 말한다.¹⁰⁾ 김일성을 소련계 한인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김일성과 그의 부하들은 일본에 대항해 만주 벌판에서 유격 활동을 벌였던 빨치산들이다. 그런데 김일성과 그의 빨치산은 다른 공산주의자들과의 경쟁에서 비교적 유리한 입장에서 설 수 있었다. 왜냐하면, 소련은 한국의 공산주의 혁명지도자나 혁명 조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북한에 들어왔고, 과거에 국내의 지하 공산주의자들과 연계를 맺고 모스크바에서 활동했던 이름난 조선 공산주의자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북한에 들어온 소련파들은 주로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Uzbekistan)과 카자흐스탄(Kazakhstan) 공화국에서 온 한인 2세 및 3세대들로서 한국에 별다른 애착이 없었다. 그들은 소련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든지 소련으로 돌아갈 사람들로 인식되어 있었다.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던 연안파는 대부분 조선 의용군 출신이었고, 그들은 중국 대륙과 만주에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권력 투쟁이 벌어져 만주에서 양쪽 군인들이 대결하게 되자 북조선에 들어오지 않고 만주에서 중국 공산군을 도와 싸웠다. 그들은 해방된 조선에 뒤늦게 들어왔을 뿐 아니라 들어와서도 남북으로 갈라져 분산되어 있었다. 그리고, 과거의 혁명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토착 공산주의자들, 즉 국내파의 지도자들은 소련 당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았다. 민족주의자나 공산주의자를 막론하고 뛰어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미군들을 상대로 협상을 시도하면서 서울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은 평양에 있었고, 항일 유격대의 경력을 지닌 공산주의자였으며, 1940년대 초반에 소련의 극동 지역에서 훈련받았고, 소련군에게 알려져 있었다. 소련 점령 당국이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결정한 것은 그가 북한 공산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당한 사람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김일성이 소련 점령 당국에 선택되어 그들의 비호를 받기는 했으나 다른 공산주의자들과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였다. 김일성이 북한의 권

력 투쟁에서 제일 중요하게 이용한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장악한 북한의 군부였다. 김일성의 빨치산들은 북한에 들어와서 보안대를 조직하였고, 북한에서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나 군대를 양성하는 학교는 전부 빨치산들의 지도하에 있었다. 1945년 11월에 조직된 평양 학원은 김책이 교장이었고 1946년 2월에 조직된 보안국에는 최용건이 국장으로 있었으며, 중앙 보안 간부 학교에서 배출된 2만여 명의 북한 군인들은 빨치산 안길의 지휘 아래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군 다음으로 북한의 당도 장악하였다. 그러나 당의 장악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고 오랜 시일을 두고 노력하였다. 김일성은 먼저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서울에서 이탈시켜서 북조선 공산당으로 독립시키고 연안파의 신민당과 북조선 공산당을 통합하여 북조선 노동당을 수립하는데 성공했다.

1946년 8월의 북조선 노동당 제1차 당 대회에서는 권력이 계파간에 균형을 이루고 있었고, 김일성과 그의 빨치산 세력은 상대적으로 아주 미약하였다. 연안파의 김두봉이 중앙 위원회 위원장이었고, 김일성은 국내파의 주영하와 함께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 5명의 정치 위원회는 연안파의 김두봉과 최창익, 소련파의 허가이, 국내파의 주영하, 그리고 김일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중앙 위원회 위원으로 43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서 김일성의 빨치산은 겨우 4명(김일성, 김책, 안길, 김일)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48년 3월에 열린 제2차 당 대회의 사정은 조금 달랐다. 김일성의 지위는 여전히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이었지만, 그는 당의 결점들을 지적하고 종파주의와 개인 영웅주의를 통렬히 비난하는 보고를 하였다.¹¹⁾ 김일성의 화살은 서울의 박헌영과 조선 공산당을 지지했던 북한의 토착 공산주의 지도자들, 즉 오기섭, 정달현, 최용달, 이순근, 장시우, 장순명 등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 당시만 해도 조선 공산당 지도자들과 김일성 사이에는 이념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박헌영을 위주로 한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북조선 분국에 있던 지도자들은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으로부터 북조선 공산당으로 변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김일성이 북조선 공산당의 지도권을 쥐는 데에도 찬성하지 않았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북조선 공산당과 신민당을 합하여 북조선 노동당과 같은 대중당을 조직하는 것도

찬성하지 않았다. 그들은 레닌이 주장한 대로 지도적이고 혁명의 신념이 확실한 ‘동무’들로 조직된, 노동당이 아닌 공산당을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오기섭과 같은 함경도 공산당 지도자는 직업 동맹의 역할을 가지고 김일성에게 이견(異見)을 제출하였다.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라도 노동자는 국가 기업에서 파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김일성으로부터 개인 영웅주의라고 비난을 받았다. 김일성의 비난에 이어 그들에 대한 공격을 떠맡고 나선 것은 허가이, 한일무, 박창옥, 김열 같은 소련계 한인들이었다. 소련파는 소련 집령 당국이 선택한 김일성을 지지하였다. 그들은 국내파들이 새로운 공산주의 이론과 실천 강령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마치 소련에서 나온 자기들만이 마르크스주의의 권위자인 양 행동하였다. 이 싸움에서 연안파는 중립을 지켰고 김일성은 연안파의 누구도 공격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그의 빨치산 동료들도 북한의 토착 공산주의자들을 비난하는 일에 나서지 않았다. 이들 토착 공산주의자들은 물론 다양한 이유로 비판을 받고 쫓겨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김일성이 당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다는 점이다.¹²⁾

김일성과 그의 빨치산 세력은 이 제2차 당 대회에서도 여전히 열세에 있었지만, 제1차 당 대회에 비하여 그들의 권력 강화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67명의 중앙 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37명이 새로 뽑혔는데 거기에 김일성의 빨치산들 중 4명(강건, 김광협, 김경석, 박금철)이 더 포함되었다. 또한 8명 이상의 소련계 한인들도 추가로 중앙 위원에 선출되었다. 5명의 정치 위원회 위원들도 모두 재선되었고, 빨치산 김책과 연안파의 박일우가 새로 정치 위원에 선출되었다.¹³⁾

1948년 남북에 각기 다른 정부 수립이 선포되고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 계열의 공산주의자들이 월북하는 변화가 있자, 그 해 9월 말에 열린 중앙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당의 활동을 통제할 목적으로 조직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자신이 위원장 자리에 앉고 허가이, 김열, 박창옥, 박영선 등 4명의 소련계 한인을 위원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당의 부위원장도 주영하에서 소련파의 허가이로 교체되었다. 김일성은 자신이 당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전개했고, 1949년 6월 24일에 남로당과 북로당의 중앙 위원회 연석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 조선 노동당

이라는 공식 당명 채택과 함께 그는 마침내 당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남로당 출신의 국내파 박헌영이 제1 부위원장에, 소련파 허가이가 제2 부위원장으로 뽑혔고, 9명으로 구성된 정치 위원회 위원에는 김일성, 박헌영, 허가이를 포함해서 남로당 계열의 이승엽, 김삼룡, 허헌, 연안파의 김두봉과 박일우, 그리고 빨치산 출신의 김책이 선출되었다.

이러한 경과를 밟아 김일성은 북한에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고 군과 당을 장악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정권 수립 과정과 권력 균형으로 세워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는 남한 인민의 해방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었고, 그들은 무력적인 방법으로 조국 통일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전쟁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하자 북한의 지도층 내부에서는 심각한 권력 투쟁이 유발되기 시작한다.

3. 한국 전쟁과 국내파의 도전

한국 전쟁중에 김일성과 제일 먼저 대결한 사람은 소련파의 허가이였지만, 김일성에게 직접 조직적으로 도전해 온 무리는 북한 초대 내각의 법무상 이승엽을 포함한 12명의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었다.¹⁴⁾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통일하는 데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라는 김일성의 주장에 회의를 품게 되었으며, 그들의 지도자로 박헌영을 추대하고자 하였다.

이승엽 일파는 김일성을 실각시키기 위해 전쟁이 진행중이던 1951년 9월부터 군사 쿠데타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엽 자신이 최고 사령관이고, 박승원은 총사령관이었으며, 배철은 군사 기구를, 김응빈은 무장단을 각각 이끌기로 되어 있었고, 조일명과 임화는 통신과 선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1952년 9월에 이승엽 일파는 박헌영이 없을 때 그의 집에서 쿠데타가 성공한 뒤에 수립될 새로운 정부까지 조직했다고 한다. 이승엽 등은 그들의 지도자 박헌영을 수상에 추대하고, 주영하와 장시우는 부수상, 박승원은 내무상, 이강국은 외상, 김응빈은 무력상, 조일명은 선전상, 임화는 교육상, 배철은 노동상, 윤순

달은 상업상, 이승엽은 새로이 창설될 공산당의 제1서기로 각각 내정하였다.¹⁵⁾ 김일성 정권을 전복시키려 했던 군사 작전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평양 근처에 배치된 군대를 이용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⁶⁾ 정확한 당시 상황은 비밀로 남아 있지만, 그들의 쿠데타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 모두 1953년 초에 체포되었다.

이승엽을 비롯한 12명은 한국 전쟁이 종결된 지 사흘 뒤 1953년 7월 30일에 세 가지 죄상으로 기소되었다. 즉, 이승엽 등은 미제의 간첩죄, 남한의 인민 역량을 무차별하게 약화시킨 죄, 그리고 국가 전복죄의 혐의를 받았다. 기소된 12명 중 10명은 사형을, 그리고 윤순달과 이원조는 각각 징역 15년형과 12년형을 선고 받았다.¹⁷⁾ 세 가지 죄상 중 국가 전복죄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받은 사형 선고나 15년, 12년형은 마땅한 처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김일성으로서는 자신의 정권 보존을 위한 당연한 대응 조치였다고 합리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간첩죄와 남한의 인민 역량 약화라는 죄가 추가되었는데 간첩죄는 그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남한의 인민 역량을 약화시켰다는 죄상에는 김삼룡과 이주하가 1950년 3월 27일에 체포될 때 조용복, 백형복 등이 이승엽의 부하인 안영달과 공모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¹⁸⁾ 보다 중요한 것은 이승엽이 해방된 서울에서 서울 시장과 임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인민들에게 난폭한 행동을 했으며 남로당 계열의 자기 추종자들을 조직에 배치하였다는 점이다.¹⁹⁾ 이승엽은 경기도 인민 위원회에 박광희, 충북에 이성경, 충남에 박우현, 전북에 박중표, 전남에 박영발, 경북에 박종근, 경남에 남경우, 그리고 서울시에 박응빈을 임명하고 과거 남로당의 세력을 재건하려고 애썼다. 이들은 해방된 남한 각 지역에 인민 위원회를 복구하고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토지 개혁²⁰⁾과 다른 사회 개혁들을 추진해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승엽은 토지 조사 위원회를 조직해서 인민의 토지를 무자비하게 몰수하는 등 잔학 행위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기소된 세 가지 죄상 중에서 가장 근거가 있는 죄명은 무력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김일성 대신 박헌영을 옹립하려고 시도한 것이지만, 사실상 기소된 12명 가운데서 단 한 명도 김일성의 빨치산을 대적할 만큼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승엽과 조선 공산당원들은 그들에게 썩위

진 모든 죄상을 인정했다. 자기들이 미국의 스파이들이고, 김삼룡과 이주하의 체포를 주선했으며, 남한에서 진보적인 민주 세력의 약화를 위해 같은 공산주의자들을 학살했고, 김일성 정권의 전복을 계획했으며, 새로운 당과 정부를 구상했다고 시인했다. 그들은 모두 기소된 형량 그대로 이원조는 12년형, 윤순달은 15년형을,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사형에 처해졌다.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박승원의 진술은 한국 공산주의자들의 말로를 올바르게 지적해 주고 있다. 그는 모든 혁명가는 자기의 죄가 아무리 크고 엄청난지라도 조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를 가지고 있으나 자기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의 말처럼 자본주의의 남한도, 김일성의 북한도 한국 공산주의자들의 조국이 되지 못했다.

이승엽과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추대하려 했던 박헌영도 당에서 축출되고 체포되었으나, 그의 추종자들과 같은 법정에서 재판받지는 않았다. 그는 2년 4개월이 지난 1955년 12월 3일에 기소되었는데 그에게 내려진 죄상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씌여진 것과 똑같았다. 박헌영은 자신이 미국 스파이의 우두머리였고, 남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무차별 살해를 명령했으며, 무력으로 정부의 전복을 도모했던 동지들의 행동에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시인했다. 박헌영에게도 물론 사형이 선고되었고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다. 박헌영의 처형을 마지막으로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의 세력은 몰락하였고,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극소수만이 전쟁 이후에도 그들의 자리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숙청된 인사들의 자리는 소련파 인물들, 즉 박창욱, 박영빈, 임해, 김승화, 남일 등으로 메워졌다.

남로당 계열의 도전을 격파한 김일성은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자신의 옛 빨치산 동료들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김책이나 강건과 같은 빨치산은 전쟁중에 전사했지만, 조선 인민군은 여전히 최용건, 최현, 김광협, 등의 빨치산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1950년 12월 21일 중앙 위원회 제3차 전원 회의에서 전쟁 수행중의 과오로 문책당했던 김일, 최광, 임춘추 등의 빨치산들도 복권되었다.²¹⁾ 또한,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주류를 형성했던 남로당 계열의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의 숙청을 계기로, 김일성은 자신의 빨치산 투쟁이 한국 공산주의 혁명의 유일한 전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련계 한인들과 연안파의 도전에 대응하였다. 그는 한국인으로서의 주체

성 찾기에 착안하고 비한국적인 모든 요소를 비난하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가장 커다란 곤경에 직면하게 된 사람은 소련계 한인들이었다.

4. 반소 운동과 소련파

소련계 한인들이 국내파의 공산주의자들처럼 단결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김일성에게 도전해 온 적은 없었다. 그들은 대부분 소련에 귀화한 사람들로서 소련 점령군과 함께 북한에 들어왔고, 초창기의 북한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그들은 국내에 뿌리가 없었으며 원하면 언제든지 소련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고, 실제로 1948년 말 소련군이 철수할 때 많은 소련계 한인들도 같이 귀국하였다. 그들은 남로당 계열의 공산주의자들과는 달리 서로간에 잘 알지 못했고 상호간에 연대성이 결여된 채 행동했으며, 어떤 정치적 문제에 관하여 조직적인 대응을 보이지도 않았다. 따라서, 그들의 김일성에 대한 도전과 그로 인한 숙청도 일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련계 한인들 중에서 김일성에게 정면으로 도전해 온 사람은 소련파의 최고 실력자 허가이었다. 허가이는 국내파의 도전에 앞서 1951년부터 노동당의 당 조직 문제와 당원 축출 문제를 놓고 김일성과 대립하였다. 두 사람간의 갈등은 1950년 말 조선 노동당 중앙 위원회 제3차 전원 회의에서 비롯되었는데, 김일성은 이 회의에서 매우 강경한 어조로 연설했다. 그는 전쟁을 통하여 충성스런 당원과 그렇지 못한 당원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당내 위치에 관계없이 충성스럽지 못한 당원들을 엄단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일성은 이 사업이 적절한 법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무차별적인 처벌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사업은 허가이가 주도하는 검열 위원회의 임무였는데, 1950년 12월부터 중앙 위원회 제4차 전원 회의가 열린 1951년 11월 1일까지 거의 1년 동안 허가이는 김일성의 지시를 어기고 하위 당원에 대한 무차별 출당 처분을 단행해 버렸다. 즉, 60만 당원 가운데 45만 명을 추방하였던

것이다. 그는 새 당증을 발급하면서 이와 교환할 구(舊)당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에 협조한 자로 간주하고 처벌했다. 사실상 많은 북한 주민들이 유엔군의 일시적인 점령 기간중에 당증을 버렸거나 분실하였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북 순천 군당의 경우 당원 164명 가운데 154명이 당증을 잃어버린 죄로 축출당했던 것이다. 김일성은 1951년 8월 1일 조직 위원회 회의에서 허가이의 가혹한 처사에 주의를 주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허가이는 협조를 거부했다.²²⁾

이처럼 김일성과 허가이가 서로 대립하게 된 문제의 핵심은 소련식의 엘리트 중심의 공산당을 만드느냐, 아니면 소련 점령 당국이 김일성에게 지시했듯이 대중적인 당을 만드느냐 하는 당 조직 이념 차이에 있었다. 소련 점령 당국으로부터 조직 전문가로 불렸던 허가이는 당원 6만 명 미만의 엘리트 공산당을 주장했고, 당원들은 주로 산업 노동자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북한에는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게 대중적인 당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북한 주민의 8할이 농민인데도 불구하고 있지도 않은 산업 노동자를 위해 농민의 입당을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일성은 축출당한 사람들을 복당시키도록 명령했고, 1년이 지난 1952년 12월 15일의 중앙 위원회 제5차 전원 회의 때까지 축출당한 전체 당원의 69.2%가 복권되었다. 그리고 더 많은 당원들을 모집하였다. 허가이는 제거되었고, 1953년 8월 4일에 열린 중앙 위원회 제6차 전원 회의에서 그의 자살이 발표되었다. 김일성은 허가이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비겁한 행위를 했다고 그의 자살을 오히려 비난했다.

김일성의 허가이에 대한 숙청은 국내외의 정치적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면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을 한국 전쟁의 패배에서 구해 준 것은 소련군이 아니라 중국 의용군이었고, 소련에서는 스탈린이 사망했으며, 서방 세계와의 평화 공존을 주장하는 새 지도자들은 스탈린 격하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태는 북한에서 자신의 권위주의적 권력을 수립하기 위해 스탈린을 모방하려고 애쓰던 김일성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 게다가, 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이그나티에프 대령은 전쟁 초기에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고, 슈티코프 대사도 소련으로 돌아

갔다. 북한 정치에 있어서 소련의 영향력은 확실히 줄어들었고, 소련계 한인들의 힘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은 자신을 권좌에 앉혀 준 소련군이 북한에서 계속 지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감히 언급조차 할 수 없는 말들로 허가이를 고발했다.²³⁾ 그는 허가이를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당박사’라고 비난하면서 당 조직의 전문가라고 불렀던 소련 점령 당국의 칭찬을 비웃었다.²⁴⁾ 또한, 김일성은 허가이가 마치 소련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의 대변인이나 되는 듯이 행동하면서 개인 영웅주의에 빠지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꼬집기도 했다. 허가이는 잘 맞지도 않는 소련의 방식을 북한에 기계적으로 강요했다고 더욱 비난받았고, 그러한 그의 태도는 관료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것으로 지적당했다.²⁵⁾ 이러한 반소적인 입장에서 김일성은 더욱 주체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자신의 빨치산들을 제외하고는 해외에서 혁명 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매도하기 시작했다.

5. 연안파의 도전

1956년 6월과 7월에 김일성이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 국내에서는 최창익이 이끄는 연안파의 주도적 인물들이 김일성과 그의 권위에 도전하여 집체적 지도 체제를 수립할 것과, 엄격하게 통제되어 온 당 기구를 완화할 것을 모의하였다. 연안파의 이 같은 시도는 다분히 소련에서의 스탈린 격하 운동과 집체적 지도 체제의 확립에 영향 받은 것이었다.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ev)가 소련의 당 정책 변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1956년 2월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였고, 그로부터 두 달 뒤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조선 공산당 제3차 당 대회가 개최되었다. 제2차 당 대회 이후 8년 만에 개최된 이 회의에는 소련 대표단을 이끌고 브레즈네프(Leonid Brezhnev)가 참석하였고, 그는 축하 연설을 통해 조선 노동당 제3차 당 대회는 최고위에서 말단에 이르는 모든 당 조직에 레닌의 집체적 지도 체제를 도입하는 데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⁶⁾ 그러

나 김일성은 소련에서의 스탈린 격하 운동과 집체적 지도 체제 확립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국내파의 반당·반혁명 분자에 대한 비난을 반복하고 당을 더욱 강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일성은 제1차 5개년 경제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소련으로부터 더 많은 원조를 얻어야 했고, 이러한 현실적 필요 때문에 그의 반소적 입장은 억제되었다. 또한, 박창옥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소련파와 김두봉, 최창익 등 다수의 연안파 인물들이 이 당 대회에서 여전히 당 고위직에 선출된 탓으로 김일성은 드러내 놓고 자신의 빨치산 활동이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주체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미묘한 상황 아래서도 김일성의 빨치산들은 제3차 당 대회에서 만만치 않게 등장하였고, 아직 지배적인 세력은 못 되었지만 크게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즉, 중앙 위원회의 정위원에는 11명이, 후보 위원에는 6명이 선출되었고, 6명의 최고위급 중앙 위원 가운데서는 4명이 빨치산 출신이었다.²⁷⁾

제3차 당 대회가 끝난 지 채 2개월이 안된 1956년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김일성은 1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소련과 동유럽의 9개국을 방문하고 경제 원조를 요청하였다. 방문 성과는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었고,²⁸⁾ 김일성의 부재중에 연안파가 정권에 대한 도전을 음모하였다. 이 때 남한에서는, 연안파의 군 지휘관들이 휘하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김일성과 그의 빨치산 세력을 전복시키려 했던 극적인 시도에 관해 상세한 기사들이 나돌았고 김일성은 여정을 단축해서 일찍이 평양에 돌아왔다고 보도하였다.²⁹⁾ 이것은 실제와 달리 김일성에 대한 반대를 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에서 과장되었고, 신빙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안파가 실제로 김일성을 군사적으로 밀어내려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김일성 자신도 최창익과 그 일파가 폭동을 일으킬 음모를 꾸몄다고 말했으나, 연안파의 군사적 모험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 김일성은 예정대로 방문 일정을 끝마치고 귀국했고, 자신의 방문 성과에 대하여 보고하기 위해서 1956년 8월 30일에 중앙위원회 '8월회의'를 개최하였다. 연안파의 김일성에 대한 도전은 바로 이 회의를 통해 외부에 노출되었고, 김일성의 지도력이 공개적으로 비판받게 된 것이다.

‘8월회의’에서 직업 총동맹의 위원장인 연안파의 서휘는 직업 동맹의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정치적 자주성과 파업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³⁰⁾ 연안파의 윤공흠은 김일성에 대한 개인 숭배를 비판하고 소련의 경우처럼 북한에도 집체적 지도 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최창익은 북한 경제 발전의 난관들, 특히 중공업의 치중을 비난하고 생활 필수품의 생산 확대를 위해 경제 계획을 개편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은 최창익이 심지어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중립화에 기초한 정치 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고 비난했다.³¹⁾ 김일성은 군부 안에서도 김을규와 같은 연안파들이 빨치산의 전통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김을규는 인민군의 전통이 비한국적인 만주에서의 빨치산 활동에서 계승된 것이 아니라 일제 치하 북한에서의 치열한 농민 운동에서 계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역시 연안파로서 조선 인민군정치국장이었던 최월종과 최종학 같은 군의 주요 지휘관들도 최창익 일파의 음모에 가담했는데, 그들의 군사적인 움직임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연안파의 도전에 대해 김일성은 그들을 당내 파괴 분자로 지목하고 비난을 퍼부었으며, 그들을 분쇄하기 위해 허가이의 방법, 즉 당중 재발급 사업을 벌이고 모든 당원을 철저히 조사하였다. 이 사업은 1956년 말부터 1957년 초에 걸쳐 시행되었다. 연안파의 인물들은 국내파들의 경우와는 달리 기소되었지만 처형당하지는 않았고, 당과 정부로부터 축출되었다. 이 때 직접적인 가담자는 아니었지만 연안파의 최고 지도자 김두봉도 그들과 함께 숙청당했고, 그들과 협조했던 소련파의 박창욱, 그리고 연안파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당에 충성이 미약한 죄로 소련파의 박의완과 북한의 토착 공산주의자 오기섭 등도 숙청당했다.³²⁾

김일성이 소위 반당적 요소를 모두 제거하고 국정에 복귀하는 데에는 한 해가 걸렸다. 1957년 9월 김일성은 비로소 제2기 최고 인민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는데, 이는 제1기 최고 인민 회의가 소집된 지 10년 만이었다. 이 선거에서는 약 215명의 대표가 선출되었는데 제1기 대의원들 중에서 75명이 재선되고 나머지 140명은 새로이 선출되는 대폭적인 교체가 있었다.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의장에는 빨치

산 출신의 최용건이 뽑혔고, 제2차 내각의 요직은 김일(부수상), 김광협(국방상)과 같은 빨치산들로 채워졌다. 김일성과 그의 빨치산 동료들은 그들에게 도전 가능한 모든 집단들을 제거했고, 1958년 2월 8일 조선 인민군 창설 10주년 기념 연설에서 김일성은 처음으로 인민군은 만주에서 전개했던 그의 빨치산 항일 무장 투쟁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6. 빨치산 군인들의 득세와 제거

1961년 9월에 열린 제4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오랫동안 그를 지지해 왔던 옛 빨치산 동료들을 당과 정부, 그리고 군의 요직에 등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외적으로 1960년대 초반에는 스탈린 격하 운동과 흐루시초프의 수정주의에 반대하여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후반기에는 중국 문화대혁명과 교조주의적이고 맹목적인 홍위병의 등장으로 인해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었지만, 김일성은 북한의 자주성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자신이 추구했던 이 두 가지 정책으로 인하여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중국과 소련이 북한의 경제발전이나 군사력의 현대화를 원조하지 않음으로써 자주성의 추구가 가져온 대가에 직면하였고, 그가 의지해 왔던 빨치산 장군들이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대두하였던 것이다. 김일성은 가장 신임했던 빨치산 장군들을 마지막으로 제거했고, 이로써 자신의 1인 절대 권력을 확보하였다. 이 때부터 김일성은 자기 자신과 그의 가계, 그의 혁명 활동, 그리고 그 밖에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상화시키는 작업에 돌입하였고,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김일성의 왕국으로 만들어 갔다.

김일성의 빨치산들이 명백한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1961년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4차 당 대회에서였다. 이 대회에서는 85명의 중앙 위원회 위원들이 선출되었는데, 이는 71명이었던 제3차 당 대회 때보다 14명이 증가된 숫자였다. 85명의 위원들 가운데에 28명만이 재선되었고 나머지 57명은 새로 뽑혔는데, 이미 사망한 유경수를 제외한 빨치산

들은 모두 재선되었다.³³⁾ 1950년대 말까지 완전히 제거된 파벌들 중에서는 김창만이나 남일같이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짐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재선되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새로 선출된 57명 중에 25명이 빨치산 출신들이었고, 21명 정도는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이나 조선 인민군으로부터 새롭게 충원된 젊은 간부들이라는 점이었다.³⁴⁾ 빨치산 출신이 아닌 사람들도 얼마간 있었는데, 그들은 김일성의 동생인 김영주나 과거에 빨치산이었던 이제순의 친척 이효순처럼 빨치산들과 직접 가족 관계로 연결되어 있거나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와 같이 빨치산 출신이거나 그들에 의해서 훈련되었거나, 또는 그들과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 위원회의 80%를 차지했다. 1946년 제1차 당 대회에서 4명의 중앙 위원으로 출발했던 빨치산들은 15년 만에 다른 파벌들을 모두 제거하고 당을 독점하게 되었다.

중앙 위원회 간부 선거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했다. 당 대회의 마지막 날에 개최된 중앙 위원회 제1차 전원 회의에서 김일성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최용건, 김일, 박금철, 김창만, 이효순 등 5명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중에서 김창만이 유일하게 연안파 출신이었다. 그리고 상임 위원회 정위원 11명, 후보 위원으로 4명이 각각 선출되었는데 김창만과 소련파 출신의 남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치산 출신이거나 그들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제4차 당 대회는 김일성과 그의 빨치산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었으나 빨치산들의 대대적인 권력 장악은 1960년대 말에 이르러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김일성은 제4차 당 대회에서 야심에 찬 7개년 경제 계획을 제시했고, 1962년 12월의 제3기 최고 인민 회의에서 빨치산 출신들과 관리 및 기술 전문가들로 제3차 내각을 출범시킨 뒤에는 경제 발전과 체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1960년대 전반에 소련과 갈등을 빚게 되고, 그 여파로 소련의 기술자들이 철수하고 경제 원조가 중단됨으로써 심각한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게다가 흐루시초프가 쿠바 미사일 사건에서 미국에 굴복한 것은 빨치산 장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독자적령 군사력 증강을 심각하게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1963년 2월 8일 조선 인민군 창군 15주년 기념식에서

북한 인민은 경제 발전면에서 자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같은 해 10월 5일 김일성 군관 학교 제 7차 졸업식 때 김일성은 북한의 국방 문제를 논의하면서 북한은 국방에서 자위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북한에서는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비를 늘리고 국방을 강조하는 여파로 빨치산 장군들이 정치에 득세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부터 1966년에 이르는 동안,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부추기고 빨치산 장군들의 정치적 우세를 뒷받침하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은 남한 정치의 변화에도 있었다. 즉 '5·16혁명'으로 군사 정권이 등장했고 그들은 일본과 국교 정상화 체결로 유대를 강화하였으며, 미국을 도와 월남전에 군대 파병을 결정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켰고 정치적 우위를 점한 빨치산 군부 세력은 그 대응책으로써 북한을 군사화하는 한편, 일련의 대남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게 되었다. 조선 인민군 창군 20주년이 되던 1968년 2월 8일을 앞두고 그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게릴라 부대의 대남 침투 계획을 수립하고, 1968년 한해 동안 이를 적극적으로 감행해 나갔던 것이다. 예를 들면, 1968년 1월에는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고, 남한 내 혁명 세력 양성을 위해 소위 '통일혁명당사건'을 조종하기도 했다.³⁵⁾ 그 밖에도 울진 근방의 무장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게릴라 활동이 남한에서 자행되었지만, 그들의 대남 무력 투쟁은 건국 이후 가장 강력한 반공 체제를 확립하고 있었던 남한의 군사 정부에 의해 모두 분쇄되었다. 특히, 우발적으로 빚어진 미국의 정보함 푸에블로(Pueblo)호 나포 사건은 빨치산 장군들을 고무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김일성으로 하여금 군사적 모험주의의 위험을 인식케 하였고, 빨치산 장군들의 위세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968년 말에 이르러 김일성은 빨치산 출신 장군들의 지나친 권력 행사와 북한의 군사화가 안고 있는 폐단에 눈을 돌리고 그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빨치산 장군들의 대남 무력 투쟁은 남한 국민의 단결이라는 역효과를 낳았고,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7개년 경제 계획을 완수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과거 다른 파벌들의 숙청 때와는 달리 김일성은 그의 빨치산 출신들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삼가했고, 그들의 몰락은 공

식으로 발표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제일 먼저 대남 침투 공작의 실패에 대한 문책으로 연락국 총책 허봉학은 빨치산이 아닌 민간인 김중린으로 교체되었다. 허봉학의 축출에 이어 약 10명의 고위 장군들이 1969년에 제거되었는데, 여기에는 빨치산 출신의 고위 장군으로 당비서 겸 정치위원이었던 부수상 김광협, 민족 보위상 김창봉, 인민군 총참모장 최광, 정치 위원인 해군 제독 이영호, 당비서 겸 사회 안전상 석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그들의 추방은 중국 홍위병의 활동과도 관계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중 중국 홍위병은 1967년부터 김일성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김일성을 독재자요 수정주의자로 매도하고, 그의 생활이 황제의 호화스러움을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 세력간의 알력을 밝히고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조선 인민군 소속 장군들에 의해 김일성이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 <조선중앙통신>은 즉각적으로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부인하고 나섰지만, 1968년과 1969년에 걸친 빨치산 장군들의 숙청은 이러한 소문을 뒷받침할 만한 것이었다.

빨치산 장군들의 숙청을 둘러싼 자세한 상황과 이 숙청에 몇 명이나 관련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미 언급한 사람들 외에 최민철, 정병갑, 김자린, 김창덕 등의 빨치산 출신 장군들도 같이 제거되었다. 그들의 제거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빨치산 출신들에 대한 조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결합하여 평생 그를 뒷받침해 왔던 빨치산들이 붕괴되었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그의 오랜 혁명 동지라 하더라도 1960년대 말에 이르러 더 이상 그들의 지지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지위가 확고해지고, 자신의 지지 세력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군사 집단의 위협으로 여겨지자 과감하게 제거해 버렸다. 빨치산 장군들의 제거로 김일성은 1960년대의 군사 정책을 마감했고,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자 1970년 11월의 제5차 당 대회를 통해서 전문 기술 관료들과 빨치산의 전통에 따라 훈련받은 젊은 지도자들을 대폭적으로 기용하여 그 동안 소홀히 해 왔던 경제 개발 사업과 정치 체제 개선 작업으로 되돌아왔다. 제5차 당 대회에서 혁명 제2세대 총성 분자들의 부상과 함께 두드러지게 눈에 띈 것은 김영주, 김성애를 비롯해서 박성철, 양

형섭, 허담 등 김일성 직계 친척의 등용이었는데, 이것은 장차 김일성이 자신의 독재와 그의 친척들의 정치 기반을 강화해 나가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7. 김정일의 대두

1970년대의 국제 정치적 변화는 김일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는 스탈린의 충실한 추종자로서 미·소 냉전 기간 동안 언제나 사회주의 진영의 명분을 옹호해 왔었다. 그러나 1970년에 들어와서 미국과 소련이 더욱 화해 분위기로 나아갈 뿐 아니라 미·중국 관계가 정상화되고, 소련과 중국이 각각 일본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등 양 진영간에 명백한 변화의 바람이 일게 되자 김일성도 새로운 변화에의 적응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는 대외적으로 제3세계와의 관계를 증진시키려 하였고, 조국 통일을 위해 남한과의 대화를 시작하려고 노력했다. 제3세계와의 교섭에서는 김일성이 북한을 비동맹 회의에 가입시키는 데에 성공했고 많은 제3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유엔에서 친북한 결의문을 통과시키는 데에 성공했으나, 자신을 제3세계의 지도자로 부각시킨다는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1972년 '7·4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으나, 남한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태도가 바뀐 것은 아니었다. 남북 대화를 통해 양측은 서로의 차이를 새삼 확인하고 남북한 모두 자신의 정치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고안해 냈다. 즉, 남한에서는 1972년 10월에 '유신 헌법'을 제정하고 박정희의 집권 연장과 아울러 반공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였던 반면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1972년 12월 신헌법을 제정하고³⁶⁾ 후계자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북한의 신헌법 제정은 1948년 9월에 공화국이 수립된 후 처음 있는 개정으로서 김일성식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성문화인 동시에 김정일 후계 문제의 사전 작업이었다. 신헌법의 근본적인 변화는 당의 운영과 정부 기능의 명확한 분리에 있었고,³⁷⁾ 당의 정책 결정 기능의 대부분을 정부에

새로이 신설된 중앙 인민 위원회로 이관하는 한편, 당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능이 축소된 당 기구를 김정일에게 맡겨서, 김일성이 당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것처럼 아들 김정일도 당을 효과적으로 장악케 함으로써 장차 권력 승계에 대비하고자 하였던 것이었다. 김일성은 내각의 수상에서 국가 주석으로 격상되었고, 당 대신 막강한 힘을 지니게 된 중앙 인민 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함으로써 1인 절대 권력을 합법화하였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은 일단 당 사업에서 물러나 정부의 행정에만 관여하고, 모든 국가 주요 정책들은 과거처럼 당 정치국과 중앙 위원회에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인민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결정되었다. 또한 새로운 내각인 정무원은 국가 주석이 지도하는 중앙 인민 위원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 기관으로 격하되었다. 이러한 당에서 정부로의 권력 이전이 보다 확실하게 파악되고,³⁸⁾ 후계자 선정 문제와의 상호 연관성을 감지할 수 있게 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였다.

김일성이 신헌법 제정을 계기로 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자신의 후계 작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소련과 중국의 경험들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혁명 동지였던 그의 빨치산들이 숙청당하거나 사거(死去)해 감으로써, 그의 사후에 일어날 북한의 장래를 생각지 않을 수 없게 된 까닭이었다.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후 그의 후계자들의 격하 운동을 목격한 김일성은 자신의 사후에 그를 배반할 가능성이 없는 아들을 후계자로 미리 내정하였다. 그리고 그의 생전에 후계자로서 김정일의 권력 체제를 확립시키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신헌법에 의하여 기능이 약화된 당을 후계자 김정일의 훈련 도장으로 만들었고, 그를 위해 소위 '3대혁명소조운동'을 전개하였다.³⁹⁾ 그는 또한 젊은이들과 당 관료들에게 김정일의 지도 아래 '3대혁명소조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격려하는 데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고, 이 소조 운동을 통해서 북한 인민들이 아들 김정일의 지도력을 인정하기를 기대했다. 1975년 가을부터는 김정일이 북한 인민들 사이에서 '당중앙'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기 시작했고 당으로부터 나오는 강령들은 '당중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하신 수령님과 당중앙', '어버이이 수령님과 당중앙', 또는 '새롭고 창조적이며 자주적인 당중앙의 지도' 등의 표현을 북한 사회의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은밀히 진행되어 왔던 김정일의 권력 승계는 1980년 10월에 개최된 조선 노동당 제6차 당 대회를 통해서 공식화되었다.⁴⁰⁾ 이 당 대회에서 김정일은 공개적으로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명되었고, 동시에 당 비서국의 비서로 임명되었다. 또한, 그는 서열 제4위의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 당 중앙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당 군사 위원회에서는 김일성과 오진우의 뒤를 이어 서열 제3위를 차지하게 되었다.⁴¹⁾ 김일성의 북한 통치 40년 동안 당내에서 이렇게 막강한 지위를 차지한 정치 지도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은 1972년에 시작해서 1980년 10월까지 김정일이 당의 운영권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뜻하는 동시에 김일성의 족벌 정치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제 김일성 부자의 권력은 도전받지 않는 봉건 사회의 제왕과 같은 것이고, 그들 앞에 남은 일은 북한 인민들의 끝없는 칭송을 요구하는 것뿐이다.

8. 결 론

김일성은 조국이 해방되자 국내에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는 채 귀국했지만, 그는 다른 공산주의자들과의 경쟁에서 유능하게 대처했고, 권력 투쟁에서 궁극적으로 성공했다. 그는 주변에 전개되는 정치 상황들, 즉 한반도의 분단, 소련군의 북한 점령, 한국 전쟁, 중국군의 북한 주둔, 그리고 중·소 분쟁마저도 자신의 정치적 도전자들의 제거와 권력 강화에 잘 이용하였다. 그는 한반도의 분단과 소련군의 보호로 북한의 지도자로 올라섰고, 한국 전쟁을 이용해서 정적을 숙청했지만 북한에 있던 중국 사람들은 북한의 내부 정치에 간섭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 전쟁에서 소련의 불참은 북한 정치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종결시켜 주었다. 김일성의 지도력에 도전했던 다른 그룹들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군사력을 결합하고 더욱 주도면밀하게 쿠데타를 계획했다면 아마 성공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김일성에게는 그에 대항해서 연합적인 공격을 전개할 만한 어떤 조직도 존재하지 않았다. 국내파 지도자들이 그에게 도전했

을 때에 연안파의 지도자들은 중립을 지켰고 소련계 한인들이 오히려 그를 도와 국내파를 제압했다. 연안파가 김일성에게 도전했을 때에 살아 남았던 국내파의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돕지 않았다. 그리고 소련계 한인들은 북한에 전혀 뿌리가 없었고 소련 점령군이 철수한 뒤에는 자연히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특히 소련파는 그들 사이에서도 서로 단결되지 못했고, 김일성의 뜻에 따라 특권을 누리거나 쉽게 제거되었다. 반대로, 빨치산 출신들은 그들의 지도자 김일성 아래 강하게 단결하여 숫적인 열세를 극복해 나갔던 것이다. 그들은 빨치산 시절의 강인한 생존력과 전투 경험을 발휘하여 군을 쉽게 장악하였고, 군의 지지를 바탕으로 당권 강화를 확보해 나갔다. 그들은 최후의 승리자였고 그들의 행위는 모두 합리화되었다.

김일성과 그의 빨치산의 승리는 북한 역사의 왜곡을 조장하였고, 빨치산 집단의 공산주의자들 외에는 모두 부정되었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북한의 역사는 모두 다시 기술되었고, 북한의 현대사는 김일성의 빨치산 활동과 업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오직 그의 혁명 활동만이 북한의 고유한 혁명 전통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이 한국 공산주의 혁명의 유일한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한국의 독립과 혁명을 위해서 싸웠던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불행한 일이다. 김일성이 만주에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조직했다고 주장하는 조선 혁명군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의 빨치산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 동북 항일 연군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첫째로는 중국에 사는 조선족의 자치를 위해, 둘째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 일본군에 대항했던 것이다. 그의 혁명 업적을 과장하고 날조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잘못은 김일성이 한국 공산주의와 혁명 정신의 전통을 이처럼 그릇된 기초 위에 세우려고 하는 점이다.

김일성의 빨치산들과, 중국 연안에서 돌아온 혁명 투사, 소련에서 들어온 동포들, 그리고 국내에서 싸우던 조선 공산당들이 모두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하려고 노력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들 사이에는 사상과 이념의 차이가 있었고, 그 이념의 차이로 서로 투쟁하기도 했다. 즉, 오기섭이나 서희 같은 사람들은 우리 나라 노동자들의 절대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의 정권을 상대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

다. 소련에서 나온 허가이 같은 사람은 당권 투쟁에서 조선 노동당의 성격을 규명하고, 대중 중심의 노동당보다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엘리트 중심의 공산당을 옹호하였다. 그리고 윤공흠이나 최창익과 같은 중국 연안 출신의 투사들은 스탈린 격하 운동과 함께 북한에서도 집체적 지도 체제를 선택하여 1인 독재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중공업 위주의 경제 발전보다 인민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경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반대한 빨치산이나 관료들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 모든 사상과 이념 차이를 자신의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을 제거한 후에도 그들의 사상이나 이념을 받아들여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 발전에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사상만으로 북한 인민을 무장시켰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북한을 소련이나 중국과 같은 대국들의 영향권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상이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에서는 이러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남용하여 '수령론'을 만들어 내었고, 김일성주의를 제창하면서 김일성의 1인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쓰고 있다.

김일성이 북한에 세운 공화국은 더 이상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인민의 행복 대신 그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물이 넘치고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는 김일성의 왕국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더 이상 봉사하지 않는다. 북한 인민들이 그와 그의 아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민족의 태양'이 북한 전역에 밤낮으로 비치고 있어서 인민들이 쉴 수도 없을 정도이다. 이 '은혜로운 태양'의 대가는 인민들의 끝없는 노동과 궁핍으로 보상되었다. 그는 일제 시대부터 한국 공산주의 혁명과 인민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싸우고 죽어간 모든 한국 공산주의자들의 포부와 열망을 배신한 것이다.

각 주

- 1) *Documents on Korean-American Relations, 1943-1976*,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6, pp. 28-29. 김일성은 1948년 3월의 제2차 당 대회 연설에서 이 두 포고문을 비교했다. 원문은 김일성,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 대회에서 진술한 당중앙위원회 사업 결산보고와 결론", 《김일성전집》(제1판) 제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pp. 38-39 참조.

- 2) 이 포고문을 기록하고 있는 소련의 책은 *Otosheniia Sovetskogo Soiuzas narodnoi Koreei 1945~1980 : dokumenti i materialii* [*Relations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the Korean People, 1945~1980 : Documents and Materials*], Moscow, Izd. nauka, 1981 pp. 6~7; 한글판으로는 <조선중앙년감(194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0, pp. 57~58 참조.
- 3)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화 과정을 소련 점령 정책의 특징으로 미루어 이러한 3단계로 구별하는데 이것을 북한의 경우에 적용해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을 적용하면서 북한의 소비에트화 과정을 조금 다르게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는 양호민,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서울,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67, pp. 79~109 참조. 동유럽에서의 소비에트화에 대해서는 H. Seton-Watso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New York, Praeger, 1961 참조.
- 4) 북조선 5도 행정국의 32명의 위원들 중 한 사람이었던 한재덕은 1945년 8월 26일에 열렸던 최초의 회합은 로마넨코(Andrei A. Romanenko) 장군이 사회를 보았고 32명의 위원에는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각각 16명씩 참여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재덕, <공산주의 이론과 현실 비판 총서> 제 5권, 서울, 내외문화사, 1965, pp. 171~188.
- 5) U. 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 of Takeover* Washington, D. C. GPO, 1961, pp. 100~105. 이 연구는 약 200개의 주요 직위를 소련계 한인들이 차지했다고 주장한다; 이흥근, <소련 군정의 시말>, 서울, 출판사 미상, 1950, pp. 4~10 참조.
- 6) 로마넨코 소장과 이그나티에프 대령 이외에도 북한의 점령 당국에는 유능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 점령군 사령관 치스차코프(I. M. Chistiakov) 대장과 그의 참모장 펜코브스키(V. A. Penkovsky) 중장이 점령 업무 전반을 지휘했고, 행정장교 레베데프(N. G. Lebedev)는 점령에 따르는 정치적인 문제들을 다루었다. 발라사노프(G. M. Balasanovc)는 레베데프의 정치 고문으로 일본어를 잘 구사하였고, 샤닌(G. I. Shanin) 소장은 제 25군의 군사 문제를 처리하였다. 1946년 후반에는 서울의 소련 영사관에서 부영사로 근무했던 샤프신(Anatolii I. Shabshin)이 점령군 사령부에 합류하였다.
- 7) 예를 들면, 체신에는 라자레프(G. R. Lazarev) 소령, 보건에는 로트블류트(A. I. Rotblyut) 소령, 재정에는 일라토프스크(A. T. Ilatovsk) 대령, 농업에는 카디셰프(I. I. Kadishev) 소령, 군민 관계에는 돌기흐(N. I. Dolgikh) 대령이 있었다. B. V. Shchetinin, "V Koree posle osvobo-zhdenie [Korea after the liberation]," in *Osvobozhenie Korei [Korean Liberation]*, Moscow, AKademii nauk, 1976, pp. 244~249와 Ivan M. Chistiakov, "Voevoi puti 25~i armii [The battle path of the 25th Army]," in *Ibid.*, pp. 51~52 참조.
- 8) 슈티코프 대장은 서울에서 미군과의 협상을 주로 담당하였고, 제 25군의 민정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평양에 머무르기도 했는데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했을 때 스탈린은 그를 초대 북한 주재 소련 대사로 임명한다.
- 9) 해방 후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관해서는 김남식, <남로당 연구>, 서울,

돌베개, 1984 참조.

- 10) 북한 정치에 있어서 소련파의 활동에 관한 연구로는 Dae-sook Suh, *Koreans in the Soviet Union*,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7을 보라.
- 11) 이에 관한 연설의 원본은 그의 선집의 모든 판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저술에서 볼 수 있으나 후기의 판본들은 심하게 수정되어 있다. 수정되지 않은 원본은 김일성,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1, pp.105~212를 보라. 이 연설에 대한 수정과 재해석의 정도는 이 연설의 30주년을 기념하여 <로동신문> 1978년 3월 29일자에 실린 논평에서 볼 수 있다.
- 12) 제1차 당 대회 및 제2차 당 대회를 통해 김일성이 당에 가한 통제는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89~94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 13) 중앙 위원회의 구성과 그 변화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Dae-sook Suh, "Communist Party Leadership," in Dae-sook Suh and Chae-jin Lee eds., *Political Leadership in Kore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6, pp. 159~161 참조.
- 14) 김일성에게 맞서 도전하고 나선 12명은 이승엽, 이강국, 조일명, 임화, 박승원, 배철, 윤순달, 이원조, 백형복, 조용복, 맹종호, 설정식이다.
- 15) 여기에 제시된 자료들은 북한 당국에서 발표한 공식 문서와 공판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는 단행본인 <미제국주의의 고용간첩 박현영, 리승엽도당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전복 음모와 간첩사건 공판문헌>,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 1956, pp. 150~160을 들 수 있다.
- 16) <조선로동당 역사교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p. 297.
- 17) 이들에 대한 재판은 1953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최고 재판소장 김익선이 주재하는 최고 재판소에서 열렸다. 기소는 빨치산 출신의 김찰 총장 이승운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소된 12명의 소속과 직위에 대해서는 Dae-sook Suh(1988), p. 131 참조.
- 18) <좌익 사건 실록> 제 11 권, 서울, 대검찰청 공안부, 1974, pp. 216~226.
- 19) 이에 관해서는 전쟁이 진행중이던 1950년 12월 21일 강계에서 열린 조선 노동당 중앙 위원회 제 3차 전원 회의에서 이미 논의된 적이 있다. 1950년 10월 말 중국 의용군이 전쟁에 개입하고 자신이 전쟁의 지휘권을 상실하게 되자, 김일성은 제 3차 전원 회의에서 한국 전쟁을 평가하고 전쟁중의 과오를 일일이 지적하면서 비판하였다. 김일성은 자신의 빨치산을 포함하여 실책을 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엄하게 처벌하였다. <김일성선집>(제 1 판), 제 3 권(1953), pp. 122~173을 보라.
- 20) 북한에서 실시한 '6대민주개혁'을 모방하여 최고 인민 회의 의결로 1950년 7월 4일 남한에서의 토지 개혁을 발표하였으나 이것은 사실상 1949년에 박문규가 남조선 토지 개혁안으로 이미 준비해 둔 것이다.
- 21) 이승엽과 그 일파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김일성은 1953년 8월 4일부터 6일까지 중앙 위원회 제 6차 전원 회의를 소집하고 당을 재편성했는데 그들은 이 때 다시 기용되었다. 이 회의의 중요한 내용과 변화에 관해서는 Dae-sook Suh, *Korean Communism, 1945~1980: A Reference Guide to the Political system*,

-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1, pp.288~289를 보라.
- 22) 김일성, 〈당단체들의 조직사업에서의 몇가지 결함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51, pp.3~85. 이 보고서는 1951년 11월 1일 조선 노동당 중앙 위원회 제 4차 전원 회의에서 작성되었다.
 - 23) 허가이에 대한 김일성의 비판은 10년 이상 계속되었다. 이미 인용된 것 외에 1955년 4월 4일, 1956년 4월 7일, 1956년 4월 23일, 1958년 3월 7일, 1958년 11월 20일 1959년 2월 26일, 1960년 2월 23일, 1961년 1월 23일, 1966년 10월 18일 1968년 5월 27일의 김일성의 연설을 보라. 이 내용들은 《김일성선집》(제2판) 제2권, p. 531; 제3권, p.7; 제4권, pp.267, 335~336, 334, 385, 407, 409, 536; 그리고 제5권, p.85와 p.409 참조.
 - 24) 1959년 2월 25일의 중앙 위원회 제8차 전원 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연설을 보라. 이 연설은 그의 선집 제2판에만 수록되어 있다. 《김일성선집》(제2판) 제6권 p. 269.
 - 25)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p.9~29. 그것은 그의 '주체'개념을 말해 주는 아주 중요한 연설의 하나이다. 이 연설은 계속 출판되면서 여러 번 수정되었기 때문에 초판본이 매우 중요하다. 초판본의 내용은 《김일성선집》(제2판), 제4권, pp.325~354에도 수록되어 있다.
 - 26) 브레즈네프 연설의 한글 번역문은 1956년 4월 25일자 〈로동신문〉을 보라. 이 글은 〈조선로동당 제3차 당대회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pp.479~486에 실려 있다.
 - 27) 중앙 위원회 위원인 11명의 빨치산은 서열순으로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금철, 김광협, 최현, 유경수, 김경석, 이영호, 김창덕, 이송운이다. 중앙 위원회 후보 위원인 6명의 빨치산 출신은 석산, 오진우, 최광, 최용진, 김창봉, 서철이다. 최고위급 중앙 위원 4명이 빨치산외에는 김두봉과 박정애가 선출되었다.
 - 28) 정부 총투자액이 1,800억 원인 5개년 경제 계획에 대한 3억 루블의 원조액은 지난날 정부의 총투자액이 810억 원이었던 3개년 경제 계획의 원조액이 10억 루블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보잘것 없는 수준이었다.
 - 29) 이 사건에 관해서 남한에서는 믿기 어려운 해석들을 하고 있다.〈북괴의 과별 투쟁사 :북한 정권의 암투사〉, 서울, 내외 문제 연구소, 1966, pp.118~148 참조.
 - 30) '8월회의'에 대해서는 〈근로자〉 제8권(1959년 8월)과 이송운의 논문, pp.19~22을 보라.
 - 31) 백봉,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제2권, 평양, 인문과학사, 1969, pp.401~403.
 - 32) 이들에 대한 김일성의 비판은 1958년 3월 6일의 제 1차 당 대표자 대회에서의 그의 연설 참조. 《김일성선집》(제2판) 제1권, p.148. 오기섭에 대한 비판은 1959년 3월 23일 김일성의 연설 참조. 앞의 책(제2판), 제6권, p.321과 p.327.
 - 33) 제3차 당 대회에서 제4차 당 대회에 걸쳐 재선된 사람들은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금철, 김광협, 최현, 김경석, 이영호, 김창덕, 이송운이다. 제3차 당 대회 중앙 위원회 위원이었던 유경수는 1958년 11월 19일에 사망했다.

- 34) 새로 제 4 차 당 대회에 선출된 25 명은, 서철 석산, 김창봉, 허봉학, 최용진, 박성철, 오진우, 전문섭, 전창철, 최광, 안영, 한익수, 김대홍, 김동규, 박영순, 최기철, 오백룡, 김병식, 허석선, 김옥순, 임철, 최민철, 김좌혁, 지병학, 허학송이며 당 대회 동안에 변경된 완전한 명단은 Dae-sook Suh, *Korean Communism, 1945~1980: A Reference Guide to the Political System*,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1981, pp. 309~359 참조.
- 35) '통혁당사건'의 주모자 김종태의 사형 집행이 있을 뒤 북한은 1968년 8월에 통혁당 선언 및 12개 강령과 같은 몇 가지 통혁당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의 전문은 <조선중앙년감(1970)>, pp. 513~517 참조.
- 36) 1972년 북한의 신헌법인 사회주의 헌법의 전문과 분석에 대해서는 *On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yongyang,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75 참조.
- 37) 신헌법에 대한 다른 해석은 Chung-sik Lee, "The 1972 Constitution and Top Communist Leaders", in Dae-sook Suh and Chae-jin Lee eds., *Political Leadership in Kore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6, pp. 192~219 참조.
- 38) 여기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p. 269~276 참조.
- 39) 3 대 혁명이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말한다. 이 말은 1973년 10월경부터 북한의 출판물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로동신문> 1973년 10월 22일자 참조. 3 대 혁명 정책에 관한 논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3대혁명로선의 위대한 생활력>,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참조.
- 40) 제 5 차 당 대회의 공식적인 발표에 앞서 김정일의 권력 승계 사실을 밝힌 것은 1977년 2월 일본의 조총련이 발간한 책자였다. 이 책의 내용은 남한의 정보 기관에 의해 비밀리에 출판되었다. <북괴 간부 및 당원 학습 자료>, 서울, 중앙 정보부, 1977, pp. 187~213 참조.
- 41) <로동신문> 1988년 10월 15일자.

3. 주체 사상의 형성과 사상 체계 분석

고병철(일리노이대 교수)

1. 서론

최근 소련과 동유럽의 많은 공산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격적인 변화는 이데올로기의 비중을 격감시키고 있다. 얼마 전까지도 공산주의 체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공산당에 의한 권력 독점과 지도 이념 내지 통치 수단으로서의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들 수 있었는데 요즈음은 이 두 가지 현상이 모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개방과 개혁의 조류가 아직까지 미치지 않은 공산 국가의 대표적인 예가 북한인지도 모른다. 북한에서는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공산 국가가 표방하고 있는 통상적인 의미의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아닌 '주체사상'인데, 그것은 북한의 지도 이념일 뿐 아니라 북한의 모든 정책과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북한의 집권층은 설명하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을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은 주체 사상의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히 터득하는 것이다. 주체 사상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으며 그것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주체 사상이 북한의 정치 제도 또는 사회 일반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무엇이며 주체 사상의 효율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은 다루어 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의도이다.

2. 주체 사상의 형성

주체 사상의 형성 과정을 보면 1955년에 ‘주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선을 보인 후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여 1965년에 체계적인 해설이 있었고, 1970년에 열린 조선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당 규약의 지도 이념으로 채택되고, 1972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 북한의 공식적인 ‘지도적지침’으로 천명되었다. 환언하면 주체 사상이 북한의 유일한 지도 이념으로 부각된 것은 1970년대 초기부터이다.

주체 사상의 형성은 북한의 국내 정치 및 대외 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체의 개념은 김일성 체제의 확립 과정에서 경쟁자들의 숙청을 정당화하고 김일성 자신의 정통성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였고, 중국과 소련 간의 갈등에 대응하는 방패의 기능도 수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주체 사상 형성의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김일성의 1955년 연설문부터 검토해 보자. 동년 12월 28일에 김일성은 조선 노동당 선전 선동 담당 간부들에게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다. 그는 “주체가 똑똑히 서있지 못”한 것이 노동당 “사상사업의 가장 주요한 결함”이라고 지적하고 ‘주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 당 사상사업에서 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다른 나라의 혁명도 아닌 바로 조선혁명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이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상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사업을 반드시 조선혁명의 리익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쏘련공산당의 역사를 연구하는것이나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리를 연구하는것은 다 우리 혁명을 옹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1)

김일성은 이어서 “주체가 똑똑히 서있지 않기 때문에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의 과오를 범하게” 된다고 말하고 주체를 세운다는 것이 외국의 경험을 무시하여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그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

맑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창조적학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는 매개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될 때에 비로소 그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는것입니다. 형제당들의 경험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제당들의 경험을 연구하여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 현실에 옹게 적용하여야 그 경험이 가치가 있는것이지, 그렇지 않고 통채로 받아들여 일을 망쳐버린다면 우리 사업에 해를 줄뿐 아니라 형제당들의 고귀한 경험까지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것입니다.”²⁾

이상 인용한 주체의 설명은 극히 상식적이며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교조주의나 경험 또는 이론의 진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겉모양만 복사하는 형식주의를 비판하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의 연설이 노리고 있는 것이 반드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의 퇴치와 주체의 확립만이 아니라는 가설을 우리는 세워볼 수가 있다.

김일성은 동 연설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김일성의 비판 대상 중에는 박창옥, 박영빈, 허가이 등 소련파에 속하는 인물이 많았으나 박현영, 이승엽 등 남로당파의 인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김일성의 연설이 ‘반쏘련’적 측면을 가졌다는 해석이 완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소련에서 스탈린 격하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하여 위협을 느끼고 자위책으로 이 연설이 나왔다고 보는 것은, 시기적으로 김일성의 연설이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비공개로 행한 스탈린 비판 연설보다 2개월 앞서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김일성이 소련파든 남로당파든 연안파든 그의 경쟁자들의 언동

을 비판하고 자기의 방침이 옳다는 것을 강조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의 ‘혁명적군중관점’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우리가 항상 군중의 이익을 옹호하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싸웠기 때문에 그들도 이와같이 우리를 지지하고 보호한것입니다. 전체 당원들은 빨치산들의 군중에 대한 태도에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³⁾

이 연설이 있는 뒤 4년이 넘도록 김일성은 주체를 다시 강조하지 않은 듯하다. 1960년 2월에 그는 “주체라는것은 모든것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해나가며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원칙과 다른 나라의 경험을 우리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주체문제를 내세운 다음부터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졌”으며 “지금은 모두가 자기 실정에 맞게 사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전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많은 창발성이 나오고있”다고 밝혔다.⁴⁾

그 후 주체를 반영하는 정책들, 특히 경제에서 자립과 국방에서 자위의 방침을 강조하고 언어, 문학, 예술, 교육에서 주체를 확립할 것에 대한 연설문이 여러 개 나왔으나 주체에 관한 생각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것은 김일성이 1965년 4월 14일에 인도네시아의 ‘알리 아르함(Ali Archam)’ 사회 과학원에서 한 연설이었다.

김은 “조선혁명의 주인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며 조선혁명승리의 결정적요인도 우리자체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모든 당이 “완전히 자주적이고 평등”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조선 노동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립장”이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고 선언하였다.⁵⁾

‘사상에서의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조선 노동당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하여 간결히 투쟁”하였고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반대하였다고 김일성은 말하고, 북한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우리 나라의 지난날과 오늘, 우리 인민의 혁명전통과 문화전통에 대한 학습을 결정적으로 강화”한 결과 북한 사람들의 “민족적자

부심과 자주의식”이 크게 앙양되고 창발성도 높아졌다고 주장하였다.⁶⁾

북한의 주체 정책의 노선인 ‘경제에서의 자립’은 ‘자력갱생의 원칙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의 노동과 국내자원으로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할 각오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김일성은 설명하였다.⁷⁾

그는 경제에서의 자립이 외국의 원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전후복구시기에 우리 나라는 형제나라들로부터 약5억루블(5억 5천만 달러)에 맞먹는 경제기술적 원조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나라들사이의 경제협조를 반대하거나 문을 닫아매고 사회주의를 건설 하자는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반대하는것은 <경제협조>와 <국제분업>을 구실로 하여 다른 나라 경제의 자립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막으며 나아가서는 그 나라들의 경제를 자기에겐 얹어매려는 대국주의적경향이다.⁸⁾

다시 말하면 김일성은 소련이 경제 원조를 북한에게 불리하게 이용하였다는 경험에 비추어 자립 경제 노선을 내놓은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중·소 분쟁에서 중국편을 든 북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소련이 원조를 중단한 1962년에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남의 원조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나라들의 원조를 환영합니다. 주는 원조를 싫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조를 주지 않는 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의 원조가 없어도 혁명은 해야하며 사회주의는 건설해야 합니다.…… 원조는 주지도 않으면서 자력갱생하자는것은 민족주의라고 시비하는 사람들의 심보를 어떻게 리해하여야 할것입니까?⁹⁾

북한의 주체 노선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1966년 8월 12일 <로동신문>의 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였다. <로동신문>의 1·2면 전체와 3면의 절반을 차지한 이 사설은 내용은 새로운 것이 없었지만 외국 언론에서 ‘북한의 독립선언’으로 취급, 대서특필 보도하였기 때문에 북한의 귀 홍보에 국제 공헌을 하였다. 당시 북한은 소련과의 관

계를 '정상화'하고 중·소간에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중이었다. 따라서 <근로자> 8월호에도 동시 게재된 동 사설은 북한이 기회주의 노선이 아니고 자주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 무대에서 선포하는 데도 목적이 있었던 듯하다.

같은 해 10월에 열린 조선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김일성은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라는 보고를 하였는데 그는 주체 노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역설하였다. 그는 북한이 “대국주의자들의 내정간섭을 받은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당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당들에 대하여 <중간주의>, <절충주의>, <기회주의> 등의 딱지를 붙이고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원칙한 타협의 길>을 택하고 있으며 <두걸상 사이에 앉아있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부절없는 소리입니다.

우리에게도 자기의 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자기의 걸상을 버리고 남의 두걸상사이에 불편하게 량다리를 걸고 앉아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똑바른 맑스-레닌주의 걸상에 앉아있을것입니다.”¹⁰⁾

1967년 12월에 북한의 최고 인민 회의 제 4기 제 1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을 발표하였는데 주체가 북한의 모든 정책의 지도 이념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10대 정강 중 주체에 직접 관련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화국정부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모든 부문에 걸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나라의 정치적자주성을 공고히 하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통일독립과 번영을 보장할수 있는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도록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 자립,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관철할것입니다.

다섯째, 공화국정부는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공업화정책을 계속 견지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며 근로자들은 고된 노동에서 해방하는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할것입니다.

여섯째, 공화국정부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에 튼튼히 의거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주의적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

것입니다.

일곱째, 공화국정부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적, 전인민적 방위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

여덟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자체의 힘과 내부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로선을 계속 견지하면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과 완전한 평등및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맺고 대외무역을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¹¹⁾

이처럼 주체 사상이 북한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침’이 되었으므로 그것을 조선 노동당의 규약과 국가의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김일성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1970년 11월에 열린 조선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 김일성은 “오늘 우리 당안에는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섰으며 전당이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어있”다고 말하고 “이것이 총결기간 당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과이며 우리 당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게 한 기본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¹²⁾

김일성은 “당의 유일사상의 진수를 이루는것은 맑스-레닌주의적인 주체사상이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라고 말함으로써 주체 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시사하였는데, 제5차 대회에서 조선 노동당의 규약이 개정되어 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였다.¹³⁾

1972년 12월에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가 헌법이 대폭 개정되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라고 불리는 새 헌법은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인용한 노동당 규약의 규정과 거의 같으나 한 가지 다른 점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북한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주체사상’만이 북한의 지도 사

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¹⁴⁾

이상 우리는 주체 사상의 형성 과정을 고찰해 보았는데 주체 사상의 변천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도 주체 사상의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하다.

3. 주체 사상의 변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체 사상은 1955년 말부터 1970년대 초기까지에 걸쳐서 형성되었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 구성 요소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그 윤곽이 뚜렷해졌다는 것 이외에는 수정되거나 변화한 것은 없다.

그러나 주체 사상의 위치가 점점 높아진 것은 분명히 중요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처음에는 ‘주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을 뿐인데 점점 살이 붙고 강조의 빈도가 늘어나서 드디어 ‘주체사상’이 되고 다음에는 조선 노동당의 ‘유일사상’이며 북한의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군림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발전 단계로 주체 사상이 ‘정식화’되어 ‘김일성주의’로 탈바꿈한 것을 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 가지 특기하여야 할 것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는 작업을 김정일이 1974년 2월에 완수하였다고 하면서 북한은 ‘김일성주의’라는 용어를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로동신문>, <근로자>, 또는 북한 지도층의 연설문에서는 ‘김일성주의’라는 용어가 한번도 쓰여진 적이 없다.

일본의 릿쿄(立教) 대학의 경제학 교수 이노우에 슈우하치(井上周八)가 1983년에 출판한 <현대 조선과 김정일 비서>라는 책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김정일이 김일성주의 정식화에 대한 구상을 1970년 5월부터 하였다고 한다. 당시에 김정일이 ‘어느 한 당간부’에게 한 말을 이노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김일성주의는 현대의 기본 사조입니다. 선행 사조와는 틀이 근본 다릅니다. 주체 철학에 기초하고 있는 김일성주의는 수천년 동안 인류의 예지가 도달한 과학 이론의 총화나 집대성보다 더 높은 혁명 사상의 최고봉입니다. 우리 시대

의 유일한 시대적 지도 사상입니다.

김일성주의는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고 인류의 존재와 더불어 영원할 주체의 혁명 학설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세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혁명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해야 합니다. 그 정식화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¹⁵⁾

김정일이 1974년 초에 ‘정식화’를 완료했다는 김일성주의의 내용은 1982년 3월에 김일성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김정일이 보낸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잘 정리되어 있다. 5절로 되어 있는 동 논문은 주체 사상의 창시,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 주체 사상의 사회 역사 원리, 주체 사상의 지도적 원칙, 마지막으로 주체 사상의 역사적 의의를 다루고 있다.

주체 사상의 창시를 설명하면서 김정일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탁월한 수령들에 의하여 창시”된다고 지적하고 마르크스(Marx), 엥겔스(Engels), 레닌(Lenin)의 예를 든 다음 김일성이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고 주체 사상을 창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일은 김일성을 상기한 3대 거장과 동격으로 취급할 뿐 아니라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시였으며 인류력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였다고 말하고 있다.¹⁶⁾

김정일은 또한 1920년대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대중과 리탈되어 령도권싸움과 말공부만 하고있었으며 대중을 단결시킨것이 아니라 파벌싸움으로 분렬”시킨 것을 김일성이 보고, “이들과는 다른길,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에게 의거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의 길을 걸으시였으며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를 밝힌것이 주체사상의 출발점의 하나”¹⁷⁾라고 말한다.

주체 사상의 또 하나의 출발점은 조선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 안에는 ‘사대주의’, ‘행세식맑스주의’, ‘기성리론과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고 하는 경향’, ‘교조주의’가 범람하고 있는 것을 보

고 김일성이,

혁명은 그누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하여야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밝히게 된것이라는 것이다.¹⁸⁾

그리하여 김일성이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 1930년 6월 카룬(Gelun)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 청년 동맹 지도 간부 회의에서’였다고 한다.

1930년이면 김일성이 18세일 때이고 그 때 했다고 하는 연설문이 1978년에 처음으로 발표된 것은 김정일의 말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을 자아낸다.¹⁹⁾

다음 김정일은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이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²⁰⁾

김정일은 김일성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이룬다는것을 밝히심으로써 사람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해명을 주시였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김정일은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을 생명”인데 그것은 “육체적생명”과 구분되는 “사회정치적생명”이라고 설명한다.²¹⁾

결국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며 세계에 숙명적으로 아니라 혁명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하고 세계를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하게 된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곧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이며 유일한 개조자입니다.

이렇게 김정일은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규명하고 있다.²²⁾

세번째로 김정일은 주체 사상의 사회 역사 원리를 논하면서 주체 사상이 ‘새로운 사회력사관, 주체사관’을 천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체사관’은 네 가지 명제로 집약된다.

- ①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이다.
- ②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다.
- ③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이다.
- ④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사상의식이다.²³⁾

김정일은 인민 대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명제를 설명할 때에 “인민대중은 력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력사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 할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한 지도는 당과 수령이 담당하는데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령도자”라는 것이다. 결국 엄격한 의미의 역사의 주체는 인민 대중이 아니고 당과 수령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²⁴⁾

또 한가지 주목을 끄는 것은 네번째 명제이다. 김정일에 의하면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원리를 새롭게 밝혔”는 것이다. 김일성은 “혁명운동에서 물질적요인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물질적조건이 마련되었다고 하여 혁명이 저절로 일어나는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사상적요인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에 의거하여 모든 조건을 적극적으로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²⁵⁾

그러면 주체 사상의 ‘지도적원칙’은 무엇인가? 김정일은 그것이 3대 원칙으로 집약된다고 말한다. 첫째,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는 것, 둘째,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셋째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주적립장을 견지’한다는 원칙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 다시 말하면 주체,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으로 세분된다.²⁶⁾

이 개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 김정일이 특별히 강조하는 점을 몇 가지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사상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곧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당과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이어서 높은 민족적자존심과 혁명적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전체인민이 슬기롭고 용감한 조선민족으로서의 자존심, 특히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인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어서 김일성이 사대주의가 사람을 ‘머저리’로 만들고 나라를 망치며 혁명과 건설도 ‘망쳐먹는다’고 가르쳐 주었다고 상기하면서 “특히 오늘 가장 유해롭고 위험한 것은 미제에 대한 사대주의”라고 지적하였다.²⁷⁾

김정일은 ‘정치에서 자주’가 자주성을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정치에서의 자주를 떠나서는 어떠한 자주성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상에서의 주체도 무엇보다 정치에서의 자주에서 표현되며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도 정치에서의 자수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말한다. 것처럼 불가결한 존재인 정치적 자주성은 구체적으로 “자기인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인민의 이익을 옹호하고 자기인민의 힘에 의거하는 정치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혁명의 지도력량인 당을 강화하고 로동계급을 핵심으로 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여야”하며 “대외관계에서는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여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인민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전체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정일은 주장한다.²⁸⁾

‘경제에서 자립’은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 것을 요구하며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서술하였다. 김정일은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 “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민족기술인재를 대대적으로 길러내야”하는 것, “자체의 원료, 연료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하는 것 등을 강

조한다. 그는 또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문을 닫아매고 경제를 건설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자립경제는 다른 나라에 의한 경제적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것이지 국제적인 경제협조를 부인하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한다.²⁹⁾

김정일에 의하면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것은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원칙”인데 그것은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동안 전쟁과 침략의 위협이 항상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김일성의 말을 인용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전쟁에 해방전쟁으로 맞서고 반동들의 반혁명적폭력에 혁명적폭력으로 맞서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언제나 준비있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자위 국방의 노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⁰⁾

김정일은 자위의 원칙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나라를 보위한다는것을 의미” 하지만 “형제나라들과 벗들로부터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제’의 확립을 강조하고 그것은 ‘전군의 간부화와 현대화’, ‘전인민의 무장’과 ‘전국의 요새화’를 요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일은 “인민무력의 정치사상적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한다고 말하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은 무기나 기술”이 아니고 “군대와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혁명적헌신성에 있다”고 주장한다.³¹⁾

주체 사상의 두번째 ‘지도적원칙’인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는 것은 “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우는데서나 그것을 관철하는데서”적용된다. 김정일은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동원하는가” 하는 문제와 “모든 문제를 변화발전하는 현실과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 지도 원칙의 관건이라고 해설하고 있다.³²⁾

인민 대중의 창조력을 동원하기 위하여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지향을 반영한 로선과 방침을 세울뿐 아니라 그것을 대중속에 깊이 침투시켜 대중 자신의 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혁명적군중로선’은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시’한 것이며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늘 군중속에 들어가 실정을 깊이 요해하여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세우며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군중이 혁명과 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며 격식과 틀이 없이 모든 문제를 구체적특성과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이 사업방법은 언제나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군중의 앞장에 서서 이 신작적하며 겸손하고 소박하고 너그러운 품성을 지니고 대중이 온갖 창의창발성을 다 내도록 이끌어주는 방법입니다.³³⁾

창조성을 발휘하려면 “혁명투쟁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옹게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자기나라 혁명의 주객관적조건을 잘 타산하고 그에 맞게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김정일은 말한다. 주·객관적 조건 중에서 “주체적요인, 정치사상적요인에 보다 큰의의를 부여하여야” 하며 “주체적력량이 준비되고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이 높을 때에는 비록 다른 조건은 불리하여도 혁명을 주동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성리론’과 ‘남의 경험에 비판적으로 창조적으로 대하는것이 중요’하다. “다른 나라의 경험 가운데서 자기에게 리로운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며 “남의 경험을 참고하여야 하지만 될수록 자체의 경험을 잘 살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³⁴⁾

주체 사상의 세번째 지도 원칙인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어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혁명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민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개조사업,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고 김정일은 말한다. 그는 김일성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것을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였다고 지적하고 “주체의 혁명관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라고 강조한다. 김정일은 이러한 혁명관을 ‘신념화’시키기 위하여 학습을 강화하여야 하며, “일생동안 학습을 계속하여야” 하고, “혁명적조직생활을 잘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³⁵⁾

그는 이어서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행정실무사업이나 기술경제사업을 홀시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며”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할 때에 물질적 자극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여기에 물질적자극을 옹계 배합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정치사업은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지 “명령하고 호령하는 관료주의적방법으로써는 결코 사람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킬수 없다.”고 김정일은 주장하고 있다.³⁶⁾

김정일의 1982년 논문이 결론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주체 사상의 역사적 의의이다. 그는 주체 사상이 “인류의 사상정신생활과 세계의 혁명적 변혁과정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체 사상이 “인류의 사상발전과 해방위업에 이바지한” 것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을 밝혀준데 있다.”고 단언한다. 김정일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시대의 발전은 세계관의 발전을 동반”하는데 “맑스주의유물변증법적 세계관의 출현은 당대의 요구를 반영한것”이었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진출과 함께 개시된 혁명의 끊임없는 확대발전은 이제까지 력사의 대상으로 되어 온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가져왔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세계관의 출현을 요구하였고” “이 력사적과제는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었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시원문제가 유물론적으로 밝혀진 조건에서 세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었다.” “사람중심의 세계관, 사회력사관을 밝힌 주체사상은 세계관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왔다.” “맑스주의에 의하여 처음으로 노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이 확립되었다면 주체사상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완성되었다.”³⁷⁾

이상 요약한 것이 김정일이 주체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였다는 내용의 골자인데 주체 사상의 변천 과정에서 주체라는 개념을 과연 김일성이 ‘창시’하였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 자신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72년 9월에 있었던 일본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과의 회견에서 김일

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다시말하면 자기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와같은 사상은 결코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맑스-레닌주의자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다만 나는 이와 같은 사상을 특별히 강조하였을 뿐입니다.³⁸⁾

같은 해 10월에 일본 월간지 <世界>의 편집국장과의 회견에서도 김일성은 자기가 주체 사상을 창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당신은 주체사상이 민족적과업과 국제주의적연대성의 과업과의 연관에 관한 새로운 철학을 창시한것이 아닌가고 하였는데 그것은 너무나 과분한 말씀입니다. 원래 진정한 맑스주의자라고 하면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강조했을 따름입니다.³⁹⁾

그러나 2년 후에 김일성은 처음으로 주체 사상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1974년 6월 페루 조선 친선 문화 협회 서기장이 제출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주체사상은 조선에서 전면적으로 승리하고 있을뿐 아니라 세계인민들속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조선혁명의 요구로부터 우리가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염원에도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⁴⁰⁾

그 후 김일성은 주체 사상이 “우리가 처음으로 내놓은 사상”, “우리가 내놓은 조선혁명의 지도사상”,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된 사상이라는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것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다.⁴¹⁾

김일성 이외의 북한 주민들은 주체 사상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서 창시하신 불멸의 사상”이라고 일관해서 찬양해 왔다. 김일성이 주체 사상은 “결코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한것이 아니”라고 일본 기자들에게 말하던 1972년에도 조선 노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근로자>는 주체 사상을 김일성이 창시하였기 때문에 ‘조선혁명’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근로자>에 의하면,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적과썬폭압이 극도에 달하였고 민족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놓여있던 1920년대말 1930년대초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땅국의 비운 속에서 투쟁의 옳은 길을 찾아 모대기던 우리인민앞에는 승리와 해방의 서광이 비끼기 시작하였다. 42)

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주체 사상의 가장 큰 변천은 그것이 북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최고봉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외적으로도 크게 선전하여 새로운 시대의 지도 사상이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보다 더 발전 완성시킨 사상이라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면 과연 주체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더 성숙한 사상인가? 그 두 사상 체계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4. 주체 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

김일성은 북한에서 주체를 세울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할 때부터 주체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의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부정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천명하였다는 그는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창조적학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개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될 때에 비로소 그 불패의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43)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는 프란츠 셔만(Franz Shurmann)

교수가 말하는 순수 이념(pure ideology)이고 주체 사상은 실제 이념(practical ideology)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일성은 주체 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근본 원칙에 일치된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하였다. 1967년 12월에 김일성이 발표한 북한의 정부 정강의 해설에서, 그는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이라고 규정하였다.⁴⁴⁾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언급을 거의 중단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970년 11월에 열린 조선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를 보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언급이 20번 이상 나온다. 그는 조선 노동당을 “맑스-레닌주의당”이라고 표현하였을 뿐 아니라 “전당이 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 당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근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 것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⁴⁵⁾

그 후 김일성은 1973년까지 “맑스-레닌주의적인 주체사상”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1974년부터는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용어가 그의 연설문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1980년 10월에 열린 조선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한 김일성의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말이 한번도 나오지 않아서 10년 전 제 5차 대회에서 한 그의 보고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⁴⁶⁾

주체 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논한 것이 1976년 10월에 김정일이 발표하였다는 논문,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옹계 인식할데 대하여”이다. 이 논문의 내용은 1983년에 출판된 이노우에 슈우하치의 책, 〈현대 조선과 김정일 비서〉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 노우에는 김정일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김일성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관계는 계승성을 무시하고 독창성만 보려고 하여도 안 되며 반대로 독창성을 소홀히 하고 계승성을 지나치게 내세워

도 안됩니다. 물론 계승성과 독창성, 여기에서 주되는 것은 독창성입니다. 독창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계승성을 결합시켜 보는 것, 이것이 김일성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인 입장입니다.⁴⁷⁾

김정일은 김일성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비록 “다른 역사적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이기는 하나나 노동 계급의 혁명 위업에 이바지하는 그 계급적 이념과 사명”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김일성주의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달성한 사상 이론적 업적을 평가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창시되고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계승하고 있다고 말한다.”고 이노우에는 썼다.⁴⁸⁾

한편 김정일은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그것의 내용과 구성에서 찾고 있는 데 내용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주체를 다루지 않고 있는 데 반하여 김일성주의는 주체를 일관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구성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철학, 경제학, 과학적 사회주의’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김일성주의는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⁴⁹⁾

이노우에는 김정일이 주체 사상의 독창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더 이상 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면에서의 독창성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1986년 7월에 김정일이 조선 노동당 중앙 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가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소책자로 1987년에 출판되었는데, 그는 주체 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공통성’으로 다 같이 ‘과학적공산주의사상’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김정일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진반을 일관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적립장과 유물론적이고 변증법적인 원리와 과학적인 이론을 계승하고있다.”는 것이다.⁵⁰⁾

그러나 주체 사상이 유물론적 원리를 계승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주체 사상의 ‘사회력사원리’의 하나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명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유물론적 결정주의(materialistic determinism)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김정일은 주체 사상의 독창성을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물질적요새와 함께 반드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하며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을 앞세워야 한다.”고 김일성이 교시한 데서 찾고 있다. 김정일은 레닌이 “공산주의는 소비에트 정권에 전기화를 더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고 그것은 공산주의 건설에서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 긴박하다는 명제이나 김일성은 역사적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새로운 명제를 제시하였다고 말한다. 김정일이 말하는 ‘3대혁명’은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을 지칭하므로 그것이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동시 점령해야 한다는 원리를 반영한다는 뜻이다.⁵¹⁾

사상 교육, 더 나아가서는 인간 개조의 중요성을 김일성이 독창적으로 강조하였다는 주장은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 특히 모택동(毛澤東)의 사상과 행동을 무시한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독창성을 떠나서 주체 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상당한 차이점을 가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김정일이 말한 것처럼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주체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주체 사상이 자주성과 민족의 존엄, 긍지를 강조하는 데 반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Proletarian internationalism)를 표방하고 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사상의식의 결정적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근본적 원리와 모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체 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나, 그것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완성시킨 새로운 시대의 지도 사상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6. 결 론

마지막으로 필자는 주체 사상의 기능과 효율성을 생각해 봄으로써 결론에 대신하려고 한다. 주체 사상은 그 형성 과정에서 김일성 자신의 권력 공고화와 정통성 구축에 기여하였고, 북한의 대외 정책, 특히 중·소 분쟁에 대응하는 정책을 정당화하는 기능도 수행하였다.

주체 사상은 또한 북한 집권층의 통치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

어 왔다. 주체 사상의 기본적 전제 또는 명제는 상식적이고 실용적인 것이 많다. 남의 경험이나 사상을 맹목적으로 모방하지 말고 자기 실정에 맞게 적용하라는 것, 모든 일에서 인민 대중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 나라의 자주 독립, 민족적, 존엄과 긍지를 옹호하라는 것 등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충고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주체를 세워야 하며 자기 머리로 생각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과 수령의 지시에 절대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수령의 지도가 없이는 인민 대중이 주체성도 창조력도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상 의식의 결정적 역할과 사상 개조 및 정치 사업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건설에서 사상 교육 정치 학습 등 정신적 자극을 강조하는 동원식 접근 방법이 성공한 예는 드물다. 최근 중국, 소련, 그 밖의 동유럽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정신적 자극의 한계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지난 몇 년 동안에 긴박해진 것은 주체 사상의 효율성을 의심케 한다. 그러나 주체 사상이 대외 경제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주목하여야 한다. 북한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 대외 무역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합영법'을 제정하여 해외 자본과 기술의 유치를 장려하는 등 제한된 개방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주체 사상과 모순되는 정책이 아니다. 주체 사상의 구현이라는 '사상적요새점령'을 '물질적요새점령'에 앞세운다는 정책은 북한 경제 침체의 중요한 요인인 듯하다.

주체 사상은 북한의 대외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으면서도 자주적 노선을 견지해 온 것은 물론 중·소 분쟁의 역학을 북한이 잘 이용한 때문이지만 주체 사상의 역할도 무시할 수는 없다. 주체 사상은 또한 북한의 대외 홍보 또는 국위 선양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 효율성은 극히 제한되었다고 본다. 소련, 중국 그 밖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체 사상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그 현상은 주체 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엄격한 의미의 독창성이 결여되었다는 데서 설명을 찾을 수 있는 듯하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것을 주체 사상이 처음 발견하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인민대중의 의사와 지향’을 반영하여 노선과 방침을 세워야 한다는 ‘혁명적 군중 노선’(revolutionary mass line)을 김일성이 ‘창시’하였다는 북한의 입장을 중국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일성의 ‘군중노선’은 모택동의 군중 노선과 대동소이하며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먼저 발표되고 행동에 옮겨진 것이기 때문이다.⁵²⁾

그러나 주체 사상이 대외적으로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영향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3세계, 특히 아프리카에서 주체 사상이 학습되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이 조직 후원하고 있지만 학습하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반공 교육을 일괄해서 실시해 온 남한에서 주체 사상이 일부 운동권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주체 사상의 효율성과 설득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다만 주체 사상이 북한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더 발전된 사상이며 전세계의 노동 계급과 인민들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룩”한 새 시대의 지도 이념이 아닌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주체 사상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지도 이념이며 2천만 북한 동포들의 일상 생활을 규제하는 이데올로기라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 문헌

- 김일성,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0.
 김일성, 〈주체사상에 관한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평양, 삼학사, 1981.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동방사, 1982.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평양, 동방사, 1987.
 井上周八(이노우에 슈우하치), 〈현대 조선과 김정일 비서〉, 권순희 역, 평양, 근역사, 1983.
 Koh, B. C., “The Impact of the Chinese Model on North Korea” *Asian Survey*, XV III, 6(June, 1978), pp.26~643.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Suh, Dae-sook, *Korean Communist 1975~1980 : A Reference Guide to the Political System* Hord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1.

Suh, Dae-sook, *Kim Il Sung :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각 주

- 1) 김일성, 〈우리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0, pp.29~30.
- 2) 위의 책, p.41.
- 3) 위의 책, p.51.
- 4) 위의 책, pp.93~94.
- 5) 위의 책, pp.344~345.
- 6) 위의 책, pp.344~347.
- 7) 위의 책, p.348.
- 8) 위의 책, p.349.
- 9) 위의 책, p.193.
- 10) 위의 책, p.427.
- 11) 위의 책, pp.513~559.
- 12) 〈근로자〉, 1970. 지 11호, p.55.
- 13) Dae-Sook Suh, *Korean Communism 1945~1980 : A Reference Guide to the Political System*,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1, p.525.
-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해설〉, 1973, p.5.
- 15) 이노우에 슈우하치, 〈현대 조선과 김정일 비서〉, 권순희 역, 평양, 근역스 1983, pp.129~130.
- 16)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동방사, 1982, pp.3~4.
- 17) 위의 책, p.5.
- 18) 위의 책, pp.6~7.
- 19) Dae-Sook Suh, *Kim Il Sung the North Korean L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p.305.
- 20) 김정일, 앞의 책, p.9.
- 21) 위의 책, p.10.
- 22) 위의 책, p.11
- 23) 위의 책, pp.15~37.
- 24) 위의 책, p.18.
- 25) 위의 책, pp.31~36.
- 26) 위의 책, pp.37~72.
- 27) 위의 책, pp.39~41.
- 28) 위의 책, pp.42~44.

- 29) 위의 책, pp. 45~50.
- 30) 위의 책, p. 51.
- 31) 위의 책, pp. 52~53.
- 32) 위의 책, pp. 55~62.
- 33) 위의 책, pp. 56~59.
- 34) 위의 책, pp. 60~62.
- 35) 위의 책, pp. 63~67.
- 36) 위의 책, pp. 69~71.
- 37) 위의 책, pp. 72~77.
- 38) 《毎日新聞》 1972년 9월 19일자; 《로동신문》, 1972년 9월 19일자.
- 39) 김일성, 《주체사상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평양, 삼학사, 1981, p. 179.
- 40) 위의 책, p. 209.
- 41) 위의 책, p. 210, p. 215, p. 230, p. 239, p. 284.
- 42) 《근로자》, 1972, 8·9호, p. 101.
- 43) 김일성, 앞의 책, p. 41.
- 44) 위의 책, p. 513.
- 45) 《근로자》, 1976, 11호, pp. 2~72.
- 46) 《근로자》, 1980, 10호, pp. 2~80.
- 47) 이노우에, 앞의 책, pp. 133~134.
- 48) 위의 책, p. 134.
- 49) 위의 책, p. 134.
- 50)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평양, 동방사, 1987, p. 10.
- 51) 위의 책, p. 11.
- 52) B. C. Koh, "The Impact of the Chinese Model on North Korea", *Asian Survey*, XV III, 6 (June, 1978), pp. 631~633.

4. 정치 문화와 정치 사회화

도홍렬(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1. 문제 의식

한 사회의 정치 문화를 조명하는 문제는 정치 문화 접근법이 가진 제한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정치 문화의 개념 자체가 문제되고 있으며, 정치 문화의 본질을 파악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정치 문화를 정치 지향 또는 정치적 태도와 같은 다분히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정치적 행동의 지침들을 제공하는 문화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학자들은 기능적 측면에서 문화를 인간과 자연 환경과의 관계, 이성 관계와 재생산, 분업과 자원 배분, 의사 소통의 방식, 공동의 목표와 목표 달성의 수단, 사회화, 감정 표출과 긴장 해소 등 사회 성원의 행위와 삶의 총체에 대하여 그 지침들을 제공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특히 공산 국가의 경우, 정치적 행동 강령의 기반을 제공해 주는 일련의 상념(想念)들로 구성된 이데올로기가 사회 활동의 지도적 지침이라는 면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연유하는 이데올로기의 문화가 정치 문화의 중핵을 이룬다.

8·15해방 이후 45년간의 혁명 과정을 거친 북한은 주체 사상에 의해 유일적으로 지배되고 통제되는 '김일성의 나라'로 변모했다. 우선 북한 체제에 있어서 최고 규범인 '조선로동당규약'이나 '사회주의헌법'에서 주체 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규정하였고, 인간관, 과학 이론,

철학, 정치 이념, 혁명론 등 모두가 주체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¹⁾

그리고 단편적으로나마 북한을 방문한 외부 관찰자의 눈에 비친 북한 거리의 모습이나 북한 주민의 사고 방식, 행동 양식, 또는 정책 지표가 모두 ‘유일사상’으로서의 주체 사상에 의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제 주체 사상은 북한의 정책 결정과 개인의 행동, 사고, 감정을 결정할 유일한 준거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북한의 정치 문화는 바로 주체 사상의 문화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 밑에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북한의 정치 문화를 파악하고자 할 때, 사회 변동을 이데올로기의 성격과 연계시켜 분석하려 했던 월레스(Anthony Wallace)의 목표 문화(goal culture)와 전이 문화(transfer culture) 개념이 유용한 분석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도구는 이데올로기의 정치 문화를 혁명의 목표와 혁명을 위한 제전략을 상호 연계시켜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²⁾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북한도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공산 사회 건설이 궁극적 목표임을 밝히고, 이러한 목표 문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이 문화로서 주체 사상을 강조한다.³⁾ 즉,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 건설의 혁명적과정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를 거쳐 무계급사회가 실현되고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에로 나아가는 공산주의 건설의 로정과 그 때 단계의 과업과 수행방도를 밝혀준다.”

는 것이다.⁴⁾

이와 같이 주체 사상은 ‘보다 높은 단계로서의 공산주의 건설’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⁵⁾ 주체 사상 자체는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목표 문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전이 문화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 본 장에서는 북한의 정치 문화를 주체 사상의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규명할 것이며 나아가 정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정치 문화가 어떻게 수용되고 전승되는가라는 문제에 답하고자

한다.

2. 정치 문화의 이중적 성격

북한 체제의 전개 과정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는 주체 사상은 이제 북한의 생존 논리이며 정치 문화의 중핵을 이룬다. 그것은, 주체 사상에 기초한 현재의 정치·경제 사회적 특성을 상실한다면 북한은 국가적 정통성도, 권력의 정당성도 함께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북한 공산 지도자들이라는 점에서 주체 사상에 의한 정치 문화 정착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정치 문화는 주체 사상 문화로 정착되고 있으며 주체 사상은 목표 문화 체계와 전이 문화 체계로 구성된다.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체 사상의 목표 문화 체계

주체 사상의 문화는 공산 사회 건설을 지향한다. 주체 사상은 북한의 생존 논리이며, 그 궁극적 목표는 공산주의적 무계급 사회 건설에 있다. 그런데 주체 사상의 기본 개념인 주체성에 준거해 보면, 궁극 목표로서 공산주의 건설은 ‘인민대중의 완전한 자주성의 실현’을 가리킨다. 즉, 인간 본성인 자주성이 창조적으로 최대한 발현되는 것이 공산주의 이상의 실현이라는 설명이다.

김일성에 의하면, 자주성의 실현은 곧 인간 해방을 의미하며 인간 해방은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을 실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자주성의 실현과 인간 해방은 ‘공산주의적사상의식이완비된사회’를 뜻하며 이른바 ‘공산주의적도덕품성’이 구비된 사회이다.⁶⁾

그러면 이렇게 인민 대중의 자주성이 최대한 실현되고 인간 해방을 이룩한 공산주의 사회는 어떠한 모습을 띠는가? 주체 사상에서 제시한 공산주의 사회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①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곧

노동 계급과 농민 간의 차이가 없어지고, ② 협동적 소유 형태가 모두 전 인민의 소유 형태로 단일화되며, ③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의 차이가 없어지고, ④ 생산력의 제고로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를 받게 되는 사회로 묘사되어 있다.⁷⁾

그러나 주체 사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이상적 사회상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의 주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혁명과 건설의 보편적 내용들을 재구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주체 사상의 전이 문화 체계

북한은 이상과 같은 목표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북한식의 수단과 방법으로 주체 사상을 전이 문화로 설정하고 있다. 공산주의적 목표 문화는 매우 이상적이고 요원한 일이며, 지금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제시되고 있는 궁극적 목표로서 공산 국가에 도달한 곳은 없다. 따라서 아직까지 경험한 바 없는 요원한 목표만을 제시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계속적인 지지를 획득하고 체제 정통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 체계에서는 궁극적 목표 달성의 수단이 되는 실현 가능한 중간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이 때 대개 공산주의적 물질 토대를 쌓기 위한 산업화를 앞세우는 것이 일반적 경험이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서 레닌주의와 스탈린의 교의가 등장한 것은(적어도 레닌·스탈린의 견해에 따르면) 러시아적 전통과 현실적 조건에 적용시킨 마르크스주의의 실천이다.⁸⁾ 또한 중국 혁명의 오랜 과정을 통해 형성된 모택동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레닌·스탈린의 이론과 경험을 중국적 전통과 현실적 조건에 적용시킨 실천적 이론인 것이다. 따라서 각국 공산당이 대내적으로 정통성을 내세우고 대외적으로 독립적일 수 있는 것은 자기 당의 전통이 별개로 존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실천적인 이론이 있을 경우인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은 사회 구성원들의 계속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북한 나름의 주의·주장이 필요하였고, 공산주의 사회의 완성을 위한 혁명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주체'를 내세웠

다.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궁극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민족적 특수성에 따라 그 방법이나 형식은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교조주의라 비난하면서 민족적 특수성에 따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올바른 건설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민족적 특수성의 강조는, 곧 각 민족의 특수한 조건과 실정에 따라 혁명과 건설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전이 문화로서의 주체 사상은 그 지도원칙으로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방법’ 그리고 ‘사상적주체’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주체 사상이 가진 이러한 내용 구성이나 공식적 표명 과정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실은 주체 사상이 유일 사상으로서 정치 문화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혁명전통’으로부터 주체 사상으로 이어지는 김일성에 대한 ‘권위’가 북한 사회 내에서 일종의 종교적 신앙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현실이다.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정치 문화는 주체 사상의 문화로 귀착되고 그 기본 성격은 혁명 이데올로기로서 목표 문화 체계와 전이 문화 체계로 구성된다. 목표 문화 체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사회주의의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전이 문화 체계는 민족적 특수성의 입장에서 북한 나름대로 혁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체계로 구성된다.

3. 정치 문화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이미 본 바와 같이 주체 사상은 북한 주민의 가치 판단 및 태도에 있어서 준거틀(framework of reference)이 되는 정치 문화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이나 정세에 대한 인지나 판단도 바로 주체 사상이라는 혁명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의 태도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주체 사상의 유일적 지배 체제를 확립하고 있는 정치 문화의 기능들을 매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데올로기가 프리즘이나 필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예컨대 주체 사상에 따를 것 같으면 미국은 '제국주의의 두목'이고 남한은 식민지이며 '제국주의적침략기지'로 규정되는데, 북한에서는 이것이 마치 사실인 양 인지된다. 이와 같은 정치 문화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세에 대한 과장 내지 단순화된 판단 결과가 의도적으로 유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신념화되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이론 또는 과학(science)의 이름을 빌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주체 사상 관련 문건들을 보면 예외없이 '과학적'이라는 수사를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마르크스의 논리를 북한에 적용해 보면, 김일성의 주체 사상도 사실은 북한이 처한 비주체적 현실에 대한 대응 양태로서 나타난 것이며 동시에 이는 합리적이고 유일한 과학적 혁명 사상이고 보편적 이념이라는 외피를 쓴 것이다.¹⁰⁾

그러다 보나 중요한 문제는 이데올로기가 현실적 모순의 대응 양태로서 허구성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회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현실로서 인정하고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기능이 순기능인가 역기능인가의 문제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적어도 그 사회의 통합 성취에 기여하고 대중 동원을 촉매한다는 면에서는 순기능을 한다고 하겠다.

셔만(Schurmann)은 공산주의 체제의 확립과 혁명 수행 과정에서 이데올로기가 차지하는 기능을 다음 여섯 가지로 분류했다.¹¹⁾ 즉, 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기능, ② 정당화의 기능, ③ 사회적 통합의 기능, ④ 국제적 연대감의 창출 기능 ⑤ 대중 동원의 기능, ⑥ 체제의 유지와 발전 전략으로서의 기능 등 그것이며, 이러한 제기능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 연계성을 지닌다.

북한 주체 사상도 기본적으로 위에 열거한 기능들을 수행한다. 다만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과 전통적 정치 문화의 특성에 따라 권력 세습의 합리화라든가 대남 혁명 전략 등 독특한 기능들이 변형적으로 첨가되고 있다.

(1) 권력 체제의 정당화 기능

주체 사상이 등장하게 된 것은 대외적으로 자주 노선을 구축하고 대내적으로 반(反)김일성 세력을 제거하여 1인 지배 체제를 다지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이런 면에서 주체 사상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김일성 1인 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기능이다.

사실상 어떠한 정치 체제도 그 체제의 정통성에 위기가 오는 경우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서 공산 정권이 수립된 것은 김일성이나 북한 자체의 혁명 투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2차 세계 대전이 승리로 끝나자 밖에서부터 이식된 소비에트화 정책이 낳은 결과적 산물이다. 북한의 초기 공산화 과정에서 김일성이 공산주의 지도자로서 ‘인민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스탈린에 의해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추진할 스탈린 역할의 대행자로 간택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김일성은 중국의 모택동이나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와 같이 처음부터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 후진국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민족 해방 투쟁을 통해 자국의 공산 정권을 수립하였던 것과는 달리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 경력은 사실상 그렇게 내세울 것이 못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의 절대 권력을 확립하고 유지하며 나아가 카리스마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투쟁 경력을 과장 내지 미화하거나 나아가 날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정치사건>(1973)에 의하면,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하여 “일체를 반대하는 항일 무장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할수 있는 결정적요인은 전적으로 절세의 애국자이며 민족적영웅이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인 수령 김일성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령도에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전설적인 신화와 같은 내용의 연속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얘기들을 사실화(史實化)하기 위해 백두산 부근을 중심으로 무수한 ‘혁명전적지’로 만들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방문 견학

하도록 하고 있다.

김일성의 혁명 전통에 대한 과장과 미화 작업은 결과적으로 개인 우상화로 나타났고 더 나아가 김일성 가계(家系) 전체를 미화하는 데까지 이르렀으며 그의 가계를 ‘혁명가문’으로 찬양하고 있다.

이러한 김일성과 김일성 가계에 대한 미화와 절대화 작업은 결국 주체 사상의 ‘수령론’으로 귀착되었다. 즉, 주체 사상을 ‘인류역사상 최고의 혁명리론’이라 규정하고 이를 창시한 수령과 수령의 가문에게 절대적 권위와 무조건적 복종과 충성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법은 심지어 수령의 후계자도 수령의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데까지 비약되고 있다.¹²⁾

결국 주체 사상에서 정당화하고 있는 북한의 권력 체제는 김일성 1인 체제뿐만 아니라 ‘계속혁명론’을 내세워 김일성 이후의 김정일 권력 계승까지 정당화하고 있다. 주체 사상은 이처럼 김일성의 권력 체제가 그 출범 과정에서 떠맡지 않을 수 없었던 정통성의 시비 문제를 일차적으로 해소해 주는 기능을 하였고, 이는 체제의 정통성을 굳히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김일성 이후의 권력 세습을 합리화하는 논거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2) 대중 동원의 극대화 기능

주체 사상은 ‘사회주의의 건설과 혁명’이란 명분으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대중 동원을 극대화하는 데서 그 힘을 철저히 발휘하고 있다. 동원이란 행동 단위의 잠재적인 에너지를 집단 행동에 이용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사적·민간적 목적으로부터 공적·군사적 목적으로 자원의 통제력을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사유 재산제를 철폐하고 모든 생산 수단을 인민적 소유 내지 공유화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생산 의욕과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경쟁을 통한 동원적 경제 운용은 불가피하게 된다.

주체 사상에 의하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 대

중이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인민 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조직 동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¹³⁾ 이는 곧 김일성이 제창한 ‘주체의 령도 방법’, ‘혁명적군중로선’의 관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 사상의 군중 노선은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속도전’, ‘3대혁명소조운동’,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운동’ 등의 형태로써 전개되었다. 북한에서는 이와 같은 ‘혁명적군중로선’을 가리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혁명적사업과 인민적사업작품”이라고 칭송한다.

천리마 운동은 농업 집단화가 완결된 1958년부터 실시된 고도의 노동 집약적 동원 운동으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1983년에 시행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도 일종의 천리마 운동이다.

‘천리마운동’이 순전히 경제 건설에 초점을 둔 노력 동원이었다면 ‘3대혁명소조운동’은 경제 건설을 촉진시키려는 목표를 지녔다 하더라도 정치 교양에 중점을 둔 운동이었고, 1980년대에 등장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상 주입을 통한 군중 동원의 기능을 한층 강화시킨 사상적 동원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상 주입을 통한 군중 동원의 강화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김정일에 의해 주체 사상이 체계화되고 그 절대적 권위가 강화됨으로써 더욱 촉진되고 있다. 즉, 주체 사상에서 제시하는 이론과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지름길이라고 규정하고, 인민 대중에게 주체 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인민 대중의 동원은 더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북한에서 주체 사상이 표방되기 시작한 것과 사회 동원이 고차화된 것은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 동원 방법은 결국 ‘행정적방법’이나 ‘물질적방법’보다 ‘정치사업을 통하여 그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자각을 가지고 혁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정치사상적으로 발동시키는 방법만이 참다운 혁명적방법’이라는 주체 사상의 논법에 준거한 것이다. 이것은 곧 대중을 주체 사상으로 무장시킬 수 있을 때 효과적인 동원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남한에 대한 인식 구조

주체 사상은 주민들의 의식 구조 형성, 특히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지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체 사상에 입각한 인민들의 이러한 인지 구조는 수령과 혁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1인 독재의 정당성을 더 한층 확고히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남 혁명의 정당성마저 부여하게 된다.

즉, 주체 사상에서 말하는 적은 민족적 주체성을 침해하는 제국주의 세력은 물론 이들과 영합하는 교조적·형식적 반동 세력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적의 개념에 근거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남조선’의 성격을 “애국자와 매국자들간의 투쟁이며, 민족자주세력과 제국주의 침략세력간의 투쟁”¹⁴⁾으로 규정하고, 주체 사상에 기초한 ‘조국해방통일’을 합리화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슬로건을 내걸고 대남 혁명의 불가피성과 주체적 혁명 의식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방문했던 재미 정치학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주체 사상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곳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미국의 지배, 착취하에 있는 남한’이며 미국은 남한을 퇴폐 사회로 오염시켰으며, 남한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케 함으로써 ‘조국의 남반부’를 무능력화시켰다고 믿는다는 것이다.¹⁵⁾ 이러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북한 주민들은, 남한 정부와 그 정치 제도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붕괴된다고 믿고 있다. 북한의 학자는 남한 정부가 발표한 수량적인 경제 발전 지표를 대중의 실질 생활 여건과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한의 급격한 경제 성장이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외국의 제국주의 자본으로 이룩된 것이라고 규정하여 이를 배척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지배층은, 남한의 정치 체제가 정당성이 결여되어 필시 붕괴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는 경제적 및 사회적 대립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믿고, 고조되는 투쟁의 원인을 빈부간의 격차에서 찾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한국 사회 내에 소요가 일어나 정치 체제가 붕괴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나아가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북한이 제안한 ‘고려런방제’ 통일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 체제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 주민들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의식 구조는 바로 주체 사상에 근거한 기계적 학습의 효과로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획일적 사상 의식은 북한 사회의 현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미화하여 인식하게 할 것이므로 북한 사회에 대한 맹목적 자부심만을 더욱 부채질할 뿐 김일성의 정체와 북한 사회의 체제적 모순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정보는 철저히 배제된다. 따라서 북한 인민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인지 구조는 사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체 이데올로기’에 바탕한 대중 조작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4) 권력 세습의 합리화 기능

북한 체제는 혁명의 매 단계마다 주체 사상에 근거하여 김일성 수령 체제의 계승적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일적 후계 체제의 논리 전개와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후계자론’, ‘수령결정론’, ‘혁명적수령관’, 그리고 ‘지도자론’ 등을 앞세워 모든 성원들에게 꾸준히 학습시켜 왔다. 이런 면에서 주체 사상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세습적 권력 승계를 합리화시키는 기능으로 귀결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 권력의 세습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을 만들지 못하면 이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후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인물이 바로 김정일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권력 세습의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여기서 김일성의 후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그는 그에 절대 충성하고, 그의 사상(주체 사상)에 정통하고 주체 사상을 계승·발전·고수하여야 하며, 새 세대의 인물이고 고매한 덕성을 가졌으며,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 등의 조건들을 들고 있다. 그런데 바로 김일성의 장자인 김정일은 주체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했으며 아버지의 고매한 덕성과 지도력을 계승했고, 문화·사상 이론과 정치면에서 많은 업적을 이룩

했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에 올수록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은 주체 철학의 유일한 계승자로 주체 철학을 발전·완성시켜야 할 인물로서 부각하고 있다.¹⁶⁾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후계자로서의 요건을 완벽하게 구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의 혁명 과업이 한 세대에서 완결될 수 없는 ‘대를 이어 계속되어야 할 역사적과업’이라는 점에서 김정일은 주체 사상에 정통하고 그것을 옹호 고수하며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혁명 과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 전개는 주체 사상에 근거하여 김정일을 유일한 후계자로 내세움으로써 김일성의 체제를 그대로 계승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로써 앞으로의 주체 사상은 현상 유지적 기능을 우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주체’는 북한의 사회 변동을 방향짓고, 김일성 수령 체제를 강화하고, 나아가 주민 의식을 통제하는 작용에 끝나지 않고, 급기야 권력 세습을 통한 계속 혁명의 장치로 합리화시키는 단계까지 비약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주체 사상이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억제하면서 사회의 정치적 통합과 지도층의 권력 기반을 확고히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주체 사상이 지난날과 같이 체제 수정적 변화 억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다.

4. 정치 사회화의 의미 규정

한 국가 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은 무엇보다 그 체제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어떻게 양육하고 학습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즉, 현대 국가에서는 어떤 형의 인간이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 가라는 문제가 체제 경쟁의 우열을 판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인간적 존재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각기 특유한 사고,

감정, 행동의 양식을 가진다. 여기서 사회화(socialization)란 동물적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하여 문화를 습득하고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여 사람 됨됨이를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화는 개인의 무지와 무능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를 가진 개념인 동시에 소속된 사회 집단의 문화가 기대하고 지시하는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런 면에서 사회화는 해방과 구속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양면적 성격을 가진 사회화가 사회 전체를 유지·발전시키는 수단적 장치로서 정교하게 이용된다. 이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하나의 보편적 현상이다. 왜냐하면, 자유 민주주의 사회든 공산 독재 체제든 그 어디를 막론하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그 체제가 필요로 하는 인간형을 양육하고 양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화는 근본적으로 이데올로기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사회화는 궁극적으로 정치 사회화를 추구한다.

정치 사회화는 정치 문화를 학습하여 사고·감정·행동의 기준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이며 국가 사회의 정치 문화를 유지하고 변형하고 창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화는 정치 문화에 의해 조건지워지고 영향을 받는다. 이는 한 국가 사회의 체제와 이념에 따라서 인간 본성에 대한 개념 규정과 정치 사회화의 의미가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특히 북한에서는 정치 사회화를 가리켜 정치 사업(또는 사람과의 사업), 정치 사상 사업, 정치 사상 교양, 사상 사업, 사상 교양, 주체 사상 교양 등으로 규정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힘있는 수단(무기)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북한 정치 사회화의 실상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용어들은 그 의미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먼저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편찬한 <현대조선말사전>(1981)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사업 :

《정치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며 이것은 당사업의 기본이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제2판, p.227).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기본요인인 사람과의 사업, 곧 인민대중의 정치적각성과 혁명적열의를 높여주고 혁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줌으로써 그들이 자각적으로 발동되어 맡겨진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

정치사상사업 :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수령의 혁명위업수행에 끝까지 충성 다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혁신을 이룩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과 정치조직사업.

정치사상교양 :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도덕적품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교양.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은 정치사상교양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사상사업 :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서 로동계급적관점과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워 수령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 혁명가로 교양하고 개조하며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

그리고 북한 <철학사전>(1985, pp.658~659)에 의하면 ‘주체사상교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사람들을 주체의 세계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며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려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교양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양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자면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개조하여야 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이란 주체의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를 말한다.

-무엇보다도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지시,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사람에게 깊이 침투시키고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 의의를 폭넓고 깊이있게 체득시킬 때, 사람들이 자기사업에 대한 확신과 정확한 방법을 알고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갈수 있게 된다.

-주체사상교양에서 중요한것은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 나갈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해 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속에서 김일성의 혁명 역사를 전면적으로 체득시키는것과 함께 항일혁명투사들의 무한한 충실성, 불굴의 혁명정신과 강의한 의지, 그들의 피어린 투쟁에 대하여 깊이 인식시켜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은 사대주의, 교조주의, 봉건유교사상, 부르쵸아사상을 비롯한 낡고 비로동계급적인 사상을 뿌리뽑기 위한 심각한 사상투쟁을 동반한다.

이상에서 나타난 용어 해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가치론적 인간관을 거부하고 도구적 인간관을 앞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의 유물론적 세계관에 준거하여 정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인간을 중시한다. 이러한 입장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소위 '주체형의 공산주의 인간'이란 김일성·김정일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적 인간인 것이며 사회주의적 혁명을 위해 죽고 사는 도구적 인간을 가리키게 된다. 이는 그들의 사회화 목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리론>(평양, 사회과학연구소, 1975)에 의하면 "우리는 후대들이 그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그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그의 사상과 교시를 신념으로 신조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충

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북한의 정치 사회화는 국토 분단 이후,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향해 끈질기게 시도해 온 공산주의화 정책의 중심 과제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화가 과잉적인 정치 사회화로 일관되어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5. 사상 교양 사업의 변천과 정치 사회화 과정

(1) 정치 사회화의 정책적 변천 단계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 경제적 요소에 따라 정치 문화의 의미 내용이 각기 특이하게 정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 사회화에 있어서도 그 국가 사회의 정치 문화와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천한다. 일반적으로 공산 사회에 있어서 정치 사회화는 혁명 초기 단계에서는 기존의 존재적 조건을 공산주의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제도로 대처하려는 창조적 기능을 주로 담당하지만 공산주의 제도가 정착되어 그 체제를 관리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 때는 현존 체제를 유지·존속시키려는 보수적 경향이 나타나고 정치 사회화의 목적도 체제 유지 기능에 주력하게 된다.

북한에서도 정치 사회화의 기본 목적은 변함이 없지만 이를 달성하는 정책적 수단은 내외의 정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변천되어 왔다. 즉 사상 사업, 정치 사업을 최우선시하면서도 당의 성격 변화와 공산화의 진척 단계에 따라 ‘사상교양사업’의 우선적 과제는 계속적으로 바뀌었다. 그 단적인 예는 노동당 규약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각 당 대회마다 새로운 당 규약을 개정, 채택하고 ‘지도이념’과 목표, 그리고 당의 전통을 재정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북한 정치 사회화 정책의 전개 과정은 바로 이러한 당 규약의 변화 과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당 규약의 변화 과정에 따라 북한의 교양 사업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좀더 구체적으로 시기별로 구분해 보면 다

음과 같다. 해방 이후 정권 수립 전까지의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시작으로 하여 ‘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 ‘혁명전통교양’ 등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전인민의 공산주의화, 전인민의 혁명화, 전인민의 노동 계급화를 그 목표로 하였다.¹⁷⁾ 그러나 유일 사상 체제가 확립되고 김정일 후계 체제가 공식화되고 있는 1980년대부터는 ‘주체사상교양’을 통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근본방도’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¹⁸⁾

첫째, 건국 사상 총동원 시기는 ‘민주개혁’이란 이름으로(1946년 토지 개혁을 비롯한 중요 산업 국유화 등) ‘반제반봉건민주혁명과업을 완수’하고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의 초기단계에 들어선 시기였다. 교양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각 분야에서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 의식과 사상 의식을 고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봉건적 잔재 및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적 사회를 건설한다는 명분만을 내세웠다.¹⁹⁾

둘째, 1950년대 후반까지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와 사회주의의 기초건설’이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중의 사회주의적 사상 의식과 당성 제고가 강조되었다.

셋째, 1960년대 초까지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완성되고,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시기’였다. 따라서 사상 교양 사업에서도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이 요구되었다. 즉, 이미 확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을 비롯하여 집단주의 정신, 노동 애호 정신, 혁명 정신 등을 강조하였다.

넷째, 1960년대 말까지는 ‘사회주의의 더 높은 발전단계’로 규정된 시기이다. 이 때는 ‘천리마운동’이 사회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사회 전분야에 걸쳐 강행되면서 김일성 유일 체제의 확립과 관련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강조되고, 김일성 가계 우상화와 ‘주체사상에 기초한 정치사상적통일’을 주창하게 된다.

다섯째, 1970년대 말까지는 이른바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과도기적 단계이다. 이 때는 사상 혁명·기술 혁명·문화 혁명의 수행을 위한 ‘3대혁

명소조운동'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시작된다. 이 때부터 김정일 후계 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를 이은 혁명', '혁명세대의 계승'이 강조되고 '김일성혁명사상, 주체사상'이 당의 유일한 이념으로서 모든 활동의 지도적 지침이 된다.

여섯째, 1980년 이후는 '사회주의 완전승리'의 단계로 김정일에 의한 권력 승계 작업의 공식화와 함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혁명의 총적 임무'로 제시되었다.

〈철학사전〉(북한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에 의하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즉,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우리 당의 공산주의건설강령이다.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두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두가지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 것이다.

—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이며 우리 당의 최고 강령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다. 그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아직 누구도 실현해 보지 못한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마땅히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에서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 나가야 한다.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벌이는 것이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 사상으로 무장시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수 있다. 그래야 또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차이를 없앨수 있으며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시할수 있도록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킬수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측면에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그 하나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2) 정치 사회화의 제단계

북한은 지금까지 모든 인민들을 김일성의 요구하는 방향의 ‘새’ 인간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성장 단계에 상응하는 특정한 정치 사회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어린이보육교양법’(1976년 4월)과 ‘사회주의 교육체제’(1977년 9월)에 근거하여 각종 사회화 주관자로 하여금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와 공산주의 인간성을 주입하고 있다. 여기서 삶의 주기에 상응하는 사회화 매개체의 성격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영·유아기에서는 탁아소 교육과 유치원 교육을 중요시한다. 북한은 초기 사회화 단계부터 어머니의 보살핌을 제한하고 국가와 사회가 어린이의 양육 방법에 깊이 관여한다. 어린이들은 생후 3개월부터 탁아소에 집단 수용되어야 하며 4~5세 때부터는 유치원에 가서 교양원의 가르침을 받는다.

교양원들은 ‘김일성 혁명력사 이야기’, 만경대 모형에 의거한 김일성의 어린 시절 소개, 미군, 지주, 자본가, 관리들의 횡포 이야기, 혁명 가요 부르기, 반미적인 연극 활동, 반미적 전투적 내용이 담긴 만화와 그림, 전쟁놀이, 무용, 운동, 산보 그리고 간식 제공 등을 통하여, ① 김일성에 대한 고마움, 존경, 복종심을 기르고, ② 미군, 지주, 자본가, 관리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③ 집단주의 정신을 배양하게 된다.

이곳에서 어린 아이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또 행동에 옮겨야 할 것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구분되며, 그것은 서로 대칭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즉, 김일성은 ‘은혜’와 그에 대한 무조건 절대적 복종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계급적원썹’에 대한 무조건적인 타도를 설득하는 것들이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되는 사항은 첫째로 그들의 ‘적’이 무엇이고 그러한 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며, 둘째는 모든 사회 관계에서 각자가 취해야 할 행위의 표준을 김일성의 과거 행동(혁명 전통) 가운데서 찾게끔 가르친다는 것이다.²⁰⁾

둘째, 후기 아동기에서는 인민 학교 교육과 소년단 조직 생활을 중심으로 교화시킨다. 어린이들은 후기 아동기(6~11세)가 되는 만 6세부터는 인민 학교의 공산주의적 교육과 동시에 소년단원으로서 사회 단체 생활을 시작한다. 소년단의 조직 생활은 만 13세가 되는 고등 중학교 3학년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 동안 어린이들의 생활 환경은, ① 인민 학교 교과서의 학습을 통하여 김일성에의 충직, ‘미국놈’, 적에 대한 적개심 함양, 전쟁 의식의 고취,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등을 시도함으로써 북한 공산 지도자들이 기대하는 기본적 성격 특성을 배양하며, ② 소년단의 정치 사회 활동을 통하여 당과 김일성에 무한히 충실하며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붉은 전사, 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방법들은 1980년대에 와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예컨대 1982년 6월 6일, ‘조선소년단’ 결성 36주년을 맞아 ‘소년단’은 김일성과 당에 절대 복종하는 ‘주체혁명의 후비대’로 육성시켜 나갈 것을 재다짐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에 대한 주체 사상 교양 사업을 적극화시키도록 촉구했다.²¹⁾

—모든 소년단원들이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당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할줄 알게 하여야 한다.

—김일성동지와 당에 대한 충실성은 소년단원들의 제일생명이며 청소년들속에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위업계승에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소년단원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배움의 천리길 행군’, ‘광복의 천리길 행군’, ‘김일성의 청소년시절따라 배우기 운동’, ‘숨은 영웅 모범따라 배우기 운동’,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 답사, ‘김일성 소년영예상’ 수여, 그리고 줄땅콩 가꾸기, 유지 작물 재배 등 생산 노동 운동과 키크기 운동, 파고철 수집 운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셋째, 초기 사춘기에서는 고등 중학교와 사로청의 역할이 강조된다. 인민 학교를 마친 소년들은 대부분 후기 아동기(6~11세)와 초기 사춘기(12~15세)에 해당되는 만 10~16세 기간을 고등 중학교의 교육을 받게 되며 동시에 중등반 학생은 소년단, 고등반부터는 '사로청' 맹원으로서 정치 사회 활동을 본격화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기간부터 벌써 고등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특수 교육 기관의 입학자로 선발되어 이른바 민족 간부로서의 예비 과정을 일찍부터 시작하는 특수층이 생긴다. 이는 사회적 이동 과정에서 장차 각자가 차지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를 배당받는 데서 가장 중요한 생활 주기가 된다.

사로청의 맹원이 된 학생은 당의 직접적 통제를 받고 있는 사로청의 조직 활동을 통하여 당과 혁명에 충실한 공산주의의 후계자로 양육된다. 그들은 주간 행사 계획에 의거한 각종 회의, 사회 봉사, 문화 위생, 기술 연마, 체육을 비롯하여, ① 경험 교환회, 경제 건설의 선봉대로서의 노력 동원, 집단 기술 운동의 돌격대 활동, ② 목표량 독려, ③ 칭호 수여, ④ 자연 개조, 농촌 지원 등을 맡고 있으며, ⑤ 이에 필요한 학습회, 강습회(토끼 관리, 병 예방과 치료, 토끼 먹이 등 강습)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 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에게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과 더불어 적에 대한 적개심이 배양되고 체제 지향적인 후계자로 양성된다.

넷째, 후기 사춘기에서는 상급 학교 진학과 직장 배치 과정을 통해서 정치 사회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청소년 사회화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후기 아동기를 지나 초기 사춘기(만 16세 정도)에 이르게 되면 청소년들은 각기 북한 체제에서 각자가 놓여지게 될 사회적 위치의 행방이 가려진다. 고등 중학교나 특수 교육 기관을 마친 청소년들에게는, ① 대학 진학, ② 엘리트 양성의 천재 교육, ③ 군대(17~20세) 입대 ④ 직장 배치 등 제도화된 사회 진출의 기회가 차별적으로 부여된다. 이 중에서 고등 교육을 받을 자격을 얻어 진학하는 사람은 극소수층에 속한다. 나머지 대다수는 본인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 국가 기관 등 각 분야의 직장에 배치받게 된다. 따라서 후계 세대들은 스스로가 북한 체제를 포기하고 소의 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는 한 소속 단체의 신임과 추천을 받아 낼 수 있는, ① 정치적 표징과, ② 실무적 표

정을 축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치 사회화의 기본 원칙은 그 이후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지속된다.

이상에서 볼 때 북한 주민들은 각자 맡은 바 과업 완수를 위한 노동 생활, 조직 생활, 학습 생활에서 지배 집단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사고·감정·행동 유형에 보다 충직하고 충실하지 않으면 북한땅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 이는 그만큼 ‘완전조직사회’ 속에서 ‘완전한 공산주의혁명가’ 양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북한의 이러한 정치 사회화 과정은 독특한 의식 구조를 양성한다. 오늘날 북한의 후계 세대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태어나서 사회주의적 양육과 교육을 받은 그야말로 외부 영향력이 최소한도로 제한된 폐쇄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이들은 ‘순수한 공산주의자’로 양육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소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가장 골고루 갖춘 인간들이라는 뜻이다.²²⁾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인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내면적으로 실재하고 있을 사회 의식 내지 가치관 가운데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남한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태도일 것이며 이 중에서도 대 남한관에서 나타나는 ‘적대의식’이 문제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또 하나는 북한 공산집단이 고수하고 있는 소위 ‘남조선혁명여건의 조성’ 전략과 연관된 혁명 의식이다.

6. 맺음 말

북한 공산 지도자들은 주체 사상 문화를 바탕으로 ‘주체적공산주의혁명가’를 만들어 내기 위해 유아 때부터 공산주의식 양육 방식을 강요하는 교화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분명한 역설이 발견된다. 즉, ‘주체사상’은 공식적으로는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인간, 또는 ‘주체형의 혁명적인간’을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인간상을 실현하는 방법, 과정 및 절차는 비자주적·타율적·강압적인 방법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아주 어릴 때부터 집단 생활을 강요하고, 개성을 무시·파괴시키는 분위기 속에서 오로지 한 사람의 명령에 따라 죽고 살 수 있는 자동화된 인간 기계를 일방적으로 제조하려는 데서는 결과적으로 반자주적, 비주체적, 비창조적, 반사회적인 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측면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인민들은 교조적으로 경직화된 정치 문화 속에서 마치 수용소의 인간을 연상케 한다. 수용소에 갇힌 인간에게는 자유도 창의도 자주성도 있을 수 없다. 결국 '북한적 인간'이란 바로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해서 주조된 비주체적 인간일 것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그러한 논거에 비추어 볼 때 공산 국가의 현실은 철저한 정치 사회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산 지배 집단이 설정한 이상적인 '인간상'의 정립과는 달리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겠다는 요구와 그것이 실제로 구현하는 사회적 환경 사이에는 심각한 지체 현상(social lag)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간 개조가 어떤 소수 통치 집단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강압적으로 도야되었다고 할 경우, 역할 거리 현상이 더욱 역력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안정된 바탕을 갖춘 '주체적 자아'로서가 아니라 자아의 지주를 타자에게서 구하는 '객체적 타아'로서 존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의 잠재적 가능성이 개발될 여지를 찾지 못함으로써 그들은 곧 자아 발달의 한계점에 봉착, 퇴영적 상태에 머물게 된다.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 있고, 또 공산주의 여러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점이다.

독일 나치의 초인간적 지도자 원리의 파탄이 그랬고, 소련에 있어서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퇴색과 이에 따른 청소년의 대중화 현상, 또 동유럽에 있어서 청년 문화의 소외 현상과 자유화 경향, 북한 사회의 반사회주의적 심리 변화와 탈출 심리 등 이러한 현실적 제반 문제의 야기는 주목거리가 되고 있다.

■ 참고 문헌

1. 저서

- 김시환, 〈북한 주체 사상의 이론 구조와 이데올로기적 기능〉,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부설 대학원, 석사 논문, 1988. 12.
- 김원휘, 〈북한의 정치 교육 실태〉, 고려대, 석사 논문, 1982. 11.
- 김갑철·고성준, 〈주체 사상과 북한 사회주의〉, 문우사, 1988.
- 김학준·전인영 공저, 〈소련 및 동구 공산주의〉, 서울대 출판부, 1984.
- 도홍렬, 〈남북한 청소년의 의식 구조 형성 과정 비교〉, 국토 통일원, 연구 보고서, 1977.
- 양성철·박한식 편 〈북한 기행〉, 한울, 1985.
- 양호민외, 〈북한 사회의 재인식〉, 한울, 1987.
- 엄홍철 외, 〈북한 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 극동 문제 연구소, 1987.
- 이정식·스칼라피노,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제3권, 돌베개, 1987.
- 허동찬, 〈김일성 평전: 허구와 실상〉, 북한 연구소, 1987.
-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국토 통일원, 연구 보고서, 1978.
- 〈북한 사회론〉, 북한 연구소, 1977.
- 〈북한 교육론〉, 북한 연구소, 1977.
- 〈북한 정치론〉, 북한 연구소, 1977.
-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 비판〉, 북한 연구소, 1977.
- 〈북한 개요〉, 평화 통일 연구소, 1986.
- 〈원자료로 본 북한: 1945~1988〉, 동아일보사, 1989.1.
- Wallace, Anthony, *Culture and Personality*, N.Y., Random House, 1961.
- Johnson, Charlmers, *Revolutionary Change*, 〈혁명의 미래〉, 환상상 역, 현대사상, 1977.
- Johnson, Charlmers,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Univ. press, 1970.
- Schurmann, Franz,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keley, California Univ. press, 1966.
- Marx Karl, Engels, Friedrich, *The German Ideology*, N.Y., International Publishers, 1967.

2. 논문

- 고영복, “북한의 사회구조와 사회적 성격”, 〈북한학보〉 제3집, 북한 연구소, 1979, pp.142~154.
- _____, “북한의 정치 사회화와 사회 동원 체계”, 〈북한 사회론〉, 북한 연구소,

- 1977.
- 김남식, “북한의 사회 체계와 이데올로기의 변천”, 《북한 사회론》, 1977, pp.15~76.
- 김행선, “주체 사상의 기능 분석 : 통일관을 중심으로”, 《북한학보》 제 6 집, 1982, pp.181~245.
- 도홍렬, “사회주의 심리학 비판”, 《북한학보》 제 8 집, 1984, pp.203~204.
- _____, “북한의 사회변 화와 주체 사상”, 《동아연구》 제 13 집, 서강대 동아연구소, 1988. 2, pp.135~162.
- _____, “세대 문제로 본 남북한 관계”, 《북한학보》 제 9 집 1985, pp.142~147
- 박상섭, “주체 사상 비판 연구에 관한 비판적 내용 분석”, 《북한 통치 이데올로기 연구》,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1984, pp.302~312.
- 박용현, “북한의 정치 교화 정책과 청소년의 가치관”, 《북한학보》 제 4 집, 1980, pp.123~138.
- _____, “북한의 정치 교화 교육”, 《북한 교육론》, 북한 연구소, 1977.
- 박순영, “정치 교육의 비교 연구 : 서독과 동독을 중심으로”, 《한국 사상과 윤리》,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1980, pp.237~298.
- 안병영, “정치 사회화의 비교 연구 서설 : 서구이론의 공산권에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북한학보》 제 1 집, 1977, pp.101~126.
- 양성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배우나”, 《북한 기행》, 한울, 1986.
- 양호민, “주체 사상과 정치 교화”, 《북한 정치론》, 북한 연구소, 1979.
- 이계희, “북한의 사상 정책과 정치 교육”, 《통일문제연구》 제 1 권 제 1 호, 국토 통일원, 1989, pp.226~249.
- 이상우, “정치 이념, 사회 변화와 대남 정책”, 김준엽·스칼라피노 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 범문사, 1985, pp.294~305.
- 이용필, “북한 통치 이데올로기의 구조와 기능”, 《통일을 위한 민족 화합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한국 정신 문화 연구원, 1984, p.87.
- 차경수, “공산주의 교육과 정치 사회화 과정”, 《통일정책》 제 4 권 제 4 호, 국토 통일원, 1978.
- 최광석, “김정일 체제하의 정치 사상 교육”, 《북한학보》 제 7 집, 1983, pp.43~268.
- _____, “북한 통치 이데올로기의 교육”, 《북한 정치 체제 연구》, 고대 아세아 문제 연구소, 1972.
- 황성모, “북한 연구 논공 : 이해 사회학적 방법론 시론”, 《통일정책》 제 3 권 2 호, 국토 통일원, 1977, pp.131~148.

_____, “북한 연구 현황과 방법론”, 《북한학보》 제 4집, 1980, pp.11~29

3. 북한 간행물

김일성, 《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3.

_____, 《혁명적 수령관》, 평양, 1982. 10.

사회과학연구원,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1~10, 평양, 사회과학연구원, 1985.

_____, 《철학사전》, 1985.

_____, 《현대조선말사전》, 1981.

_____,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각 주

- 1) 예컨대 주체 농법, 주체 공법, 주체 과학, 주체 철학 등을 비롯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관리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등을 들 수 있다.
- 2) 목표 문화와 전이 문화 개념은 월레스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었지만 문화 일반의 분석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을 정치 문화 또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분석 도구로 찰머스 존슨이 정교화 했다. Anthony Wallace, *Culture and Personality*, New York, Random House, Inc., 1961; Char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Univ. press, 1970; Charlmers Johnson, *Revolutionary Change*, 《혁명의 미래》, 한완상역, 서울, 현대사상, 1977 참조.
- 3) 1980년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 의하면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하였다.
- 4) 사회과학연구원,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평양, 사회과학연구원, 1985, p.55.
- 5) 북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산주의 혁명 단계는, ①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 단계, ② 사회주의 혁명 단계 ③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단계, ④ 북한 내 공산주의 건설, ⑤ 세계 혁명 순이다. 양호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론”, 《북한 사회의 재인식》, 서울, 한울, 1987, pp.89~142 참조.
- 6) 김일성,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15.
- 7) 《김일성 저작선집》 제 3권, p.49.
- 8) 1921년 6월, 스탈린은 《정치적 전략과 전술에 대하여》라는 책자에서 “한나라의 혁명을 위해서는 모든 공산당들이 다른 나라 당들의 신행 경험과 교훈을 자기 나라의 전통과 현실적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고 하여 각 당마다 독특한 혁명 운동과 전략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 9) 이와 같이 김일성이 자신의 이상화를 이룩하여 주체 사상을 유일 사상화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일성 개인의 과거 경력에 대한 콤플렉스의 반작용, 권위주의적 유교 문화와 전체주의적 식민 통치 문화에 힘입었던 바 크다 하겠다.
- 10) 마르크스의 의하면 현실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의식의 차원에서 해결하려 할 때 이데올로기의 모습을 띤다고 한다. 이데올로기 개념의 핵심은 결국 현실적 모순의 대응 양태에 불과하며 현실에서 극복되지 못한 모순을 의식에서 해결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이 모순들을 부정하고 감추려 하게 된다는 것이다. Karl Marx · Friedrich Engels, *The German Ideology*,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67 p. 39.
- 11)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Berkeley, California Univ. Press, 1966, pp. 58~62.
- 12) 북한에서 주창하고 있는 권력 세습의 합리화 이론으로서 ‘혁명승계론’, ‘혁명전통론’, ‘세대교체론’, ‘혈통계승론’, ‘력사적 준비단계론’, ‘김일성화신론’ 등을 들 수 있다.
- 13) 김일성, 〈외국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제 3권, p. 246;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제 9권, p. 65.
- 14) 〈로동신문〉 1975년 10월 9일자.
- 15) 양성철 · 박한식, 〈북한 기행〉, 한울, 1985, pp. 33~34.
- 16) 현재 북한에서는 김정일을 ‘주체혁명 위업을 이어갈 현명한 지도자’로 선전하고 있으나 폴란드에서는 ‘옛날 왕조 시기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작태’, ‘20세기 수치’로 비난받고 있다고 한다. 폴란드 유학중 귀순한 북한 대학생, 동영준 · 김순학 증언 (1989. 5. 20)
- 17) 1971년 12월 27일 전국 교육 대회에서 한 김일성 연설,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 18) “제 6 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김일성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1980년 10월 12일자.
- 19) 당시의 어떤 공식 문헌에서도 명백한 혁명의 성격을 밝힌 문서를 찾아볼 수 없다.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혁명’임을 공식화한 것은 10년 후인 1955년에 이르러서이다.
- 20) 교육도서출판사 집필위원회, 〈사회주의 심리학〉(사범대학용), 동경, 학우서방, 1974; 〈북한학보〉 제 9 집, 1985, p. 144.
- 21) 〈내외통신〉 1982년 6월 18일자.
- 22) 예컨대 그 주요 요건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은, ① 김일성에 대한 무조건 충성과 절대적 복종, ②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과 부단한 혁명의 사상, ③ 집단주의 정신, ④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⑤ 사회주의 애국주의, ⑥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정신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으로 무장한 혁명 지향적·조직 지향적 인간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 청소년 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는 개인의 심성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려는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해 놓고 있다. 즉,

① 새 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정의·진리를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운다. ② 배우려는 의욕과 과학 기술에 대한 탐구력이 강하다. ③ 용감하고 낙천적이고 풍부한 정서를 지녔다. ④ 원대한 포부와 이상을 가졌으며 그것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싸우고 대담하게 앞을 뚫고 나간다. ⑤ 군중 앞에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남이 못하는 것을 하여 이름을 떨치려는 영웅심을 가졌다. 교육도서 출판사, <사회주의 심리학>(사범대학출), 동경, 학우서방, 1974, pp.221~252.

〈표 1〉 당 규약의 개정 및 변화 과정

당 대회	지도 이념	전 통	목 표
제 1 차대회규약 (1946.8)	규정이 없음	규정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강한 민주주의적 조선 독립 국가 건설 • 근로 대중의 정치·경제 및 문화 생활 수준 향상
제 2 차대회규약 (1948.3)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제 3 차대회규약 (1956)	마르크스-레닌주의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조선 인민의 혁명적 전통 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면 목표 : - 전국적 범위에서의 반제·반봉건 민주 혁명 -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 • 최종 목표 : - 공산주의 사회 건설
제 4 차대회규약 (1961.9)	마르크스-레닌주의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한 혁명 전통 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면 목표 : - 전국적 범위에서의 반제·반봉건 민주 혁명 -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 • 최종 목표 : - 공산주의 사회 건설
제 5 차대회규약 (1970.11)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의 주체 사상	위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면 목표 : -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 -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 • 최종 목표 : - 공산주의 사회 건설
제 6 차대회규약 (1980.10)	김일성의 주체 사상, 혁명 사상	항일 혁명 투쟁 기간 김일성이 이룩한 혁명 전통 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면 목표 : 위와 같음 • 최종 목표 : -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 공산주의 건설

제 2 부 사회주의 경제 건설

1.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계획

연 하 청(한국 개발 연구원 부원장)

1. 서 언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일반적으로 생산 수단의 국·공유화 및 계획에 의한 사전적인 자원 배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모든 경제 건설의 기본 목표를 그들 특유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달성하는 데 두었는데, 이는 사회주의의 원칙하에서만 공업화가 촉진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공업화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주민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혁명을 완수하는 물질적 생활 기반을 보유한 참다운 사회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북한 경제 정책의 일관된 기본 특징은, 중공업의 급성장하에서의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 '자력갱생원칙'에 입각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발전 및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의 동시적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과 그 직접적인 건설을 위한 이와 같은 경제 정책은 다음의 4단계로 수행되었다고 한다.¹⁾

첫째, 인민 경제 복구기(1946~1949, 1954~1956)로서 이 기간 동안 토지 개혁 및 주요 산업 시설의 국유화 조치(1946)가 시행되어 '사회주의의 토대구축'으로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었으며, 전후 복구 3개년 계획(1954~1956)은 생산 수준을 전전 수준으로 높일 것과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파생된 기형성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였다.

둘째,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반 조성기, 즉 북한의 5개년 계획(1957~1960) 기간으로, 농업 협동화 및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 완성 등 생산 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가 완성되고, 공업화의 기반 구축을 통해 자립 경제의 기반을 확립하는 사회주의 경제 기반 강화 시기이다. 북한은 조선 노동당 제4차 대회(1961)에서 이 기간을 통해 북한이 식민지 농업국에서 사회주의적인 농·공업국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셋째, 공업화의 전개와 인민 경제상의 거대한 구조적 진보 시기, 즉 제1차 7개년 계획 및 7개년 계획의 3년 연장기(1961~1970)로서, 사회주의적 소유와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발전 및 공업화를 실행하고 사회적 생산을 근대화시키며, 과학·기술 혁명을 실현시키는 도정에서의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술적 토대 구축의 재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그 기본 정책 목표를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 및 경공업과 농업의 병행 발전, 전면적 기술 혁신, 그리고 문화 혁명과 국민 생활 향상에 두었다. 제5차 당 대회(1970)에서는 북한을 사회주의적 공업국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과제가 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기술 개조와 인민 경제의 현대화 시기(1971~현재)로서 6개년 계획(1971~1976),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 및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이 이에 해당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사회주의로의 이행기 전체의 주요한 전략적 과제인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²⁾에 완전히 상응하는 물질적·기술적 토대의 조성, 인민 생활의 물질적·문화적 수준의 현격한 고양의 해결과 함께 북한 경제의 질적으로 보다 높은 발전 단계로의 이행을 위해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집약적 발전 방식을 추구하였다.

다음에서는 북한 경제 운용 체제의 기본 모형을 살펴보고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고자 수행한 경제 계획의 각 단계별 목표 및 기본 성격,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들을 분석한 다음, 북한 경제 정책의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을 경제 개혁의 가능성과 관련시켜 살펴보기로 한다.

2. 경제 운용 체제의 기본 모형

경제 운용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 접근 방법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소련의 모형을 모방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주의’와 ‘교리적인 경향’에 입각해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북한의 실정에 맞도록 각색한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북한의 ‘주의’와 ‘교리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은 기본 명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지배 집단은 중앙 집권적인 계획이 시장의 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피하고 균형 있는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확고한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당의 지배가 없이는 사회주의의 발전도 침체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당의 경제 운용 목표는 급속한 산업화가 아니라 독립된 통일 국가 형성의 기반이 되는 사회주의 경제 혁명의 발전으로서, 이것은 중공업의 중점적인 육성을 필요로 하며 군사 부문에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도록 한다. 넷째, 경제의 운용은 행정적 또는 기술적 노력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수단에 더욱 크게 의존하며 근로자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행정적인 개혁이나 물질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정치적인 동원에 더욱 역점을 둔다. 다섯째, 당 운영 기구는 중앙 집권과 집단 지도 체제라는 이중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조직되는데 중앙 집권은 상급 기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 하급 기관을 포함시키는 한편, 하급 기관으로 하여금 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를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강요해 왔다. 집단적 지도 체제는 모든 차원에서 당 조직의 조직화를 필요로 하며, 이는 당의 지배권 행사를 위한 메커니즘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여섯째, 경제 정책의 결정과 집행은 기본적으로 자주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당의 정당성(legitimacy)의 근거로서 뿐만 아니라 혁명 완수를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도 한다.³⁾

이상과 같은 기본적인 명제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북한은 권위주의와 유교적 전통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앙 집권적이고 엄격한

통제 경제적 국가 중의 하나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국가의 개발 우선 순위 결정이나 정책 과제 선정에 있어서 김일성의 개인적인 역할이 크게 중시되어 왔다.

따라서, 북한 정책 결정의 일반적인 모형은 중앙 집권적인 기획과 ‘개인’의 엄격한 정치적 통제에 입각한 명령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모형은 북한이 경제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을 때에는 고도 성장의 잠재력을 몇몇 주요 부문의 발전에 집중적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어느 정도 북한의 경제 발전에 공헌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가능케 한 이와 같은 경제 운용 방식 자체가 경제 발전이 진전됨에 따라 북한 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에 직접적인 장애와 제약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⁴⁾ 즉, 고도의 중앙 집권화는 부문간 조정의 결여, 업적에 대한 과대 평가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으며, 엄격한 정치적인 통제는 기획의 경직성을 야기시켰다. 또한, 체제의 불안정은 경제의 정치 도구화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생산 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중 동원과 이데올로기에의 지나친 의존은 이미 효과면에서 수익 체감(收益遞減)의 단계(the points of diminishing return)에 도달하였고, 계획 수립상의 오류, 생산품의 질 저하 등을 초래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혁명 발전에 대한 지나친 강조, 중공업 및 군사 부문 우선 정책은 성장의 침체와 불균형을 심화시켰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북한의 경제 운용 방법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더 이상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북한 경제 운용상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북한 경제 계획의 실시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3. 북한의 경제 계획

(1) 사회주의 이행기의 경제 계획(1945~1960)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에 있어서는 각 나라의 사회 경제적 조건이 다를지라도 혁명 주체의 사회주의적인 이념 지향이 공통점으로 부각된다. 그것은 공업 부문에 있어서 외국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국유화가 추진되고, 농업 부문에서는 토지 개혁과 집단화가 순차적으로 시행되어졌음을 말한다.⁵⁾

북한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개혁은 1946년에 실시된 토지 개혁과 중요 산업의 국유화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의 개혁 조건을 창출하는 데 있어 특이한 것은 한국 전쟁의 영향이 북한의 사회주의 전개를 촉진시켰다는 것이다. 한국 전쟁의 영향은 정치적으로 북한의 공산주의 이념의 강화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집중화로 나타났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생산력 기반의 파괴는 기존 사회 관계를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광범위한 사회적 동원으로 사회주의적인 집단화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1950년대 이후 초기의 북한의 발전 전략은 소비에트 발전 모형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공업에 있어서는 중공업을 우선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농업에 있어서는 집단화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었다. 농업 집단화의 주요 동기는 노동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력의 제고를 위한 농업 발전이라는 경제적 지향에 앞서 공업 개발을 위한 원료 공급과 농촌 부문에 대한 통제력의 강화라는 정치적인 요소가 전제되어 있었다. 중국과 소련에 의한 물질적·기술적인 원조 아래에서 이러한 초기의 발전 전략은 경제 성장이라는 면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통하여 사회주의로 이행한 1945~1960년의 기간에 실시한 경제 계획은 시기별로 1940년대의 재건기(1945~1946), 제1·2차 1개년 계획(1947, 1948), 그리고 2개년 계획(1949~1950)이

있고, 1950년대에는 주요 산업 시설을 북부 산악 지대로 소개한 남침기, 전후 복구 3개년 계획(1954~1956), 그리고 5개년 계획(1957~1961)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에서는 이 기간 동안의 이와 같은 경제 계획에 의한 북한의 사회주의화 과정을 농업의 사회주의화 과정과 공업의 사회주의화 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로 한다.

1) 농업의 사회주의화

북한이 해방 이후 추진해 온 농업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농업의 사회주의화와 식량·원료의 자급 자족화를 통한 자립적 경제 체제의 구축을 말한다. 농업의 사회주의화란 1946년의 토지 개혁에 의한 소토지 소유 농업 경제의 창출, 1958년에 완성된 농업 협동화, 그리고 1964년 이후부터 추진되어 온 협동적 소유제의 전인민적 소유제로의 전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농민의 노동자화를 말한다.⁶⁾

먼저 토지 개혁을 살펴보면, 북한이 해방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행한 공산화 개혁인 11개 당면 과업⁷⁾ 중에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으로서 봉건적인 소작제를 폐지하고 자작농제를 확립하기 위한 토지 개혁은, 양차 대전 후 동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후진국들에게 공통적인 과제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일제로부터 해방된 북한에서의 토지 개혁도 당연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시기와 방법, 그리고 어떠한 내용으로 실시하였는가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46년 3월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과 '동개혁실시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3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토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개혁법령'에 따라 일본인 및 일본 국가 소유의 토지, 5정보 이상 소유 지주의 토지, 소작을 주는 토지, 종교 단체 소유와 민족 반역자들의 토지를 전부 몰수하여 고용 농민, 토지가 적거나 없는 농민, 이주한 지주 등의 경작자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분배에 있어서는 가족수와 가족 내에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수에 따른 균등 분배가 이루어졌다.⁸⁾ 그 결과, 총경지 면적의 52%에 해당되는 100만여 정보가 몰수되어, 그 가운데 98만여 정보는 약 72만 호의

농민에게 분배되었고, 약 2만 정보는 임시 인민 위원회 보유지로 귀속되었다.⁹⁾

이러한 북한의 토지 개혁은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형식 면에서 무상 몰수·무상 분배 원칙이 취해졌다는 것인데, 이는 그 당시에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농업 생산성과 토지가 없거나 열악한 자·소작농이 태반이었던 빈농을 기반으로 하여 공산당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토지개혁법령’ 제 10조에서는 “토지개혁에서 분배받은 토지는 매매할 수 없고 소작 및 저당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토지 개혁을 보다 완결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규정으로서 생산력의 저위성과 상대적 격차에서 비롯되는 토지의 소수인으로서의 집중과 소작 제도의 재생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소토지 소유 농민 경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자본주의적 토지 소유 관계의 부활을 봉쇄함으로써 장차 농업의 사회주의화, 즉 농업 집단화를 실시함에 있어서 유리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토지 개혁은 북한의 농촌에 있어서 계급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당시 북한이 내세웠던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타도 대상이었던 지주 계급은 완전히 청산되고 부농층도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와는 달리 고용자, 소작인, 빈농들은 농촌에서 생산 수단을 가진 ‘주인’ 입장에 서게 되고 사회주의적 생산 활동 체계를 갖게 되었다.¹⁰⁾

결국, 토지 개혁은 봉건적 생산 관계를 철폐하여 농업 생산력을 봉건적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나아가 농업 집단화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농촌의 지주 계급을 없애고 빈농을 기초로 하여 공산당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토지 개혁이 사회주의화를 지향하는 과도적 단계의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사회주의 혁명 이론과 결부시키지 않고, “조선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는데,¹¹⁾ 이는 농민들의 전통적인 토지 소유욕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농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토지 개혁과 함께 실시된 토지 관개 관리령, 지하 자원·산림·수역 등의

국유화 조치는 이 시기의 주요 농정 목표 가운데 하나인 식량 증산을 위해서 취해진 생산력 발전 시책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무관한 농민들의 영원한 소유로 부여되었던 토지는 휴전 후인 1954년부터 시작된 사회주의 개혁에 따라 개인 소유로부터 협동 소유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1958년 8월경에 농업의 협동 조합화 과정이 완성된다. 농업 협동화 계획이 1954년 처음 제기되었을 때는 당내에서 '시기상조론', '공업우선론'¹²⁾ 등 그 시기 선택 문제와 농민의 자발적 참여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난제가 대두되었으나, 이 계획은 사회주의 경제가 계획 경제인 만큼 개인농을 그대로 두고서는 철저한 계획 경제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정치적 측면에서 노동 동맹을 강화하고, 농민을 사회주의적 성분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실시되었으며, 또한 6·25 전쟁을 통해 농지 기반이 크게 파괴되어 농민들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복구·발전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도 객관적인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북한 농업의 협동 조합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 다음의 <표 1>이다. 이와 같은 농업의 집단화를 위해 북한은 계급 교양사업을 강화하였고 국영 농업 기업소를 확대하여 대농 경리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였으며, 농업 협동 조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부농에 대한 탄압 조치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의 평균 규모는 80호의 농가와 130정보의 경지 면적으로 그 규모가 작아 농민의 토지 소유에 대한 의식 구조를 변화시킬 수 없었고, 경지 정리와 기계화 등 사회주의적인 대농 경리의 우월성을 발휘할 수 없었는데, 이는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농업의 공업화 이전에 실시되어 농업이 실제로 사회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러한 과제는 제 4기 조선 노동당 중앙 위원회 제 8차 총회(1964. 2)에서 채택된 제 2차 당 농업 강령 — 사회주의 농업문제에 관한 테제 — 의 실현, 즉 농업의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통해 해결되었다고 한다.

2)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 확립

1945년부터 1960년까지 북한은 농업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업 부문

에서도 중요 산업의 국유화 조치 및 협동 조합화로 생산 관계를 사회주의 체제로 개조하면서¹³⁾ 사회주의적 공업화에 착수하기 시작한다. 북한은 공업화를 당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공업화가 실현됨으로써 물질적·기술적 토대가 강화되고 경제적 자립성이 보장될 뿐 아니라 사회적 노동 생산 능률이 성장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공업화가 공산 국가의 공통된 요구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한 북한도 오랜 기간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균형적이고 현대적인 공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대적 공업을 건설하며 선진 기술을 토대로 경제를 재건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설정했다는 데서 비롯된다.

북한이 제시한 공업화는 튼튼한 물질적·기술적 토대에 기초하여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건설하며 주민 생활을 체계적으로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 중공업부터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하나의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관한 논리적 근거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경공업이나 농업은 물론 운수·통신 등 현대화의 필수적 부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의 생활 향상과 자립 경제의 구축 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사회주의 경제 이론의 ‘우회 생산설’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¹⁴⁾

1954년부터 북한은 전후 복구 3개년 계획(1954~1956)에 착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계획은 생산 수준을 전전 수준으로 높일 것과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파생된 기형성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여 ‘중공업의 우선발전 보장과 경공업·농업의 동시 발전’을 주요 과업으로 하였다. 그러나 처음 1년간에 중공업 부문의 기초를 구축한다는 3개년 계획의 구상은 자본, 기술, 노동력을 포함한 모든 생산 요소가 부족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3개년 계획의 추진 방법으로서 전인민의 노동력을 총동원하고 모든 국내 가용(可用) 자원을 경제 계획에 투입하며, 외적으로는 공산권 제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택하였다. 3개년 계획 기간 중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기술 원조에 힘입어¹⁵⁾ 공업 부문에의 집중적인 기본 건설 투자로 대규모 공장의 복구 건설과 기술 인력의 양성

에 주력하여 광공업 부문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계획 기간 말에 가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즉, 광공업 생산의 연도별 성장율을 보면 1954년에 51%, 1955년에 52%, 그리고 1956년에 27%로 감소하였다.

3개년 계획에 이어 1957년부터는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조성하고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기본 경제 시책으로 한 제1차 5개년 계획(1957~1960)에 착수하였는데,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 및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이라는 기본 노선에 따라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농업의 집단화와 소규모 상공업의 사회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제1차 5개년 계획은 중공업 편중 문제를 둘러싼 소련과 당 내부에서의 반발 및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경제 원조의 격감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 경쟁 운동으로서의 '천리마운동'을 통한 노동력의 최대 동원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2) 제1차 7개년 계획 및 계획의 3년 연장(1961~1970)

북한은 5개년 계획을 1년 앞당겨 1960년에 마무리한 데 이어 1961년부터 사회주의 공업·농업 경제로부터 사회주의 공업 경제로의 이행을 지향하는 제1차 7개년 계획(1961~1970)에 착수하였다. 제1차 7개년 계획은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실시하고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강력히 구축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시키고 공산주의로의 점차적 이행을 준비하는 데 그 목표를 두었다. 그리고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 및 전면적인 기술 혁신과 문화 혁명에 의하여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과제로 삼았는데, 이 7개년 계획을 통하여 북한은 공업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특히 5개년 경제 계획의 결점을 시정하여 중공업 편중에 의해 야기된 각 부문간 불균형의 폐단을 없애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북한은 이 같은 과업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전반기 3년 계획과

후반기 4년 계획으로 구분하였는데 전반기 계획의 목표는 기존 중공업 기지를 정비하여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고, 후반기에는 중공업 기지를 한층 더 확장하고 기술 장비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이같이 의욕적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자본과 선진 기술을 필요로 하였는데, 1962년의 쿠바 사태를 계기로 채택한 국방력 강화의 우선 정책¹⁶⁾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및 생산 의욕의 감퇴, 그리고 이념 분쟁에 따르는 중·소로부터의 원조 중단으로 인한 자본 및 기술의 부족으로 당초 계획 목표를 실현치 못하여 7개년 계획은 3년간 연장·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독자로선’을 표방, 폐쇄 경제인 ‘아우타르키(Autarky)’ 경제 체제를 강화하였는데, 이는 1966년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력갱생의 원칙하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당의 일관된 로선”이라고 선언, 그들의 고립주의적 폐쇄 체제를 강조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아우타르키 체제는 “각국은 종합적인 산업기반을 보장해야 한다.”는 스탈린식의 ‘1국가 사회주의’를 교조적으로 모방한 것으로, 북한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제1차 7개년 계획의 3년 연장기(1968~1970)에는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병진시킬 방침을 총로선으로 결정하고, 1967년부터 예산 지출 중 군사비가 점하는 비중을 일약 30% 이상(총 세출액 대비)으로 높게 책정하였다.¹⁷⁾ 물론 개발 도상국이 자립 경제를 지향하며 자력갱생의 정신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기는 하지만, 산업화 조건이 열악한 북한이 국제 분업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대내 지향적 성장만을 추구한 것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어서¹⁸⁾ 폐쇄 체제의 고수로 인한 자원 부족과 기술 낙후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둔화의 중요 요인이 되었다.

(3) 1970년대 이후의 경제 계획

북한은 1971년 이후를 기술 개조와 인민 경제의 현대화 시기로 설정하고 6개년 계획(1971~1976),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 그리고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사회주의로의 이행기 전체의 주요한 전략적 과제인 승리한 사회주의 사회에 완전히 상응하는 물질적·기술적 토대의 조성¹⁹⁾, 인민 생활의 물질적·문화적 수준의 현격한 고양의 해결과 함께 질적으로 보다 높은 발전 단계로의 이행을 위해 과학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의 집약적 발전 방식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6개년 계획(1971~1976)에서는 계획의 기본 과업을 공업화의 성과를 강화·발전시키고 기술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전진시켜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한층 더 공고히 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근로자를 힘드는 일에서 해방시키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근로자를 힘드는 일에서 해방시킬 것과 관련하여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공업 노동과 농업 노동의 차이를 축소시키며 여성들을 가사에서 해방시키는 '3대기술혁명'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제1차 7개년 계획의 성장 애로의 하나였던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은 1975년, 6개년 계획(1971~1976) 목표의 조기 달성 발표 이후 어떠한 새로운 계획도 입안하지 못하다가 1977년 12월 최고 인민 회의 제6기 제1차 회의에서야 비로소 제2차 7개년 계획을 채택하였는데, 1975년 이후의 외채 상환 연기 사태로 더 이상 서방 선진 제국으로부터의 신규 차관 도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북한은 다시금 자력 갱생 원칙을 기본으로 중·소의 불충분한 경제 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2차 7개년 계획은 시설의 확대나 증강 없이, 기존 시설을 바탕으로 사상 개조 및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인민 생활의 향상 등을 그 목표로 삼았으며 계획의 기본 과업으로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경제 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인민 경제를 한 단

계 향상시키는 것을 내세웠다.

1987년부터 착수한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의 성격은 제2차 7개년 계획과 유사한데 기본 정책 과제로서 북한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강력히 내세우고 있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한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튼튼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과학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켜 기술 혁명 운동을 전개하며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 생활 수준을 질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 차례의 경제 계획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공업 생산 성장율을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하였다는 점인데,²⁰⁾ 이는 중전의 김일성의 사회주의 경제 성장에 대한 견해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건설이 진전되면 진전되는만큼 경제성장의 템포가 빨라진다."²¹⁾는 주장과는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던 북한 경제의 현실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실시해 온 6개년 계획, 제2·3차 7개년 계획에서는 북한이 1945년 이래 공업화를 추구해 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중공업 우선 정책 이외에 몇 가지 과제에 공통적으로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데, 첫째, 무역 및 대외 경제 협력의 확대, 둘째, 과학 및 기술 혁명, 셋째, 소비재 생산 부문의 강조, 넷째, 경제 관리 체제의 합리화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 중진국들의 일반적인 특성인, ① 기술 수준이 일정 수준에 이르러 기본적인 공업품을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 ② 생산 확대에 있어서 노동력의 동원보다는 기술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는 점, ③ 제품이 다양화하고 복잡화하기 때문에 국제 분업의 필요성이 높아져서 많던 적던 대외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점, ④ 1인당 국민 총생산의 수준도 경제적으로 후발의 사회주의 국가와는 구분되는 일정한 수준(1,000달러 이상)에 달하며 국민의 수요도 다양화하고 요구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 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²²⁾

1) 무역 및 대외 경제 협력의 확대²³⁾

북한은 현재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을 표방하면서 무역 및 대외 경제 협력을 통해 자본과 선진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북한이 국내 시장의 규모가 작고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내 지향적 공업화 정책을 취해 온 데서 찾아볼 수 있다.²⁴⁾ 북한의 대내 지향적 공업화는 대외 부문의 역할을 한정하여 무역은 단지 원활한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만 최소한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입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국내 수요 충족에 부족한 상품에 한정시키고 수출은 수입에 필요한 외화 획득을 위해서만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대내 지향적 공업화 정책이 지니는 커다란 문제점은 기술 진보 및 생산 증대를 위해 외화 수요가 필요 불가결할 때 수출 이외에는 외환 조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기대했던 중·소로부터의 원조가 무산되었고 국내 산업 성장이 둔화되는 한편, 남한의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한 자극 등으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방 세계에 대한 경제적 폐쇄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즉, 자력 갱생 원칙의 경제적 폐쇄 정책으로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 걸쳐 기술 수준이 낙후되고 생산 시설이 노후화된 북한은 6개년 계획(1971~1976)의 목표 달성과 상환 기간이 다가온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차관을 갚기 위해 기술 및 플랜트 등 대규모의 자본 장비를 일본 및 유럽으로부터 수입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의 '석유 파동'으로 북한의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입 증가와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비철금속 가격의 하락에 기인한 수출 감소로 북한은 채무 상환 불이행 사태에 처하게 되었다.²⁵⁾

따라서 최근 북한은 수입 대금의 마련 및 그 동안 누적된 채무 변제를 위해 수출 증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입장이며, 1984년에 합영법을 제정하여 상환 부담이 없는 외국의 합작 투자를 적극 유치한 것도 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²⁶⁾

북한은 최근 제3차 7개년 계획에서도 대외 경제 교류의 강화를 위해

무역액의 증가 목표를 사회 총생산의 증가 목표 1.8배를 훨씬 초과하는 3.2배로 책정하고 있는데, 특히 수출 산업의 육성과 수출 상품의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현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북한 무역의 일반적인 제약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수출의 경우 한 나라의 수출은 그 나라 경제의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생산 시설 및 기술 수준이 낙후된 북한의 경우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는 수입 설비 투자가 증가되어야 한다는 점과 투자를 제약하는 GNP의 20~25%를 차지하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 에너지 공급의 애로 등이 생산력 증대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또한 수입의 제약 요인으로는 수입에 필요한 외화 부족과 북한의 전반적 기술 수준의 낙후 및 사회 간접 자원 부족으로 인한 경제의 흡수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제약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따르지 않는 한 북한의 무역 증대, 나아가 북한의 경제 성장은 그들이 원하는 목표와 커다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기술 혁신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 경제는, 60년대 상반기까지 비교적 순조로운 발전을 하도록 만들었던 외연적 성장 요인, 이를테면 순조로운 노동의 공급 및 유향 생산 요소의 존재들이 거의 고갈되었고, 더 이상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포함한 이른바 집약적 발전(intensive growth)의 요소들이 개발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북한이 6개년 계획에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3대기술혁명'을 추진하여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이나, 일본 및 서구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및 플랜트 등 대규모 자본 장비를 수입한 사실은 그 동안 공업화를 완성하였다고 하는 북한의 과학 기술이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이를 단시일 내에 탈피하여 보려고 하는 정책 수단으로도 이용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다.²⁷⁾ 특히 최근의 제3차 7개년 계획에서는 기술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1988년부터 1990년까지 3년간을 과학 기술 발전 3개년 계획 기간으로 정하여 과학 기술 행정과 과학 기술 교육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공작 기계 공업, 전

자·자동화 공업 분야에서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독자적인 과학 기술 연구 노력과 동시에 선진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도 광범위하게 시도하려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 기술 중시 정책에 따라 과학 기술 연구에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최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1988. 4. 10)에 따르면 과학 기술 연구 투자가 전년 대비로 1986년 30%, 1987년 32%, 1988년 35%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1989년 예산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과학 연구비를 '큰 폭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²⁸⁾ 또한 기술 도입의 일환으로서 1988년에는 국제 연합 개발 계획(UNDP)과의 협력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1988년 11월의 합영 공업부의 신설 또한 자금 도입 및 외화 획득과 함께 기술 도입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

3) 소비재 생산의 강조

북한의 공업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은데 공업화 초기 단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자기 완결적 자립 경제의 확립에 목표를 두고 중공업 정책을 우선적으로 전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공업에 대한 우선 순위는 장기적으로는 경공업 및 농업 발전에 기반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 소비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이들 부문의 발전을 지연시킴으로써 생산을 제약하는 구조적 애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산업간의 연관 효과가 적고 소비재 수요 측면에 있어서 배급제 실시로 인해 소비 수요가 억제된 점 또한 상대적으로 소비재 생산 부문의 낙후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²⁹⁾ 북한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먹고 입는 문제'의 중요성 및 '경공업부문에서 혁명적진전' 등을 강조하고 있다거나³⁰⁾ 1984년에 끝난 제2차 7개년 계획의 실적 보고에서 소비재 생산 부문은 직물 생산에 대한 것만 발표했다는 사실은 최근에 이르러서도 국민 생활 수준과 직결되는 이들 부문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에서는 국민의 의식주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것이라는 독립 항목을 두어 이들 부문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둔 것이 종전의 계획과 다르다고 하겠으나, 공업 총생산 성장 목표

내에서 소비재 생산의 성장 목표 1.8배가 생산재 생산의 성장 목표 1.9배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과거의 장기 경제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또한 생산재의 생산이 종국적으로는 국민 소비 물자의 생산을 위한 것이더라도 적어도 계획 기간에는 소비재 공급이 경제 전체의 성장율을 넘어 증가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4) 경제 관리의 합리화

북한의 정의에 의하면 경제 관리란 사회적 생산 과정에 대한 지휘 기능을 실현하여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경제 관리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기능은 경제 제도에 따라 근본적으로 그 내용 및 성격을 달리하지만 북한의 경우 집단적 노동의 바탕 위에서 노동 과정 자체를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³¹⁾

일반적으로 계획 경제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사회적 생산의 통합적 추구에 있어서 개인의 개별적 이익 및 이와 연결된 자주성이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생산 조직의 기초 단위로서의 기업이나 노동, 소비의 주체로서 개인의 의사 결정을 모두 중앙 계획, 관리 기관의 지령으로 규제하려고 한다면, 사회주의적 공동 관리에 고유한 민주주의 원리 전개가 크게 제약되며 나아가 그것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정보 집중과 처리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계획 경제는 기업이나 개인의 자주적 의사 결정을 자극, 조정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자동 운용 장치를 내포하고 있어야 하며, 현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가격, 기타 상품 가치적 제관계 내지 일정한 시장 메커니즘적인 요소이다.³²⁾ 그러나, 북한의 경제 관리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직도 고도의 중앙 집권적이고 행정적인 방식에 따라 경제가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 관리 체제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1960년대의 '대안의 사업체계'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데³³⁾ 이는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정치 사업 우선, 중앙 집권, 그리고 균중 노선의 원칙을 강조한다.

북한은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부터 경제 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독립 재산제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주의 독립 재산제는 국가로부터 필요한 물자와 자금(화폐 자원)을 받아서 생산 활동을 조직하며, 생산에 대한 지출은 자체의 수입으로 보상함은 물론 공장·기업소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물자 절약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제도이다. 그러나 계획 목표와 생산 요소가 위로부터 주어지는 등 제한된 조건 속에서 공장이나 기업소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독립 재산제의 근본 목적은 공장·기업소 등의 경제 활동이 지시된 계획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가를 자금 회계 측면에서 통제하는 데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⁴⁾

한편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에서의 경제 관리 합리화 정책에 대해 검토해 보면,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관리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 기업소를 “기업조직의 기본형태이고 국가의 계획적관리운영의 기본단위라고 규정”한 다음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지도하에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 모든 경영활동을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 기능의 발휘를 호소함과 동시에 “각종의 경제적기법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정책 과제인 경제 지도와 기업 관리에 있어서는 주로 사상 교양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사업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경제기술사업과 실질적유인을 중심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면 경제기관, 기업소의 활동가와 노동자들중에 기관본위주의와 개인리기주의를 조장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우월성을 발휘할수 없고 경제건설에 중대한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물질적 유인의 독주를 엄격히 경고하고 있다.

4. 북한 경제 정책의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

북한의 경제 정책은 자력 갱생 노선을 기본으로 하여 국내 부존 자원의 우선적 개발, 중공업 건설에 필요한 자본 조달을 농업과 경공업 부문의

희생과 주민 소비 억제를 통해 극대화하며, 각종 사회주의 노력 경쟁 운동의 전개로 노동력 동원을 극대화하는 성장 전략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경제 운용에 대한 북한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북한 경제의 지나친 중앙 집권화와 엄격한 정치적 통제는 이제 구태의연한 것이 되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이 없으면 비효율과 경직성만을 야기시켜 북한 경제 체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현재 북한 경제는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을 가능케 한 정책들이 앞으로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북한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자력更生 원칙에 입각한 폐쇄 경제로서 최근까지 '주체'라는 명목하에 자립적 경제 건설을 기조로 가급적 국내 자원을 사용하고 국내 시장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독립적인 국가 경제를 이루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폐쇄적 경제 정책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본 및 기술 도입이 커다란 제약 요인으로 작용, 거의 전(全)산업 부문에 걸쳐 기술 수준의 낙후와 생산 시설의 노후화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북한 경제의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운영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정책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북한 경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산업 부문간의 불균형을 들 수 있다. 북한은 군수 산업과 직결된 중공업 우선 정책을 추구한 결과, 경공업(소비재 생산) 및 농업 부문의 발전이 지연되고, 에너지·운송 등 사회 간접 자본의 만성적인 애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스타하노프주의(Stakhanovism)'의 고수 정책을 들 수 있겠다. 이는 기술 진보 등을 통한 상대적 잉여 가치의 증대라기보다는 노동 투입 증대를 통한 절대적 잉여 가치율의 증가를 통해 한계 생산력 제고를 추구하는 것으로, 결국 동일한 낡은 기계에 보다 많은 노동을 투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모든 사람이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이것이 부족한 추가 자원의 지원 없이도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여전히 믿고, 여러 가지의 경제 선동을 통해 주민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 주민의 생

산 의욕을 고취시킨다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북한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리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경제의 당면 과제는 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 경제 구조의 개선과 주민 생활의 향상, 경제 관리 체제의 개혁 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낙후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은 1984년부터 전반적인 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중국,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 대부분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개방 및 경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이러한 동향의 대표적인 예로는 합영법 제정 및 무역 확대 정책으로 대변되는 개방화 정책, 주민 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경공업 및 서비스 부문 육성 정책, 기업의 부분적인 독립 재산제 도입 등 경제 관리 체제의 합리화 정책, 그리고 과학 기술 발전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합영법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다 채무 문제로 인한 대외 신용 실추 및 북한 상품의 대외 경쟁력 결여 등으로 무역 확대, 특히 대 서방 무역 확대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어 북한의 개방화 정책은 담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소비재 생산보다는 여전히 중화학 공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당분간 주민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리라고는 볼 수 없으며, 독립 재산제도의 도입도 여전히 중앙 통제의 색채가 강해 지령형 계획 경제에서 지표형 계획 경제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제 관리 체제의 합리화는 단지 형식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 서방 자본 및 기술 도입선이 차단된 상태에서 과학 기술의 획기적 발전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최근의 경제 '팀' 교체에서 분단 이전 세대인 이근모(李根模) 수상을 퇴진시키고, 분단 이후 세대의 테크노크라트 계층을 대변하는 연형묵(延亨默)으로 교체한 것은 이와 같은 현재의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최근 북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그 내용에 있어서나 정도에 있어서 종래의 경제 체제 및 경제 노선의 기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틀' 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대책을 총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은 북한이 경직된 폐쇄적인 경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고, 경제 정책의 새로운 움직임이 장래에도 현재와 같은 위치에 머물 것이라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어느 정도 진행시킬 것인가는 북한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 북한이 최근 '물질적유인의 독주'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북한 내부에 이러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도 북한 경제 정책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미국, 일본 등 서방 제국이 북한과의 경제 교류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북한이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최근 서방과의 교역 감소 추세는 북한 입장에서 대 서방 무역·경제 교류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경제 정책은 외부로부터의 움직임에 의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미묘한 단계에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은 근년중에 정권 교대를 할 가능성도 크다. 분단 이전 세대는 조만간 은퇴할 것이며, 북한 경제 개혁의 전개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분단 이후 세대의 등장이 앞으로의 경제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3차 7개년 계획 기간중에 이러한 정권 교대를 배경으로 북한 경제 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다시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참고 문헌

1. 국토 통일원, 〈남북한 경제 현황 비교〉, 1987. 12.
2. _____, 〈북한의 정치 경제〉, 1988. 12.
3. 고정식,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관리 제도”, 〈공산권경제〉 제2권 제2호, 산업 연구원, 1989. 6.
4. 극동 문제 연구소, 〈북한 전서〉, 1980.
5. 김공열, “북한의 농업 집단화 과정에 관한 연구”, 〈공산권연구〉 제4권 제9호, 극동 문제 연구소, 1982. 9.
6. 동아일보사, 〈원자료로 본 북한(1945~1988)〉, 〈신동아〉 1989년 1월호 별책 부록.
7. 武貞秀士, “統一優先と先鋭化”, 〈코리아評論〉, No. 308, 民族問題研究所, 1988. 2.

8. _____, “北朝鮮を どう見るか”, 〈코리아評論〉, No. 313, 民族問題研究所, 1988. 7.
9. 사회과학연구소, 〈경제사전〉, 평양, 1970.
10.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1950.
11. 小牧輝夫,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망”, 〈기로에 선 북한 경제〉, 국토 통일원.
12. _____, “88年の經濟動向と89年の展望”,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日本貿易振興會, 1989.
13. 연하청, 〈북한의 경제 정책과 운용〉, 연구 총서 57, 한국 개발 연구원, 1986.
14. _____, “북한의 경제 체제”, 김영봉 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이론과 현실〉, 세경사, 1989.
15. 연하청·김형원, “북한의 경제 개방화 정책 분석”, 〈한국개발연구〉 제9권 제3호, 1987 가을.
16. 이 호, “남북한 경제 역량 비교”, 〈민주 통일론〉, 국토 통일원, 1989.
17. _____, “북한 경제의 딜레마 — 외채 문제”, 〈민족 재결합의 모색〉 제33집, 국토 통일원, 1987. 11.
18.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1989.
19. 임현진, “제3세계의 체제 유형과 구조 변화”, 김영봉 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이론과 현실〉, 세경사, 1989.
20. 조 순, 〈북한 체제 및 사회 예측〉, 국토 통일원, 1978.
21. Chung, Joseph Sang-hoon,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22. Levin, Norman D., *Management and Decisionmaking in the North Korean Economy*, Rand Corporation, 1982.

각 주

- 1) 국토 통일원, 〈북한의 정치 경제〉, 188. 12, p. 64.
- 2) 김일성은 1970년에 북한에서 사회주의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선언하였는데 사회주의가 완전한 승리로 들어서는 것은 계급내 차이가 일소되고 사회가 계급적인 동질성을 이루었을 때이다. 김일성,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 및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제문제에 관하여〉, 평양, 1969, pp. 11~12 참조(국토 통일원, 1988, p. 52에서 재인용).
- 3) Norman D. Levin, *Management and Decision making in the North Korean*

Economy, Rand Corporation, 1982.

- 4) Joseph Sang-hoon Chung,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 5) 임현진, “제3세계의 체제 유형과 구조 변화”, 김영봉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이론과 현실〉, 세경사, 1989, pp. 330~331.
- 6) 최민호,
- 7) 그 중에서 경제에 관한 것을 보면 토지 개혁 성과의 견고화, 일본인 및 민족 반역자 소유의 국유화, 일체의 금융 기관 국유화, 8시간 노동제 실시 및 사회 보장, 남녀 임금 동일화, 세금제도 철폐 등이다. 극동 문제 연구소, 1980, p. 278.
- 8) 동아일보사, 〈원자료로 본 북한(1945~1988)〉, 신동아 1989년 1월호 별책 부록, pp. 35~63.
- 9)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50, p. 198.
- 10) 김공열, “북한의 농업 집단화 과정에 관한 연구”, 〈공산권 연구〉 제4권 제9호, 극동 문제 연구소, 1982. 9, pp. 72~97.
- 11) 김일성은 1947년 8·15 해방 2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석상에서 “해방이후에 북조선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의 결과는 북조선 농촌으로 하여금 경제발전의 새 계도에 들어서게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주고 농촌경리를 근본적으로 개조한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북조선에서 공산주의가 실시된다고 하는 것은 반동적 지주와 결탁된 민족반역자, 친일분자들의 발악적 악선전에서 나온 잠꼬대로 밖에는 간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김일성,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제1권, 1949, p. 395(김공열, 1982), p. 80에서 재인용).
- 12) 당시 북한 지도층 내에서는 농업 집단화에 대한 정책상 이견으로 “남한이 통일되어 전국적으로 반계·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할 때까지는 북한에서 혁명을 더 전진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시기 상조론과 “사회주의적인 공업화를 실현하지 않고는 농업집단화는 불가능하다.”, “현대적인 농기계 없이는 농업을 협동화할 수 없다.”는 공업 우선론 등이 제기되었다. 〈조선로동당력사교과〉, 1964, p. 326(김공열, 1982, p. 85에서 재인용).
- 13) 북한의 공업 부문에서 사적 소유의 비중은 1955년 현재 총 공업 생산의 2~3%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대부분 소규모적인 기업체들로서 정미, 타면 등 부차적인 부문에 국한되어 있었다.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1955. 4(동아일보사, 1989, p. 131에서 재인용).
- 14) 극동 문제 연구소, 앞의 책, pp. 287~288.
- 15) 3개년 계획 기간 중 북한 예산 수입에서 차지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 비중은 1954년 34%, 1955년 21.7%, 1956년 16.5%에 달했다. 국토 통일원, 1988, p. 201.
- 16) 북한은 1962년 12월에 개최된 당 중앙위 제4기 제5차 전원 회의에서 “인민경제 건설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군사 우위의 정책을 북한 노동당의 기본 노선으로 제기하였다. 극동 문제 연구소, 1980, pp. 283~284.
- 17) 국토 통일원, 〈남북한 경제 현황 비교〉, 1987. 12, p. 37.

- 18) 小牧輝夫,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망”, 〈기로에 선 북한 경제〉, 국토 통일원, pp. 18~19.
- 19) 김일성은 “어느 나라든 그 나라가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중·경공업제품 및 농산물에 대한 경제, 국방, 그리고, 인민생활의 다양하고 끊임없이 증가하는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킴과 동시에 자기나라의 천연자원, 원료, 물자를 바탕으로 하여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최신과학과 기술을 갖춘, 그리고 자신의 민족간부들을 지휘하는 총체적인 민족자립경제를 건설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 4 권, 평양, 1971, p. 601(국토 통일원, 1988, p. 92에서 재인용).
- 20) 북한은 제 2차 7개년 계획에서 연평균 공업 생산 성장율의 목표를 6개년 계획 실적치 16.3%보다 낮은 12.1%로 책정하였고 1987년부터 착수한 제 3차 7개년 계획에서는 보다 낮은 10%로 책정하였다. 연하청, 1989, pp. 217~225.
- 21) 김일성은 “사회주의사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속도로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경제토대가 강화될수록 이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가 생산과 분배, 축적과 소비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축적에 많은 자금을 돌릴 수 있고 또 그것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확대재산을 끊임없이 큰 규모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1969. 3(동아일보사, 1989, pp. 248~252에서 재인용).
- 22) 小牧輝夫(1988), p. 7 참조.
- 23) 무역 확대 정책과 대 서방 합영 협력으로 대변되는 북한 개방화 정책의 현황과 그 문제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연하청·김형원(1987), pp. 95~120 참조.
- 24) 북한은 자립·내부 지향적 경제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협소한 국내 시장 규모로 인해 각 산업은 생산비가 최저로 되는 최적 규모에서의 조업 경험에 적었다고 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가 문제되지 않았던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시장 규모의 제약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으나, 산업이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자본 집약적으로 됨에 따라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대규모 조업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산업은 대외 경쟁으로부터 보호되어 왔고 수입 대체 산업에 주력한 결과, 산업 구조가 비교 우위에 의한 국제적 전문화를 이루지 못하여 상품의 대외 경쟁력이 낮은 점이 북한의 수출 증대 및 경제 성장의 제약 요건이 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수출 확대 노력이 수입 대체 발전 전략을 시장 대체 전략 등의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고, 이는 다만 대외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그리고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구의 선진 자본 및 기술을 계속 도입하려는 북한 지도층의 의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5) 1986년 현재 북한의 외채 규모는 총 40억 6,000만 달러로 이를 권역별로 나누어 보면, 소련을 비롯한 대 공산권 채무가 전체의 45.1%인 18억 3,000만 달러이고, 서방 제국에 대한 채무는 전체의 54.9%에 해당하는 22억 3,000만 달러로 파악되

- 고 있다. 이에 1986년 10월에는 일본 통산성이 일본의 30여개 대북 수출 업체가 10여 년간 북한으로부터 지불받지 못한 수출 대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1987년 7월에는 영국 모건 그렌펠(Morgan Grenfell) 은행과 호주의 ANZ 은행을 간사 은행으로 140개 은행들이 참여한 서방 채권 은행단이 북한에 대해 차관 원리금 7억 7,000만 달러의 연체 사실을 공식 통보함으로써 북한을 사실상 파산국으로 선고하였다(이호, 1987, pp. 50~58). 그러나 이러한 ‘채무상환 불이행선언’에 대해 북한은 “부유한 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차관에 대해 관대하여야 한다.” 혹은 “개발도상국의 채무변제는 무이자로 보류해 주어야 한다.”고 하여 ‘채무불이행선언’이 북한의 개방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견해와는 달리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 이는 북한이 여전히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키고 경제 문제를 2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武貞秀士, 1988. 2, pp. 29~30 및 1988. 7, pp. 19~29).
- 26) 북한은 1984년 합병법 제정, 1988년 합영 공업부의 신설 및 최근 중·소 양국과의 국경 지대에 자유 기업 지역 설치 계획 등 외국과의 합작 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채무 문제로 인한 대외 신용의 실추 및 북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日本貿易振興會, 1989, p. 46).
- 27) 조순, 〈북한 체제 및 사회 예측〉, 국토 통일원, 1978, p. 22.
- 28) 小牧輝夫, “88年の經濟動向と89年の貿易”,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日本貿易振興會, 1989, p. 24.
- 29) 연하청, 〈북한의 경제 정책과 운용〉, 연구 총서 57, 한국 개발 연구원, 1986, pp. 54~56.
- 30) 〈로동신문〉 1981년 10월 7일, 1984년 1월 1일 및 2월 29일자 (국토 통일원, 1988, p. 98에서 재인용).
- 31) 사회과학연구소, 〈경제사건〉, 평양, 1970, p. 74.
- 32) 고정식, “사회주의 경제의 계획·관리제도”, 〈공산권 경제〉, 산업연구원, 1989, 6, pp. 115~140.
- 33) 동아일보사, 앞의책 pp. 184~193.
- 34) 이 호, “남북한 경제 역량 비교”, 〈민주 통일론〉, 국토 통일원, 1989, p. 67.

〈부록〉 남북한 경제 계획(1961~1991) 남북한 경제 계획(1961~1991)

연평균 경제성장률(%)	남		북		연도	구분	비고	연평균 경제성장률(%)	
	주요 성과	계획의 목표	주요 정책 방향	계획의 성과					
7.8	1)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 2) 국민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 3) 기간 산업과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4) 유흥 자원의 활용 5) 국제 수지 개선 6) 기술의 진흥	1) 사회 경제적 약속권의 시정 2) 저립 경제 기반의 구축	1) 중공업 발전 2) 공업·농업의 동시적 발전 3) 전국적 기술 혁신 4) 문화 혁명과 국민 생활의 향상	공업 목표의 72.21% 달성, 농산물 67~57% 달성, 수산물 70~83% 달성	당초 계획은 1967년까지였으나, 1966년 10월 당 대표자 회의에서 3년 연장 결정되어 1970년에 실시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제1차 7개년 계획 (1961~1967)		8.6
	1) 식량 자급, 산업 육화 및 수산업 자원의 개발 2) 고도의 응연화 기반 조성 3) 국제 수지 개선 4) 고용 증대, 가족 계획 추진 및 인구 팽창 억제 5) 영농의 다각화와 농가 소득의 향상 6) 과학 기술의 진흥과 인력 개발을 통한 기술과 생산성의 향상	1) 장비 구조의 근대화 2) 저립 경제의 확립을 더욱 추진	1) 경제와 군사 권력의 병진 2) 기술 혁명의 추진 3) 군수 공업의 강화	식민과 권력 목표 달성					
9.6	1) 주류의 저금 2)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 3) 국제 수지 개선 4) 중화학 공업 육성을 통한 공업 구조의 고도화 5) 과학 기술의 향상과 인력 개발 6)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7) 국토 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산업 및 인구의 적정 분산 8) 주거 환경의 개선과 국민 복지 향상	1) 성장, 안정, 균형의 조화 2) 저립적 경제 구조 실현 3) 국토 종합 개발과 지역 개발의 균형	1) 경제의 군사 권력의 병진 2) 기술 혁명의 추진 3) 군수 공업의 강화		7개년 계획의 3년 연장 (1968~1970)	1968 1969 1970 1971		5.8	
9.7	1) 주류의 저금 2)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 3) 국제 수지 개선 4) 중화학 공업 육성을 통한 공업 구조의 고도화 5) 과학 기술의 향상과 인력 개발 6)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 7) 국토 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산업 및 인구의 적정 분산 8) 주거 환경의 개선과 국민 복지 향상	1) 성장, 안정, 균형의 조화 2) 저립적 경제 구조 실현 3) 국토 종합 개발과 지역 개발의 균형	1) 공업 발전의 근대화 2) 기술 혁명의 추진	1) 광장·제련도 목표 미달성, 가치는 1975년 8월 당 중앙 정치 국장은 2차 5개년 계획 공장을 건설, 석유 화학 공업의 건설 착수	시정과 일관으로부터 설비 도입을 시작, 외채 지출을 줄이려 계획은 1975년 8월 끝으로 종료	1972 1973 1974 1975 1976	제3차 계획 (1972~1976)	8.2	

5.8	1) 투자 제원의 적량 조달 2) 국제 수지 균형의 달성 3) 산업 구조 개선과 국제 경쟁력 제고 4) 교육 기회 확대와 인력 개발 5) 새마을 사업의 확대 6) 생활 환경 개선 7) 과학 기술 투자의 확대 8) 경제 운용과 제도의 개선	1) 자력 성장 구조의 실현 2) 사회 개발을 통한 생활의 증진 3) 기술 혁신과 능력의 향상	1977	제4차계획 (1977~1981)	1) 6개년 계획의 미달성 고지(철강·시멘트)의 점진 2) 수출의 긴장을 해소 1) 경제 발전의 가속화 2) 권료주의 박멸 3) 기술 혁신의 추진 4) 석유 화학 등업의 발전 5) 생산 원가 인하 6) 경약 운동의 강화 7) 수출(철도·합금)의 근대화 8) 독립 재산계의 강화	6개년 계획의 미달성 고지(철강·시멘트)를 1977년 말에 점진	새로운 계획의 준비 기간으로 설정	-
			1978	제2차 7개년 계획 (1978~1984)	1) 1980년 1980년과 10대전망목표 발표 2) 1984년 5월, 합성 기술 도입을 위한 외국과 합작 기업 유치 시도	4.3 (1978~1981)		
7.3 목표	1)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적정 성장 2) 물가 안정 구조의 건지 3) 국제 수지 (외국)의 장악과 외국 부담 완화 4) 산업 구조 조정 촉진과 기술 인력의 실현 5) 지역간 균형 발전과 농어촌 종합 개발 6) 국민복지 증진과 생활 제고 7) 시장 경제 질서의 확립과 정부 기능의 재정립	1) 노동과 경영의 조화 2) 경제의 선진화 3) 국민 복지의 증진	1985	제5차계획 (1982~1986)	1) '80년대 10대전망목표'의 추진 2) 기간산업(연료, 동력공업)의 우선적 발전 3) 중요 대장 건설의 강조	1) 사회 각문완성 2) 종합 생산 및 농업 생산실적 미달 3) 국가 재정 수입 신장율의 저하 (1985년 4.0%)	'80년대 10대전망목표의 지속적인 추진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보다 높은 목표달성을 위한 준비·조결 기간으로 설정	-
			1986	제6차계획 (1987~1993)	1) 기술 혁신의 추진 2) 10대전망목표의 실현 3) 외국주의 국민 생활 향상 4) 무역·외외 경제 사업의 확대·발전	김일성·김정일권력 세습의 가능성		

* 자료: 대한민국 정부, <제1, 2, 3 및 4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 각 년도.
 경제 기획원, <제5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수정 계획(1984~1986)>, 1983 및 <제6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 1986.
 극동 문제 연구소, <북한 진서>, 1980.
 U.S. CIA,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2.
 王城豪, “北朝鮮第二次七か年計劃完遂の明暗(上)·(下)”. 日本朝鮮研究所, 第253, 256號, 1986.
 小村武樹, <남북한 경제 현황 비교>, 1987.
 小村武樹, “北朝鮮の第三次七か年計劃か目指すもの”. <코리아評論>, No. 301, 民族問題研究所, 1987. 7.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1987. 6.

〈표 1〉 북한의 협동 조합화 과정

(단위 : %)

농장 형태	1954	1955	1956	1957	1958
협동 조합에 포함된 호수의 비율	31.8	41.0	80.9	95.6	100.0
협동 조합에 포함된 경지 면적의 비율	30.9	48.6	77.9	93.7	100.0
제 3 형의 협동 조합 비율 ¹⁾	78.5	92.2	97.5	98.8	100.0
제 2 형의 협동 조합 비율 ²⁾	21.5	7.8	2.5	1.2	—

* 자료 : 국토 통일원, 〈북한의 정치 경제〉, 1988. 12, p. 44

주 : 1) 제 3 형태(사회주의적 단계)는 토지와 기본적인 생산 수단을 통합하여 노동량에 따라 분배받는 최종 완성 형태임.

2) 제 2 형태(대중적 발전 단계)는 토지를 통합하여 공동 경영하고 노동과 토지의 크기에 따라 분배하는 형태를 말함.

〈표 2〉 북한의 공업 투자 추이(1956~1976)

(단위 : 북한 원화, %)

	총 투자액 (억 원)	공업 투자 비율	공업 투자중	
			중공업	경공업
3개년 계획(1954~1956)	8.1	49.6	81	19
5개년 계획(1957~1960)	11.7	55.0	83	17
7개년 계획(1961~1970)	107.2	56.1	79	21
6개년 계획(1971~1976)	166.1	18.7	83	17

* 자료 : 국토 통일원, 〈남북한 경제 교류 추진 방안에 관한 제 2차 연구〉, 1982, p. 10.

2.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와 ‘딜레마’

김세원(서울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1. 서 언

본 장에서는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자주 지적되었거니와 계획 경제를 택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시장 경제에서와는 전혀 다른 원칙과 취지 아래 대외 경제 거래가 추진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외 거래가 시장의 이윤 동기에 의해서 전개되지는 않으며 경제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 경제 체제의 속성부터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북한 경제에 있어서 대외 거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원칙과 기조에 따라 수행되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 사회주의 제국이 거의 예외없이 경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과연 북한의 입장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나아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지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음, 시기별로 북한이 어떻게 대외 경제 정책을 운영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대외 경제 정책이 경제 체제 그 자체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기조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하더라도 대내외적 정치·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경우 체제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정해진 태두리 내에서나마 대외 거래에 영향을 주는 정책의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의 기복을 보여왔다. 본 장에서는 대외

경제 정책의 전개 과정과 그 배경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한의 대외 무역과 경제 협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경제 정책이나 구체적으로는 경제 계획의 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본다. 특히, 북한과 같이 극히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대외 거래가 곧 국가의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끝으로, 비록 아직까지 공식적인 거래는 없다 하더라도 남북한 경제 관계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간 협상 내용, 제약 및 전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경제 체제의 특징

어떤 경제 체제도 총체적으로 세 가지 기준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다고 본다.¹⁾

첫째는 생산 수단의 소유 형태로서 사유가 허용되느냐, 아니면 공유 또는 국유인가 하는 기준이며, 둘째는 경제적 의사 결정 방식으로서 분권적 방법 혹은 중앙 집권적 방법에 대한 선택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자원 배분의 메커니즘인데 크게는 시장과 계획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은 각각 상호 연결을 갖는데 그 예로 시장 경제가 소유 형태면에서 사유, 의사 결정에 있어서 분권적 방법, 그리고 자원 배분면에서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계획 경제의 경우, 공유 혹은 집단 소유, 중앙 집권적 의사 결정, 그리고 경제 계획에 원칙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최근 대부분의 사회주의 제국 내에서 급속히 추진되어 오고 있는 경제 개혁의 기본적인 취지는 원칙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 결정의 분권화와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이나 생산성의 제고를 시도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국유, 공유 또는 집단 소유가 전제되어 있는 한 경제 개혁의 추진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이념 문제와 연결된다.

반면, 북한 경제는 이제껏 전형적인 중앙 집권적 체제를 고수하고 있으

며, 경직적인 계획 경제, 혹은 명령 경제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다. 즉, 농업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있어서 생산 수단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며 경제 활동은 중앙 집권적 계획과 지령에 의하여 통제된다.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엄격한 국가 계획 및 통제 아래 협동 농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자원 배분을 위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 계획에 의하여 수행된다. 공산당 최고 위원회가 국가의 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물자 수급 계획(material balance plan)과 투자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다.²⁾

이러한 북한 경제 체제의 특성을 다시 정리하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당이나 인민 회의가 비록 지도 및 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국가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하향식 명령 체계에 의하여 경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계획이 없이는 경제가 한발짝도 나갈수 없다.”³⁾는 김일성의 발언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철저한 중앙 집권적, 그리고 지시적 수급 계획이 자원 배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표 2>에서도 보듯이 이제껏 8차례 걸친 경제 계획을 수행하여 왔으며 1985~1986년의 조정기를 거쳐 현재 제3차 7개년 계획 기간(1987~1993)중에 있다. 경제 계획이 이미 지적하였듯이 물자 수급 계획과 투자 기금 운용 계획에 바탕을 두고 있거니와 운영상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전년에 비하여, 또는 계획 기간중 일정 배수나 퍼센트(%)만이 발표될 뿐 절대 수치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북한 경제 체제 특유의 명령적 경직성, 그리고 계획 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목표 미달이나 수급도 차질이 빈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계획 기간의 연결이 불규칙하고, 또 조정 기간을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이 이제껏 추구해 온 경제 계획의 중·장기적 목표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급 자족 체제의 구축으로서 소위 자력 껑생의 바탕 위에서 자생적 민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제3차 7개년 계획에서도 “인민경

제의 주체화·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을 제시하고 있다.⁴⁾ 여기서 말하는 ‘자립적’이란 개념이 대외적 균형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외국과의 거래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둘째는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스탈린이 집권 당시 강조하였던 1국 사회주의 건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자력 갱생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 외 이 정책의 또 다른 취지는 국방력의 강화에 있는데 북한 정권이 가장 중요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남조선해방’은 결국 군사력면에서의 우위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단계별 경제 계획의 목표를 비교한다면 6개년 계획(1971~1976)에 이르러 기술 혁명이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에 있어서도 과학화나 생산 원가 인하와 같은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의 변화는 정권 수립 이후 추구되어 온 외연적 성장(extensive growth)의 한계를 느끼고, 보다 내포적 성장(intensive growth)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고민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 대외 무역 증대도 최초로 중요 과업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데, 1970년대 중반 이후 외채의 압력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조적 국제 수지 악화로부터 탈피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제3차 7개년 계획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무역과 대외 경제 협력의 확대·발전은 정책 기초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⁵⁾

이러한 전환은 1970년대 중반 이후 한때 상환 불능에까지 이른 외채의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수출 증대를 통한 국제 수지 개선에 주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가피성을 말하여 준다. 또, 이제껏 부정적으로 간주해 온 자본주의 제국과의 경제·기술 협력에 대한 시도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3. 대외 경제 정책

(1) 정책 기조

북한의 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정경 일치'라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기조는, 북한이 1950년대 이후 지속해 온 중화학 공업 우선의 불균형 성장 정책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군수 산업의 육성과 폐쇄적 자금 체제의 구축으로서, 이는 북한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남조선해방'을 위한 군사력 우위의 유지와 정권 수립 이후 추구해 온 1국 사회주의 체제의 실현에 취지가 두어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 정책의 일부분으로서 대외경제정책 역시 북한의 사회주의적 정책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북한의 대외 경제 정책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이러한 방향이 다소 변화되어 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정치 우위의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외 경제 정책이 정치화되고 있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⁶⁾

첫째, 북한의 제반 정책은 주로 전통적인 마르크스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이론 자체가 자본주의 제국과의 경제·무역 관계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김일성이 정치 경제학 강좌를 통하여 행한 연설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즉, 김일성은 자본 협력에 대하여,

독점자본이 국내에서 팽창하면 해외침략으로 나아간다는것은 제국주의의 움직일수 없는 법칙이다. 자본축적이 진행되어 과잉자본이 생기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인민들을 약탈하는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

것이다.⁷⁾

라는 극단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레닌의 독과점 자본주의에 의한 국제적 착취 이론을 인용한 데 지나지 않는다.

둘째,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의 외교적 갈등, 군사력 증강 및 친한(親韓) 서방국들에 대한 적대감 등 북한의 입장에서 대외 경제 관계를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의지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정치적 측면이 우선되고 있는 북한의 대외 경제 거래는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영향권을 확대시키고, 결국에는 자본주의 세계를 고립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 경제 정책의 기초는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저작 선집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자체의 힘과 내부원천을 최대한 동원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면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국가들과 경제관계를 맺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⁸⁾

이처럼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자금 자족을 내세운 극히 폐쇄적인 자립경제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 경제의 대외 경제 거래의 취지가 경제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수입하는 데 두어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즉, 생산 수단의 집단 소유, 계획 경제 체제의 운영, 무역의 국가 독점화 및 아우타르키(Autarky)적 자립 경제의 추구 등 전체주의 경제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일련의 논리이기도 하다.⁹⁾

따라서 무역은 경제 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그들이 추구하는 사회주의 공업화, 즉 중화학 공업 우선의 불균형 성장 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를 수입 계획에 따라 수입하고, 수출은 다만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조달하는 한 수단으로 간주될 뿐이다.¹⁰⁾

결국 북한의 무역 역시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수입우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수출 규모의 확대나 수출 산업의 고도화가 국내 공업화의

촉진과 연결되지 못하고, 다만 수입에 필요한 외화 확보라는 경로를 통하여 공업화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 경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수입우선주의'에 의한 '수출입 균형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즉, 북한은 매 거래마다 대부분 협정의 체결이나 연장을 전제로 하는데 당사국과 협정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수출입 균형을 위한 거래 내용에 관하여 합의를 본다.

북한이 여타 사회주의 제국과는 달리 2국간 수출입 균형 원칙을 아직껏 고수하는 데는 주로 다음의 두 가지 이유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치·외교적인 이유로서 불균형적인 무역 거래가 간접적인 침략 형태의 하나로 인정되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경제 지배를 초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2국간 평등·호혜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실질적인 문제로서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국제 수지 불균형으로 인한 외채 상환 압력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사전에 이러한 국제 수지의 불균형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상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제 수지 불균형 현상은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구조적으로 심화되어 오고 있는데, 경제 체제 그 자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2) 무역 정책

다음으로 북한의 실제적인 무역 제도와 무역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북한의 무역은 경제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북한 헌법 제 55조 2항에 의거 중앙 기관에 의해 관리되며 정무원 '계획위원회'가 수립한 무역 계획에 따라 행해진다.

또한 이러한 무역 계획의 수행이 당의 지시에 따라 정무원 무역부가 직접 담당하나 실제로는 무역부 산하 국가 기관이 직영하는 상사 또는 협동상사 등에 의해 분산, 수행되고 있다.

그 외의 중요 기관으로서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있는데, 동 위원회는 주로 대외 무역 촉진을 위하여 구성되었다. (<도표 3> 참조)

이러한 무역 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의 무역은 명령 경제 체제가 갖는 특징적인 강력한 중앙 집권적 하향식 체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무역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평등·호혜 원칙에 입각한 2국 간 쌍무 교역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나, 수행 방식은 외교 관계의 수립 여부에 따라 크게는 두 가지의 형태로 분류된다.

우선 국교가 수립된 경우 대부분 무역 협정의 체결에 의해 매년 작성되는 무역 의정서에 따른다. 이러한 경우 북한은 GATT 회원국이 아니므로 무역상 무차별 원칙, 즉 최혜국 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의 적용이 명시되고 있다. 그러나 GATT 제1조의 무차별 원칙과 비교하여 볼 때 국내 조세의 적용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가 전제되는 데 반해, 이와 유사하거나 같은 조항이 삽입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차이점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내의 조세 제도와 무역을 분리시킴으로써 대외 경제 정책의 정치화를 간접적으로 표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무역 조약과 관련하여 대부분 통상 항해, 지불 및 과학 기술 협정 등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국교 관계가 없는 경우의 무역은 주로 경제 통상 사절단의 왕래를 통한 합의에 의하여 쌍무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 때는 앞서 언급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의하여 주도된다.

북한의 이와 같은 무역 거래 중 특수한 예로서 일본을 들 수 있다. 즉, 기타 미수교국과의 거래를 위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는 별도로 일본과의 직접 거래를 위한 '조일수출입공사'를 설치하여 이를 전담케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일본과의 거래 역시 양국간의 무역 협정에 기초한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북한의 무역 정책 수단을 살펴보면, 우선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다른 사회주의 제국의 경우보다도 더 경직적으로 시장 기능과는 전혀 무관하게 중앙 집권 기관인 '가격계획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물론, 이론상 북한 내 가격은 '노동가치설'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의하여 설정된다고 하나, 실제로 있어서는 중화학 공업과 같은 전략 산업의 육성 또는 사회 계층간의 소득 분배 등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설정된 가격이 국제 시세로부터 유리되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덤핑 형태의 수출 등이 용이하다는 점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둘째, 관세 정책을 들 수 있는데, 북한 헌법 제 34조는 자립적 민족 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 보호주의적 관세 체제의 경향을 띠고 있는데, 강력한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국내 산업 보호 수단으로서의 관세는 별로 큰 의의를 갖지 못한다. 다만 재정 수입의 증대와 일종의 협상 관세 정책(bargaining tariff policy)로서의 역할에 더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셋째, 외환 정책으로서 북한과 같이 극도로 왜곡된 국내 가격 구조와 이로 인한 국내외 가격 간의 독립성이라는 여건에서는 무역의 방향이나 규모,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다만 북한의 경우 환율조정이란 사전적인 무역 계획과 대외 무역의 진행 결과를 조화시키는 사후적 수단에 불과하다.

넷째, 수량 제한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북한의 무역이 중앙 기관에 의해 사전에 계획되고, 또한 관리됨으로써 수출입 전체가 그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쌍무적인 교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량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기는 하나,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제국에 비하여 강력한 제한 정책을 이제껏 고수하고 있다.

끝으로, 대외 경제 협력이 하나의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원칙적으로 수혜국의 입장에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등 일부 후진 지역에 대하여는 비록 소규모 이기는 하나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경제 곤란과는 별도로 지극히 정치·외교적인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4. 대외 무역 및 경제 협력

(1) 무역 정책의 전개

북한 헌법 제 34조에 잘 나타나고 있듯이 북한의 무역 정책은 원칙적으로 국가 독점, 호혜·평등 그리고 자립적 민족 경제에 입각하여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대외 무역 정책의 전개 과정은 총체적으로 1970년을 기준으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즉, 1950년대 이후 1970년까지는 ‘정경 일치’의 원칙이 고수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시기는 사회주의 제국 중심의 무역으로부터 벗어나 점차 교역 상대국이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에 들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외 무역 정책이 변화하게 된 것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한다.

첫째, 1957년부터 착수한 5개년 계획 목표의 실현은 대부분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제국의 원조에 의존하였는데, 1960년대에 들어 중·소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들 국가로부터의 원조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1950~1960년대 대외 무역의 90% 이상을 사회주의 국가와의 거래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북한이 필요했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애로는 대내 지향적 대외 경제 정책에 기인한다는 내부적인 반성이 대두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국별·권역별 무역 구조에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연도별 무역 추세를 보면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무역 규모가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초반 대 서방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8.6%에서 30.6%로 증가한 반면, 대 사회주의국과의 무역은 반대로 79.

0%에서 59.4%로 감소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정책적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계속 증가하던 무역량이 1980년대에 이르러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급속한 수입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수출 확대가 뒷받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1970년대 후반 이후 외채 압력이 가중되었다는 데 기인한다.

북한의 외채는 1975년의 경우 대 서방 13억 달러, 그리고 대 공산권 7억 달러로 총 20억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같은 해 총무역량 20억 7,000만 달러와 거의 대등한 규모였으며,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87년에는 51억 1,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¹¹⁾

북한의 이러한 외채 문제는 1970년대 이후 대외 경제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며 다소 개방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교역 상대국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로까지 확대한 신축성을 가져오게 하였다.

(2) 지역별 무역 구조

북한의 무역을 주요 상대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련

이미 <표 4>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주요 국별 무역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소련과의 무역은 해방 후 1960년대까지 북한 무역 총액의 약 50%를 차지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북한의 대 서방 교역이 증대되면서 한때 25% 수준까지 감소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소련의 고르바초프 정권의 등장 이후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이에 따라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6년 이후에는 계속 5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무역 증대는 북한의 대 소련 무역 적자를 수반하였는데 1987년 그 규모는 5억 9,0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대 소련 무역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북한의 주요 수입 품목을 살펴보면 원유, 석탄 제품, 기계 설비, 수송

수단 등 주로 중화학 분야로서 이 중 원유는 전체 수입액의 약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마그네슘크링카, 의류, 압연 강재 등으로 이 중 마그네슘크링카의 비중이 가장 높아 전체 수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수출 품목 중 기계 설비, 프레스 설비 등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련과의 상계 매입(Product Buy-back) 방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은 시베리아 개발과 관련, 이 같은 보상 무역 방식을 경공업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이를 중심으로 한 양국간의 교역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2) 중국

북한은 경직적 경제 체제의 운영으로 인하여 국제 정치적 상황 변화가 대외 무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즉, 1950년대 후반부터 중·소 분쟁의 노정에 따라 북한의 대 소련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 중국 무역이 급증하였으나, 1966년 문화 혁명이 시작되면서 급속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양국 정상의 교차 방문과 함께 다시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치적 여건의 동향에 따라 많은 기복을 보여 왔다.

무역 수지면에 있어서는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였는데 단지 1984~1986년간 예외적으로 북한측이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

양국간의 무역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와 같다.

주요 수입품은 석탄, 원유 등 주로 1차 산업 생산물로서 석탄은 전체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 중국 주요 수출품은 철강, 비철금속, 석탄 등으로 광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3) 일본

일본과 북한 간의 무역은 1956년 '일조무역회'가 결성되면서부터 비롯되었는데, 1963년 2월 '일조무역회'(일본측)와 '국제무역추진위원회'(북한

측) 간에 '상품거래에 관한 협정' 및 '일반조건'이 체결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0년대 북한이 대 서방 무역을 다양화시킴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은 이러한 협정을 바탕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북한의 외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다소 침체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 1979년 대 일본 외채 상환 연기 교섭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대일 무역이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1983년 버마 랭군 폭탄 테러 사건, 그리고 1987년의 KAL기 폭파 사건 등 외교적 조건 속에서도 계속 4~5억 달러 수준에 머무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주로 일본 내 조총련계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87년부터는 조총련계 기업과의 합영 기업에 의한 활동이 확대되면서부터 이에 따라 대 일본 수출이 증대되고 있다.¹²⁾

이는 또 197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북한의 입초(入超)가 1987년에는 출초(出超)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북한의 주요 수출 상품은 <표 5>에서와 같이 주로 1차 상품으로서 금, 아연, 철강, 송이버섯 등의 6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약 5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합영 기업의 증가로 인하여 수산물 1차 가공품, 섬유 제품 등의 대일 수출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의 주요 수입 상품은 기계류, 전기 기기, 화학 제품 등 2차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 동유럽

북한과 동유럽 제국 간의 무역은 약 10년간 10%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었으나, 1985년 김일성의 동유럽 방문을 계기로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 증대에 중점을 두어 오고는 있으나, 동유럽 제국의 내부 개혁과 동서 화합 분위기로 인하여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무역 수지면에서는 총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해 오고있다.

5) 서유럽

북한과 서유럽 제국 간의 무역은 일본의 경우와 유사한 변동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70년대 초 한때 급증하였으나, 외채 문제로 인해 1975년부터 감소되었으며, 다시 1977년 프랑스, 서독, 영국과 채무 상환 연기 교섭이 무사히 끝나자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87년 동 협력이 결렬되면서부터 북한의 대 서유럽 무역은 다시 저조한 상태에 접어들었다.

(3) 경제 협력

1984년까지 북한은 무상 원조 12억 8,000만 달러 및 유상 원조 34억 4,000만 달러 등 총 47억 5,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외국 자본을 들여왔으며 이 중 사회주의 국가들의 구성비는 전체의 73.8%를 차지하였다. 특히, 소련의 비중은 무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45.6%에 달하였다.

(표 8)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외자(外資)는 한국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1950년~1959년 사이에 가장 많이 도입되어 전체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그 후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외자 도입은 거의 중단되었으며, 주로 소련과 중국에 의존하였다.

한편 대 서방 차관 도입에 있어서는 1970년의 300만 달러를 시작으로 외채 상환 불능으로 중단된 1975년까지 OECD 국가들로부터 총 12억 4,000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본이 도입되었는데 이 중 일본이 가장 많은 약 3억 달러를 제공하였다.

결론적으로 1970년대 이후 무역의 급속한 증대는 '수입우선주의'로 인하여 무역 수지 적자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국제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 자본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수출의 증대가 뒷받침되지 않는 전제 아래 오늘날과 같이 심각한 외채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1987년 현재 북한의 국가별 외채 규모는 다음의 (표 9)과 같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서방 국가들로부터의 외자 도입이 중단되고, 소련

과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지원 역시 감소함에 따라 북한은 채무 상환 부담이 없는 외자 도입 방식으로 고려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1984년 9월에 제정, 공포된 '합영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합영법 제정 이후 관련법을 준비하는 한편, 1988년에는 정무원 내에 '합영공업부'를 설치함으로써 합영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했다.¹³⁾ 이러한 외국 기업과의 합작 기업법은 1970년 헝가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미 제정, 시행하여 온 내용을 담고 있다. (표 10) 참조)

합영법의 발표 이후 외국 기업과의 거래 실적을 보면 소련 및 중국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 17건, 소련 3건, 중국 2건, 프랑스 1건 등으로 일본과의 합영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거래는 전부 제일 조총련계 상사들과 이루어진 것으로서, 순수 서방 기업과의 합영은 프랑스의 '콩베농 베르나르'사와 체결된 양각도 국제 호텔 건립의 1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북한의 대 서방 합영 추진 실적이 부진한 요인은 외채 상환 연기, 국내 시장 협소 및 투자 여건 미비 등에 기인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경제적 개방이 결국 정치적 개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집권층의 우려 때문이라 할 수 있다.¹⁴⁾

한편 북한의 합영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1986년까지는 백화점, 호텔 및 골프장 등 서비스 부문이 대부분이었으나, 1987년부터는 섬유, 피복, 기계 제작 등 기술 이전을 포함하는 부문까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합영 추진 실태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북한은 이 경우 역시 일본, 소련 및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제일 조총련 상공인의 합영 투자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1986년 8월에 설립된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해진다.

5. 남북한 경제 관계 전망

(1) 남북한 경제 관계의 한계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분단 국가라는 사실이 양 지역간 경제 거래에 결코 지장을 가져올 수는 없다.

동·서독간 무역은 오랜 역사를 갖고 정착되어 왔으며, 이제는 '1민족간 무역', 또는 특수한 형태의 '내독 무역'으로 기반을 굳히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1국간 무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주로 홍콩, 마카오 및 일본 등과 같은 제3지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비록 분단 국가라고 하더라도 양 지역간 의지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무역 거래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 상호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로 인하여 거래의 개시는 아직까지 극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한측은 기능주의적 접근의 원칙을 굳히고 남북한 경제 거래를 위한 협상을 제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제5공화국 기간 중 본격적인 회담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합영법' 제정은 남북한 경제 회담 개최의 계기가 되었다. 1984년 10월 남한측의 제의에 따라 사상 최초로 양측 당국자간 공식 회담이 시작되었다. 동 회담은 1985년 11월까지 약 1년간에 5차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상당히 구체적인 제안들이 등장하였다.¹⁵⁾

동 회담이 1986년 1월 북한측의 팀 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무기 연기 선언에 따라 비록 결렬되기는 하였으나,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대책을 다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회담을 통하여 쌍방간 합의를 보거나 의견 접근이 가능했던 내용은 거래 가격, 거래 담당자, 결제 통화, 관세 면제 및 수송 경로 등 극히 실무적인 거래 방법에 지나지 않았다. 합의서 명칭 및 내용, 교류 대상 품목,

경제 협력 대상, 공동 위원회 기능, 분과 위원회 운영 및 국호 표기 원칙, 또는 근본적인 수행 형태 등에 있어서는 토의되지 않았음은 물론 상호 견해가 좁혀지지 않았다.

우선 북한이 남한측의 제의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양지역간 거래의 실현에 대하여 기대를 갖고 있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앞선다. 무엇보다도 순수한 경제 협력 또는 무역의 추진보다는 회담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였던 느낌을 주고 있으며, 정치 의제는 이제껏 상호 평행선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이다. 쌍방 주장과 관련하여 견해가 좁혀지지 않은 부분들은 거의 전부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이 팀 스피리트를 구실로 회담을 결렬시킨 것은 이미 예견되었었다고 생각되며, '명분'이나 책임 전가에 그 취지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고집해 오던 '정치우선'의 입장에는 아직껏 큰 변화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단지 북한이 대내외적 경제 곤란을 겪고 있으며, 그 원인이 체제의 경직성이나 폐쇄성에 있음을 당국자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합영법, 수출 증대 및 기술 혁신 등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어디까지나 서방 자본주의 세계이며, 한국 측과의 협상은 단지 외교적 명분을 얻는 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었다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다.

따라서 1988년의 '7·7선언'은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정부가 협상을 당분간 보류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남북한 무역을 '민족 내부'의 거래로 인정하고, 또 국내 민간 경제인의 자원에 맡기며, 정부는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그 후 '10·7 남북한 경제 교류 특별 조치'의 채택에 의하여 '7·7선언'의 수행을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여건을 고려할 법·제도·규정 등이 폭넓게 새로이 준비되거나 조정 내지는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7·7 특별 선언'은 제6공화국의 출범 이후 새로이 정책 목표로 등장한 북방 정책과 서로 연관을 갖는다. 사회주의 제국 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혁과 개방은 북방 정책의 전개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

며, 또 그간 국내에서 시도되어 온 민주화와 형평의 실현은 한국과 이들 간의 접촉에 있어서 유리한 명분을 마련해 주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여건 변화는 북한 당국에게 커다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지적하였듯이 비록 남북한 관계가 기능주의적 접근에 기초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는 한, 양측간 정치적 결단을 통한 '합의'가 실행되지 않는 한, 경제 거래의 개시에는 항상 제약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이 보수적인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한측의 제안만으로는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을지언정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¹⁶⁾

6. 결 언

이상 북한의 대외 경제 관계를 개관하였거니와, 끝으로 제기되어야 할 문제는, 다른 사회주의 제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개혁 및 개방이라는 변혁이 이 지역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느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많은 논문들¹⁷⁾이 발표되었으며, 견해들도 다소 엇갈리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 내에서도 197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어 온 대외 경제 정책의 기조가 다소 변하고 있고, 또 신축성을 띠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가져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구조적인 국제 수지의 악화와 외채 상환 불능의 상태, 그리고 경제 계획 목표 달성의 차질 등이다. 또, 보다 근본적인 제약이 폐쇄적·배타적 대외 경제 관계의 고수라는 데 대한 인식이 확고해졌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이에 따라 수출 증대라는 목표도 새로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합영법도 제정되었으며, 대 서방 경제 협력에 역점도 두어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사회주의 제국, 특히 소련 및 중국의 개방 정책도 하나의 커다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 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

을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표 11>에서와 같이 남한의 경우와는 너무나 큰 격차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의 경제적 낙후는 더욱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렇게도 고집해 오던 중공업 정책, 다시 말하여, 군사적 우위도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가 바로 대 서방 개방의 추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경제 정책 기조의 전환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나 분명한 것은, '개방'과 '개혁'을 분리하여 당면한 경제 곤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자만을 추진하되 경제 체제와 관련하여는 종전의 입장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경제 체제의 개혁은 사회주의 제국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치적 변혁까지를 의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전망에 수궁이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 권력 구조 및 정치 체제의 특수성으로 미루어 현 정치 권력의 동요는 곧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역시 다른 사회주의 제국과 마찬가지로 당면한 경제 곤란의 근본적인 요인은 경제 체제나 계획 경제에서 비롯되며, 또 '개방'은 '대내 개혁'의 연장일 수밖에 없으며 후자가 병행하지 않는 한 전자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나아가 정치적 개혁 의지가 전제되어야만 경제 개혁 역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실질적인 대외 개방은 현단계에서 그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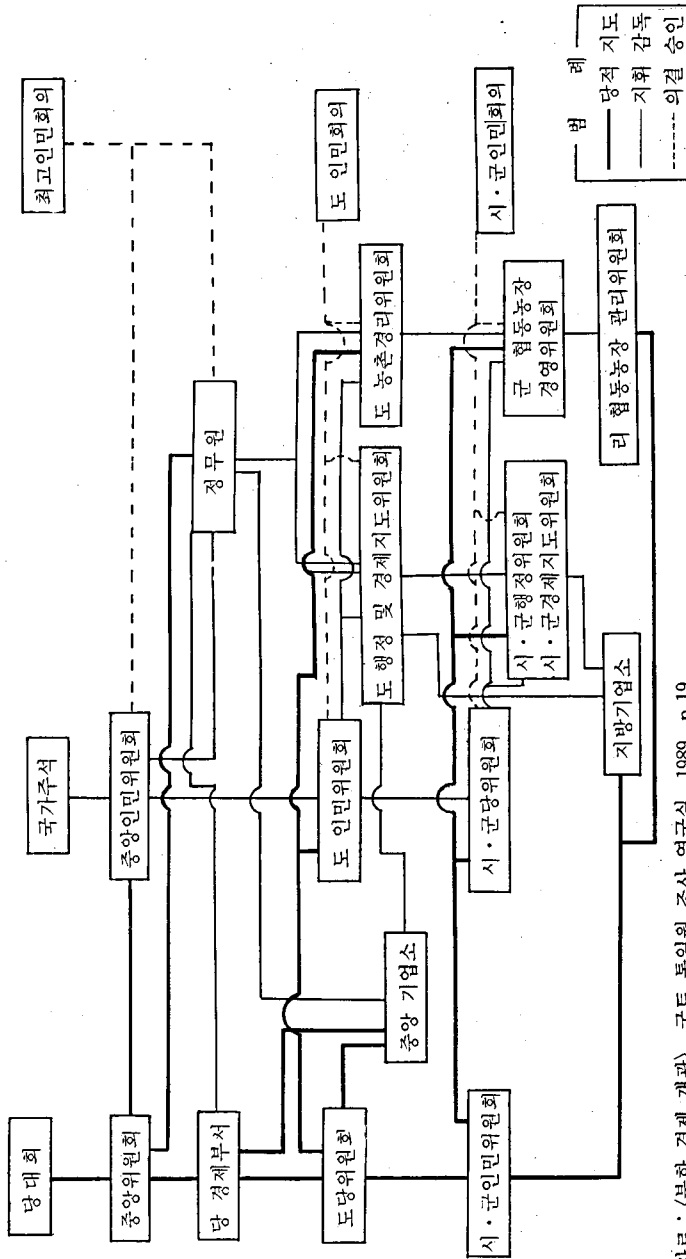
각 주

- 1) 예로 G.N. & J.E. Pickersgill,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Prentice-Hall, 1976, p.9 이하. 참조.
- 2) 오관치, "북한 경제의 실태와 남북 관계", <전환기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국토 통일원, 1987, p.228.
- 3) <경제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 4) 국토 통일원, <북한 최고 인민 회의 제 8기 제 2차 회의 기록>, 1987. 4, pp.80~81.
- 5) 국토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9, p.14.
- 6) 김세원, "대의 경제 협력 및 무역", <북한 경제론>, 북한 연구소, 1977, p.389 이하.

- 7) 극동 문제 연구소, <정치 경제학 강좌>(김일성 방송대학 강의록), 1973.
- 8) <김일성저작선집>, 제 4권.
- 9) 이러한 기초의 추구로 인하여 북한 경제의 대외 무역 의존도는 20% 내외로 극히 낮은 편이다.
- 10) 김세원, <무역 정책>, 무역경영사, 1988, p.433.
- 11) 국토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9.
- 12) 국토 통일원, 앞의 책.
- 13) 북한의 합병법에 대하여는 임양택, <남북한 산업 및 기술 협력의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경제 연구원, 1989, p.169, 이하; 국토 통일원, 앞의 책, p.119 이하.
- 14) 임양택, 앞의 책.
- 15) 동 회담에 관하여는 연하칭, <북한의 경제 정책과 운용>, 한국 개발 연구원, 1986, p.86 이하; 국토 통일원, 앞의 책, p.179; 임양택, 앞의 책, p.211 이하 참조.
- 16) 남북한 경제 관계를 위한 제안은 김세원, <한국의 국제 경제 정책>, 무역경영사, 1985, p.318 이하 참조.
- 17) 예로 국토 통일원,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 1989, 8 및 서울 대학교 한국 정치 연구소, “북한은 바뀌고 있는가?”, <경제, 외교 및 정치>, 1989, 10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들 수 있다.

북한 경제 관리 체계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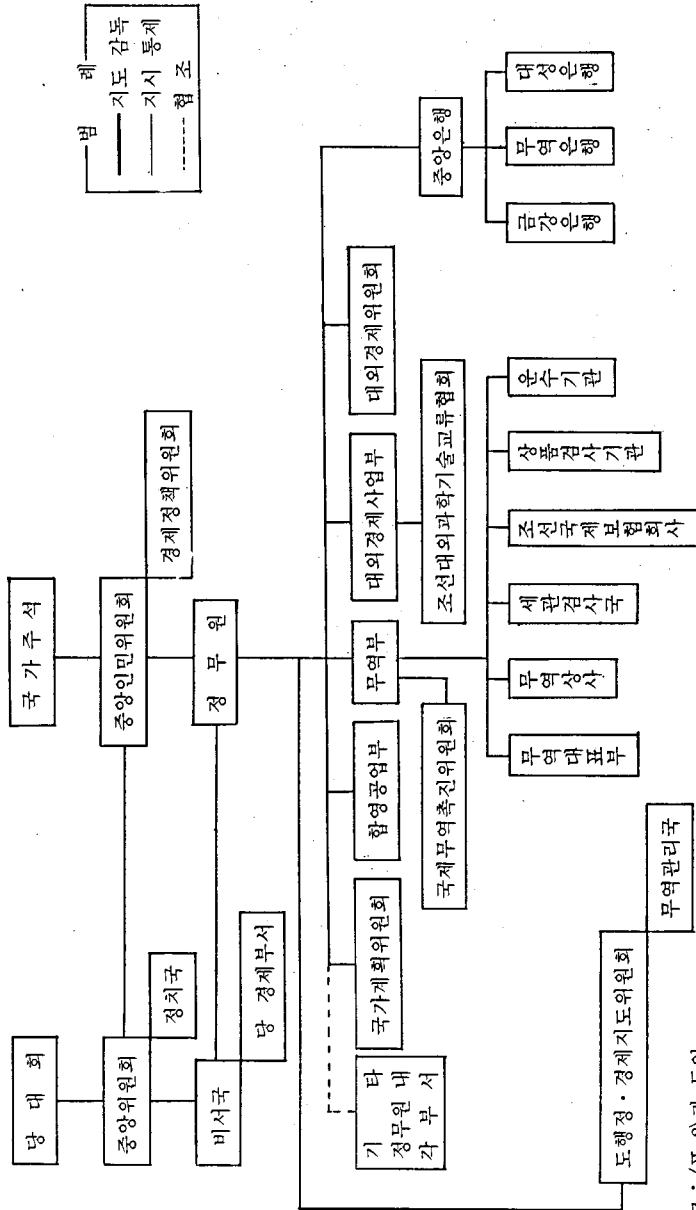


* 자료: <북한 경제 개관>, 국토 통일원 조사 연구실, 1989, p.19.

〈표 2〉 경제 계획의 목표와 실적

계획	주요 과업	주요 계획 목표	주요 실적
제 1 차 1 개년 계획 (19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소 복구 조업 국영 상공업 확대 생산의 급속한 보장과 생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 총생산 : 1946년 비 약 200% 증대 양곡 수확고 : 1946년 비 30만 톤 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 총생산 : 1946년 비 70% 증대 양곡 수확고 : 1946년 비 17만 톤 증산
제 2 차 1 개년 계획 (19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의 편파성 극복 생산품의 질 제고 및 원가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 총생산 : 1947년 비 41% 증대 양곡 수확고 : 1947년 비 13.5% 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 총생산 : 1946년 비 260% 증대 양곡 수확고 : 280만 8,552톤
2 개년 계획 (1949~1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후된 산업과 농업의 발전 전지역의 경제 복구 토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영 산업 총생산 : 1948년 비 194% 증대 양곡 수확고 : 1946년 비 158% 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영 산업 총생산 : 계획 1949년 102.9% 양곡 수확고 : 279만 5,231톤
진후 복구 3 개년 계획 (1954~19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진 수준 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소득 : 1953년 비 75% 증대 공업 총생산 : 2.6 배 양곡 수확고 : 1949년 비 119% 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소득 : 1953년 비 160% 공업 총생산 : 2.8 배 기계 급속 공업 성장율 : 47.5% 노동 생산 성장율 : 196% 양곡 수확고 : 1946년 비 126%
5 개년 계획 (1957~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업화의 기초 구축 의식주 문제 기본적인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소득 : 약 2.2 배 공업 총생산 : 2.6 배 양곡 수확고 : 376 만 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소득 : 2.2 배 공업 총생산 : 3.5 배 기계 급속 공업 성장율 : 49.6% 노동 생산성 성장율 : 140% 양곡 수확고 : 380 만 3,000 천 톤 계획 목표 1년 조기 달성
제 1 차 7 개년 계획 (1961~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공업 발전 경공업·농업의 동시적 발전 전국적 기술 혁신 문화 혁명과 국민 생활의 향상 국방·경제 병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소득 : 2.7 배 공업 총생산 : 3.2 배 양곡 수확고 : 600~700 만 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소득 : 미발표 공업 총생산 : 3.3 배 기계 급속 공업 성장율 : 18.4% 노동 생산성 성장율 : 147.5% 양곡 수확고 : 미발표 계획 기간 3년 연장
6 개년 계획 (1971~197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 견고화 산업 설비 근대화 기술 혁명 촉진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소득 : 1.8 배 공업 총생산 : 2.2 배 양곡 수확고 : 700~750 만 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소득 : 1.7~1.8 배 공업 총생산 : 2.5 배 기계 급속 공업 성장율 : 19.1% 노동 생산성 성장율 : 155% 양곡 수확고 : 800 만 톤 ('76년)
제 2 차 7 개년 계획 (1978~1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 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생산 원가 인하 결약 운동 강화 수송의 근대화 주민 생활 향상 독립 체산제 강화 대외 무역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소득 : 1.9 배 공업 총생산 : 2.2 배 양곡 수확고 : 1,000 만 톤 '80년대 10대전망목표'와 '4대자연개조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 소득 : 미발표 공업 총생산 : 2.2 배 전력 생산 성장율 : 168% 철강 생산 성장율 : 185% 공작 기계 생산 성장율 : 167% 양곡 수확고 : 1,000 만 톤('84) 시멘트·합성수지·철물 생산 목표 달성

북한의 무역 관계 기구표



————— 법
 ————— 레
 ————— 지도 감독
 - - - - - 지시 통제
 - - - - - 협 조

* 자료 : <표 2> 과 동일

〈표 4〉 주요 국별·권역별 무역 구조

구분 연도	총 계			소련			중 국			일 본			서 방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합계	수출	수입
1970	333.2 (100.0)	472.4 (100.0)	805.6 (100.0)	130.2 (39.1)	253.0 (53.6)	383.2 (47.6)	49.5 (14.9)	66.9 (14.2)	116.4 (14.4)	31.3 (9.4)	25.7 (5.4)	57.0 (7.1)	98.3 (29.5)	51.8 (11.0)
1975	767.3 (100.0)	1,310.6 (100.0)	2,077.9 (100.0)	190.6 (24.8)	284.7 (27.1)	475.3 (22.9)	179.8 (23.4)	312.5 (23.8)	492.3 (23.7)	58.9 (7.7)	199.8 (15.2)	258.7 (12.5)	161.2 (21.0)	474.6 (36.2)
1980	1,594.5 (100.0)	1,836.2 (100.0)	3,430.7 (100.0)	397.5 (24.9)	487.4 (26.1)	884.9 (25.8)	275.7 (17.3)	411.6 (22.4)	687.3 (20.0)	165.1 (10.4)	414.0 (22.5)	579.1 (16.9)	419.2 (26.3)	551.6 (30.0)
1981	1,071.9 (100.0)	1,554.1 (100.0)	2,626.0 (100.0)	320.5 (29.9)	432.1 (27.8)	752.6 (28.7)	210.5 (19.6)	329.9 (21.2)	540.4 (20.6)	127.0 (11.8)	319.2 (20.5)	446.2 (17.0)	189.6 (17.7)	491.5 (31.6)
1982	1,258.5 (100.0)	1,576.7 (100.0)	2,835.2 (100.0)	451.1 (35.8)	479.4 (30.4)	930.5 (32.8)	276.6 (22.0)	309.5 (19.6)	586.1 (20.7)	137.1 (10.9)	344.5 (21.8)	481.6 (17.0)	281.8 (22.4)	505.3 (32.0)
1983	1,116.9 (100.0)	1,437.6 (100.0)	2,554.5 (100.0)	396.5 (35.5)	387.4 (26.9)	783.9 (30.7)	231.1 (20.7)	300.7 (20.9)	531.8 (20.8)	115.8 (10.4)	360.1 (25.0)	475.9 (18.6)	255.2 (22.8)	507.6 (35.3)
1984	1,202.4 (100.0)	1,397.9 (100.0)	2,600.3 (100.0)	423.9 (35.3)	487.2 (34.9)	911.0 (35.0)	247.7 (20.6)	248.8 (17.8)	496.5 (19.1)	131.1 (10.9)	279.5 (20.0)	410.6 (15.8)	278.3 (23.1)	385.1 (27.6)
1985	1,171.6 (100.0)	1,770.3 (100.0)	2,941.9 (100.0)	423.3 (36.1)	824.5 (46.6)	1,247.8 (42.4)	222.5 (19.0)	262.9 (14.9)	485.4 (16.5)	160.9 (13.7)	274.4 (15.5)	435.3 (14.8)	229.2 (19.6)	375.1 (21.2)
1986	1,356.9 (100.0)	2,092.3 (100.0)	3,449.2 (100.0)	583.6 (43.0)	1,186.5 (56.7)	1,770.1 (51.3)	255.1 (18.8)	280.9 (13.4)	536.0 (15.5)	154.3 (11.4)	203.9 (9.7)	358.2 (10.4)	235.9 (17.4)	331.1 (15.8)

*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77, 1979, 1987.

〈표 5〉 대 소련 주요 수출입 품목(1986)

(단위 : 1,000루블)

품 명	수 출		품 명	수 입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마르네샤크링카	626 천t	103,384	원유 및 석유 제품	-	188,014
외투 및 상의	-	97,163	기계·설비 및	-	138,379
압연 강재	-	83,465	수송 수단	-	51,259
기계·설비 및	-	81,707	제철·제강 설비	-	46,944
수송 수단	-	45,678	고체 연료	-	14,978
축전지	-	21,544	항공 기술	-	14,795
금속 절삭 기계 및	-	12,060	면 화	10,321t	13,628
단조 프레스 설비	-	8,905	면직물·면상직물	25,966천m	8,902
비금속 광물·점토·	-	4,099	섬유 공업 설비	-	6,093
광토	-	3,619	모직물·모상직물	1,351천m	5,178
시멘트	-	-	광물 채취 설비	-	-
화학 제품	-	-			
담 배	-	-			

* 자료 : 〈소련 무역 통계 연감〉, 1986.

〈표 6〉 대 중국 주요 수출입 품목(1987)

(단위 : 만 중국원(元), %)

수 출			수 입		
품 명	금액	증감률	품 명	금액	증감률 ¹⁾
철 광	22,002	-16.2	석탄·코크스 및 연탄	32,766	39.6
석탄·코크스 및 연탄	21,937	8.3	원유·석유 제품 및 판	32,645	-10.3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16,921	6.8	련 연료		
금속광 및 금속 조각	8,552	-0.1	채유용의 땅콩	8,171	65.7
어개류 및 조제품	6,735	-45.9	곡물 및 조제품	5,530	15.4
비철금속	3,237	-45.9	직물용 섬유 및 그 조각	3,842	80.6
비 료	2,892	0.8	직물용 섬유사·직물	3,020	-24.0
			및 섬유 제품		
담 배	1,859	122.9	비료 및 조광물	2,223	12.6
기타 동물성·식물성	1,139	-26.6			
연료			사료(곡물 제외)	1,672	-1.8
곡물 및 조제품	955	21.2	무기화합물	1,689	570.2
			금속광·금속 찌꺼기	1,487	357.5

* 자료 : 〈중국 세관 통계〉 주 : 1) 1986년 대비 증감률.

〈표 7〉 대 일본 주요 수출입 품목(1987)

(단위 : 1,000 만 엔)

수 출			수 입		
품 명	수량	금액	품 명	수량	금액
금	2,633KG	5,502	철강 및 그 제품	19,197MT	3,424
아연피	36,487MT	4,070	광업·토목용 기계	328MT	1,488
철강 코일	78,574MT	2,896	광학·정밀·의료	-	1,412
송이버섯 ¹⁾	814MT	2,731	기기 등		
계 ²⁾	8,814MT	2,288	무선 통신 기기,	22,213대	916
무연탄	288,571MT	1,604	라디오·TV		
합(蛤) ²⁾	7,266MT	1,520	판지 및 그 제품	-	812
대구알 ³⁾	2,501MT	1,517	화물 자동차	289대	661
연 피	10,205MT	1,418	승용차	604대	636
선 철	66,295MT	1,112	타이어·튜브	1,756대	609
철강판	20,664MT	727	냉장고·냉동 기기	1,174대	589
알루미늄피	3,668MT	700	전력·통신 케이블	1,081MT	576
청어 및 대구알	2,626MT	674	공작 기계	76대	485
조제품			내연 기관	295대	466
마그네슘크링카	44,831MT	649	고무 벨트류	735MT	451
중 유	36,244KL	564	알루미늄 및 그 제품	792MT	428
생선(新鮮)	1,286MT	535	어 망	614MT	377
야 채	1,184MT	483	발전기·전동기·변	3,746대	319
갑각류 및 연체동물	1,176MT	458	압기 등 재료		
조제품			처리 기기 ⁴⁾	148대	314
생선(冷凍)	1,683MT	397	트 릭 ⁵⁾	57대	306
섬 계	252MT	340	액체 펌프	1,502대	290
			록·조절판	118MT	271

* 자료 : 일본 대장성 통관 통계.

주 : 1) 신선(新鮮). 2) 활(活), 신선, 냉장, 냉동. 3) 염장.

4) 온도 변화를 이용하는 것. 5) 운전실·엔진 부착.

〈표 8〉 수원(受援) 및 차관 도입 현황

(단위 : 만 달러)

기 간	합 계	소 련	중 국	기타 공산국	OECD국
1949년 이전	5,300	5,300	-	-	-
1950~1960년	165,336	71,325	50,850	43,161	-
1961~1969년	33,668	19,668	10,500	3,500	-
1970년	9,000	8,700	-	-	300
1971년	26,700	25,000	-	-	1,700
1972년	35,400	15,000	-	-	20,400
1973년	48,400	10,900	-	-	37,500
1974년	52,000	12,000	-	-	40,000
1975년	42,900	18,600	-	-	24,300
1976년	560	400	160	-	-
1978~1984년	55,585	29,625	25,870	-	-
총 계	474,849	216,518	87,380	46,661	124,200

* 자료 : 국토 통일원, 〈북한 경제 통계집〉, 1986.

〈표 9〉 국가별 외채 규모(1987)

(단위 : 억 달러)

구 분	국 가	외 채 액	계
서 방 국	서방채권은행단	9	28(54%)
	일본	4.5	
	서독	2	
	프랑스	1.8	
	스웨덴	1.38	
	오스트리아	1	
	영국	0.24	
	스위스	0.2	
	네델란드	0.19	
	핀란드	0.16	
	벨기에	0.05	
	덴마크	0.04	
기타	7.44		
공 산 국	중 소 련	5.8	24.1(46%)
계		18.3	52.1(100%)

* 자료 : 〈표 2〉과 같음

〈표 10〉 사회주의 제국의 외자 도입·합작 기업법

국 명	외자·합작법	합작기업의 형태	소유권의 형태	외자 합작 비율
헝가리	1970, 법률 제 19호	주식회사, 유한회사	국내법상 소유권을 가짐	원칙 : 49% 예외, 50% 이상
루마니아	1971, 법률 제 1호 1972, 포고 제 424호	〃	소유권을 이론적으로 보유하나 구체적 내용은 미확정이고 실질 내용은 합작계약에 따름	49%까지
유고	1973, 법률 제 22호 1978, 법률 제 18호	사회 소유 기업	사회 소유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외자 계약에 따름	유고측을 넘는 비율(50%)
폴란드	1976, 각의 결정 1979, 〃	주식회사, 유한회사	국내법상 소유권을 가짐	49%까지, 특정서비스업은 100%까지 가함
베트남	1977, 각의 결정 1977, 법인세법	〃	〃	30%이상, 49%이하
중국	1979, 중의 합자 경영 기업법	유한회사(개인 출자 가능)	국내법상 소유권을 가지나, 구체적 내용은 미확정(중국측 사장)	25%이상, 100%까지
북한	1984, 합작회사 운영법	유한회사(개인 출자 가능)	국내법상 소유권을 가지며 실무 사장은 외국측이 담당	50%가 기본이나 그 이상, 이하도 가능
불가리아	1970, 각의 결정	외자 합작 가능성을 승인하나 외자법은 아님		
소련	1987, 최고 회의 결정 총래 회사법 (1927)	유한회사(법인체만 임)	계약 정관에 따라 규정되며 최고 책임자는 소련측이 담당	49% 이하

* 자료 : 〈現代世界經濟と新興工業國〉, 東京大學出版會, 1984, p. 279.

임양택, “남북한 산업 및 기술 협력의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경제 연구원, 1989.4에서 재인용.

〈표 11〉

남북한 주요 경제 지표

(1987년 말 현재)

구 분	단 위	남 한	북 한	남북 대비
인구(연앙 인구)	만 명	4,208	2,069	2.0 : 1
면 적	1,000km ²	99.2	122.1	1 : 1.2
G N P	억 달러	1,186.0	193.7	6.1 : 1
1인당 G N P	달러	2,826	936	3.0 : 1
경제 성장율	실질%	12.0	3.3	—
환 율(연중)	미 1달러 대비	822.4	2.14	—
재 정 규 모	억 달러	195.3	140.6	1.4 : 1
군 사 비 지 출	억 달러	59.8	42.2	1.4 : 1
군 사 비 / G N P	%	5.0	21.8	—
군 사 비 누 계 액	억 달러	514.8	528.6	1 : 1.03
1 인 당 군 사 비	달러	142	203	1 : 1.4
무 역 고	억 달러	883.0	40.6	21.7 : 1
수 출	억 달러	472.8	16.7	28.3 : 1
수 입	억 달러	410.2	23.9	17.2 : 1
외 채	억 달러	356.0	52.1	6.8 : 1
발전 설 비 용 량	만KW	1,902	637.7	3.0 : 1
석 탄 생 산 량	만M/T	2,427	3,900	1 : 1.6
정 유 생 산 능 력	만M/T	3,558	350	10.2 : 1
강 철 생 산 능 력	만M/T	1,854.0	480.5	3.9 : 1
비철금속생산능력	만M/T	44.4	46.4	1 : 1.1
시멘트생산능력	만M/T	2,600	932	2.8 : 1
화학비료생산능력	만M/T	311	351	1 : 1.1
자동차생산능력	만 대	65	2	32.5 : 1
조 선 능 력	만G/T	300	21.4	14.0 : 1
TV 생 산 능 력	만 대	1,248	24	52.0 : 1
직 물 생 산 능 력	만m	55.0	6.4	8.6 : 1
식 량 작 물 생 산 량	만M/T	668.7	495.2	1.4 : 1
(쌀 생산량)	(만M/T)	(549)	(203.4)	2.7 : 1
수 산 물 생 산 량	만M/T	333.2	212.3	1.6 : 1
도 로 총 연 장	1,000km	54	22	2.5 : 1
(고속도로)	(km)	(1,539)	(240)	6.4 : 1
철 도 총 연 장	km	6,340	4,703	1.3 : 1
(전철구간)	(km)	(1,154)	(2,867)	1 : 2.5

* 자료 : 〈북한 경제 개관〉, 국토 통일원 조사 연구실, 1989.

3. 북한 주민의 경제 생활

강광하(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1. 서 언

반세기에 가까운 분단의 역사는 남북한 사이의 벽을 점점 높게 쌓아 올려 서로의 이해의 폭을 극도로 축소시켜 어느 새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면서도 가장 그 실상을 알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오늘날 북한 사회에 관해서는 극단적으로 상반된 두 가지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즉, 한편에서는 북한을 가장 이상적인 지상 낙원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독재의 총칼 아래서 신음하는 동토의 왕국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의 원인으로서는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들 수도 있을 것이며, 이데올로기적 요소를 떨쳐 버리지 못한 비과학적 연구 태도를 들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제 체제나 정치 체제가 아닌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알아보고자 할 때에도, 우리는 자료의 부족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각종의 통계 자료를 거의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주민 생활과 관계되는 세부적인 항목의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간혹 발표되는 자료가 있긴 하지만 선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허위, 과장된 수치가 많아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는 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남북한 사이의 벽을 넘어서 민족적 과업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도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경제 생활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먹고 자고 생활하는가를 한번 고찰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북한에서 직접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토 통일원과 북한 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다른 자료를 참조하면서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료 부족에 연유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2. 경제 성장 정책과 주민 생활

(1)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크게 보아 전통적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 제한적 분권화 계획 경제 체제,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한의 경제 체제는 이 중에서 전통적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¹⁾ 중앙 계획 경제의 근본 목적은 급속한 경제 성장 및 공업화, 그리고 중앙 집권화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²⁾

이 경제 체제에서 계획 작성을 담당한 계획자들은 매우 빠른 속도의 성장을 추구하는데, 이 때 경제의 모든 부문이 고르게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문이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불균형 성장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공업에 필요한 투입물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에 우선권이 두어지기 때문에 중공업이 장려되는 반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공업과 농업은 열악하게 방치되거나 중공업의 발전을 위해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체제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경제 운영을 추구한다. 경제의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대부분 피라미드의 꼭대기로부터 내려지며, 그것도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명령의 형태로 하달된다. 이러한 지도자 주권(leader's sovereignty)은 경제를 운영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목적으로서 때로는 성장면에서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구된다. 지도자 주권이 강력하게 행사됨으로 인해 일반 주민들이 자신

의 소비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박탈된다. 소비재의 종류, 품질, 수량 등이 하나의 지도자, 또는 소수의 지도층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소비자들은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소비 생활에 주민 스스로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생산품의 질은 하락한다.

또한 이 체제의 기본적 목적은 아니지만 경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써 폐쇄 경제를 추구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 역시, 국제간의 교역에서 오는 이익을 얻을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쉽다.

북한의 경제 체제는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 체제에 속하므로 북한의 경제적 특성 역시 위에서 말한 중앙 계획 경제 체제의 기본적 범주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다.

북한의 경제 정책 방향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른바 '자력갱생'으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 북한은 이와 같은 개발 전략이 식민지 경제의 편파성과 기형성을 청산하고 독자적인 확대 재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소위 주체 사상이 확립된 1960년대 후반 이후 경제적 자립을 정치적(외교적) 자립과 군사적 자위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간주해 왔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추진된 북한의 경제 개발 전략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⁴⁾

첫째, 경제 자립을 강조한 나머지, 대내 지향적 공업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것은 수출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대외 지향적 공업화 정책과는 달리 국내 시장 위주의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대외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자급 자족을 이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무역 의존도(무역액/국민 총생산)는 20% 내외(남한은 70%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자본재의 대외 수입 의존도(자본재 수입액/국민 총생산)는 3.5% 내외(남한은 8.9% 내외)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⁵⁾ 그렇지만 이 전략은 역내 시장이 협소하고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북한의 실정에서 결국 지속적 성장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둘째, 중공업 우선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구하였다. 북한은 생산재(생산

수단)를 생산하는 중공업에 우선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생산력 증대를 급속히 실현하고 이를 통해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중공업을 경제 성장의 축으로 삼아 왔다. 이 같은 북한의 중공업 우선 정책은 군사력 증강 정책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북한의 연평균 총투자액 가운데서 광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후 복구 3개년 계획기(1954~1956)에서는 49.6%, 제1차 5개년 계획(1957~1960년)에서는 51.3%, 제1차 7개년 계획과 그 연장기(1961~1970년)에서는 60%에 달했다. 그리고 광공업 투자액의 구성 중에서 중공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공업과 경공업 사이의 상대적 투자 비율은 1954~1956년에는 81.1% 대 18.9%, 1957~1960년에는 82.6% 대 17.4%였다.⁶⁾ 북한의 전체 산업 생산에서 중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에 이미 40% 수준에 달했으며, 이후 그 비율은 계속 높아져 왔다.⁷⁾ 북한은 성장의 초기 단계에서 중공업 우선 정책이 효과를 보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나 점차 그 역기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즉,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중공업만의 발전이 경공업과 농업의 성장에 기틀이 되지 못했으며, 점점 심각해진 산업 구조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1970년대 들어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는 1인당 GNP에 있어서도 한국보다 뒤쳐지게 되었다.⁸⁾

셋째, 군사와 경제의 병진책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 군사력 증강은 모든 정책 목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들은 1962년 12월 제4기 제5차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4대군사로선'을 채택하고, 1966년 10월 당 대표자 회의에서 '국방·경제병진책'을 채택한 이래 지금까지 군사력 증강을 정책 목표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 같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 노력은 1960년대 이후 국민 총생산의 20% 이상이 군사비로 지출돼 오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1987년 현재 GNP 대비 약 21.8%).⁹⁾

넷째, 경제의 운용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수단이 강조된다. 근로자들의 생산 동기를 자극하여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행정적인 개혁이나 물질적인 인센티브(incentive)보다는 정치적인 대중 동원에, 즉 행정적·기술적 노력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수단에 크게 의존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김

일성과 김정일)의 지배적인 역할이 특히 강조되었다. 실제로 북한의 중요한 정책적 결정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내린 교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북한 경제는 1947년 제1차 1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계속적으로 경제 계획을 추진하여 왔는데, 1984년에 마친 제2차 7개년 경제 계획에 이르기까지 여덟 번¹⁰⁾의 경제 계획이 있었고, 제3차 7개년 경제 계획(1987~1993)이 현재 진행중이다. 앞에서 설명한 원칙하에서 추진된 경제 계획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식민지의 유산, 빈곤과 기아로부터 출발해서, 게다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오는 막대한 국방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북한 경제를 이끌어 낸 것은, 비록 남한과는 정도가 다르지만 하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경제가 점차 성장하면서 산업 간의 불균형이 누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공업과 농업은 크게 낙후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상당수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1950년대 말 또는 1960년대 초에 겪은 경험과도 일치한다.

북한의 경제 계획에서 주민의 경제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목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였다 하더라도 계획 자체에는 주민 생활에 대한 고려가 종종 있어 왔다. 그러나 실행 과정에서 계획이 난관에 부딪침에 따라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공업, 농업이 줄곧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소비재 부문의 성장이 저조하게 된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초에 북한은 7개년 계획의 기본 정책 목표로서 주민 생활의 향상과 경공업·농업의 병행 발전을 내세웠지만¹¹⁾ 실제로는 ‘군사와 경제의 병진책’을 그대로 견지함으로써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앞으로 북반부 인민들의 생활방식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¹²⁾고 공언했다. 이것은 혁명 작업의 계속적인 추구를 위해서는 인민 생활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밝힌 것이라 하겠다. 1979년 1월 1일의 신년사에서 는, “경공업부문에서는 모든 경공업공장을 완전가동시켜, 대중소비물자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의 원료원을 적극 동원 리용하여 지

방산업공장의 생산을 정상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질 좋고 다양한 일용필수품과 식료품을 넉넉히 공급하여야 하겠다.”¹³⁾고 하여 경공업 발전을 통한 주민 생활의 향상을 역설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될 것을 우려해 실제로 주민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단순히 주민 생활 향상이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으나마 가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80년 10월 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적 문화생활양식’의 전면적 확립을 통한 주민 생활 향상 문제를 주요한 과제로 내세워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생활양식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경공업발전과 인민소비품 생산에 일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¹⁴⁾고 주장하였다. 이 당 제6차 대회에서는 주민 생활의 향상이 ‘당의 최고의 원칙’ 또는 ‘최고의 목표’라고 강조되었다.¹⁵⁾

이어 1982년에 “공산주의 건설도 우선 먹는 문제부터 해결한 뒤에……”라고 역설했던 김일성의 연설(4월 13일)이 있던 후 각종 일용품과 식료품을 대량 생산하여 공급할 것이 계속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1983년도는 ‘소비품 증산의 해’로 설정하여 소비재 부문에 소요되는 자재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1984년에도 북한은 김정일의 지시로 공장, 기업소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기본 생활 소비품을 생산하는 한편, 당 간부들이 지방을 순회하면서 경공업 사업에 대한 ‘일용품 관계자회의’를 소집하는 등 소비품 생산을 독려했고, 중앙 및 각 도에서는 주민 소비품에 대한 ‘특제품 전시회’, ‘품평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생활 필수품의 질적 제고와 양적 증가를 꾀하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공장, 기업소의 지배인을 비롯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삭감 지급하고 ‘법무생활 지도위원회’ 등에서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였다.

김일성은 1985년 1월 1일의 신년사에서 “모든 경공업공장을 총기동시켜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공장, 기업소들의 생활필수품 직장과 작업반을 많이 내오고 도시와 로동자구,¹⁶⁾ 협동농장의 가내 작업반과 부업반을 널리 조직하여 일용잡화를 비롯한 생활필수품과 식료품생

산을 더욱 늘려야 하겠다.”¹⁷⁾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김일성은 1986년 1월 1일의 신년사에서 “근로자들의 생활적요구는 날로 높아가고 있으나 그에 맞게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¹⁸⁾고 지적함으로써 인민 생활 문제의 시급성을 또 한번 강조했다.

김정일의 주도로 수립된 최초의 경제 계획으로서 현재 진행중인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년)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목표로서 ‘인민의 의식주문제 해결’이 포함되어 있다.¹⁹⁾ 이 경제 계획은 당면 경제 현실을 감안하고 주민 생활의 궁핍에서 오는 내재적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 일부의 기존 전망 목표치를 다소 하향 조정하면서 주민 생활의 향상에 비교적 높은 관심을 둔 것이다. 그러나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이 새롭게 제시된 것이 없고, 주민 노력 동원을 위해 정치 사상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3차 7개년 계획 역시 이제까지의 계획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최근 이른바 ‘경공업혁명’, ‘인민봉사혁명’ 등의 구호 아래 북한 주민들의 생활 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각종의 경공업 제품의 생산에 관심을 쏟고는 있으나, 그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2) 경공업 및 농·축산업

1) 경공업

경공업은 대부분이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생활 필수품, 일반 소비재, 그리고 내구 소비재를 생산하는 부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생산업자들이 수요가 많은 경공업 제품의 생산에 자동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정부 당국도 이 부문에 대해 후생, 복지의 차원에서 정책적인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상품의 수요 공급이 중앙 계획 기구에서 일방적으로 선택,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소비자인 주민들의 욕구가 잘 반영되지 않는 북한에서는 경공업이 정책적으로 경시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지금까지 군수 산업 위주의 중공업 우선 정책을 택하여 왔기 때

문에 경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는 그 실적이 부진하다. 그 결과 경공업은 북한의 산업 중 가장 낙후한 부문으로 전락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의 소비 생활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북한이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경공업 부문 발전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6개년 계획(1971~1976년)부터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중앙 계획 당국의 투자 없이도 경공업 부문의 향상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1973년부터 신지방 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주민 소비 용품의 생산 공급을 지방 행정 기관에 일임하였다. 또한 제2차 7개년 계획의 후반기에 주민들의 소비 생활에 대한 욕구 충족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제 정책의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자, '경공업혁명', '인민봉사혁명', '8·3인민소비품생산' 등과 같은 구호를 내걸고 경공업 제품의 양적·질적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²⁰⁾

그러나 이러한 경공업 육성책은 북한의 기본적인 중공업 우선 정책을 그대로 견지하는 가운데 추진된 것이며, 또한 김정일 치적 만들기와 같은 다분히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은 것이었다. 따라서 생산 시설의 영세성, 시설 장비 및 생산 공정의 전근대성을 탈피함으로써 제품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는 문제는 여전히 북한 경공업의 과제로 남아 있다.

북한의 경공업 중에서 섬유 공업, 식료품 공업, 일용품 공업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초기 단계에 있어 북한의 방직 시설은 대부분 재래식이어서 직물 생산 능력이 보잘것없었으며 제품의 종류도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해방 전, 북한의 인조 섬유 생산량은 연간 2300여 톤, 1인당 직물 생산량은 13센티에 불과하였지만²¹⁾ 오늘날에는 그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통하여 연간 직물 생산량이 6억 5,000만 미터, 주민 1인당 생산량은 약 30미터에 이르고 있다(표 1) 참조). 그러나 이 중 군용 및 공공용, 그리고 공업용과 수출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민들의 의생활에 돌려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주민 수요에 필요한 절대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섬유 공업은 화학사(인건사와 화학 섬유), 모사와 건사를 혼방한 혼방직 계열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편직 공업이 현저히 증대되고 있는

반면, 1960년대까지 주축을 이루었던 면직, 모직 계열은 면화와 양모의 수입 부담이 커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이다.

북한의 섬유 공업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스프사 계열(人絹織)과 폴리비닐 알콜(PVA) 계열(비날론)이 크게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에서는 갈대와 옥수수대를 주원료로 하는 인견직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이다.

기술 수준을 볼 때, 북한의 섬유 공업 제품은 방직 설비의 대부분이 회전수가 낮은 고리 정방기와 소폭 복직기 등 구형 설비를 사용,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디자인, 색상, 염색, 감촉 등의 수준이 뒤떨어져 있으며, 최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일 조총련계 상공인과의 합영을 통한 최신 설비 도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여성을 부역으로부터 해방시켜 모자라는 노동력을 확충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식료품 공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식료품 생산을 군단위로 자급화하기 위해 옥수수 가공 공장을 비롯하여 식용유 공장, 육류·어류 가공 공장 등을 시·군 단위마다 건설하였는 바 현재 식료품 생산의 70% 이상을 지방 공장이 담당하고 있다.²²⁾ 따라서 현대적 설비를 갖춘 대규모 식료품 공장이 각종 식료품을 대량 생산하는 한편, 중소 규모의 지방 식료품 공장은 수공업적 시설을 갖추고,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자체의 원료로서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식료품을 가공, 생산하고 있다.

북한의 식료품 공업의 특징은 옥수수 가공 처리와, 장기 저장이 어려운 1차 가공품 생산이 주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옥수수 가공 공장은 절미운동의 일환으로 대규모로 건설하여 옥수수 가공품인 옥쌀 생산을 증대시키도록 했다. 제당업의 경우는 원료 부족, 생산 설비 미약으로 인해 주민 수요에 필요한 설탕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 제당 공장보다 물엿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간식류인 제과, 제빵이나 음료수, 주류 등도 생산되기는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수량이 적어 일반 주민들은 쉽게 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경공업이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되자 이의 획기적 발전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 공업이 주민의 소비품 중 기술이 복잡하고 대규모로 발전시켜야 할 분야를 맡고, 지방 공

업이 지방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 가능한 중소 규모의 생산을 맡게 되었다. 이들 지방 공업에서는 각 시·군내에 평균 16~20개의 단위 공장들을 하나의 통합 공장 체제로 묶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지방 산업 공장 제품들이 전체 주민의 소비 물량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있고 일부는 수출도 하고 있다.

1980년대 초를 기준하여 볼 때 지방 산업 공장수는 3300여 개소가 있다. 이들 단위 공장들을 보면 식료품, 일용품, 섬유류 등 생필품 공장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화학, 농기계, 건채류 등도 생산하고 있다(표 2 참조).

그러나 지방 공장의 시설이 노후하고 자체 조달하는 원료의 품질이 낮아 생산된 제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인데 최근에는 기존 제품의 질적 개선,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1〉에는 남북한의 주요 경공업 시설 능력이 나와 있는데 전체 생산량으로 보면, 1인당 기준으로 보면 북한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2) 농·축산업

(가) 농업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업의 발전 못지않게 농업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북한도 이를 인식하여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한 지주로서 농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농업의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농촌 기술 혁명의 4대 기본 과제로 삼아 농업 생산 증대를 꾀해 왔다. 그러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농업 생산은 식량을 자급 자족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곡물 생산이 부진한 것은 첫째,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중공업 우선 정책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둘째, 냉해에 강한 신품종 개발에 실패하여 농업 생산이 기후 조건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셋째, 무리한 화학화 추진으로 지력이 감퇴되었고, 넷째, 농민들의 근로의욕 저하로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²³⁾ 근로 의욕의 저하는 '농업의 집단화'라는 제도상의 한계에 기인하는 바 큰데, 이와 같은 현상은 대다수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북한은 농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966년부터 이른바 '분조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농촌의 기술 혁명과 함께 농작의 집약화, 품종 개량, 병충해 방지에 주력한 결과, 알곡 생산이 1977년에 850만 톤, 1979년에 900만 톤, 1984년에 1,000만 톤에 달했으며, 정보당 수확량은 벼 7.6톤, 옥수수 6.5톤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⁴⁾

그런데 북한의 농작물 생산 실적을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북한의 식량 통계 지표인 '알곡'은 곡류 이외에 서류(薯類)까지 포함해서, 가장 작황이 좋은 곳을 표본으로, 입묘 상태에서 측정된 조곡 개념(粗穀概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식량 통계에 사용되는 정곡 개념(精穀概念)의 곡물 생산량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입묘 감모율, 도정률, 통계 오차를 감안하여 일반적인 식량 통계 개념으로 환산하면 실제 생산량은 크게 줄어든다.

특히, 최근 북한의 곡물 생산은 지난 3년간 이상 기후로 인해 평년작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1987년의 경우 일반적인 식량 통계 개념으로 추정된 북한의 곡물 생산은 쌀 203만 4,000톤을 포함하여 495만 2,000톤을 기록, 평년작에 비하면 5.3% 감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표 3〉 참조).

국민 1인당 쌀 생산량(1987년)을 보면 북한이 104.3kg, 남한이 132.1kg으로 남한이 앞서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상당량의 미곡을 외국(주로 소련)에 수출하고 있으므로²⁵⁾ 쌀에 있어서의 1인당 소비 가능량의 격차는 실제로 이보다 더 크다고 하겠다. 남한도 최근 쌀을 조금씩 수출하는데 이것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는 쌀을 수출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쌀 수출은 외화 획득을 위해 강요되는 출혈 수출이다.

한편 국민 1인당 곡물 생산량에서는 북한이 253.4kg, 남한이 160.8kg으로서 북한이 상당히 앞서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쌀 이외의 거의 모든 곡물에 대한 자급도가 매우 낮아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곡물량을 알려면 수입량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

다.²⁶⁾ 1987년도 남한의 곡물 수입량은 1021 만 2,000 톤(수출은 없음)으로 이를 포함해 1인당 수치를 계산하면 표에서 보는 대로 406 kg이 된다. 그러므로 실제 처분 가능한 곡물량에 있어서는 남한이 북한에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북한은 식량 증산의 관건이 경지 면적 확장에 달려 있다고 보고 '30만정보 간척지개간'과 '20만정보 새땅찾기'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같은 경지 확장을 통해 제3차 7개년 계획 기간중에 쌀 700만 톤을 포함하여 1,500만 톤의 곡물을 생산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발표한 1984년의 생산 실적 1,000만 톤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이 1,500만 톤 생산이라는 목표의 달성에는 5백만 톤의 추가 생산이 필요하다. 그들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제2차 7개년 계획 동안에 곡물 생산량이 겨우 150만 톤이 증가한 것을 보면 제3차 7개년 계획의 목표가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총 50만 정보에 달하는 간척지 개간과 새땅 찾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러한 경지 확장 계획이 달성되고 정보당 7톤이 수확된다고 하더라도 350만 톤의 증산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1,500만 톤 생산 목표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²⁷⁾

(나) 축산업

북한의 축산업은 국영과 협동 농장 축산을 중심으로 여기에 개인 부업 축산을 배합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낙농 기술이 뒤떨어져 있고 사료 확보가 어려워, 초지 면적의 확대와 자연생 사료의 취득에 역점을 두면서 소, 돼지 등 큰 가축보다는 토끼, 오리, 닭, 산양 등의 사육에 더 치중해 왔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그들의 축산물 생산은 1986년 현재 55만 톤 수준으로 10년 전인 1976년과 같다.²⁸⁾ 그렇지만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1인당 기준으로 볼 때 남한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1986년 남한의 육류 생산량은 80만 톤이며 수입은 없고 약간의 전년도 이월액과 수출량이 있다.²⁹⁾ 그러나 이월액과 수출량이 미량이므로 생산량을 곧 소비 가능량으

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북한도 육류의 수출입액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생산량을 소비 가능량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의 생산량을 토대로 1인당 소비 가능량을 보면 북한이 28.9 kg, 남한이 19.5 kg으로서 북한이 남한의 1.5배에 이른다.

3. 부문별 경제 생활 실태

지금까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공업과 농업의 현황 파악을 통해 북한 주민 경제 생활의 평균치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생산(소비)액의 단순한 나열에 머문다면 이는 북한 주민의 경제 생활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것은 북한의 경제 체제가 남한의 그것과 비교할 때 근본적으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주민 생활에만 한정시켜 보더라도 소비재의 공급 및 소비 양상, 가격 결정 체계, 경제 의식 등이 크게 다르다. 남한은 시장에서 자유 경쟁의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반면 북한의 경우에는 계획, 지시, 명령 등에 의하여 생산, 공급이 결정된다. 가격 결정 역시 남한은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지만 북한은 계획 당국이 정책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경제 의식 또한 남한이 적극적이며 자율적이라면 북한은 소극적이며 타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우리와는 이질적인 경제 체제하에서 다른 경제 질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경제 생활을 우리와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경제 생활을 몇 부문에 한정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소득 및 소비 수준

국민의 경제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변수는 1인당 GNP이다. 달러로 표시한 북한의 GNP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정확한 값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국토 통일원의 추정에 의

하면 1987년 현재 북한의 1인당 GNP는 939달러로서³⁰⁾ 남한의 2,826달러와 비교할 때 약 1/3 수준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GNP 내역과 경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의 경제 생활 수준을 1인당 GNP의 차이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주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대리 변수로서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를 들 수 있는데³¹⁾ 이는 1인당 GNP에서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투자 지출과 군사비 지출액을 차감한 잔여분을 계산해,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후생을 위해 소비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1인당 GNP보다는 더 적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GNP에 대한 군사비 부담을 보면 남한은 약 5.0%, 북한은 21.8%이다.³²⁾ 그리고 총투자율은 남한이 29.8%, 북한이 약 30%로서 모두 높은 수준으로 비슷하다. 이를 감안하면 남한은 가용 민간 소비 지출의 비율이 약 65.2%로서 1인당 약 1,842.6달러로 나타나는 데 비해 북한은 주민의 최대 소비 비율이 약 48.2%로서 452.6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남북한의 가용한 소비 수준은 약 4.07 대 1의 격차를 나타내 1인당 GNP의 격차보다도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체로 볼 때 1인당 소득 또는 소비 규모에 있어서 남한이 북한보다 높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차이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흔히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에 비해 능률면에서는 좀 뒤떨어지더라도 분배면에서는 우월하다고 일컬어진다. 이번에는 이것에 관해 한번 알아보자.

〈표 4〉에는 북한 사무원, 기술자, 노동자 등의 임금 수준이 나와 있는데,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일반 경노동자의 임금이 60~80원으로 가장 낮고 특급 기업소 지배인 등의 임금이 300~350원으로 가장 높아 그 차이가 대략 5배 정도된다. 반면 〈표 5〉에는 남한의 직급별 임금 격차가 나와 있는데 전(全) 기업체가 아닌 제조업만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하나의 예로서 북한의 그것과 비교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남한은 생산직 중졸자의 임금이 19만 8,300원이고 사무직 부장의 임금

이 70만 3,200원으로서 그 비율이 약 1 대 3.5이다. 그러나 남한의 사무직 부장을 북한의 사무원 부장급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의 부장은 특급 기업소의 지배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자급 기술자나 사무원 중 지방 단위 간부를 남한의 부장급에 대응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들의 임금은 150~200원이므로 최저인 일반 경노동자의 60~80원에 비해 1.8~3.3배가 된다. 따라서 임금만을 대상으로 비교해 볼 때에는 임금 격차가 남북한간에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위직을 포함하여 비교해 본다면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는 사유 재산의 불인정으로 인해 재산 소득이 거의 없는 데 비해 남한에서는 근로 소득 이외에 재산 소득이 있고, 재산 소득의 격차가 임금에서의 격차보다 일반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소득 분포가 상대적으로 더 균등하다고 하겠다. 다만 절대적 수준에 있어서 남한의 소득이 북한보다 훨씬 높다는 의미에서 성장에 따른 소득 수준의 향상과 분배에 따른 형평의 문제는 쉽게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실제 소득을 처분하는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문제, 즉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구매가 가능하나의 여부 등 소비 수준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측정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모두 고려해서 비교하는 것은 자료의 제한 때문에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면에서 남북한을 비교해 본다면 소득 수준은 남한이 높고, 분배 구조는 북한이 더 균등하다고 볼 수 있다.

(2) 식생활

우리에게는 '의식주'라는 표현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북한에서는 '식의주'라 하여 식생활이 최우선의 과제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선전과는 달리 북한의 식량 사정이 썩 좋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선 그들은 농작물의 수확량이 넉넉지 못하여 공급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식품 가공 기술 및 저장 수단이 좋지 못하고, 식료품의 공급이 철저하게 중앙 통제적 배급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확보된 양에 대해서도 적

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평양, 개성, 청진 등 주요 도시에 대한 '우선배정정책' 때문에 중소 도시 및 농어촌 등이 행정적으로 소외됨에 따라 더욱 악화된다.

북한은 1957년 11월, 내각 결정 제 96호 및 제 102호에 의거하여 종래 배급제와 병행되었던 식량 자유 판매 제도를 완전 폐지하면서 협동 농장 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에 대한 식량 배급제를 실시했다.³³⁾ 식량 배급제는 사회주의적 경제 구조하에서 식량 생산의 부족으로 인한 식량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노력 전선에 나가지 않으면 식량을 얻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주민들에게 조성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1973년부터는 전쟁에 대비한 식량 비축을 명목으로 식량을 감량 배급하고 있다. 각 가정별로 전식 배낭 속에 4~5일분의 식량을 자체적으로 비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애국미운동'의 명목으로 배급량에서 1일 100g 씩 사전 공제하여 지급함으로써 북한의 식량 배급 사정은 종전보다 훨씬 악화되었다.

식량 배급에 있어서 배급량과 배급 내용은 모든 주민에게 일정하지 않으며 당 간부, 고위 관리, 군인 간부층 등에는 특혜가 있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중앙 공급 대상자와 일반 공급 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표 6>에 나타나 있는 기준에 의거하여 배급하고 있다. 배급 기준으로서 우선 개인의 신분과 그가 속한 계층이 중요하며, 그 다음 연령과 노동량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매월 2회 직장 노동 행정부에서 발부한 식량 공급 카드와 절취표(식량 공급표)를 가지고 각 리·동 배급소에서 식량 배급을 받게 되는데, 출장이나 여행, 병원 입원, 군인의 휴가 기간 등의 때에는 양권(양표)을 제출하고 식당에서 매식한다. 도시 주민들이 식당을 이용할 때에도 양권을 사용한다.

노동자, 사무원 등 일반 주민에게 배급되는 식량은 주로 쌀과 옥수수인데 식량 배급은 지역에 따라 백미 대 잡곡의 비율에 차이가 있다. 규정상으로는 백미 대 잡곡의 비율이 5 대 5이지만 실제로는 이 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종전 3 대 7에서 지금은 2 대 8로 악화되었다.³⁴⁾ 그러나 평

양의 주민들에게는 7 대 3 내지 5 대 5로 배급되고 있다.³⁵⁾

농민들의 식량은 배급제가 아니라 협동 농장의 연말 결산 분배에 의해 현물과 현금으로 분배받고 있다. 이 때 농민들은 그들에게 할당된 곡물 실수량을 완전히 지급받는 것이 아니다. 협동 농장에서는 1년간 생산한 총생산량 중에서 국가의 의무 수매량과 탁아소·유아원 등의 시설비, 사료비, 종자비, 비료대, 농기계 이용료, 수리비, 농기구·농장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60% 정도를 공제한 후 그 나머지를 가지고 농장원의 '로력 공수'³⁶⁾와 부양 가족의 수를 고려하여 분배하고 있다.

실제로 농민들이 노력 공수에 따라 분배받는 양곡의 양을 보면, 1년분의 1인당 기본 식량이 벼로 400kg 정도인데, 이를 정곡으로 환산하면 현미로 250~270kg이며 1일 700g 정도가 되어 도시 근로자들의 식량 배급 기준량과 비슷한 양이다. 그렇지만 농번기의 식량 수요 증가와 관혼 상제 등으로 농민들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전체 농민 중 약 20%만이 분배곡으로 연중 식량을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협동 농장 축적 펀드에서 대여 받은 대여곡으로 부족한 식량을 충당하고 있다.³⁷⁾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식량(주식) 배급량은 1일 1인당 300~700g이며 농민들에게 분배되는 양도 대략 1일 700g 정도가 된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1일 곡물 소비량은 어떤 수준인가? <표 7>에는 남한의 1일 1인당 쌀 소비량이 나와 있는데, 1987년 현재 1일 1인당 쌀 소비량은 농가의 경우 452.1g, 비농가의 경우 320.5g이다. 쌀의 소비량만을 따진다면 남한이 앞선다. 그러나 남한은 쌀이 주가 되고 북한은 잡곡이 주가 된다는 것을 감안해 1일 곡물 소비량을 비교하면 커다란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물론 쌀을 주로 하는 남한의 주민들이 북한의 주민들보다 식생활의 질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대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식생활이 획일화되어 있어 곡물의 배급 물량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에 비해, 남한은 식생활의 다변화로 쌀 등의 비중이 줄고 점차 육류, 채소, 과일, 소맥, 가공 식품의 소비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³⁸⁾ 남한에서는 비농가의 쌀 소비량이 1971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줄고 있으며, 농가에서도 점차 쌀 소비 증가율이 떨어

어지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칼로리 섭취량에서는 남한의 경우 1일 1인당 2,588칼로리(1982년)인 데 비해 북한 노동자 가족(5급) 1인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1,841칼로리로서 남한의 71% 수준이다.³⁹⁾

북한에서는 밥 공장을 통한 집단 조리 체제가 널리 확산되어 있다. 그들은 여성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1970년 11월 제5차 당 대회에서 6개년 계획 기간(1971~1976년)에 주민 식생활의 일대 변혁을 시도하는 밥 공장 설치를 대폭 확장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1980년 10월 당 제6차 대회에서도 김일성은 여성들이 집단적인 노동 생활과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에 자유롭게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밥 공장의 증설을 장려하였다.

밥 공장은 평양을 비롯한 각 지방과 도시에 3~4개 정도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평양에는 각 동마다 밥 공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곳에는 20분 만에 200명 분의 밥을 지을 수 있는 시설과 4~5분 만에 60kg의 빵을 생산할 수 있는 전기 가마 시설 및 한 번에 1,000명 분의 밥을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밥 공장에 사용되는 식량은 각 가정에 공급될 것을 공장에 지급한 것이다. 부녀자들은 출근할 때 밥 공장에 찾아가 주문자의 거주지와 성명, 공급받을 시간과 함께 필요한 양을 신청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서 약속된 시간에 찾아가게 된다. 밥 공장에서는 주식물 이외에도 반제품으로 된 부식물과 국거리들을 배급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주식이 배급제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부식은 상점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표 8>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세대당 구입할 수 있는 부식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식용유 등의 부식은 공급 카드에 의거해 구입하고 육류, 어류는 직장에서 공동으로 구입하여 분배한다. 그러나 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소량의 필수적인 것 이외에는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기는 어렵다.

개, 닭, 달걀 등은 국영 상점이나 농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으며, 특히 농민 시장에서는 국가 지정 가격이 아닌 자유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 주민에게는 1년에 3~5 차례의 명절 특배(名節特配)가 있다. 북한의 명절로는 설(1월 1일), 김정일 생일(2월 16일), 김일성 생일(4월 15일), 해방 기념일(8월 15일), 정권 창건일(9월 9일) 등의 일반 명절과, 국제 노동절(5월 1일),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탄부절, 어부절 등과 같은 특수 명절이 있다. 일반 명절에는 모든 북한 주민에게, 특수 명절에는 해당 계층이나 직종 종사자들에게 특별 배급이 주어진다. 매 특별 배급시에는 각 호당 돼지 고기 1~2kg, 생선 2~3kg 등이 배급되는데, 가족수나 직장별로 차등이 두어지며 당시의 공급 사정에 따라 증감되는 것이 보통이다. 중앙 공급 대상인 특권층에게는 일반 명절마다 육류, 생선류의 특별 배급 외에 백미 5~7kg, 사과 등 과일류 1~2상자, 설탕과 과자류 등이 각각 500g 특별 배급된다.

이와 같이 명절 특배에서도 특권층에게만 충분한 특별 배급을 주어 명절을 즐기도록 하는 불평등한 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3) 의생활

북한의 중공업 우선 정책은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의류 수급이 결정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로서는 배급받는 작업복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의류를 구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다.

북한은 처음부터 '천리마시대와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의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의복을 획일화시켜 왔다. 이것은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위한 것인 동시에 의류의 부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평양 방직 공장이 가동을 시작한 1960년까지 '의류점수제'를 통해 의류의 구입을 철저히 통제했으므로⁴⁰⁾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다가 1960년대 말부터는 의복을 '발전하는 현실생활'에 맞게 개선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의복의 유행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에는 김일성의 교시로 도시 주변의 주민들에게 유색의 복장을 착용하도록 장려한 바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의류에 있어서의 다양화가 눈에 띄게 장려되었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사람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옷의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성복전시회’, ‘옷 전시회’, ‘옷 품평회’ 등도 개최하고 있으며, 외국으로부터 직물류를 수입하여 가공 수출하고 있어 옷의 형태, 색상, 무늬 등이 다양해져 가고 있다.

특히, 여성 의상에서의 화려한 색상과 대담한 노출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경쾌하고 아름다운 옷차림이 업무능률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등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의상도 점진적으로 변화,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평양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신사복과 양장 입기를 권장하고 있고, 여자들에 대해서는 굽 높은 구두 신기까지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통치마에 저고리 차림의 한복을 입은 여성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도시 지역을 벗어나면 아직도 인민복이나 한복 차림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의류는 엄격한 배급제로 공급되고 있다. 옷감의 종류, 디자인, 품질 등이 모두 국가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의 개성을 살린대거나, 유행을 살린대거나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최근 북한 주민의 옷차림이 다양하고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것도 우리 나라와 같이 디자인, 색상, 품질 등이 다변화된 것이 아니라 딱딱한 디자인이 줄어들고 색상이 밝은 색으로 다양해졌다는 정도이다.

북한의 의류 공급은 신분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다. 계층에 따라 중앙공급 대상과 일반 공급 대상으로 구분되어 배급량과 종류에 차이를 둔다. 중앙 공급 대상에게는 급수에 따라 1년에 몇 벌씩 양복 또는 복지가 무료로 공급되며, 질에 있어서도 최고급 모직물인 것에 비해 하위직 간부는 반모직, 대마직 등으로 차등이 두어지고 있다(표 9) 참조).

예술가, 기자, 교원 등 특수층에 대해서도 의류 특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당·정무원 산하 간부들에게는 신사복을, 판문점 출입 기자들에 대해서는 상급(相級; 장관급)에 해당하는 의류를 특배하고 있다. 이외는 달리 일반 공급 대상자에게는 1년에 한 벌 정도 ‘로사용물자’라고 하는 질이 낮은 광목, 포플린, 스포 직물 등이 배급된다. 노동자에게는 작업복을

1년에 1~2회 1착씩 지급하고, 사무원, 농민과 그 부양 가족들에게는 ‘인민반’을 통해 유상 공급하고 있다(〈표 10〉 참조).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작업복은 원칙적으로 무상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명목으로 임금에서 그 비용을 차감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신분에 따라 외투, 모자, 구두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복을 보고서 그 사람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보통의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을 무상 또는 염가로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스스로의 개인적·사회적 만족을 위한 의생활은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주생활

북한은 6·25 동란 중 약 60만 호의 주택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주택난에 직면하자 휴전 후부터 주택 건설에 치중했다. 휴전 직후에는 파괴된 도시의 복구 건설을 위해 평양을 비롯한 도시 건설에 주력하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촌 주택 건설을 본격화하였지만 주택 건설 목표는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제 19조와 20조의 규정에 의해 모든 건축물이 국유 또는 집단적 소유로 되어 있다. 각 개인은 그의 지위와 그가 속한 계층에 따라 규격화되어 있는 각 등급의 독립 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임대료를 지불한다. 개인의 주택 소유는 물론이고 스스로 주택을 짓는 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동유럽 국가들은 개인의 주택 건축,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⁴¹⁾ 국유 주택은 북한과 비슷하게 노동량, 평등 원칙, 특권 등을 기초로 배분되지만 사유 주택은 자유롭게 거래된다.⁴²⁾ 이것을 고려할 때 북한의 주택 제도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훨씬 엄격하고 개인의 선호가 반영될 여지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마다의 독립적 부대 시설은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주거 생활 공간이 전반적으로 협소하고 주택의 내·외장도 거의 획일화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기호나 적성을 반영한 주택에서 생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 주택 양식의 특징은 일부 특권층을 위한 주택을 제외하고는 집단주의적 주거 방식에 따라 공영 주택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족적양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으라'는 당의 시책에 따라 감시, 통제, 상호 견제, 노력 동원의 편이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의 방침에 따라 도시에서는 고층 아파트화, 농촌에서는 연립 주택(2층 2~3세대용)의 조립식 공법을 도입하여 건축하는 등 주택의 획일화 정책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 환경을 집단화하였다. <표 11>에는 각 신분에 따른 주택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데 공영 주택 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주택 보급률은 약 65%⁴³⁾로서 남한의 69.2%(1987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1세대용 아파트에 2세대가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노동자가 다른 직장으로 배치되면 처음 2~3개월 동안은 남의 집 방 1칸에 임시로 기거한다든지, 신혼 부부도 주택 배정을 받지 못해 2~3년간 남자는 합숙소에서, 여자는 친정집에서 별거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은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과제주택'이란 것을 내놓기도 했는데,⁴⁴⁾ 이것은 각 공장들이 스스로 자재를 마련하고 집터도 스스로 닦고 건축도 스스로 해서 공장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집들을 자체적으로 짓는 것으로 당에서 과제를 주어서 스스로 짓는다고 하여 '과제주택'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하루 종일 작업에 지친 노동자들이 일과 후 집을 짓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어설피게나마 지어 놓으면 당의 소유로 넘어가기 때문에 집을 짓는 데 대한 의욕이 별로 없는 형편이다.

농촌의 주택 문제는 도시에 비해 더 열악하다. 북한에서는 철로변이나 도로변에 있는 기존의 농촌 주택에 기와로 지붕을 이어서 이것을 '농촌문화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이들은 흙벽돌을 쌓고 외부에 흰 석회칠을 한 것들이다. 그러나 도로나 철도에서 떨어진 지역에서는 아직도 초가에서 생활하고 있다.

북한의 농촌 주택은 1956년에서 1959년까지 시범적으로 협동 농장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건설하였으나, 이는 선전을 위한 조치에 불과하였다. 이후 1962년 각 군마다 '농촌건설대'가 조직되어 농촌 주택 건설이 본격

도에 올랐는데, 이 때 각 협동 농장에서는 총수입금 중 10~25%의 건설 기금을 공제당했다. 농촌 주택 건설은 건설 자재를 지방별로 자체 해결하라는 원칙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게 되었다. 농촌 문화 주택은 협동 소유 또는 국가 소유로 되어 있지만 도시 아파트와는 달리 입주자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주거 이전의 결정권이 각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며, 주택의 관리 및 입주 배정권도 시·도 인민 위원회의 '도시경영사업소'에서 장악하고 있다. 노동당에서 일방적으로 직장 부근을 중심으로 이사 절차와 입주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고 있어서 개인적 사정에 의한 주거지의 이전은 불가능하다. 주거지를 임의로 이동했을 경우, 주민 등록을 할 수 없고 주민 등록이 없으면 어디에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며, 따라서 식량 배급도 받지 못한다.

친척이나 친지의 집으로 이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주하고 있다가 '사회안전주재원'에게 발각되면 '정치적불순분자'라는 의심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방을 빌려 준 사람까지 책임 추궁을 받는다.

그러나 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고향을 버리고 타지역으로 강제 이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휴전선 일대의 주민들 대다수가 휴전 후 1~2년 동안 압록강과 두만강 근처의 산간 벽촌으로 강제 이주당한 것이 그 예이다. 또 정치적 성향이 믿을 수 없다고 인정되면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추방되어 강제 이주당하게 된다.

(5) 직장 생활 및 여가

사회주의 경제의 장점 중 하나는 완전 고용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 당국이 노동력 흡수 계획에 따라 모든 노동자를 일정한 직업에 배정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볼 때 취업의 기회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반면에 남한은 1981년 현재 3.1%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어 있어서 개인의 의사, 능력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을 마친 사람은 당에 의해 직장 배치를 받게 되는데, 어떤 부문에

취업하던 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노동자는 행정 위원회의 노동부를 통하여, 사무원 및 간부 직원은 간부부를 통하여 배치장이나 소개장을 발부받아야만 해당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따라서 졸업을 앞둔 사람들은 졸업식 몇달 전에 미리 각종의 서류를 노동부에 제출한다. 이 서류에는 이력서, 자서전(자기 소개서), 신원 진술서(친인척의 인적 사항을 기록한 서류), 취직 희망서(제5지망까지 기록), 신원 보증서, 보건 진단서 등 자신이 작성하는 것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평정서가 있다. 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여기에 '사로칭'의 평정서가 추가된다.

시·군 인민 위원회 노동부는 이러한 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도 인민 위원회 노동국에서 배정된 공장, 광산, 농어촌 등의 배치 인원에 맞추어 인력을 안배한다. 인사 행정에 있어서는 정치적 신임도가 최우선의 기준으로 작용하며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그 다음으로 참작된다.

배정받은 직장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군 인민 위원회 노동부의 소개장이나 배치장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며 직장이 없으면 당장 식량 배급을 탈 수 없으므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다.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을 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들의 출근 시간은 보통 오전 8시이다. 정오까지 오전 노동이 행해지는데 50분 노동에 10분 휴식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점심 시간은 1시간 30분 내지 2시간으로 여유있게 주어지는데 과밥(도시락)을 먹은 뒤 남은 시간은 오침 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⁴⁵⁾ 낮잠을 위한 장소는 따로 없으며 회의실의 긴 의자, 책상, 숙직실 등을 이용하여 낮잠을 잔다. 이렇게 오침 시간을 주는 것은 야근 또는 일과 후의 각종 회의, 학습회 등에 효과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이다.

오후 노동도 오전 노동과 같이 50분 노동에 10분 휴식으로 되어 있으며 오후 6시에 기본 노동이 끝난다. 중노동인 경우는 3교대 근무를 하는데 각각 오전 8시, 오후 4시, 자정에 작업이 시작되며, 작업이 끝나면 다음 번 교대자에게 인계한다.

북한의 헌법 및 노동 법령에 의하면 모든 국민들에게 8시간 노동제가 보장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8시간 노동만으로 일과를 마치는 일이 없

고 '각종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명목으로 거의 매일 과외 노동에 묶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시간의 근무 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다.

하루 노동이 끝나면 한 시간 가량 '작업반별(또는 직장별) 작업총화'가 있고 그것이 끝나면 두 시간 동안 각종 회의나 학습이 진행된다. 노동자, 사무원(간부 포함), 청소년, 학생들에 의해 진행되는 학습회로는 김일성주의 연구반 학습회, 당 역사 연구반 학습회, 당 정책 학습회, 회상기 학습회, 김일성의 교시와 약전(略傳) 학습회, 김정일 덕성 학습회, 신문 독보회, 시사 토론회 및 기타 수시로 제기되는 당 지시 학습회 등이 있다. 이렇게 북한은 수많은 회의, 학습을 통하여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공산주의 교양을 쌓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작업과 학습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여가를 위해 남겨지는 시간은 대단히 적다. 게다가 그 많지 않은 시간마저도 개인적인 여가 생활보다는 집단적 여가 활동 위주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그런대로 자주 누리는 여가 활동은 영화, 연극 관람이다. 각 공장, 기업소와 협동 농장에서는 월 1~2회씩 의무적으로 단체 영화 관람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에는 상설 영화관이 있어 개별적인 관람을 하는 수도 있으나, 이것 역시 구역 당의 선전 계획에 따라 단체 관람을 하는 수가 많다.

이러한 활동은 휴식과 오락이라는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은 영화, 연극을 공산주의 선전 교양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화가 김일성 우상화, 당 정책의 선전, 대중 동원 등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노동자, 사무원, 학생, 농장원들은 영화 관람을 한 후 반드시 감상 모임을 열어 그 영화에서 자기가 받은 사상적인 영향, 감동 등을 토론하고 자기 책임량 수행에 더욱 분발하도록 결의케 하고 있다.

집체적으로 행해지는 노래 보급 시간도 있는데 이 때의 노래는 대부분 혁명 가요를 비롯하여 당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에 국한된다. 노래를 통해서도 주민들의 정치 사상 교양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간혹 등산이 있기는 하나 이것도 학교, 공장, 직장 등에서 노동당의 승인을 얻어 단체로 등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치 사상적인 목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코 등반이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 적위대, 붉은 청년 근

위대, 소년단 등에서 야외 훈련의 일환으로 백두산, 포태산 등에 등산해서 회상기 학습 등을 겸한 체력 단련, 사상 단련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것은 등산이라기보다 오히려 행군이라고 볼 수 있다.

퇴근 후 집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이나 오락을 즐길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 가족 성원들이 각각 노동당, 여맹원, 사로청, 소년단 등 조직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정도 조직 생활의 연장이 되고 말아 흔히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화투, 율놀이 등은 오래 전에 없어졌다.

오락 시설 자체가 별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탁구대, 장기관 정도가 직장이나 민주 선전실 등에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북한의 여가 활동이 당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대부분 집체적인 활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가 생활 시간까지도 김일성 우상화 및 제도 순응을 위한 교육에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4. 결 어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렇듯이 북한도 중공업과 군수 산업에 경제 정책의 우선권을 두었기 때문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공업, 농업 등이 상대적으로 뒤쳐졌다. 그 결과 주민의 일상 생활에서는 소비재의 '부족(shortage)'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필요한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에 기인하며 2차적으로는 경직적인 공급 체계 및 특권층·주요 도시에 대한 우선 공급 정책 때문에 원활한 공급이 지장 받는 데에 기인한다.

이러한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론적으로 볼 때 부족의 해결법으로는 부족 재화의 가격을 올려 시장의 조정 기능에 의존하는 방법과, 가격은 그대로 낮은 수준에 묶어 두고 인위적인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회주의 경제라면 당연히 후자쪽을 택하게 된다. 후자는 다시 줄서기(queueing), 즉 선착순에 의존하는 방법과 배급제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동유럽에서는 주로 전자의 방법을 많이 쓰는데 비해 북한에서는 후자가 강력하게 시행된다.

북한의 배급은 의식주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대상자의 신분, 계층이고 그 다음으로 노동량, 연령 등이 참작된다. 이 배급제는 중앙 공급 대상이나 일반 공급 대상이나에 따라 배급 물품의 양·질면에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이념과는 달리 사람들의 불평등을 강조하고 불만을 누적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배급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이점도 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북한 주민의 경제 생활이 대단히 통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배급제 자체가 원래 통제적 성격이 강한 것이지만 북한의 경우, 정도가 더욱 심해서 최소한의 기본 생활 이외에는 주민들이 자신의 선호를 반영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제한되어 있다. 특히 양권에 의한 식생활 통제, 거주 이전에 대한 완전 통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에서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신음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다. 비록 그들의 생활 수준이 남한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민 생활이 비교적 평균화되어 있다. 생활 자체가 당국의 계획과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므로 생활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폐쇄적 사회라는 특성 때문에 특별히 비교할 만한 대상도 없으므로 소비 생활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욕구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올 수 있었다. 그러나 동유럽 및 소련, 그리고 중국의 개혁 바람이 북한에도 불어올 때 북한 주민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이에 따른 당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주민 생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관심 이상을 보이지 않았던 북한 사회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 중공업, 군수 산업 위주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선회시킬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까지의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인지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남한의 경우, 그 동안의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요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에서는 생활 수준을 높이자는 요구가 강해지는 등 자본주의가 직면한 문제점과 사회주의가 직면한 문제점이 한반도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중요 과제라 하겠다.

■ 참고 문헌

- 강광식 편, 〈북한의 실태 — 분야별 경험자료 및 예비적 고찰〉, 정신 문화 연구원, 1987.
- 경제 기획원 조사 통계국, 〈한국의 사회 지표〉, 1988.
- _____, 〈주요 경제 지표〉, 1988.
- 국토 통일원, 〈북한 경제 통계집(1946~1985)〉, 1986.
- _____, 〈남북한 비교 총서〉, 1988.
- _____, 〈남북한 경제 현황 비교〉, 1988.
- _____, 〈북한 경제 개관〉, 1988.
- 국회 도서관, 〈북한 경제 관계 보도집(1979년)〉, 1980.
- 김광수, “북한 경제의 전망”, 북한 연구소, 〈북한〉 1989년 2월호.
- 김학준 외 〈남북의 생활상〉, 박영사, 1986.
-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주요 통계〉, 1989.
- 동아일보사, 〈원자료로 본 북한(1945~1988)〉, 1989.
- 북한대사전 편찬 위원회, 〈북한대사전〉, 공산권 문제 연구소, 1974.
- 북한 연구소, 〈북한 총람〉, 1983.
- _____, 북한총람(1983년~1985년), 1986.
- _____, 〈북한〉 1988년 10월호.
- _____, 〈북한〉 1989년 2월호.
- 연하청, 〈북한의 경제 정책과 운용〉, 한국 개발 연구원(연구 총서 57), 1986.
- 이상협, “한국의 직무 구조와 직급간 임금 격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학위 논문, 1988.
- 이항구, “분단 44년”, 〈북한의 현실〉, 신태양사, 1988.
- 자유평론사, 〈'87 남북한 비교 분석〉, 1987.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1986년도 식품 수급표〉, 1987.
- Brown, Alan A. and Egon Neuberger, “Basic Features of a Centrally Planned Economy”, p.100; in Morris Bornstein eds.,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Models and Cases*, 1968.
- Daniel. Zsuzsa “The Effect of Housing Allocation on Social Inequality in

Hungary”,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9, 1985, pp.391-409.

Okonogi, Masao

North Korea at the Crossroads, The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각 주

- 1) 국토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 p.7.
- 2) Brown and Neuberger, 1968, p.100.
- 3) 국토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 p.8.
- 4) 국토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 pp.8-9 및 연하청, <북한의 경제 정책과 운용>, 한국 개발 연구원, 1986, p.17 참조.
- 5) 국토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 p.8.
- 6) 국토 통일원, <남북한 경제 현황 비교>, 1988, p.28.
- 7) 국토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 p.9.
- 8) 국토 통일원, <남북한 경제 현황 비교>, 1988. p.32.
- 9) 국토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 p.109.
- 10) 7개년 계획의 3년 연장기(1968-1970) 및 6개년 계획 후의 완충기(1977) 제외.
- 11) 국토 통일원, <남북한 비교 총서>, 1988. p.57.
- 12) 북한 연구소, <북한 총람>, 1983. p.1025.
- 13) 조선중앙통신, 1979년 1월 1일. (국회 도서관, <북한 경제 관계 보도집(1979년)>, 1980, p.34).
- 14) 북한 연구소, <북한 총람>, 1983, p.1025.
- 15) 북한 연구소, <북한 총람(1983-1985)>, 1986. p.74.
- 16) '로동자구'는 공장, 기업소 인근에 있는 노동자 부락을 의미한다. 작업 동원의 용이성, 집단 생활의 거점 확보, 과외 시간 통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북한 대사전>, p.329.
- 17) 북한 연구소, <북한 총람(1983-1985)>, 1986. p.74.
- 18) 북한 연구소, <북한 총람(1983-1985)>, 1986, pp.74-75.
- 19) 김광수, "북한 경제의 전망", 북한 연구소, <북한> 1989년 2월호, p.40.
- 20) 국토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 p.61.
- 21) 북한 연구소, <북한 총람>, 1983, p.824.
- 22) 북한 연구소, <북한 총람>, 1983, p.825.
- 23) 국토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 p.35.
- 24) 위의 책.
- 25) 1979년의 경우, 북한의 백미 수출액은 약 5,040만 달러에 이르러 주요 수출 품목 중 6위 전체 수출액의 4%를 차지했다(북한 연구소, <북한 총람>, 1983. p.689와 p.691에서 계산).
- 26) 북한도 소맥 등을 수입하고 있으나 그 양이 많지 않아 계산에서 제외했다.
- 27) 국토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 pp.35-36 및 Okonogi Masao, *North Korea at the Crossroads*, The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88, p.61

참조.

- 28) 국토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 p.37.
- 29) 한국 농촌 개발 연구원, 〈1986년도 식품 수급표〉, 1987, p.14.
- 30) 국토 통일원, 〈남북한 경제 현황 비교〉, 1988, p.80. 북한은 그들의 1986년 1인당 국민 소득이 2,400 달러라고 발표했다(방예주, 〈조선개관〉, 평양, 외국문출판사, 1987; 북한 연구소, 〈북한〉 1988년 10월호, p.199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 수치는 북한의 명목 환율을 토대로 계산한 것으로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 통일원 추정치(1986년)는 860 달러). 참고로 일본의 Teruo Komaki는 무역액과 무역 의존도를 이용해 GNP를 역산하여 1985년 북한의 1인당 GNP가 1,000 달러를 약간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Okonogi, 앞의 책), p.47).
- 31) 이것은 국토 통일원에서 계산한 방법이다. 국토 통일원, 〈남북한 경제 현황 비교〉, pp.79~80 참조.
- 32) 북한은 국토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 p.109, 한국은 경제 기획원, 〈주요 경제 지표〉, 1988,
- 33) 북한 연구소, 〈북한 총람〉, 1983, p.1026.
- 34) 북한 연구소, 〈북한 총람〉, 1983, p.1027.
- 35) 국토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 p.117.
- 36) 이것은 협동 농장에서 일한 것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 3~4명의 노력 평가조에 서 채점한다. 1년 동안의 의무적 책임량은 350공수 이상이다. 북한 연구소, 〈북한 총람〉, 1983, p.1027 참조.
- 37) 북한 연구소, 〈북한 총람〉, 1983, p.1028.
- 38) 1965년에서 1987년 사이에 1일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5g에서 9.9g으로, 1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5.2g에서 24.3g으로, 연간 달걀 소비량은 1650g에서 8590g으로 증가했다(〈한국의 사회 지표〉, p.205).
- 39) 김학준 외, 〈남북의 생활상〉, 1986, p.146.
- 40) 극심한 의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 사람당 연간 의류 소비량을 규정하고 의류에 따라 점수를 매겨 그 점수의 범위 내에서만 의류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 41) 헝가리를 예로 들면 전체 주택의 74.5%가 사유, 25.5%가 국유였다(1980년 센서스 자료). Daniel, Zsuzsa "The Effect of Housing Allocation on Social Inequality in Hungary",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9, 1985, p.392 참조.
- 42) Daniel, 앞의 책, pp.392~395.
- 43) 북한 연구소, 〈북한 총람〉, 1983, p.1043.
- 44) 강광식, 〈북한의 실태 — 분야별 경험 자료 및 예비적 고찰〉, 정신 문화 연구원, 1987, p.83.
- 45) 이항구, 〈분단 44년, 북한의 현실〉, 신태양사, 1988, p.175.

〈표 1〉 주요 경공업 시설 능력

	북 한	남 한
TV 수상기	24만 대(0.0115 대)	1,250만 대(0.30 대)
냉 장 고	12만 6,000대(0.006 대)	350만 대(0.08대)
섬 유	12.0만 톤(5.8 kg)	135만 톤(32 kg)
직 물	6억 5,000만m(31.4 m)	70억m(166.4 m)
신 발	6,000만 족(2.90족)	4억 7,000만 족(11.2족)
손 목 시 계	10만 개(0.005개)	1,200만 개(0.29개)

(1987년 현재, 괄호 안은 주민 1인당 생산 시설 능력)

* 자료 : 국토 통일원, 〈남북한 경제 현황 비교〉, p. 68.

〈표 2〉 지방 산업 공장 분류

	식료품	일용품	섬유류	기타	계
공장수	534	1,050	647	1,074	3,305
(구성비 : %)	(16.2)	(31.7)	(19.6)	(32.0)	(100)

* 자료 : 북한 연구소, 〈북한 총람〉, p. 833.

〈표 3〉 곡물 생산량

		북 한				남 한	
		합계	쌀	옥수수	기타	합계	쌀(수입포함)
1986	총 량	482.5	200.9	237.1	44.5	677.4	560.7 (1, 520.8)
	1인당 소비 가능량	253.1	105.4	124.4		164.5	136.1 (369)
1987	총 량	495.2	203.4	240.9	50.9	668.7	549.3 (1, 689.9)
	1인당 소비 가능량	253.9	104.3	123.5		160.8	132.1 (406)

(북한은 국토 통일원 평가치. 단위 만톤(총량), kg(1인당))

* 자료 : 국토 통일원, 〈남북한 경제 현황 비교〉, 1988.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주요 통계〉, 1989.

〈표 4〉

북한의 임금

(단위 : 북한 원)

직 종 별		임 금	비 고
사 무 원	부 장 급	300~350	당 정부 장급 이상, 특급 기업소 지배인 등
	지 방 단 위 간 부	100~150	도 간부 및 군 단위 책임자
	일 반 사 무 원	70	
기 술 자	책 임 자 급	150~290	1~2급 기업소·공장 지배인 및 기사장
	5 등 급 기 술 자	75~78	
노 동 자	중 노 동 자	130	광부, 제철, 제련 공업 종사자
	경 노 동 자	90	일반 기계 운전사
	기 타	60~80	일반 경노동자
교 대 원	대 학	200~250	
	일 반	80	
군 인 장 교	장 성 급	250~490	
	영 관 급	120~215	
	위 관 급	84~110	
기 타	의 사	120~250	* '평양산원'의 경우
	배 우	200~300	인민 배우, 공훈 배우 등

* 자료 : 국토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 p. 116.

〈표 5〉

남한의 직급간 임금 격차(제조업 평균)

직 급		임 금
생 산 직	중 졸	1,983(100)
	고 졸	2,199(110.9)
사 무 직	고 졸	2,173(109.6)
	대 졸	3,063(154.5)
	대 리	4,236(213.6)
	과 장	5,081(256.2)
	차 장	6,098(307.5)
	부 장	7,032(354.6)

(단위는 백 원, 괄호 안은 생산직 중졸을 100으로 놓았을 때의 상대 수치)

* 자료 : 이상협 "한국의 직무 구조와 직급간 임금 격차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학위 논문), 1988, p. 32.

〈표 6〉

식량 배급 기준량

(단위 : g/1인/1일)

구 분	배 급 량	혼식 비율 (백미 : 잡곡)
당 및 정권 기관 간부	700 g	10 : 0
특수 군인(경보병)	800 g	7 : 3
군 인	700 g	2 : 8
중노동자	800 g	2 : 8
일반 노동자 · 사무원	600 g	2 : 8
대 학생	600 g	2 : 8
고등 중학생	500 g	2 : 8
인민 학생	400 g	2 : 8
유치원 이하 아동	300~100 g	2 : 8
부양 가족 등 무직자	300 g	2 : 8

* 자료 : 국토 통일원, 〈북한 총람(1983~1985)〉, 1986, p. 77.

〈표 7〉

1일 1인당 쌀 소비량(남한)

	농 가	비 농 가
1971년	322.5	406.8
1987년	452.1	320.5

* 자료 : 경제 기획원, 〈한국의 사회 지표〉, 1988, p. 205.

〈표 8〉

기본 부식 배급량(유상; 1세대 1개월, 단위 kg)

품 목	배 급 량
된 장	4
간 장	6
고 추 장	3
소 금	5
식 용 유	0.5

* 자료 : 북한 연구소, 〈북한 총람〉, 1983, p. 1027.

〈표 9〉 북한 '중양공급대상'에 대한 의류 공급

호수	간부급	양복지	내의류	구두	기타
1	정치 위원 중양 부장(장관급)	하·동북 1 년에 한 번 씩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승용차
2	중양 부부장 (차관급) 도급 책임자 대학 총장	" (질의 차이)	"	"	
3	중양 국장 도급 부책임자 시군 책임자 대학 총장	"	가족까지 필요량 공 급	1년 1회	
4	중양 지도원 도 부 장	"	"	1년 1회	
5	도 부부장 시·군 부장	하북지 : 연1회 동북지 : 2년 1회	없음	없음	

* 자료 : 북한 연구소, 〈북한 총담〉, 1983, p.1036.

〈표 10〉 의류 공급 현황

대 상	횟 수	품목 및 수량	비 고
노동자	연1~2회	작업복 1착	무상
학생	연 2회	교복 "	염가
기사, 교원	3~4년 1회	양복지 "	염가
4호대상이상	2년 1회	" "	반액

※ 4호 대상 : 시·군 지역의 당 비서, 시·군 인민위 부위원장, 2급 기업소 이상 당 부 비서, 지배인, 기사장급 등.

* 자료 : 국토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 p.117.

〈표 11〉 북한의 주택 사정

구분	주택형	가구 구조	입주 대상자
특호	독립 고급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식 단층 또는 2층 주택 • 목욕탕·수세식 변소 • 정원 • 냉온방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부부장 이상 • 정무원 부부장 이상 • 인민군 소장급 이상
4호	신고층형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2개 이상 • 목욕탕·수세식 변소 • 온방 시설 • 베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과장급 이상 • 인민군 대좌 • 정무원 국장급 이상 • 문예인 간부 • 대학 교수 • 기업소 부장
3호	중급 단독 주택 및 신형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2개 • 부엌, 창고 • 독립 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기관 지도원 • 도 단위 부부장급 • 기업소 부장
2호	일반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1~2개, 마루방 1, 부엌 • 독립 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 학교·고등 중학교 교장 • 일반 노동자·사무원
1호	집단 공동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1~2개, 부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단 노동자 및 사무원
	농촌 문화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층, 2~3층 연립 주택 • 방 2, 부엌,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 농장원
	구 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2~3개의 기존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시민 및 오지 농민

* 자료 : 국토 통일원, 〈북한 경제 개관〉, 1988, p.117.

4.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북한의 대응

하용출(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1. 문제 제기

소련에서 페레스트로이카가 시작된 지 4년여가 흘렀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많은 변화가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논문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사회주의 국가, 특히 북한에 미치는 영향의 의미를 추출하고자 한다. 최근까지 소련이 추진해 온 각종 개혁 정책들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무엇이며 북한이 안고 있는 딜레마의 성격은 어떠한가, 그리고 북한을 가장 어렵게 하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측면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다.

2. 페레스트로이카와 개혁 정책

페레스트로이카는 스탈린주의로 해석되어 왔던 소련식 사회주의의 의미를 재규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스탈린주의는 사회주의 체제의 원형을 세운 한편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시켰으며, 이에 페레스트로이카는 스탈린주의에 중식을 고하고, 정치·경제 체제, 외교 정책 등의 제부문에서 철저한 쇄신을 이룩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체

제하에서 이들 각 부문은 서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음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 개혁은 이데올로기의 재정립, 당의 재편성, 탈관료주의화와 분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이데올로기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변화를 추동하며, 변화의 최종 목적을 설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현단계 소련의 국내외적 현실을 이해하는 데에 계급적 접근은 불충분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계급 투쟁보다는 생산력의 향상과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관계의 정립에 주요한 관심이 두어져 있으며,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계급 투쟁보다 생존과 보편적인 인간주의적 목표의 가치가 한층 강조되고 있는 국제 관계 영역에서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이처럼 변화된 인식에 기초하여 병화를 주도하는 당의 조직과 구성, 역할을 개편·재규정했으며, 스탈린 체제하에서 침체되었던 사회 부문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는 민주화(demokratiia)와 개방(glasnost'), 사회주의적 다원주의의 인정 등을 통해 공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자극하고 그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확대함으로써 당과 국가의 관료주의를 타파하려고 한다. 소련의 목적은 가까운 장래에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있지 않고, 왜곡된 사회주의를 바로잡고 사회주의를 한층 강화·발전시키는 데에 있다.

다음으로 당의 구성과 기구, 역할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당은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당의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고르바초프가 권력을 잡은 이후 여러 차례 인사 교체가 행해졌다. 1986년 제 27차 당 대회가 끝난 이후 중앙 위원회 정회원의 41%가 교체되었으며, 4월 25일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중앙 위원회와 중앙 회계 위원회 위원 중 110명의 사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브레즈네프 시대의 정치국 위원들은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체되었다. 좀더 하위의 레벨에서는 1986년 6월 제 19차 당 대회에서 인사 교체가 이루어졌다. 제 19차 당 대회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민주적 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결의가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이 중 중요한 것으로는 복수 후보제와 비밀 투표제

의 채택, 고위 공직자의 임기를 5년 중임으로 제한한 것, 공직자에 대한 소환권 인정, 법률과 결정의 채택에서 자유 토론을 거치도록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당 대회에서 당 기구의 규모를 축소하고, 경제 부문의 당 기구를 폐지하며, 당 기구의 활동을 이데올로기, 선전부문과 조직, 인사 부문에 집중할 것을 제한했는데, 이 중 당 기구의 축소는 이미 수행되고 있다.

소비에트 체제의 개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변화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소비에트는 원래 입법·행정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스탈린 시대 이후 오랫동안 중앙 정부의 결정을 단순히 전달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이에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비에트에 대한 당의 독단적인 간섭과 강제를 방지하고 관료를 감독할 수 있도록 사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소비에트의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 지방의 수준에서는, 경제적 자원과 기업에 대한 지방 소비에트들의 권리가 크게 신장될 것이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립이 중앙 정부 혹은 공화국 정부로부터 지방 소비에트에게 주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페레스트로이카의 주요 내용으로 탈집중화의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소련의 연방주의 구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경제적 자생성 확보와 아울러 정치적 탈집중화는 발트 3국에서 억압된 민족주의 감정이 표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련의 연방 체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구성 공화국들의 정치·경제·지리적 상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최적의 탈집중화를 도출해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경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회주의하의 소유권, 계획과 그와 관련된 경영 구조의 역할, 유인 체계(誘引體系)와 사회주의적 시장의 문제 등이 주요한 이론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소련 경제의 기본 구조는 스탈린 시대의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중에 형성되었고, 브레즈네프 시기까지 거의 변화되지 않았다. 스탈린식의 경영 구조는 고도의 중앙 집중식 계획 경제 체제로 특징지어지며, 모든 경제적 결정은 중앙에서 이루어져서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까지 첨부된 채 지방으로 하달되었다. 따라서 지방과 기업의 특성은 무시되었고, 질적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목표량 달성에 우선 순위가 주어졌다. 이것이 사회주의의 발전에 끼친 중요한 결과들 중의 하나가 엄격한 국유화와 계획 체제가 사회주의의 결정적 본질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었다.

유인 체계에 대해 말하자면, 과도한 집단주의가 작업을 하는 데서 개인의 창의성을 무시해 버렸고, 직업 보장, 교육, 기타 사회 복지 방면에서의 지나친 평등주의가 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존을 심화시켰다. 사람들은 더욱더 정치적으로 무기력해져 갔으며, 타인의 노동이나 사회, 국가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스탈린식 계획 경제 체제가 지니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두 가지 길이 모색되고 있는데, 첫째는 중앙 계획의 영역을 축소하는 것이고, 둘째는 비국가 경제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하부 기관에 대한 중앙 권력의 탈집중화와 국가 기업의 자율성의 증대를 포함하며, 두번째 방법은, 시장의 도입, 가격, 재정, 과세 등 그와 관련된 정밀 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중앙 계획의 역할은 과학, 기술, 내부 구조(infrastructure), 환경 보호 등과, 사회 보장, 재정, 과세, 독점의 규제 등에 관련된 과제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부 기관에 대한 중앙 권력의 탈집중화와 관련하여 '공화국의 경제 자립 경영'이라는 제하(題下)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이 토론은 경제 활동의 이전, 연방·공화국간 예산 관계의 재편, 경제 계획의 재편 등을 주요 주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공화국의 경제 계획에 더 많은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전연방 차원의 계획에서 공화국의 계획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연방이 공화국들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권을 보유한다.

국가 기업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1987년 7월에 국가 기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계획과 경제 책임에 대한 기업의 권리를 신장시켰다. 대출, 재정, 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기관의 '명령'을 약화시키기 위해 법률이 다시 개정되었다.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 소유권을 분산시키는 방편으로서 협동 조합과 임

대차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협동 조합은 1988년에 공식적으로 부활되었으며, 소련의 국민 총생산에 기여하는 비중은 겨우 1%에 불과하다. 이런 사실은 소련 경제가 아직도 전반적으로 계획 체제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1989년 8월 최고 소비에트 제1차 회의는 농업·산업 임대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유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속에서 다양한 비국가 경제 단위들의 경제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과거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소유물, 협동 조합 혹은 여타의 기업, 조직뿐만 아니라 토지와 천연 자원도 임대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임대차의 주체는 국가, 공화국, 지방 소비에트, 국영 농장, 집단 농장, 협동 조합, 개인 모두를 포함한다. 임차의 연한은 50년까지 가능하며, 내부 임차와 가족·개인 임차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자는 집단 농장이나 국영 농장이 그 하위 집단과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후자는 집단 농장이나 국영 농장과 노동 관계를 맺지 않은 개인이 토지나 다른 재산을 임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대차와 관련하여 1989년 1월,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Gosagrogram을 폐지하고 그 대신 국가 식량 구매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가격 책정과 과세에 관하여 정부는 탈집중화의 추진을 약속하였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매우 완만하다. 공업 가격 체계의 변화는 1990년 1월로, 농업 가격 체계의 변화는 1991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과 자세한 가격 체계에 대하여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중요한 과제는 공업·도시 부문에 급격한 가격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가격 조정을 통해 국가 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페레스트로이카의 실행은 어려운 것이다. 한편으로는 관료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1조 루블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는 누적된 재정 적자와 이에 기인하는 인플레이션의 압력, 그리고 만성적인 소비재 부족으로 인한 대중들의 불만을 해소할 것이 요구된다.

3. 페레스트로이카와 외교 정책

국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요구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고르바초프의 외교 정책에서의 새로운 사고는 외교 정책 선언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 변화의 요지는 계급 투쟁의 세계관으로부터 보편성·상호 의존과 상호 협력을 강조하는 보편적 이익의 원칙으로의 이행이다. ‘새로운 사고’는 평화 공존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전복을 전제하지 않는다. 그것은 핵의 위협이나 환경 문제같이 일반적으로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의 문제들을 인정하고 있다. 세바르드나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제 관계의 보편적 원칙으로서의 평화 공존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이 계급 투쟁의 특별한 형태라고는 보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선언의 변화에는 국제 문제에 대한 보다 실용주의적인 접근으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변화는 세바르드나제의 다음의 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소련은 국제 관계의 탈이데올로기화와, 외교 정책과 외교로부터 이데올로기적 차이라는 압도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을 지지한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사고는 핵문제나 다른 군사 문제가 일방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공동 안보(common security)의 개념에 찬성하고, 따라서 호혜성과 정치적 수단들을 통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대화의 토대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지지한다. 공격 무기의 감축과 방어 무기에의 의존이 강조되고, 합리적인 충분성의 개념이 상호 보복을 대체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정책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다양성이 공산주의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겪은 독특한 경험들을 서로 존중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동유럽 정책은 뒤르캠의 표현을 빌리자면 기계적 단결(mechanic solidarity)보다는 오히려 유기적 단결(organic solidarity)의 달

성으로의 변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유기적 단결은 경제적 협력의 심화를 강조하는데, 이는 '이해 당사자 원칙(interest party principle)'에 기초하고 있다. 정치 개혁과 경제 개혁을 동시에 시작함으로써 경제 개혁의 부정적인 결과들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구체적인 상호 작용 메커니즘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당 서기장들간의 양자간 및 다자간 회담을 통한 협의, 그리고 다양한 협정의 체결 같은 확대된 접촉 통로가 개설되고 있다. 간단히 말해, 각국의 독특한 상황에 대한 이해에 기초한, 보다 예상 가능하고 제도화된 관계가 사회주의 국제 관계의 변화된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계급에 토대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은 희석화되고 있다.

4. 소련의 대 아시아 정책

북한에 미친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소련의 대 아시아 정책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없을 것이다.

소련의 대 아시아 정책의 변화는 지역 문제를 접근하는 데서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는 전반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소련은 시베리아 개발에 깊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아시아, 특히 동북 아시아는 소련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소련인들은 이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진출이 중요하고도 진지한 것으로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그들은 이중 정책을 취해 왔다. 한편으로 그들은 이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힘의 균형과 군사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상대해야 한다. 동시에 그들은 비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역 국가들과 상대하고 있다.

지역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평화 공세가 취해졌다.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986년 7월에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행한 태평양 지역 평화 회의 구상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신뢰 구축과 병력 감축을 위한 회의의 제안이다. 소련은 그들의 전세계적인 비핵지대화 운동의 일부로서 핵무기의 개발·사용·실험의 금지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에

핵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라론통가 조약(Rarontonga Treaty)을 1986년 12월에 체결했다.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행해진 제안들을 한층 발전·구체화시키면서 고르바초프는 1988년 9월에 자신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이 지역에서 의 다자간 긴장 완화 구도를 제의했다. 소련은 자국과 중국, 일본, 남한, 북한의 해안이 접하는 이 지역에서 해·공군력의 수준을 동결하고 완전히 낮추며 이들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목표로 하여 다자간 원칙 위에서 군사적 대결의 완화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동시에 소련인들은 PEEC에 가입하려는 자신들의 진지한 욕구를 감추지 않았다.

양자간 수준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발전은 블라디보스톡 연설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중·소 관계의 발전이다. 중·소 정상 회담이 가까운 장래에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소련인들은 일본을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한반도 내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24회 올림픽 경기가 서울에서 열렸다는 사실이다. 남북한 양측의 올림픽 공동 참가와 관련하여 몇 년간의 협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측은 자신들의 올림픽 공동 주최 제안이 실현되지 않자 서울측의 초청을 거절했다. 북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경기에 참가했다. 올림픽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들과 남한과의 접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접촉 증가를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헝가리 및 폴란드와 남한 간의 외교 관계의 개설이다.

이러한 모든 국내 정치적·경제적 변화들과 외교 정책의 변화는 북한에게 심각한 결과와 함축을 지니게 될 것이다. 고르바초프 이전 시기에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들간에 친화력을 발견할 수 있는 네 개의 영역이 있었다. 엘리트들, 당 대 당 관계, 사회·경제 질서, 그리고 국제 관계가 그것이다. 소련·북한 관계는 전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질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즉, 그들은 똑같이 고도로 중앙 집중적인 명령 계획 경제 질서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동질감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소련에서 사경제(私經濟)와 분산된 관리 체계의 도입은 그러한 동

일시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정치 질서의 측면에서 당의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당의 역할을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고르바초프의 시도는, 김일성 지배하의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북한에서는 중대한 함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특히 소비에트 기능의 강화는 정치 체제를 보다 제도화된 토대 위에 올려 놓으면서 당과 사회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러한 국내적 변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임시적인 휴전에 기초하고 있는 흐루시초프의 평화 공존 개념에 반대했다. 고르바초프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주의권과 공동 노력할 것을 한결 강조하여 제의하고 있다. 소련 내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고 세계를 공산화하려는 목적은 연기되었거나 장래의 상당한 기간 동안은 포기되었다. 이러한 방향 설정은 아직까지도 한반도에서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강력하게 공언하고 있는 김일성의 그것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관계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입장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덜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각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보다 많은 자율을 강조하고 대내적 정책 결정에서 보다 많은 자율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계급의 이익이 고려되는 것보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시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혁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주의권의 단결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남한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는 헝가리의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따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의 반제 투쟁 노선의 설득력을 훨씬 약화시키고, 그럼으로써 김일성의 정치 전략의 토대를 잠식할 것이다. 동시에 김일성이 주장하듯이 사회주의 국제 관계에서 규범의 변화가 주체의 정확성을 증명했다 할지라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율성 확대는 김일성의 주체를 더 이상 독특하거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만든다. 강대국의 지배주의에 대항하여 주로 방어적인 주체 노선은 대항할 목표를 상실했다.

김일성 지배의 중요한 축에 대한 또 다른 타격은 중·소 관계의 극적인 발전이 될 것이다. 양국간의 갈등을 이용하는 평양의 정책은 평양, 베이

정, 모스크바를 포함하는 북방 3각 관계 논의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김일성이 더 이상 보다 안정적이거나 불모의 지역적 외교 정책 환경을 획득할 수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이 모든 변화들이 남북한간 경제 발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일어나고 있다. 북한의 GNP는 남한의 1/5에 불과하고, 그 격차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1인당 GNP는 남한의 1/3이다. 북한의 성취를 정당하게 인정한다 해도, 북한이 일본이나 남한, 중국과 같은 발전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어 상대적 저발전 의식에 깊이 빠져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 소련은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북한의 고립을 야기시키는 기구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다.

동시에 남한의 국내 정치적 변화와 함께, 남한 정부는 중국과 소련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한은 정상 회담, 불가침 선언, 군사 회담과 같은 북한의 제의를 포함하여 북한에 대한 접근에서 대담한 전환을 가져왔다. 더욱이 노태우 대통령은 UN 연설에서 한반도 주변의 긴장 완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6자 회담을 제의했다. 이 제의는 우연히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고르바초프가 제안한 것과 매우 흡사하다.

이 모든 변화들이 페레스트로이카와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고, 남한에서의 변화들은 북한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모든 변화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는 어떤 종류의 대응이 있었는가? 그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왔는가?

5.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북한의 대응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격리와 선별적인 동일시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북한의 태도를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들이 있다. 소련 공산당 제 27차 대회의 축하 연설에서 북한 총리 강성산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쏘련국가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와 규범이 수립되고있다. 인민경제에서 인간의 역할이 증대하고있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전환이 사회주의경제에서 일어나고있다.……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쏘련공산당 27차 대회가 공산주의완성에 대해 특별한 중요성을 갖게 될것이라고 확신한다.

북한에서 유사한 변화들이 필요하다거나 일어나고 있다는 언급을 없다. 강성산이 조선 노동당과 조선 인민은 김일성의 영도하에 중앙 위원회를 중심으로 견고하게 뭉쳐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을 때,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북한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없다는 것이다.

똑같은 주제가 1986년 10월에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반복되었다. 김일성은 소련의 경제 개혁에 대해 어떠한 상세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북한의 상황을 소련의 상황과 분리시켰다. 반면 그는 국제 정세와 외교 정책을 많이 취급했다. 사실상 그의 전체 연설 중에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르바초프는 경제 협력과 개혁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소련 공산당 제 19차 대회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훨씬 더 분명히 볼 수 있다. 당 대회에서 제안된 대부분의 변화들은 개괄적으로 언급된 반면, 소비에트와 당 관료들의 입기, 당의 역할의 약화, 당 대회 사이에 당 관료가 20%까지 교체된 것과 같은 정치적 개혁들에 대한 언급은 간단히 빠져 있었다. 복수 후보제와 공개 토론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으며, 협동 조합법, 가격 개혁, 기업의 자율, 합작 투자법같이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키려는 다양한 조치들은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간단히 말해 북한은 북한 국내 체제를 소련 변화의 영향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는 것 같다.

외교 정책에서의 소련의 새로운 사고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서 그들이 선별적으로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양대 진영론에 입각한 자신들의 세계관을 고수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증거들은 충분히 있다. 예를 들어 김일성은 자신의 모스크바 방문중 행한 연설에서

아래와 같은 시각을 반복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책략때문에 국제정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있고, 세계평화와 안전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세계관이 소련의 탈이데올로기 시각과 명백히 모순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소련과의 정책적 친밀성의 토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것은, 북한이 전반적인 병력 감축과 세계 여러 지역에서 비핵지대화를 추구하는 소련의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평양은 한반도와 관련하여 소련의 평화 구상을 지지하고 과장하였다. 1986년 6월에 평양측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고, 같은 목적으로 1986년 9월에 평양에서 국제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제기된 제안들이 한반도 내부와 주변에서 미군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연설을 지지했다. 그들은 보다 최근에는 관련 당사국들간의 다자간 무기 감축 협상을 제외한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그들은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을 보도하면서 남한과의 경제 관계 개설에 대한 소련의 관심은 빠뜨렸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약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아주 강경하다. 모든 단독 연설과 성명에서 북한측은 그 용어를 용의주도하게 언급해 왔다. 반면 소련인들은 공식적인 전문이나 성명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정도로 그 용어를 자제했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약화 또는 그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파생되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북한이 취하는 태도는 남한과 외교 관계를 개설하려는 헝가리의 결정에 대한 그들의 대응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모든 국가와 노동계급이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들이 형제적인 계급적유대를 무시할 때는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국제로동계급의 공동의 과업에 대해서도 심각한 해를 입히게 될것임을 경고했다.……헝가리가 범한 실수는 단순히 경제에 관련된 실용주의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와 노동계급의 위대한 혁명과업에 대한 심각한 배반행위로서 간주되어야 한다.

북한의 대응은 국내 문제들에서의 격리와 선별적인 동일시, 그리고 외교 정책 분야에서의 철저한 좌절로 요약될 수 있다. 페레스트로이카가 북한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음은 위에서 보았듯이 분명하다.

6. 북한의 대응

페레스트로이카의 직접·간접적 영향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김일성의 행동과 전략의 패턴에 대해 간단히 검토하고, 이 패턴들이 지속되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지속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변화의 필요에 대처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처 방식은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인물을 교체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당의 역할을 재구성하고 국가 경제 관료의 변화를 통해서 경제 관리 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이다. 셋째는, 미시 경제적 행위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시켜 줌과 동시에 이전의 엄격한 계획 경제 체제에 시장 요소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 속에는 외국 자본에 대한 국내 시장의 개방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방식의 연장으로서, 최근 중국과 소련에서 볼 수 있듯이 계획 경제로부터의 급격한 단절, 상당한 정도의 시장 비율의 증가, 그리고 비국가 경제 단위들의 숫적인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마 어떤 나라에서도 엘리트 교체가 북한에서보다 더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에서의 엘리트 교체가 거의 새로운 엘리트의 등장을 포함하지 않고 보통은 자리바꿈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인물 교체의 비율은 현저하다. 내각 안에서의 무수히 많은 사소한 변화들은 차치하고라도 1985년까지 북한은 일곱 번의 총리 경질을 경험했다. 조선 노동당 제4차 당 대회에서부터 제6차 당 대회까지 중앙 위원회 구성원의 40~70%가 매 대회마다 교체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 관료의 빈번한 교체가 있었다. 각 부와 위원회의 숫자는 현실적 필요와 경제 정책

의 우선 순위에 따라 자주 조정되었다.

경제 관리 체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주요한 틀은 ‘대안의 사업체계’이다. 이 체계는 1961년 김일성의 대안 전기 공장 현지 지도의 결과로서 출현하였다. 이 체계의 기본 요소는 1인에 의한 관리와 집단적인 정책 결정을 결합함으로써 고도로 집중화된 관리 체계의 부작용을 바로잡는 것이다. 공장 당 위원회는 군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겸직(兼職)하고 있는 당 책임비서와, 1명의 기사장, 그리고 1명의 공장 지배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1975년에 도입된 연합 기업소와 함께 전개되었는데, 후자는 동독의 콤비나트 체제나 1973년 소련의 생산 연합 개혁을 따른 듯하다. 연합 기업소 내에서, 관련된,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급과 새로운 기술 도입을 가능하게 할 하나의 연합(complex)으로 통합되었다.

1973년에는 기업들에게 자신들이 속해 있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 속해 있는 공급 회사들과 거래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공급 체계에서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의 다른 변화는 가격 책정 과정에서 일어났다. 가격이 전적으로 중앙에서 책정되었던 이전의 체계와는 달리 새로운 가격 체계는 가격을 도 단위에서 가격 위원회의 부서들이 잠정적으로 책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시 중앙 가격 위원회로 보고되었다.

1984년 말에 독립 채산제가 새롭게 주목을 끌었다. 제6차 당 대회 제19차 전원 회의에서 경제적 효율성 증대와 중앙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이 방식을 확대할 것이 주장되었다. 1985년에는 반(半)독립 채산제가 비생산 단위들에게까지도 적용되었다.

경제적 효율을 높이려는 북한의 노력 중 가장 중요한 전환은 1984년 9월 합영법의 발표였다. 이 법의 세부 사항은 몇 번 공개되었다. 여기서는 그 법의 범위나 실질적인 성과에 관계없이 그것은 북한이 외부의 자본과 기술에 관심이 있고 또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북한 역사 초유의 일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정도로 그치고자 한다.

지방적 수준에서 인민에게 소비재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중앙의 기업들은 기술 지원을 제공할 몇 개의

지방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다. 이와 병행하여 지방 예산제가 채택되었다. 이 조치는 도(道)와 시 당국에게 그 지역의 기업들로부터 세출에 필요한 세금의 징수를 허용하고 있다.

이 체제는 1978년에 공식적으로 일반화되었다. 이와 함께 지방 산업의 관리를 위한 위원회들이 지방 행정 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다.

1981년에 경제 지도 위원회가 도 단위에 설치되었다. 그것은 중앙 조직들이 계획과 연구, 기술 지원, 자원 배분의 조정, 수출과 수입에 주력하도록 합리화된 뒤에, 특히 생산 통제와 지도를 중앙으로부터 도 수준으로 분산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세부적인 생산 통제와 감독 기능은 도 지도 위원회로 이관되었다.

북한에서 경제적 성과를 발전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은 성격상 제한적·기업적이기보다는 주로 조직적이라는 사실이 위에서 분명해진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적인 조치들의 정신조차도 원래의 조치들을 손상시키는 조치들에 의해서 미약해지고 역전되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중앙 관료에 대항해서 공장의 역할 증대를 지향하는 '대안의 사업체계'가 이미 1962년 중앙 계획 기구의 역할 강화에 의해서 역전되었다. 강화된 중앙의 조직적 통제는 1960년대 후반에는 물질적 유인과 독립 채산제를 보다 더 강조함으로써 약화되었다.

1973년의 지방 분산화 조치들과 연합 기업소는 그 해 시작된 '3대혁명 소조운동'과 같이 동원적이고 개입적인 방식들에 의하여 다시 상쇄되었다. 채택된 유사한 동원 방법으로는 1974년의 '속도전', 1975년의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1979년의 '운송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 1981년의 '120일전투'가 있다. 두드러진 것은 제6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당 규약에는 경제와 사회를 지도하는 데에서 당이 따라야 할 기본 방식들로서 '반체제릴과 사업방식'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상호 모순적인 정책들의 동시적인, 또는 연속적인 시행은 김일성의 정치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문제들을 해결하는 두 개의 모순되는 정책들을 제시함으로써 김일성은 정책 실패의 비난을 두 정책 중의 하나에 떠넘기고, 권력의 자리를 자주 바꿈으로써 스스로는 비난으로부터 모

면할 수 있었다. 김일성이 설정한 목표는 한반도의 양측에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공산주의는 먼저 북한에서 완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쪽에서 공산화를 위한 기지가 완성된 뒤에도 혁명 투쟁은 전국이 통일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 과업을 위해서 김일성은 ‘국내정책의 국제화’ 전략을 선택했다. 이것은 국내적 목적에 기여하거나 이와 조화되는 실제적, 혹은 인위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의미한다. 이 전략을 통해 정치 지도자들은 먼저 국내 정치에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국내 정책의 국제화의 전략은 어느 정치 체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전략에의 의존의 빈도와 정도, 그리고 그 전략의 성공이다. 여기서 성공은 소극적으로는 지도자의 권력의 보전을 의미하고, 적극적으로는 이것을 국내적 목적의 달성에 연결시키고 그럼으로써 그의 권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의 주체는 국내 정책을 국제화시키려는 분명한 예이다. 외교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주체의 이데올로기는 바로 대립하고 있는 양대 사회주의 국가 사이에서 이득을 취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국내적으로 이 전략은 엘리트와 대중 속에 자부심을 불어넣는 정치적 상징을 제공함으로써 김일성의 권위를 대단히 높여 주었다.

이 전략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두 가지 측면에서 구사되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확실한 물질적 이득을 낳았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사회주의로의 이행과 통일과 같이, 북한의 국내적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국제적·지역적 환경에 대한 인식을 김일성 자신이 정의하는 대로 채택되게 해 주었다.

이 전략은 중국이 서방으로 기운 1970년대부터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외교 정책 분야에서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사고는 김일성의 전략이 가정하고 있는 것들을 한층 더 손상시킬 것이다. 동시에 1970년대 중반 이래로 김일성이 말하는 식의 통일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적·지역적 환경의 변화는 김일성의 권력에는 아닐지라도 그의 권위에는 심각한 도전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

고 변화의 징후들이 드러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에서의 발전을 검토해 보자.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공산주의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공약은 김일성의 연설에서 볼 수 있듯이 쇄신되어 왔다. 사회주의 사회는 사회 생활의 많은 부분들에 존재하는 구(舊)사회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과도기적인 사회이다. 만일 우리가 사회주의 사회의 과도기적 특성들을 극복하고 공산주의의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가려면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영역에서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 공산주의 사회는 인간의 이상적인 사회로서, 그 속에서 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완전한 주인이 된다.

정치적인 영역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권력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표시는 없다. 만일 있다면 김정일의 사적지에 대한 헌신과 김정일의 45회 생일의 열렬한 경축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일의 권력 계승 작업이 한층 더 진척되었다는 것뿐이다. 김일성의 권력에는 직접적인 함축을 갖지 않지만, 그럼에도 흥미로운 몇 번의 인물 교체가 이루어졌다. 하나는 북한군 총사령관의 자리에 오극렬 대신 최광이 들어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함경북도 도당 위원회 책임비서에 강성산이 임명된 것이다. 강성산은 1986년까지 총리였고 김일성의 친척이다. 이러한 인물 교체는 소련과의 경제·군사적 접촉의 증대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최광은 친소파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 국경·경제 협력이 소련과의 국경을 따라 증대하고 있는 것은 강성산의 자리 이동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인물 교체와 각 부서 조직의 조정 패턴은 계속되고 있다. 1986년과 1988년 사이에 네 번의 개각이 있었다. 1986년 12월에 이근모는 제 3차 7개년 경제 계획 직전에 강성산을 대체하여 8차 내각을 조직하는 총리가 되었다. 8차 내각은 14개의 위원회와 15개의 부서, 그리고 하나의 청(廳)으로 구성되었다. 7차 내각 때의 15개 위원회, 10개 부서, 1개의 청과 비교해 볼 때 부서의 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87년에 소규모의 개편과 인물 교체가 이루어졌다. 1988년 2월에 경제 문제를 책임지고 있던 몇 명의 부장들이 교체되었다.

1988년 6월에는 두 개의 부서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수송, 에너지, 기계 제작, 경공업과 같은 주요 정책 관심과 문제 영역에 관련된 경제 기구들 내에서 이루어졌다. 인물 교체는 종종 새로운 사람들의 등장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이는 사소한 상하 이동과 함께 수평 이동일 뿐이다.

경제 관리에 대한 당의 개입은 대중 교화에서의 당의 역할과 함께 여전히 강력하다. <로동신문>의 한 사설은 다음과 같이 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현시기 자력갱생의 혁명적구호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갈데 대한 당의 방침의 본질과 의도를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해설 침투함으로써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숨은 영웅들처럼 사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숨은 영웅들처럼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 혁신자들을 적극 찾아내고 내세우며 그들의 규범을 일반화하는 사업도 잘 해나가야 한다.

다른 사설은 당의 성취에 대한 기준으로, 김일성의 교시와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짜여진 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총체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 인민들의 사상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념적 원칙의 고수, 당의 뜻을 따르는 대중들 속에서 일함으로써 방법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지적하였다.

두 가지의 새로운 운동이 이미 언급된 것들에 덧붙여서 시작되었다. 하나는 '8·3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이다. 이 운동의 목적은 공장과 기업과 가게에 있는 예비 자재를 동원함으로써 소비재의 종류를 증가시키는 데 있다. 이 운동은 1984년에 처음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으며, 시와 군 단위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 운동은 주로 김정일의 책임하에 놓여 있으면서 기간 건설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동원을 통해 소비재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른 운동은 '200일전투'이다. 이 운동은 1988년 2월부터 북한 건국 40주년 기념식이 있는 9월까지의 일회적인 운동이다. 이 운동이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제3차 7개년 계획의 수행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고, 그 초점은 기간 건설부 내에 두어졌다. 이 운동은 정치적으로는 동원 분위기를 경축일로 연결시켰고, 경제적으로는 제3차 7개년 계획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이 계획의 주요한 방향성도 보여 주었다.

북한 당국은 제3차 7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완수에 대단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 주민들은 제3차 7개년 계획을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이라고 특징지었다. 에너지, 금속, 광업, 건설, 대규모 화학 공장과 경금속 같은 주요 기간 건설 부문에 우선 순위가 주어졌다.

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GNP 성장율은 7.9%로 설정되었다. 이는 6개년 계획의 10.3%, 제2차 7개년 계획의 9.6%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부문별 목표도 따라서 낮아졌다. 제3차 7개년 계획 기간 동안 산업 생산은 1.9배(제2차 7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는 2.2배) 증가할 것이다. 한편 농업 부문의 목표는 제2차 7개년 계획 기간에는 곡물이 1,000만 톤이었던 것이 제3차 7개년 계획 기간에서는 1,500만 톤으로 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제3차 계획에서는 몇 가지 다른 특징들이 있다. 경공업, 특히 직물, 가정용품 등 기타 소비재의 발전에 강조점이 주어졌다. 다른 중요한 특징은 과학과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1993년에는 연구 개발에 GNP의 3~4%를 투자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이 목표 수치는 북한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은 이 기간 동안 평균적 무역 성장율 18%를 설정했는데, 이는 1980~1985년간의 무역 성장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단히 야심적인 계획이다.

북한이 이 계획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외부에 개방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은데, 이는 그 계획이 40~50억 달러의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국내 재원으로 투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축율이 소득의 30~40%가 되어야 한다. 이미 지적했듯이 북한은 1984년에 합영법을 채택했다. 경제 현실은 북한이 장래에 보다 적극적으로 합작 투자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낮은 국제적 신용도와 경직된 경제 구조 때문에 북한은 1984년 이래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00건 이상의 합작 투자가 지금까지 체결되었고, 알려진 것들의 대부분은 서비스와 관광 분야인 것으로 추측된다. 합작 투자를 위해 북한이 협상한 주요 서방 국가로는 프랑스, 홍콩, 태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서독 등이다. 대부분의 거래는 일본인과 조총련계 한국인들과 이루어졌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들과 보다 긴밀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못된다. 소련과의 경제 관계의 강화는 특히 중요하다. 1984년과 1986년 김일성의 방문의 결과로서 1987~1990년 기간과, 1986년 12월에는 2000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공업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해 양국 정부간에 협정이 체결되었다. 소련·동유럽 간 협력에 관한 협정들이 1987년 10월에 체결되었다. 덧붙여서 소련인들이 시베리아 개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국경 무역이 증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국간의 무역량은 1983년에 6억 6,800만 달러에서 1986년에는 16억 2,000만 달러로, 1984년 이래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평양은 또한 중국과 동유럽 국가들과도 긴밀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소규모의 합작 투자가 음식점 같은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과 체결되었다. 폴란드와는 항공, 유리, 선박 수리 분야에서, 체코슬로바키아와는 탄화철에서, 그리고 불가리아와는 지질 조사, 비철금속 부문에서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

경제 관리의 합리화에 대해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다른 표시는 '대안의 사업체계'에서의 미세한 변화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당 위원회가 지배하는 집단 관리에 기초하고 있다. 당 관료들의 간섭은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따라서 연합 기업소에 당 위원회가 직접 간섭하는 것을 제거하고, 대신 기사장(技士長)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것은 기업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1984년에 독립 재산제를 도입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들은 과중한 방위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징후가 있다. 예산에서 방위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6년에는 14%, 1987년에는 13.8%(실제로는 13.2%)였고, 1988년에는 12.2%로 책정되었다.

이상에서 볼 때 북한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음이 분

명하다. 하지만 그 조치들의 성격이 당면한 문제들에 부응하기에는 확실히 제한적이라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 문제들은 성격상 주로 대규모·조직적인데, 소규모·기업적 변화들이 중앙 집중식 명령 경제 구조에 단지 부과될 뿐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정책에서 두 개의 모순되는 노선의 지속이다. 즉, 제한적인 합리화 조직들에는 전통적인 동원 방식이 수반된다. 이것으로 김일성의 권력 구조와 경제 합리화의 요구들 간에는 내재적인 모순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40년 이상 북한 체제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심지어 작은 변화의 표시들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는 것이다.

7. 국제 관계와 남북한 관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북한에 중대한 도전을 안겨 주었다. 첫째로, 북한의 세계관은 생존과 보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련의 새로운 사고와 상반된다. 둘째로, 중·소 관계의 개선은 북한이 중국과 소련 모두의 관심을 끄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중국은 자국의 경제를 근대화시키는 과정에서 북한의 현상 타파적 경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데에 제약을 받고 있다. 셋째로, 극동 개발에 대한 소련의 관심은 북한에 정책적 딜레마를 안겨 준다. 한편으로 소련은 북한의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달리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소련은 남한과 경제적으로 접촉하려고 한다.

이 딜레마의 결론은 소련이 남한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들은 군사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북한의 통일에 대한 입장을 지지한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긴장 완화를 위한 크라스노야르스크 구상은 북한의 입장과 맥락을 달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최근 일련의 소련 학자들의 논조는 과거와 달리 다양성을 표출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그들의 일부가 공개적으로 소련과 남한의 외교적 관계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소련의 입장은 한국과

동유럽의 외교적 관계 수립의 확대에 따라 더욱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 원칙과 세계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련에 대한 북한의 경사(傾斜)는 최근에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소련의 지역 정책들을 지지함으로써 북한이 수행하는 단계적인 적응이다. 결과적으로 당 대 당 관계는 증가하는 국가간 관계와 함께 회복되었다.

8. 남북한 관계

소련이 처한 딜레마와 북한의 국내적 변화를 위한 돌파구는 통일 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이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구호 물자 제공과 예술 공연단의 교환에 관련된 1984년의 화려한 첫 출발은 1986년에 중단되었다. 북한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몇 번 남북 대화를 제의했다. 1986년 6월에 북한은 남북한과 미국 간 3자 군사 회담을 제의했다. 1987년 1월에는 고위 정치 군사 회담이 제의되었다. 1988년 1월에 북한은 남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석 회의를 개최할 것을 남한에 촉구했다. 이들 가운데서 가장 전형적인 것은 다자간 군사 회담 제의였다. 이 제의에 따르면, 미군과 핵무기의 단계적인 철수와 병행하여 양 당사국의 병력 규모는 1991년까지 3단계의 감축을 통해 10만명으로 축소될 것이다. 이 제의에서 북한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주한 미군 철수와 남북한 불가침 선언, 그리고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의 수립에 관한 그들의 입장이 반복되었다.

인적·물적 교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촉을 확대하기 위한 남한의 '7·7선언'은 냉담한 반응을 받았고, UN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제의한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6자 회담안'도 분단을 영구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철저히 거절당했다.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변화의 기미가 조금은 있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마지못해 남한을 군사 회담의 협상 상대로 받아들

었다. 둘째로, 1988년 10월에 노태우 대통령의 정상 회담 요구에 대한 반응에서 김일성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다. 동시에 남한 정권에 대한 악의에 가득찬 공격과 모욕적인 언사들을 중지했다.

그러나 남한은 '7·7선언'의 깊은 후유증을 겪어야만 했다. 1989년 전 반기는 일련의 밀입북 사건 등으로 국내 정치는 이른바 공안 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어 남북한 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89년 9월 새로운 통일 방안은 공안 정국을 극복하고 남북한 대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을 제공하였다. 기능주의적 교류와 정치적 발전 단계를 동시에 포함한 통일안은 그 내용의 변화 외에도 처음으로 민주적 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1989년 10월 이후 남북한은 새로운 대화 관계를 모색하는 각종 대화의 채널을 재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소련의 태도 변화 조짐과 한·동유럽 관계 발전은 중국의 일시적 고립과 대 북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 심각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9. 북한의 미래와 선택

지금까지 남한의 극적인 정치 발전과 함께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가 북한에 어떻게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북한은 그 변화들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조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북한은 상대적인 저발전 의식의 심화에 직면하여 제기되는 체제적 변화의 요구들과 경직된 권력 구조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분석을 통해서 분명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소련에 기움으로써 단기적인 대응을 했다. 소련의 평화 구상과 동일시하고 소련의 대 아시아 정책을 선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김일성은 정치·군사적인 이득을 얻고자 한다. 동북 아시아에 대한 소련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대해 알고 있는 김일성은 소련에 밀착함으로써 한반도 주변의 정치 발전 속도를 통제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시간을 버는 동안 김일성은 북한이 어느 길로 들어서야 할 것인지를 숙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시간별기 지연 전략은 그리 오래 지속될 수 없게 된 것도 사실이다.

현재 북한이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들 각각은 김일성의 권력과 권위의 성격, 북한의 경제사정, 북한의 국제적·지역적 환경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북한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정을 하고 있다.

첫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에서 어떠한 변화의 가능성도 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상태의 지속을 상정하는 것이다. 만일 있다면 그것은 김일성의 지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김일성의 권력과 권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전받지 않으며, 자신의 권력이 도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일성은 북한이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비록 경제적 성과의 절대적이고 동시에 상대적인 쇠퇴를 인식하고 있을지라도 김일성은 긴급한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순되는 단기적인 정책들을 채택할 것이다. 외부에서 강요하는 통일에 관한 어떠한 타협도 그는 하지 않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할 때까지 똑같은 방침을 고수할 것이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첫번째의 것과 정반대된다. 김일성의 권력은 도전받지 않겠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의 권위는 국내 문제의 악화와 국제 정세의 변화 때문에 약화될 것이다. 남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져 있다는 의식을 깊이 하게 될 것이다. 소련이 남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킴에 따라 변화에 대한 소련의 압력을 느낄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 긴장 완화에 관한 미·소간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서 김일성은 대내외 정책 분야에서의 변화를 미 제국주의 세력이 퇴조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정당화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의 관심을 권력의 아이러니로 이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그러한 변화는 김일성이 갑작스런 변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납득시키거나 숙청시킬 수 있는 도전받지 않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가능하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중간적인 방향을 택한다. 김일성은 주한 미군 철수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가 남한에 뒤져 있음으로 인해, 남한과 상대하는 데서 확신을 할 수 없는 현재의 한반도 주변 상황의 발

전을 고무적이면서 동시에 실망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김일성은 제3차 7개년 계획이 1993년에 완수될 때까지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에 대해 보다 확신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 철수 논의의 진전으로 통일 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나가는 것이 한층 더 수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김일성은 1993년 이전에 사망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첫번째 시나리오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 대화에서는 어떤 중요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반면 외교 정책에서는 보다 유연성을 보일 것이고, 그 계획의 성공적인 완수에 필요한 경제 협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외부와의 보다 많은 공개 접촉을 위한 신호들을 보낼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이 제3차 7개년 계획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볼 때 세번째의 선택이 가장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3 부 대외 관계와 정책

1. 북한의 외교 정책

전인영(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1. 서론

국가의 대외적인 정책이나 행위는 지도층의 의지나 선택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국내외 환경 요인들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국제 사회가 갈수록 좁아지고 국가간의 관계가 점점 긴밀해지며 복잡해질수록, 외교 정책의 수립이나 추진은 복잡 미묘해진다.¹⁾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 같은 나라의 외교 정책도 원하는 대로 수립되지 못하며, 추진 과정에서 많은 제약을 받거나 곤경에 처해 좌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볼 때 북한의 외교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작은 나라의 제한된 능력 및 복잡하고 험거운 국제 환경 때문에 강대국들보다 많은 제약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외교 정책은 체제의 보존을 위하여 남한과,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 또는 제거시키며, 정권의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 등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보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을 입증하며, 북한 정권만이 정통성을 지닌 민족을 위한 정권임을 과시하고, 북한의 주도하에 통일을 이루겠다는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한 대외 정책 노선을 추구하여 왔다.

북한의 대외 관계는 크게 보아 분단으로 야기된 남한과의 군사적 대결 및 강력한 주한 미군의 존재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이웃 사회주의 국가들인 소련 및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일본 또는 한·일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제3세계의 일원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북한의 외교 정책은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이의 변형인 주체 사상이라는 공산주의 이념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외교 정책 결정에서 실용적인 국익 추구가 우선인가 아니면 이념에 충실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익 우선 경향이 현저하다.²⁾ 북한의 경우에도 실리를 중시하는 것은 같으나, 세계관과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이념적인 면이 비교적 크게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좋은 예로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하여 미군 철수와 민족 해방을 요구하며 ‘남조선혁명’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완고한 입장에서도 우리는 강한 이념적 색채를 찾아볼 수 있다.³⁾ 대외 관계에서 이념의 퇴조라는 일반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외적으로 계급적 원칙을 강조하고 민족 해방 투쟁이나 혁명 투쟁을 지원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 제3세계 국가들에게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변 환경은 외교 정책 목표의 달성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북한은 한국군 및 주한 미군의 질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GNP의 20% 이상을 투입하여야 하며, 공산화 통일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상태에 있다. 소련과 중국은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지만, 그들의 국익 추구를 우선시하여 왔으며, 최근의 대외 정책 행태를 보아도 북한의 적대국인 남한과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북한 지도층을 우려하게 하고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입장을 강조하는 북한의 의사에 관계없이, 금년 2월 1일과 11월 1일에 각각 한국과 수교했으며 유고슬라비아도 곧 뒤를 따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외교 능력의 한계와 주변 정세의 변화는 '88서울 올림픽에 공산권 국가들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이미 입증된 바 있는데, 특히 최근 소련의 적극적인 남한과의 접촉 및 남한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표출은, 교차 접촉 및 교차 승인을 '두 개조선정책'으로 간주하여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소련 및 동유럽에서의 개혁 및 개방 정책의 실시에 불안감을 느

끼는 것으로 보인다. 자국민들에 대한 거듭되는 사상 교육의 강조와 ‘우리식대로 살자’는 구호의 반복은 북한 지도층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 국가든 자체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현명하게 적응하여야 하는데, 북한 지도층의 태도는 분명히 보수적이고도 소극적이다. 우선적인 이유는 개혁과 개방에 따르는 정치적 위험 부담을 사전에 방지 또는 배제하려는 데 있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40여 년 동안 김일성 1인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으며 철저한 국민 생활 통제와 정보 차단 등을 통해 외부의 영향을 가급적 배제하여 왔다. 만일 북한이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적극 추진한다면, 정치적인 통제가 힘들어지고 급기야는 소련·동 유럽 및 중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국민들의 과격한 요구와 혼란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북한 지도층의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도전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동안 중·소로부터의 은근한 개방 및 개혁 권유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것도 이해가 된다.

1990년대를 지향하는 북한의 외교 정책은 국내의 환경의 요구에 맞게 재조정하고 재구성해야 할 과제와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미·소 관계 및 동·서 관계의 급격한 호전은 전후의 알타 체제와 동·서 관계를 크게 동요시키고 있다. 또한 중·소 관계의 정상화와 그들의 유연한 대한(對韓) 정책은 북한의 냉전 시대 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탈(脫)이데올로기적인 변화는 비동맹 운동권을 포함한 제3세계 국가들의 형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경제 성장 민주화 추진에 힘입어 자신감을 가지고 대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남한으로부터의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주변 기류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국익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은 북한의 장래뿐 아니라 남한 등 주변 국가들에게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북한의 외교 정책 목표

(1) 외교 정책 결정 요소

북한의 외교 정책은 북한이 처한 국내외 환경적 요건들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의 인지 및 평가의 산물로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외적 정책이나 노선 행위, 또는 ‘합리적 선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⁴⁾ 흔히 국내 환경 또는 구조가 대외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국제 환경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외교 정책 결정 요소로는 일국의 인구 및 영토,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 수준, 지도자 역량, 정치 안정도, 권력 구조 및 정책 결정 과정, 동맹 관계 또는 적대 관계와 같은 국내외의 환경적 요소들 외에도, 이미지나 인지 또는 이데올로기와 같은 심리·이념적 요인들이 포함된다.⁵⁾

(2) 안보와 통일

북한은 주변국들에 비해 약소국의 위치에 있으며, 미·중·일·소 4강 대국들의 이해 관계가 한반도에서 상충하고 있어, 외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지정학적으로 외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한·미 적대국들로부터의 위협을 방지하거나 제거하며 중·소와의 동맹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게는 최대의 위협 세력이 되기 때문에, 이 세력을 상쇄할 수 있는 소련 또는 중·소 양국의 지원을 북한은 절실히 필요로 한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미 군사력을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하며 중·소와의 동맹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외교적 목표를 북한은 가장 중시하며, 이의 달성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여 왔다. 특히, 주한 미군의 철수는 북한의 안보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국가 목표인 통일 목표 달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북한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온갖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불안정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분쟁에 관여되기보다는 현상 유지 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비교적 일치된 입장 때문에, 북한은 동맹국인 중국과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 더구나, 미국은 전통적인 남한과의 유대 및 협력을 중시하여 미군 철수 및 평화 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북한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또한 미국 및 남한과 긴밀한 보조를 취하면서 북한의 정치적 접근을 거의 허용치 않고 있다. 오늘날 4강의 입장은 북한의 현상 타파를 통한 통일 목표 추구를 경계하고 있으며,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분단의 영구화' 또는 '두 개 조선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강대국들의 정책을 변경시켜 통일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라 좌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3) 경제 건설

다음으로 중요한 북한의 외교 정책 목표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 북한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자력 강생을 통한 '자립적민족경제의 건설'을 강조하지만, 자력에는 한계가 있다. 전쟁 전과,⁶⁾ 전후(戰後) 복구를 위한 3개년 계획(1954~1956)⁷⁾ 및 1년 앞당겨 끝낸 5개년 계획(1957~1960) 기간을 보더라도, 소련과 중국 및 동유럽 국가들이 북한에 상당한 원조를 제공했었다는 사실은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북한이 우방들의 경제적·기술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⁸⁾ 국토 통일원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1950~1960년 사이에 소련과 중국 및 독일 등의 동유럽 제국으로부터 받은 유상 및 무상 원조의 총액은 16억 5,336만 달러에 이르며, 이 중 소련이 7억 1,325만 달러(43.1%), 중국이 5억 850만 달러(30.75%),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이 4억 3,161만 달러(26.1%)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⁹⁾ 1950~1960년 기간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무상 원조로 50개의 대규모 공장들을 건설할 수 있었는데, 소련은 40개의 기간 산업 복구에 기여하였으며, 북한은 10억 루블(舊) 상당의 기계 및 설비들을 소련 원조로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서방측 추계에 의하면 소련과 중국은 1953~1956년 기간 외원(外援)의 42.3%를 북한 총예산의 25.4%가 양국의 원조로 충당되었다고 한다.¹⁰⁾

경제 건설을 위한 대외 관계의 중요성은 쿠바 사태 이후 중국에 동조했던 북한이 소련의 군·경 원조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흐루시초프의 실각을 계기로 소·북한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소련의 원조가 재개되었던 과거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소·북한 관계가 회복된 직후인 1965년 5월에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장기 차관을 획득했으며, 1966년 6월 20일의 경제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서, 소련은 북한의 금속, 전력, 석유 화학 공업 등을 지원하고 1억 6,000만 루블의 차관을 연 2%의 저리로 10년에 걸쳐 북한에 제공하였다. 이어서, 소련은 제1차 7개년 계획이 끝나는 1970년 9월에도 경제 및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6개년 계획이 끝나는 1976년 2월에도 새로운 협정을 맺었다.¹¹⁾

1986년 3월 15일자 모스크바 방송은 1986~1990년 기간의 쌍방간 무역 총규모를 1980년대 전반기의 2배가 넘는 94억 달러로 설정했으며, 같은 기간에 북한의 동평양 화력 발전소 등 10여 개 산업 대상을 지원하고 2,700건 이상의 설계 도면과 기술 공정 자료 등 400여 종의 기계·기기 제품과 재료 등을 무상으로 북한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¹²⁾ 이러한 사실들 외에도, 북한에는 상당한 수의 소련 기술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 북한의 핵개발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는 배경도 1970년대에 소련이 2기의 실험용 원자로를 제공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¹³⁾

소련 외에도, 북한은 중국 및 동유럽 제국들과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협정' 또는 통상 협정을 맺어 경제 건설에 도움을 받고 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후 1982년 10월까지 108개 국가와 체결한 협정수는 1,981건으로서, 이 가운데 중국과 소련을 위시한 15개 공산 국가와 체결한 협정이 1,326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경제·기술 분야만 보면, 소련과 체결한 것이 124건, 중국 134건, 동독 87건, 불가리아 79건, 체코슬로바키아 72건, 루마니아 70건, 폴란드 65건, 헝가리 59건, 쿠바 4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¹⁴⁾

북한은, 물론 일부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경제 교류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련과 중국 다음으로 크며, 서구 국가들과도 경제 교류 및 협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 체제나 능력 한계 때문에 협력 관계를 크게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외채 상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외채는 대(對) 서방 외채 27억 3천만 달러를 포함하여 52억 달러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¹⁵⁾

북한이 오늘날의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낮은 대외 신용도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북한은 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의존하며, 당분간은 자력 갱생의 기치하에 힘겨운 경제 건설을 위해 주민들을 계속 동원하고 독려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일성 생시에 북한에도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물결이 일어날지, 아니면 그의 사후(死後)에나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4) 정통성 경쟁

안보와 경제 발전 외에도, 북한의 외교 정책은 국제 사회에서의 정통성 확보라는 목표를 추구하여 왔다. 비록 남북한 정부가 각각 미국과 소련의 후원하에 1948년에 수립되었지만, 북한은 처음부터 정통성 문제에서 불리한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왜냐하면 남쪽의 한국 정부는 권위 있는 국제 기구인 국제 연합의 감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합법적인 정권으로 탄생된 반면에, 북한 지역에서는 유엔 선거 관리 위원단의 접근이 거부된 채 자체의 선거 절차만으로 또 다른 정권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1948년 12월 유엔 총회는 결의안을 통해 한국 정부만이 자유로운 선거에 의한 '유일한 합법적 정부'임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 결의안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임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 반면에, 북한 정권은 이 결의안의 효력을 거부하여 왔다.¹⁶⁾

북한은 1950년 6월의 무력 남침으로 인하여 국제 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규탄을 받았다. 북한의 행위에 대한 유엔의 단호한 대응 조치는 무력

을 통한 공산화 통일의 목표를 좌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반격으로 북한 정권의 존립마저 크게 위협을 받았었다. 물론 북한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 및 중국 같은 사회주의권의 지원을 받았으며 한국전을 ‘내전’으로 간주하여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부인했으나, 어쨌든 국제 사회에 비친 북한의 이미지는 극히 호전적이고 부정적이었다.

외교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하여 북한은 상당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왔는데, 1960년대에 들어와서 제3세계 국가들이 숫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큰 도움을 받게 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의 데탕트 분위기로 더욱 대외 관계를 확장할 수 있었다. 1962년의 상황을 보면, 북한과의 수교국은 불과 15개국이었으며, 남한은 무려 56개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1976년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북한과 수교한 나라수가 93개국으로서 남한의 96개국과의 수교에 육박하였다. 1962년의 경우 어느 나라도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하지 않았으나, 1976년에는 49개국이 양쪽 모두와 수교하는 변화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유엔 외교 무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1975년의 제30차 유엔 총회는 남북한의 입장을 담은 두 개의 모순되는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키는 이변을 창출하기도 했다.¹⁷⁾

북한의 성공적 외교 활동 결과는 1980년 10월의 제6차 당 대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1970년대 북한과 수교한 국가수는 현재의 수교국 수의 2/3에 해당하는 66개국이며, 이 중 52개국이 1972~1975년 기간에 이루어 졌다.¹⁸⁾ 이들 가운데 비동맹권을 중심으로 한 제3세계 국가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북한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한반도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북한이 ‘두개조선’을 극력 반대하여 4강의 교차 승인과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60여 개 국가들의 남북한과의 동시 수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간의 치열한 정통성 및 국제적 지위를 둘러싼 경쟁은 비동맹 운동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1975년 8월 페루의 리마에서 열린 비동맹 회의에서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됨으로써, 북한은 제3세계 외교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구축했다. 현재도 조정국의 일원인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군 철수 등의 문제를 제기하여 한·미 양국에 대한 외교적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비동맹 국가들의 다양한 입장과 분열, 남한의 경제 성장으로 인한 국제적 지위 향상 등으로 인하여, 북한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정통성 경쟁은 남한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최근의 괄목할 만한 민주화의 정치 발전 때문에 북한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북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지나친 주체 노선의 강조 및 권력 승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북한의 위상이 빛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서울 올림픽의 개최를 계기로 남한의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크게 부상되고 남한의 대 공산권과의 교류 및 협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북한도 1989년 7월에 평양에서 제 13차 청년 학생 축전을 주최하여 성과를 올렸으나, 서울 올림픽과는 비교하기 힘들다. 최근 남한의 유엔 단독 가입 시사도 올림픽 개최로 인한 국제적 동·서 관계 호전 외에도, 남한의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 및 지위의 향상에 고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외교 정책 기본 이념 및 결정 기구

북한은 안보의 강화와 사회주의 경제 건설 및 정통성을 위한 외교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세 가지 기본 이념 또는 원칙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하에 외교 정책 결정 기구들이 외교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1) 외교 정책 기본 이념

북한은 대외 관계에서 자주, 친선 및 평화를 3대 기본 이념으로 내세운다. 이러한 기본 이념들을 바탕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단결과 친선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제3세계 국가들, 특히 비동맹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경제·문화 교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¹⁹⁾ 북한은 자체의 실정과 이익

에 맞는 주체적인 외교 정책을 강조하며, 완전한 평등 및 상호 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당(黨)이나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기본 입장과 아울러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반제 투쟁 및 군비 경쟁의 중지 및 군비 철폐를 기본 이념으로 강조한다.²⁰⁾

북한은 이러한 이념들을 강조하면서 중·소 및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제3세계 국가의 일원으로서 비동맹 운동에 동참하여 북한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며, 미·일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에 접근하려 노력하고, 남한에 대해서도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과 군비 축소안들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3대 기본 이념은 특히 식민지 생활을 경험한 제3세계 국가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랭군 사태와 같은 대남 외교 정책 형태나 제3세계에 대한 무기 수출 및 군사 요원 파견 및 경직된 이데올로기적 입장 때문에 북한의 이미지는 손상을 입고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일부는 현실을 무시한 북한의 경직된 입장에 동조할 것을 거부하였고, 비동맹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한적인 성과만을 거둘 뿐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서방과의 관계는 극히 제한된 관계에 한정되어 있다. 특히, 세계적 추세인 동·서 관계의 호전과 협력 분위기, 그리고 소련 및 동유럽의 개혁과 개방에 경계적이고 냉담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폐쇄적인 사회의 인상을 주고 있다.

(2) 외교 정책 결정 기구

북한의 외교 정책이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관하여 알려진 자료는 거의 없다. 한국 전쟁에 관해서도 북한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어, 〈호루시초프 회고록〉이나 최근 〈조선일보〉에 소개되고 있는 엽우몽(葉雨蒙)의 〈흑설 — 조선출병기실(黑雪朝鮮出兵記實)〉을 통해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을 정도이다.²¹⁾ 1968년 1월의 청와대 기습 시도 사태나 푸에블로 호 사태, 1969년 4월의 EC-121 격추 사건, 1976년 8월의 판문점 사건, 1983년 10월의 랭군 사태 및 1987년 12월

의 KAL-858기 격추 사건의 결정 과정이나 대응 과정에 관하여도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북한의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 등을 통한 권력 구조와 북한의 지도층 인물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국가 기관들과 어떤 인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대강은 알 수 있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현재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는 국가 주석 및 당의 총서기로 절대적 지위에 있는 김일성과 당의 제2인자이며 권력 승계의 기반을 이미 굳히고 대부분의 실무를 장악, 처리하고 있는 아들 김정일 및 서열 3위의 인민 무력부장 오진우를 포함한(3인은 정치국 상무 위원) 13명의 당비서들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외에 노동당 중앙 위원들과 정부의 김일성 등 14명으로 구성되는 중앙 인민 위원회 위원들과 그 산하 기관 책임자들, 그리고 정무원 총리를 비롯한 소속 부장 및 위원장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²²⁾

행정 기구에서 ‘주석’은 국가 주권을 대표하며(헌법 제89조), 타국과 체결한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하고(헌법 제96조), 타국 사신의 신임장 및 소환장을 접수하는 권한을 지닌다.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의 대내외 정책을 수립하며(헌법 제103조 1항), 대사 및 공사를 임명 또는 소환하는 권한을 행사하고(헌법 제103조 8항), 대외 정책 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두어(헌법 제105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한과 임무를 지닌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이다. 행정 집행 기관인 정무원에는 외교 정책을 집행하는 ‘외교부’가 있고, 경제 외교·교류와 관련 있는 ‘무역부’, ‘대외경제위원회’, ‘대외경제사업부’ 및 최근에 설치된 ‘합영공업부’ 등의 부서들이 있다. 이들 중에서 주석의 권한과 중앙 인민 위원회의 위원들의 권한은 막강하다.

북한의 노동당은 권력의 핵심으로서, 대외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깊이 관여하고 감독한다. 북한의 중요한 정책 결정은 당의 정치국 결정으로 볼 수 있는데, 때로는 ‘중앙인민위원회’ 및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와 연석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정치국에서도 현재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치국 상무회의’는 권력의 정점이 된다. 노동당 내의 전문 부서로는 국제 관계를 전담하는 ‘국제부’가 있고, 대남 관계를 전담하는

‘통일전선부’, ‘대외정보조사부’, 공작과 정보를 담당하는 ‘연락부’ 및 ‘작전부’가 있으며, 군사 부문의 ‘군사부’와 각종 ‘경제부’들이 대외 경제 관계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에서 결정한 정책이나 사항은 정무원 또는 최고 인민 회의 명의로 발표되는 경우가 많다. 헌법상 노동당의 권한과 임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에서 주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고급 당원들과 행정부 요인들이 중복되어 당·정 분리가 모호하거나 무의미하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정부와 당 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 구분은 더욱 힘들다.

북한의 정책 결정 과정을 파악하기 힘든 이유 중의 하나는 김일성 개인 숭배 및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강조 때문이다. 주요한 결정이나 업적이 두 사람의 영광으로 돌리는 북한 현실 때문에, 다른 정책 결정자들의 입장이나 역할을 알아보기가 힘든 것이다. 그러나 일이 잘못되거나 정책의 변경시, 책임자가 교체되거나 지위가 강등되는 것을 보고 해당 인물의 책임 소재나 정책 결정 참여 여부를 짐작하는 수도 있다.

물론, 김일성과 김정일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없으며, 국내의 업무의 점증되는 복잡성과 전문성 요구를 생각할 때, 당·정 관료들의 참여의 폭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며 부서간의 갈등과 경쟁도 존재함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단지, 최고 권력자의 권한이 어느 나라보다도 절대적으로 강력하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서방 사회나 동유럽 사회처럼 사회 세력이나 여론 등을 감안하여 외교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북한의 권력이 극소수의 당 고위층 인사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정치 현상 때문에, 북한 체제는 대외 관계에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지니고 있다. 장점으로는 김일성 등 소수의 권력자들이 주요한 정책 결정이나 대응 조치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으며, 설혹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도 체제가 동요하거나 사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수령의 유일적지도체제’를 생각할 때, 공개적 비판이나 도전은 감히 생각하기 어렵다.

반면에, 최고 권력자가 이데올로기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중시한 채 다각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경우, 대개는 어렵게 만들

거나 필요 이상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²³⁾ 그러나 실책으로 인한 손실과 불이익을 쉽게 은폐하거나, 실제 성과 이상으로 선전함으로써 곤경을 피하거나, 또는 보좌관들을 속죄양으로 희생시킬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다.

북한처럼 1인 장기 집권 체제가 굳어지고 수령에 대한 개인 숭배가 정착된 곳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견해를 개진하거나 주장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 결과로 대외 정책 결정에서 유연성을 잃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북한이 주체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거센 개혁과 개방의 물결을 막고 있는 큰 이유는 북한의 최고 권력자 및 고급 당·정 관료들의 이해 관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일성 자신이나 측근이 비판받고 권력을 잃을지도 모르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과연 바라거나 방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치 개혁의 핵심이 권력의 분산과 비판의 자유 및 정책 결정에의 광범위한 참여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된다.

현재 북한의 권력 구조를 보면 대외 정책 결정이 경직되고 권력이 집중된 소수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정책을 재조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자주와 친선과 평화의 좋은 이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대외 형태는 때때로 모순을 보여 주며, 대외 활동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외교 정책과 외교 활동을 수립·추진하여 왔는지를 주요 국가 또는 지역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주변 강대국들과 대한(對韓) 관계, 및 제3세계 외교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4. 북한의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한반도는 미·중·일·소 4강 세력이 상충하는 곳으로서, 남북한 모두 이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4강대국은 한반도와 관련된 자국의 이익 때문에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안정을 바라는 공통

입장 때문에 타협이나 협의를 하기도 한다. 네 나라 중 미·일의 두 나라는 남한을 지원해 왔으며, 중·소 양국은 북한을 지원하고 있어, 남방 3각 세력과 북방 3각 세력이 균형을 이룬 채 대치하는 형세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를 살피고 다음으로 적대 세력으로 간주되는 미·일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1) 북한의 대중·소 동맹 관계

한·미 적대 세력과 대치하고 있으며 집요하게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에게 소련과 중국의 존재는 극히 중요하다. 중·소 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는 북한 체제의 보존과 김일성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사활적(死活的)인 이익이 걸린 중대사이다. 소련의 후원하에 북한 정권이 출현했으며, 초기의 북한 정권을 완전 파멸의 위기에서 구출해 준 나라는 중국이었다. 중·소 양국의 지원으로 전쟁 수행을 했을 뿐 아니라, 전후 복구와 경제 계획 수행을 위한 양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북한을 생각하기가 힘들 것이다.

외교적으로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크게 받아 왔다. 북한 정권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12일 소련은 최초로 북한을 승인했으며, 이어서 소련의 영향력하에 있던 동유럽 국가들이 뒤를 따랐다. 중국도 정권 수립 직후인 1949년 10월 6일에 북한과 수교했으며, 어려운 국내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쟁 기간과 전후 복구 기간에 물심양면으로 북한을 지원했다.

만일 한국전에 중국이 무력 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북한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은 빨리 약화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 중·소 분쟁과 북한의 시련

정권 수립으로부터 1961년까지는 북한의 대중·소 관계가 대체적으로 순조로웠다. 그 이유로는 주로 동·서간의 냉전 지속과 사회주의권의 단결 유지, 중·소의 적극적인 대 북한 원조, 그리고 북한의 대내외적으로 취약한 입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북한이 중·소의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대내적으로는 전후 복구 및 건설과 김일성의 권

력을 공고히 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때였다.

그러나 1960년에 중·소 분쟁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대중·소 관계도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60년 6월 말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공산당 회의에서 중·소가 상호 비난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북한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국내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²⁴⁾ 1961년 7월 6일에 모스크바에서 ‘조·쏘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朝蘇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을 체결한 직후인 7월 11일에 북경에서 동일한 내용의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朝中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중·소의 경쟁적인 측면도 있지만, 북한의 대중·소 관계가 원만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1961년 10월의 소련 공산당 제 22차 대회에서 북한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었다.

(가) 소·북한 관계의 악화와 화해 필요성(1962~1964년)

북한의 신중한 중립적 입장은 중·소 분쟁이 악화되고 국제 정세가 변화면서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 운동으로 1956년의 ‘8월종파사건’까지 겪었으며, 미국과 대결하고 있는 김일성으로서는 소련의 평화 공존 정책이나 유고와의 관계 개선이 불만스러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한에서의 군사 혁명과 미국의 쿠바 및 베트남 개입도 김일성을 우려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복합적 요인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쿠바 사태 이후 중국 쪽으로 편향하게끔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62년 10월의 쿠바 사태 때, 소련이 미국의 위협적인 강경 자세에 밀려 미사일을 철거한 결정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의 안보와 소련의 보호에 관하여 심각하게 재고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는 1962년 12월에 열린 노동당 제 4기 제 5차 중앙 위원회 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특히 군사면에서 ‘자위로선’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련에 실망한 북한이 중국쪽으로 기울자 소련은 북한에 대하여 압력을 가했다. 소련의 원조가 중단되고, 1962년 제 12차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대회 및 1963년 1월 동독의 사회 통일당 제 6차 당 대회에서, 북한은 중국편을 들다가 수모를 당했다. 이에 대하여 <로동신문> 1963년 1월 30일

자 사설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어느 당도 형제당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하거나, 형제당을 비방해서도 안 된다는 친중 노선을 강력히 표명했다. 북한의 친중 노선은 1963년 5월 최용건(崔庸健)의 중국 방문과 유소기(劉少奇)의 9월 15일 평양 방문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해 10월 28일자 <로동신문>의 “사회주의 진영을 옹호하자.”라는 사설은 다시금 소련의 중국 고립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고, 아울러 소련 원조의 대 북한 내정 간섭 수단화를 공박했다.

소·북한 관계의 악화는 오래 계속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우선 북한은 한·미 양국과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강력한 우방의 지원을 필요로 했으며, 미국 후원하의 한일 관계 정상화 움직임과 베트남 전쟁의 확대(擴戰)도 북한 지도층을 우려케 했다. 또한, 소련의 경제 원조 중단으로 북한의 제1차 7개년 계획이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²⁵⁾ 경제 발전의 차질은 북한이 제1차 7개년 계획을 1970년까지 3년 연장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²⁶⁾ 이를 통하여, 약소국의 강대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책이나 대결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가를 알 수 있으며, 이데올로기나 심리적인 측면이 중시된 외교 정책 결정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련도 자신이 탄생시켰던 북한의 도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이며, 미·소 대결 및 경쟁을 고려하거나 중·소 경쟁을 생각할 때, 전략적으로 중요한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어렵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1964년 10월 흐루시초프가 실각함으로써, 북한은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호기를 맞게 되었으며, 역시 관계 개선 필요성을 느끼던 소련의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소·북한 관계가 악화되었던 시기의 양국 관계를 돌이켜볼 때,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군사·경제적 외교 정책 수단을 지닌 소련측에 여유가 있으며 북한의 대소 독자 노선과 반발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소·북한 화해와 불편해진 중·북한 관계(1965~1967)

호루시초프의 실각은 소·북한 양국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북한은 1964년 11월 소련 혁명 47주년 기념식에 제 1부 수상 김일(金一)을 파견했으며,²⁷⁾ 1965년 2월에 코시킨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정상화되었고, 중단되었던 소련 원조가 재개되었다. 결국, 이념 또는 감정보다 실용주의적인 국익 추구가 우선이라는 점을 북한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다.

그러나 소련과의 관계 개선은 문화 혁명의 와중에 휩쓸린 중국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이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강력한 자주 논선 표명의 노설을 게재한 배경에는,²⁸⁾ 모택동(毛澤東)이 주재했던 중국 공산당 제8기 제11차 중앙 위원회 회의가 폐회일인 8월 12일에 성명 발표를 통해, 소련 지도층의 수정주의를 극렬히 비난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여야 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현대 수정주의 간의 투쟁에 중도 노선이란 있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선언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²⁹⁾ 즉, 북한 지도층은 소련 지도층을 현대 수정주의자로 규탄하는 중국 공산당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북한 지도층의 공세적 방어는 그 해 10월의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라는 김일성의 연설에서 교조주의와 현대 수정주의 양자를 모두 비판한 데서도 발견된다.

1967년 1월에는 홍위병들이 북한 내에 정변이 있었다는 대자보를 붙이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2월에는 김일성을 가리켜 수정주의자이며 호루시초프의 제자이고, 문화 혁명을 중상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모택동(毛澤東)의 명예를 더럽힌다는 내용의 인신 공격 사태까지 나타났다.³⁰⁾ 물론, 이러한 사태는 양국간의 관계나 양국 공산당간의 공식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중국 외교부마저도 홍위병의 행패로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겠지만, 양국 관계의 변화를 일부 반영하고 있음을 전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중·북한 관계가 소원해지기는 했어도, 1960년대 전반기의 소·북한 관계 악화와 같은 사태는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당시 중국 사회의 혼란과 중국의 전반적인 대외 관계 악화를 생각한다면, 북한의 대 중국 관계

가 특별히 나빴었다고 말하기도 힘들다. 북한이 중국을 멀리할 이유가 있어 소련쪽으로 향한 것도 아니고, 중국 정부나 공산당이 북한을 비판한 것도 아니었다. 문화 혁명 기간 양국의 지도자들이나 공식 언론들은 상호 비난을 삼가했었다. 문화 혁명의 혼란이 수습되면서, 중국의 주은래(周恩來) 수상은 우선적으로 1970년 4월 5일부터 7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양국 간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다시금 공고히 하였다.

1960년대는 북한의 대중·소 관계를 평가할 때, 중·소 관계의 악화로 북한이 시련을 겪고,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면서 중·소 양국 모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기간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중·소의 압력을 피하면서 국익을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북한의 자주적 입장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했던 기간이었다. 이 기간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중·소 분쟁의 격화로 크게 분열된 시기로서, 북한의 주체적 입장 표명은 이에 힘입은 바가 컸던 것으로, 북한이 중·소 사이에서 능동적으로 등거리 외교를 전개했다든지 자주 노선을 택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이다. 북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웃 동맹국들과의 관계 악화 내지는 불편한 관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세적 입장에 놓여 있었던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 데탕트 시대의 대중·소 관계

데탕트 시대의 도래는 북한에게도 대외적인 기회와 여유를 부여하였다. 1970년 11월의 노동당 제5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얻어맞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있다.”³¹⁾고 정세를 낙관했다. 그는 닉슨의 중국 방문 계획과 관련하여, “제국주의 진영내부가 혼란상태에 빠져 있으며, 전반적정세는 혁명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다.”³²⁾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낙관론의 배경에는 닉슨 독트린의 출현과 1971년 봄 남한에서의 미 7사단 병력의 철수가 있었다.

데탕트의 개막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중·소에 대한 북한의 의존 필요성이 감소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북한의 대외 관계 확대의 기회와, 특히 대남 관계 개선 및 대미 관계 개

선의 가능성을 의미했다.

중국과 소련이 각각 미국과의 관계를 화해 또는 호전시키고 중·소간의 긴장도 완화되어 가는 동안, 북한은 나름대로 대외 관계의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1972년에 아프리카 7개국을 포함한 9개국과 수교하고, 1974년에는 인도와 이란 및 스웨덴 등 무려 15개국과 수교하였다. 1974년에도 리비아, 라오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15개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다음 해에는 태국, 싱가포르, 에티오피아, 포르투갈 등 14개국과 수교하는 성과를 올렸다.³³⁾ 특기할 사실은 북한이 1970년 12월 20일의 말타와의 수교를 시작으로 1975년까지 서구 9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또한 1973년 5월 유엔 산하 세계 보건 기구(WHO)에 가입함으로써, 미국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다른 국제 기구들에 가입할 수 있는 문호도 열렸다. 북한의 성공적인 외교 활동 전개는 유엔에서의 남북한간 외교 경쟁에도 큰 영향을 미쳐, 1975년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던 것이다.

데탕트를 맞아 소련과 중국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1972년부터 소련은 북한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월남 패망 직전인 1975년 4월 김일성이 북경을 방문하여 위협적인 대남 발언을 했을 때 중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소련이 김일성의 1975년 동유럽 국가 방문시에 그를 초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소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화해하고 미국 세력이 동남아에서 물러가는 시점에서, 북한을 지원하여 미국을 자극하는 행위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라) 정세의 변화와 북한의 적응

1978년경부터 데탕트가 퇴조하기 시작하고 미·중·일간의 3각 협력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다시금 중·소 관계가 긴장되는 방향으로 움직이자, 북한도 새로운 정세 변화에 적응할 필요성을 느꼈다. 1978년 12월 베트남의 캄푸치아 침공과 1979년 2월 중국의 베트남 무력 응징은 중·소 관계를 긴장시켰다.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중·소 관

계 및 미·소 관계를 악화시킨 반면, 미·중 관계를 크게 강화시켰다. 이러한 사태는 데탕트 기간 무난하게 중·소와의 관계를 유지시켰던 북한의 입장을 다시금 난처하게 만들었다.

북한은 중국과 함께 폴뭇 정권을 지지하면서, 베트남의 행위를 가리켜,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지배주의’를 비난하면서 베트남군의 즉각 철수를 권고하였다.³⁴⁾ 그러나 중국이 베트남 영토를 침입했을 때, 북한은 침묵을 지켰으며, 1980년 2월의 소피아에서 개최된 12개국 사회주의 국가 대표단 회의에서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옹호하는 공동 발표문에 동조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조심스러운 중립적 입장은 서서히 소련쪽으로 변해갔다. 그 이유는 미·중·일 협력 관계의 형성에 대한 북한의 불안과 소련의 적극적인 북한 유인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은 정세 악화에 따라 데탕트 시기보다 북한을 더 필요로 했으며, 북한은 레이건 행정부의 출범과 중국의 개혁 정책 및 남한 내 사정 때문에 안보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소련에 접근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1983년 9월 소련의 KAL기 격추 사건과 10월의 아웅산 사건은 소·북한 관계를 더욱 접근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중국은 1981년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조자(趙紫陽) 수상의 북한 방문과 1982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호요방(胡耀邦) 총서기 및 실력자 등 소평(鄧小平)의 평양 방문 및 1982년 9월 16일부터 26일까지의 김일성 중국 초청 등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은 소련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1984년 5월 김일성은 23년 만의 소련 방문 기회를 얻었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는 훨씬 가까워졌다. 그의 방소 후에, 소련의 고위층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하기 시작했으며, 소련은 1985년부터 최신 무기들을 북한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소련은 MIG-23, MIG-29, SA-5, SU-25 등의 무기를 원조하는 대가로 북한 영공 통과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의 실리 외교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자국의 현대화에 여념이 없으며 북한을 지원하는 데 한계를 느끼는 중국보다는, 소·북한 접근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군사 장비 및 경제·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을 북한이 선택했던 것 같다. 더구나 북한 지도층은 호요방과 조자양의 과격한 개혁 및 개방 정책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으며, 미·일·한 3국의 결속에 비판적인 소련의 입장에서 공통 이익을 발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1985년 3월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등장하여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과감한 개혁 및 개방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외 정세를 크게 변모시켰다. 그는 INF 폐기 협정 체결과 네 차례의 미·소 정상 회담을 통하여 미·소 관계 및 동·서 관계를 크게 호전시켰으며, 동유럽 국가들의 개혁 정책을 지원 또는 권유하고,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사멸을 선언했다. ‘새로운 정치적 사고’를 강조하는 고르바초프 외교는 이미 아프가니스탄의 소련군을 철수시켰으며, 지난 9월 캄푸치아 주둔 베트남군의 철수마저 완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르바초프는 3단계에 걸쳐 1999년 말까지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일소하자고 1986년에 제안했다.³⁵⁾ 그는 또한 1988년 12월 7일 유엔 연설을 통해, 1991년까지 동유럽 3국으로부터 소련군 5만 명과 소련 탱크 5,000대를 철수시키며, 1990년까지 소련군 50만 명을 감축시키겠다는 극적인 일방적 재래식 군비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³⁶⁾

고르바초프의 ‘신사고(新思考)’에 의한 대담한 제안과 실천은 이미 국제 정세를 크게 변화시켰다. 헝가리, 폴란드, 동독에서의 최근의 연속적인 정치적 변혁은 유럽의 기본적인 알타 체제를 크게 동요시키고 있으며, 동·서 관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³⁷⁾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던 미국도, 동유럽의 과격한 개혁을 허용하는 소련의 변한 모습을 차츰 믿는 듯하며, 고르바초프의 정책을 지원하려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서구의 국가들도 소련의 과감한 정책 제안들과 동유럽에 대한 인내 및 관용을 놀라와하면서 환영하고 있다.

소련 외교 정책에 있어서의 신사고는 아시아 정책에도 적용되고 있다. 1986년 7월 28일 블라디보스톡에서 행한 연설에서,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아·태(亞太) 지역 국가임을 자부하면서 이 지역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현실의 인정 및 이해’ 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과의 선린 및 협력 관계를 호소했고, 일본과의

경제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으며, 미국이 큰 태평양 국가이며, 이 지역의 안보 및 협력 문제를 위해 미국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한반도에 관하여는 긴장 해소 및 민족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음을 지적하고, 진지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³⁸⁾

소련은 남북한에 대하여 어찌보면 모순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소련 외상 세바르드나제는 1986년 9월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가 아·태 지역에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분쟁지라고 지적한 후, 한반도 분단 종식의 유일한 장애는 주한 미군이라고 주장했다.³⁹⁾ 주한 미군에 대한 지적은 1982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중·소 관계 정상화를 매듭짓기 위하여 지난 5월에 북경을 방문했던 고르바초프에 의하여 다시금 제기되었다.

소련은 한반도가 심각한 분쟁 지역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에 최신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는 모순을 보이는데, 소련 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미국이 F-16기를 남한에 판매한 것을 상기시키거나, 숫적으로는 열세지만 남한의 무기 체계가 질적으로는 우수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소련은 북한을 지원하면서, 남한과의 교류·협력 관계 증진에 힘을 쏟고 있는 이중의 대외 정책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소련은 헝가리, 폴란드 등의 동유럽 국가들이 남한과 수교하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유연성을 보여 주는 반면에, 북한을 의식하여 남한과의 정치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소련은 정치적 관계를 회피하면서도, 경제적 관계가 확대되면 정치적 관계로 진행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 소련은 경제적 협력의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대한(對韓) 접근을 계속하여, 특히 경제계 및 학계 인사들과의 접촉을 빈번히 하고 있다.⁴⁰⁾ 소련인들은 한국측의 대소(對蘇) 교류가 너무 신중하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현추세가 계속되면 국교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한다.⁴¹⁾

북한은 소련의 점증되는 남한과의 교류·협력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소련 내에서 한국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유엔 주재 소련 대표부 대변인 데니소프는 한국이 1990년에 유엔 가입을 신청하면 반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면서, 유엔에 모

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소련의 ‘국제 경제 및 국제 관계 연구소’도 민주당과의 지난 10월 28일자 공동 성명에서 “가까운 장래에 한·소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⁴²⁾고 발표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이 지난 10월에 내놓은 통일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평이 소련 공산당 중앙위에서 발행하는 〈소비에트 카야 로시아〉지에 게재되는 일까지 나타났다.⁴³⁾ 이러한 소련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만한 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소련 지도층의 교체나 또는 천안문 사태 이후로 보수화된 중국 지도층의 지원을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국내외적 평판은 확고해지고 있으며, 그가 실각한다 해도, 소련 대외 정책 행태의 특색이 이념보다는 국익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소 관계의 정상화로 인하여, 북한이 중·소의 경쟁을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중국은 당분간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에 힘쓰겠지만,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교류 및 협력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소련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발 늦게나마 공동 보조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단, 중국은 자신도 대만 문제가 있어 한국과의 정치적 관계에는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 북한의 위안이 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어떤 경우라도 중·소 양국과의 관계를 그르칠 수는 없으며, 중·소의 대한(對韓)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북한은 중·소와의 관계를 슬기롭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1960년대 경험에서 충분히 배웠다. 북한은 또한 냉전 시대가 지나갔고, 강대국의, 또는 강대국들간의 이해 관계가 북한과의 동맹 관계에 우선함을 알고 있을 것이며, 중·소로부터의 경제·군사·외교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아무리 중·소의 대외 형태에서 불만을 느끼더라도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는 삼가하고 자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대중·소 정책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조정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강대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약소국 외교의 특징이기도 한 것이다.

(2) 북한의 대미·일 적대 관계

북한의 대중·소 관계와 정반대로, 대미·일(對美日) 관계는 고도의 불신감과 적대감으로 특징지어지는 적대 관계이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안보에 위협이 되며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주한 미군은 증오의 대상이 되며,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북한의 최고 목표가 되어 있다. 일본은 아·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이며, 한·미 양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는 점과 점증되는 군사력 강화 때문에, 북한의 불신과 적대감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약소국의 한계 및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여, 미·일에 대한 접근 및 관계 개선을 모색하여 왔다.

1) 북한의 대미 적대 행태와 요인

지난 40여 년간의 미·북한 관계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지극히 적대적이었다. 미국은 북한의 무력 통일 기도를 무산시켰을 뿐 아니라, 휴전 후에도 미군을 계속 주둔시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지하여 왔다.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남한을 경제·군사·외교적으로 지원하여 왔으며, 국제 사회에서 북한을 고립 또는 견제하는 데 주된 역할을 맡아 왔다. 미국은 북한을 폐쇄적이고 호전적이며 행태를 예측하기 힘든 국가라고 경계하며 경멸하기 때문에, 주한 미군의 존재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으며, 북한과의 대화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다.

미·북한간의 적대 관계는 상호 작용에 의하여 강화되어 왔으며, 지금은 뿌리가 너무 깊다. 미국은 1968년 1월의 푸에블로 호 납치 사건, 1969년 4월의 EC-121기 격추 사건, 1976년 8월의 판문점에서의 두 명의 미군 장교 살해 사건 등을 도발해 온 북한의 도전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를 규탄하며 경멸한다.⁴¹⁾ 미국은 1983년의 랭군 사태나 1987년의 KAL-858기 격추 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테러 국가로 지칭하여 기피하여 왔다.

한편, 북한의 대미 감정 및 행위는 보다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첫째, 심리적으로 미국은 북한에게 두려운 존재이며 좌절감을 안

거 주는 나라이다. 1866년의 서면 호 사건, 한반도의 분단, 한국전 기간의 무자비한 폭격 등의 과거사를 제외하고도, 미국은 현재 한국에 4만 3,000명 규모의 최신 무기로 무장되고 잘 훈련된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팀스피리트’ 군사 훈련을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36년 동안 조선을 지배했던 일본을 보호하고 소위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불신감과 적대감은 직접적인 위협 인지 외에도, 역사적으로 외세에 의하여 지배받고 간섭받아 온 경험에서 오는 외세 혐오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이는 북한이 동맹국인 소련 주도하의 경제 기구인 코메콘(CMEA; COMECON)에 가입하기를 기피하는 데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인 미·중·일·소가 모두 한반도를 침략했거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대미 행태는 경직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와 이를 조선의 구체적 실정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적용했다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북한의 모든 국내외 정책 및 활동의 지침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이데올로기 중시는 미·일·한 등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들 및 반미적 또는 반서구적인 제3세계 국가들과의 유대 및 협력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북한은 특히 자본주의의 본산(本山)이라고 믿고 있는 미국 사회 및 미국 정책을 극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보는 미국 사회는 소수 특권층 사람들만이 잘살고 미국인의 대부분이 가난과 억압과 착취와 실업에 시달리며, 평등 원칙이 결여된 비민주적이며 온갖 병폐와 차별이 있는 사회로서 나쁘게 묘사되고 있다.⁴⁵⁾ 이렇듯 부정적이고 균형을 잃은 북한의 대미 인지(認知)가 역시 부정적인 미국의 대 북한 인지와 상충될 때, 양국 관계는 적대적 관계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셋째, 북한의 대미 적대감의 핵심은 주한 미군의 존재이다.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군의 전쟁 방지를 위한 정치·군사적 역할을 평가하는 반면에, 북한은 초강대국 군대인 미군의 주둔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지하며 통일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북한은 초강대국

인 미국의 주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직접적인 도발을 자제하여 왔다. 미국의 대외 정책 비난, 주한 미군의 잔류 규탄 또는 강경한 미군 철수 요구, 세계 여론에의 호소, 반미 세력과의 유대 강화 등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왔지만, 북한은 주한 미군 철수라는 목표 달성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누적된 좌절감이 때로는 미국에 대한 호전적인 도발 행위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미 도발 행위는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거나, 한·미 양국의 결속을 공고히 하는 역효과를 가져왔을 뿐이다.

2) 북한의 대미 관계 개선 노력

북한의 대미 행태가 극히 적대적이지만, 대미 관계에서 완전히 유연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북한도 기회가 주어지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미·북한 외교관들이 5회에 걸쳐 만났었다는 사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북한의 대미 접근 및 관계 개선 움직임은 데탕트의 개막과 함께 1970년 대 초에 나타났다. 닉스 독트린의 적용으로 1971년에 남한에서 제7사단 병력이 철수하고 1972년 2월 닉슨의 방중으로 미·중 화해가 이루어지자, 북한의 언론은 '미제침략자'라는 용어의 사용조차 삼가하기도 했다.

미·소 관계마저 SALT-I의 체결을 계기로 호전되어 데탕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자, 김일성은 1972년 5월 26일 〈뉴욕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미국이 중·소와는 관계를 개선하면서도 북한에 대하여는 비우호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정부는 큰 나라들과만 관계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응당 작은 나라들과도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표명하고, 아울러 데탕트로 주한 미군의 명분이 상실되었으니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대미 협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⁴⁶⁾

1974년 3월 25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에서 행한 허담의 보고를 통하여서는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실권을 가진 체약 쌍방(締約雙方)인 미국과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미국 의회에 보내는 평화 협정 체결

에 관한 편지를 채택하였다.⁴⁷⁾ 북한이 미 의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보낸 배경은 베트남 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 행정부가 불신을 받고 미국의 여론이 고립주의로 흐르는 것을 계산하여 미국인들의 여론에 호소하여 성과를 거두고자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⁴⁸⁾

북한은 대미 접근이 거부당하고 월남의 패망이 임박하자 통일에 관한 과격한 발언을 삼가하지 않았다. 1975년 4월 18일 김일성은 등소평이 주최한 연회석상에서,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하나의 민족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전쟁에서 잃을것은 군사 분계선이며 얻을것은 통일뿐이다.”라고 호언했다.⁴⁹⁾ 그러나 이런 북한의 도전적 발언은 한·미 양국의 경각심만 높였을 뿐이다. 슐레징거(James Rodney Schlesinger)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한국과 상호 방위 조약 관계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북한이 군사적 모험을 할 경우 “적의 심장부를 공격하여 그 군사력을 파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⁵⁰⁾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1976년 8월 판문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북한에게 단호한 결의를 보이자, 북한은 ‘유감’을 표시하는 형태로 후퇴하고 말았다.

대미 관계에서 힘의 한계를 느끼는 북한에게, 주한 미군의 철수를 공약한 카터(James Earl Carter)의 대통령 당선은 행운이었다. 왜냐하면 카터는 북한에게 반대 급부를 요구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핵무기와 지상군을 남한으로부터 철수시키고자 했기 때문이다.⁵¹⁾ 카터는 취임 직후인 1977년 2월 24일 북한, 베트남, 쿠바 등과 화해를 모색하고, 우호 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3월 9일에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제안을 철폐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국무성은 3월 18일 북한 등지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카터 행정부의 유연한 대 북한 정책에 고무된 북한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파키스탄의 부도 수상을 통하여 1976년 12월과 1977년 1월 사이에 2회에 걸쳐 미·북한간의 직접 회담을 희망하는 서신을 카터 대통령에게 전했다. 1977년 3월 28일 외교 부장 허담은 밴스 국무장관에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자는 내용

의 서한을 보냈다. 북한은 1977년 8월에 북한을 방문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을 통해서도 대미 협상 의사를 미국에 전달했으며, 외국의 주요 언론인들과의 회견을 통해서도 대미 직접 협상을 모색했다.⁵²⁾

북한의 발언들을 보면 카터 행정부의 대한(對韓) 정책에 많은 기대와 동시에 불확실한 감을 품었음이 나타난다. 김일성은 1977년 신년사에서 대미 협정에 관한 희망을 피력했고, 7월 3일 NHK 해설 위원 오가타(諸方彰)와의 회견에서는 “주한미군 철수공약은 좋은 일이나, 워싱턴의 목소리는 공약과 차이가 있다.”고 기대와 불신감이 섞인 반응을 보여 주었다. 9월 29일 비동맹 외상 회의에 참석한 허담은 UPI 기자와의 회견에서, “북한은 대미 적대 관계를 추구하지 않으며, 미국과의 협상은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고 수행되어야 하고, 북한은 침략 의사가 없다.”고 언명했으며, 〈아사히 신문(朝日新聞)〉과의 회견에서도 “북한이 미국 정책 때문에 적대 관계에 놓여 있으며, 카터 대통령이 공약대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킨다면 이는 대단히 좋은 것이며, 이 같은 정책을 미국이 진행시켜 나간다면 미국과의 이상한 관계는 제거될 것이다.”⁵³⁾라고 희망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북한 지도층의 발언을 보면, 북한이 카터 행정부에 걸었던 기대와 동시에 불확실하다는 회의감을 느낄 수 있으며,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의 불안감과 불신을 확인해 주듯, 주한 미군 철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카터 대통령은 미 군부와 의회 및 한·일 양국의 반대에 부딪쳐, 그의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카터는 1977년 5월 26일 주한 미 지상군을 4~5년 내 철수시키겠다고 재확인했었다. 그러나 그는 1978년 12월 말까지 주한 미군 제1진 6,000명이 미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힌 1978년 3월 10일자 브라운 장관 발표에서 후퇴하여, 4월 21일 성명에서 연말까지 비전투 요원 2,600명은 철수하되 전투 부대는 1개 대대만 철수한다고 수정하여 발표했다. 이어서, 1979년 1월 15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카터 대통령은 철군 계획이 재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⁵⁴⁾ 드디어, 2월 10일 카터 대통령은 북한 군사력 증강에 관한 자료, 미·중국고 정상화의 영향, 남북한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평화 제안 등 세 가지의 평가를 내릴 때까지 주한 미군 철수를 잠정적으로 중지한다고 발

표하기에 이르렀다.⁵⁵⁾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북한을 크게 실망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동안 자제력을 발휘했다. 1979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 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미국 선수 및 기자들을 초청하고, 평양 시내의 반미 선전물들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보였던 것은 북한이 그 때까지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⁵⁶⁾

그러나 카터 대통령이 1979년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남한을 방문하여 미군의 계속 주둔을 확인하고, 7월 20일에 미 2사단 병력을 잔류시키고 철군 시기 및 속도를 1981년에 재검토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북한은 인내를 잃고 격렬한 대미 비난을 퍼부었다. 7월 22일자 중앙 통신은 카터의 철군 중지를 가리켜, “시대조류에 대한 도전이며, 미국인들에 대한 배신이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가장 큰 공약을 했으나 가장 파렴치하게 짓밟았으며, 그의 3당국자회의 제안도 분열책동과 술책임이 분명하다.”⁵⁷⁾라고 신랄한 공격을 했다. 카터 행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북한의 희망은 깨어졌으며, 미국 정치인 및 군부 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이고 반공적인 레이건(Ronald Reagan)의 대통령 당선은 북한의 대미 접근 및 관계 개선 희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레이건은 취임 직후인 1981년 2월 초 전두환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하여 양국 관계를 다짐하고, 주한 미군 철수 계획을 백지화시켜 버렸다. 북한은 레이건 정부를 반동적이고 호전적이라고 규정하고, 힘에 입각한 세계 전략 추구를 위해 전략적 요충인 남한을 이용하려 든다고 맹렬히 비난했다.⁵⁸⁾ 미군 철수 계획의 백지화와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및 대한 안보 공약을 확인하는 한·미 공동 성명에 대하여, 북한은 이를 침략적이고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레이건 대통령을 분별 없는 전쟁광이라고 규탄했다.⁵⁹⁾

카터 행정부 기간에 북한이 보여 준 대미 행태에는 분명히 희망적이고 호의적인 면이 있었으나, 북한의 레이건 정부에 대한 행태는 상당히 적대적이었다. 1977년 7월 미군 헬기 격추 사건 때, 북한은 사과를 요구함이 없이 단지 승무원들의 신원과 항공기의 이름만을 요구한 채, 부조종사

와 3명의 승무원 시체를 3일 만에 송환해 주는 호의를 보여 주었다. 1978년부터 국제 정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지만, 북한은 카터 행정부가 7월에 미군 철수 정책을 번복할 때까지 상당히 호의적이었으며 다방면으로 대미 접근을 시도했었다. 대조적으로, 북한은 ‘팀스피리트81’을 가리켜 ‘전쟁 접경정책’ 추구라고 비난하고, 한반도 정세를 푸에블로 호 사건 이래 가장 긴장된 상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⁶⁰⁾ 1981년 8월 26일에 발생했던 SR-71 미 정찰기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 사건은 북한의 대미 적대 감정이 얼마나 악화되었는가를 보여 준다.⁶¹⁾

그러나 북한은 별도로 대미 접촉을 추진하는 약간의 유연성을 보여 주었다. 1980년 7월 솔라즈 하원 의원과 클라프 연구원(研究員) 및 3명의 특파원을 받아들였으며, 그 뒤로도 한국계 미국인 학자들을 포함하여 커밍스, 자고리아, 모스코위츠, 맥도걸 교수 등을 초청하였다. 북한은 이들을 초청한 만큼 미국이 상응하는 호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⁶²⁾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미국 행정부와 의 직접 접촉이 어려울 때, 우회적인 의사 전달 통로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생각된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1982년 봄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 대사에게 양국간의 제반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김일성의 제안을 미국 정부에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³⁾ 이와 관련하여, 미국도 랭군 사태의 발생 직전인 1983년 9월 미 외교관이 제3국에서 주최하는 장소에서 북한 외교관과의 비공식적인 대화를 허용한다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었다. 북한은 랭군 사태 발생 하루 전에 중국을 통하여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제의한 바 있으며, 1984년 1월 10일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공동 회의에서 미 정부 및 의회에 보내는 서한을 채택하여 ‘3자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의했었다. 1984년 9월 19일 김일성은 이시바시 위원장 등 일본 사회당 방문단을 맞아, “주한미군의 철수를 계속 요구할것이나, 미·쏘간의 긴장상태가 계속되는 한, 미국이 바로 군대를 철수시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유연한 입장을 밝혔고, 이시바시 위원장은 주일 미 대사에게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으며 남침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김일성의 뜻을 본국 정부에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⁶⁴⁾ 물론, 랭군 사태의

여파로 미국의 반응은 냉랭하고 소극적이었다.

북한의 대미 접근 노력은 한국전 때 북한 지역에서 실종된 8,200명의 미군들의 유해 송환 문제를 미국측에 타진해 온 데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재향 군인 단체가 1987년중 북한을 방문하여 실종된 미군의 유해를 송환하도록 하자는 의사를 전해 왔다. 미 국무성은 1986년 11월 12일 이 문제에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북한 여행에 법적 장애가 없다고 밝힘으로써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보였다.⁶⁵⁾

미국은 1987년 3월 9일 다시금 대 북한 정책의 변경을 밝혔다. 즉, 미국은 중립적인 환경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대화를 해 올 때,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허담은 1987년 9월 25일 도이 다카코 일본 사회당 위원장을 맞아, 외교관끼리의 접촉도 단순한 의례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형식, 장소, 지위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싶다.”⁶⁶⁾고 미국의 적극적인 대 북한 정책을 촉구했다. 김일성도 도이 위원장에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문호를 닫은 적은 없고, 대미대화를 하겠다는것은 우리의 일관된 자세이다.”라고 미국측의 호응을 희망했다.⁶⁷⁾ 한 가지 특기 사항은 김일성이 INF 폐기에 미·소가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동·서간의 긴장 완화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남북한 대화 진행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희망적인 견해를 밝혔다는 점이다.

북한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미·북한 관계는 1987년 말의 KAL-858기 사건으로 다시금 크게 악화되었다. 1988년 2월 4일 미국 하원의 아·태 지역 소위원회는 국가 지원 테러리즘을 규탄하고, 세계 모든 정부들이 교역의 중단 등 제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클라크 국무성 아·태 지역 부차관보는 KAL-858기 사건이 미·북한간에 신중하게 구상된 평화로운 접촉 제의 및 관계 개선의 전망을 망쳐 놓았다고 북한을 신랄히 비난했다. 북한의 테러 행위는 분명히 미·북한 관계를 더욱 후퇴시켜 버린 것이다.

그러나 서울 올림픽의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북한을 회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미 하원에서의 결의안이 채택된 지 4개월 만인 1988년 6월 3일 북한 ‘땀’ 전문가 4명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발표가 국

무성에서 나왔다. 곧 이어서 한국의 '7·7선언'이 나오자, 국무성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건설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바란다는 정식 호칭 사용과 함께, 외교관 접촉 허용 문제에 관하여 한국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클리 대변인은 미·북한 관계의 진전 가능성을 시사했던 것이다. 올림픽이 무사히 끝난 뒤, 미국과 북한의 북경 주재 참사관급 외교관들이 이미 5차에 걸쳐 만났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러한 접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 가능성은 증대될 전망이다. 국제 정세가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상황에서 미·북한 관계만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소 및 한·중 교류와 협력이 증대하면,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된다. 소련과 중국은 미·북한 양국에게 관계를 개선토록 압력을 가할 것이며, 북한의 현실적 필요성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10월 전(前) 국무성 차관보 시거(Gaston Sigur)가 평양을 방문하고 허담을 미국에 초청한 사실은 비록 비공식 차원이긴 하지만, 미·북한 관계가 개선되어 가리라는 중요한 시사가 된다. 북한은 기회가 허락하면 무망(無望)한 대결 정책보다는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안보 및 통일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여 왔으며, 미국은 북한을 개방 사회로 이끌어 내려는 생각을 해 왔기 때문에, 1990년대의 신데탕트 시대를 맞아 미·북한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해 볼 수 있다.

3) 북한의 대일 정책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적대국이지만, 미국처럼 북한의 안보와 통일에 일차적으로 위협이 되거나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일본에 대한 인지는 식민지 통치와 항일 투쟁의 아픈 역사적 경험 때문에 부정적이며,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과 이에 바탕을 둔 군사력의 신장은 불신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고, 특히 북한은 한·미·일의 3각 군사 협력 체제의 형성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북한의 대일 정책 목표는, ① 미·일 동맹 관계의 밀착을 방지하고, 특히 한·미·일 3각 군사 협력 강화를 저지하며, ② 일본의 비무장·중립

정책을 지지·성원하여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고, ③ 한·일 관계의 긴밀화를 저지하며, 가능하면 일본이 남북한에 대해 균형 잡힌 외교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④ 경제·기술 수준이 높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과의 경제 교류·협력의 증진을 도모하며, ⑤ 남북한 경쟁의 관점에서 60여만 재일 교포들의 지지와 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일 접근은 일찍부터 시도되었다. 1955년 2월 25일 북한의 남일(南日) 외상은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들과 평화 공존의 원칙에서 출발하여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와 무역, 문화 관계 및 기타 조·일(朝日) 관계 수립 발전에 관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⁶⁸⁾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바라면서도, 현실을 인정하여 경제·문화 교류의 촉진을 제의한 것인데, 이러한 접근 전략은 그 후에도 여러 번 강조되었다.

북한은 대일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린 우호 정책을 강조하면서 다방면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국전을 전후로 일본 공산당과의 연계와 60여만 재일 교포들을 조직하는 데 노력을 쏟았다. 처음에는 '조선민주통일전선'이 조직되었으나, 1955년 5월 해체되고 노동당의 직접 통제 하에 '조총련(朝總聯)'을 설립하였다. 20여만 명의 조총련은 북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친북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1954년 3월에는 '일·조무역협회(日朝貿易協會)'를 설립하여 경제 교류를 실시하고, 1959년 8월에 협정을 통하여 재일 교포의 복송 사업을 추진시켰다.

대탕트 시대를 맞아 양국은 1972년 1월 23일에 '일·조무역촉진합의서(日朝貿易促進合意書)'를 체결하고 교역 규모를 확대시켰다. 일·북한간의 교역 규모는 소련과 중국 다음으로 크다. 일본의 정·경(政經) 분리 정책이 북한과의 활발한 경제 교류를 가능하게 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지불 능력 한계로 외채를 상환하기가 힘들어지면서 대일 경제 교류가 순조롭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일본의 전통적인 친미와 친한 정책 때문에 수교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다각적인 접촉을 통하여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북한은 일본의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을 초청하여 그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민외교' 방식을 활용하여 왔다. 특히, 사회당과

의 협력 및 공동 보조를 통하여 북한 입장을 선전하거나 일본의 대 북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⁶⁹⁾ ‘일·조우호촉진의원연맹(日朝友好促進議員聯盟)’ 등을 통하여 북한의 입장을 반영시키기도 한다. 북한 지도층은 일본 언론인들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북한의 정책 노선이나 희망 사항을 밝히기도 하며, 북한 입장을 선전하기도 한다.

북한이 일본 사회당과 긴밀한 접촉 및 협력을 해 온 데 비하여, 일본 공산당과는 사이가 좋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1979년 당 기관지에 김일성 개인 숭배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바 있으며, 1985년 4월에는 당 강령을 수정하여 한반도에 두 개 정부가 존재함을 인정했고, 1985년 11월에는 일본 어부들에 대한 북한의 총격 행위를 규탄하기도 했다.⁷⁰⁾ 일본 공산당의 북한에 대한 비판이 북한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데, 요즘은 일본 사회당마저 남북한을 현실적으로 모두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북한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 북한 정책을 보면 반북한(反北韓) 정책이 점차 완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토 내각(1964~1972)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켰고, 1969년 11월의 닉슨·사토 공동 성명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다나카 정권은 북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였으며 양국간의 경제 교류를 확대시켰다. 1975년에 등장한 미키 내각은 8월의 포드·미키 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유지는 일본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1977년 3월 카터·후쿠다 회담에서는 일본 및 동아시아의 안전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유지가 계속 ‘중요함에 유의’했다는 식으로 변했다. 이는 일본의 실리 외교에도 기인하지만, 어느 정도는 북한의 인민 외교 등을 통한 노력의 결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977년 1월 27일 김일성은 ‘일·조우호촉진연맹’의 구노(久野忠治) 회장과 의 회견에서, “일·조양국관계는 국제적인 제요인 때문에 급속히 발전할수는 없으나, 현재와 같이 왕래가 된것도 과거에 비하면 개선된 상태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에 대하여 반대나 이의도 없고, 관계개선은 우리나라가 평화통일될 때까지 그 이상의 진전은 어렵다고 생각한다.”⁷¹⁾고 평가 전망했다. 아마도, 김일성의 이러한 평가는 정확할지 모른다. 일본은

안보상의 중요성이나 일·북한 교역 규모의 50배나 되는 한국의 경제적 중요성이나, 미·일 관계의 중요성으로 보아, 쉽사리 친한(親韓) 정책을 바꾸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요즘같이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과, 특히 중·소의 대한 교류·협력 증대를 감안할 때, 일본이 미국보다 앞서서 대 북한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5. 북한의 대남 정책

한반도 분단 및 그로부터 파생된 결과들은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깊숙한 영향을 미쳐왔다. 남북한은 분단으로 발생한 결과들을 관리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로 인하여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즉, 남북한은 절실한 안보 문제와 최상 목표인 통일 문제 외에도 경제 문제 해결과 체제 경쟁과 정통성 경쟁 등을 벌여 오면서, 많은 분쟁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어 왔다.

(1) 대남 정책 목표와 기본 전략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 사상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를 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극히 부정적이고 왜곡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을 강점하여 가혹한 식민지 통치를 실시하여 왔으며, 독재자들을 앞세워 한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유린했다고 미국과 한국 지도층을 규탄해 왔다. ‘광주 사태’와 같은 민족적 비극 등을 외세에 의한 국토 분단 때문인 것으로 보고, 통일의 실현만이 예측을 벗어나게 하고 독립과 번영의 길을 약속한다고 주장 또는 선전한다.⁷²⁾ 즉, 북한은 미국이 한국 사회에서의 모든 비극과 재난의 근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계급적 시각과 주체 사상의 자주적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통일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 즉,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입장에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목표가 포기되거나 크게 수정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5조와 노동당 규약 전문(前文)에는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대남 정책 기조가 명문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남 정책의 기본 전략은 1964년 2월 27일의 노동당 제4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과 1965년 4월 14일자 인도네시아 방문중 행한 김일성의 연설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조선혁명을 전국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3대 혁명 역량의 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북한 자체의 정신적·물질적 힘을 준비하여 한국인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1967년 1월 16일 최고 인민 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의 김일성의 연설에서 특히 강조되었다.⁷³⁾

둘째로, 북한은 자체 역량만으로는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가 힘들다는 한계를 인식하여, 남한 내의 혁명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 김일성은 “북조선 인민들은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투쟁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남조선혁명력량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남조선에서 혁명을 할수 없다.”고 단언했다.⁷⁴⁾ 북한은 한국 사회를 미국 및 미국과 결탁한 소수가 지배하는 사회로 단죄하며, 혁명 투쟁을 통해서만이 억압에서 해방되고 민주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 특히 사항은 평화적 방법은 환상이며, 오직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점이다.⁷⁵⁾

세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국제 혁명 역량의 강화로서, 세계 도처의 반제(反帝)·반미(反美) 세력과 유대를 강화하여 대미 공동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국의 힘을 분산·약화시키겠다는 전략 구상인 것이다.

북한의 대남 목표는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북한 자체의 혁명 역량에 한계가 있다.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의 수준을 훨씬 앞질러 GNP 규모에서 7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군사면에서도 한·미 연합 군사력은 질적으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로, 남한의 혁명 역량 강화도 북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6·25 체험과 그 동안의 반공 교육, 남한의 경제 발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남한의 자

유 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의 선전 및 선동을 약화시키거나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셋째로, 국제 혁명 역랑과의 유대 강화는 각국의 국익 우선 정책과 상호간에 복잡하게 얽힌 이해 관계, 비동맹권을 포함한 제3세계 국가들의 분열, 북한의 이미지 등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들 중에서, 북한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것은 남한 내에 급격한 정세 변화가 발생하여 '진보적' 세력이 출현하여 북한과 '합작·단결'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무력 사용의 위험성도 배제시킬 수 있으며, 북한의 뜻대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지도층이 과연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 한국 사회는 북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보수와 온건 및 혁신의 다양한 세력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혼란 가운데서도 유지·발전할 수 있는 체제 능력이 어느 정도는 갖춰졌고, 특히 최근의 소련 및 동유럽 사태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매력이나 호기심이 크게 감소되었음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한국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지도나 평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2) 북한의 통일 정책과 남북한 대화

한편,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1960년부터 꾸준히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은 남한의 상황이 혼란하고 불확실한 시기를 이용하여 "남한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수 없다면,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조선의 연방제를 제의한다."면서, 남북한에 현존하는 정치 체도를 존속시키고 양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양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자고 새로운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연방제 방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남북한 쌍방의 대표로 구성되는 '경제위원회'를 조직하고 아울러 미군을 즉시 철수시키고 남북한 군대를 10만 이하로 축소하자고 제의했다.⁷⁶⁾ 이 연방제 방안은 계속 보완되면서 오늘날까지 유일한 통일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1960년대까지 북한은 통일 문제의 유엔 상정이나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북한은 미국의 영향력이 강했던 시기에 유엔에서 한국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1970년 8월의 북한 정부 성명을 통해, 유엔이 한국 문제를 토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⁷⁷⁾ 제3세계 국가들의 숫적 증가와 대탕트 분위기에 힘입어, 북한이 기피해 오던 유엔에 진출함으로써, 남북한은 치열한 외교 경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유엔을 둘러싼 남북한 경쟁은 1975년 제30차 유엔 총회에서 서방측 결의안과 공산측 결의안이 동시에 통과되는 이변을 창출했다. 유엔에서의 최초의 승리를 맛 본 북한은 서방측 안과 종래 유엔 내에서의 한국 문제에 관한 결의들의 무효화, UNC 해체, 미군 철수 및 대미 평화 협정 체결을 적극 주장하고,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한국 문제 토의의 종식을 요구했다.⁷⁸⁾

이에 앞서, 남북한은 1972년 '7·4 공동 성명'을 통해, 통일은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며,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3대 원칙에 합의하는 극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자기들의 기본 입장이 반영된 사실에 만족한 듯싶고, 남한도 큰 이의가 있을 수 없었다.

1973년에도 남북한은 경쟁적으로 통일 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남한은 '6·23 선언'을 통하여 평화 유지와 내정 불간섭 및 불침략을 강조한 후, 유엔 등의 국제 기구에 동시 가입하는 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같은 날 김일성의 후사크 환영 연설을 통해, ① 군사적 대치 상태 해소, ② 다방면의 합작·교류 실현, ③ 대민족 회의 소집, ④ '고려연방공화국'의 단일 국호에 의한 연방제 실시, ⑤ 단일 고려 연방 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 가입 등 소위 조국 통일 '5대강령'을 제시하였다.⁷⁹⁾ 남한이 '선평화(先平和) 후통일(後統一)'의 입장을 중시했다면, 북한은 고려 연방 공화국이라는 통일 국가상을 제시했다는 점에 특색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2개월 후인 1973년 8월 28일 남북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책임을 한국측에 전가하였는데, 김대중(金大中) 씨 납치 사건은 남북 대화를 중단시킬 수 있는 좋은 구실이 되어 주었다. 뚜렷한 중단 이

유는 알 수 없으나, 남북한 대화를 고도의 계산과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진행시킨다고 볼 때, 유신 체제하의 남한 상황을 분석하여 대화 지속이 별로 이롭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듯싶다.

1980년대 북한의 통일 방안이나 관련된 제안들을 보면, 북한의 대남관 및 대화 전략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79년 예상 밖의 '10·26 사태' 및 '12·12 사태'를 맞이한 북한은, 1980년 1월 11일 김일(金一)의 명의로 된 편지를 이희성 육군 참모총장 등 정당과 여러 사회 단체의 11인에게, 이종옥(李鍾玉) 명의의 편지를 신현확 총리에게 보내, 남북 정치 협상 회의 및 남북 당국자 회담을 위한 의견 교환을 제의했다.⁸⁰⁾ 1월 21일 북한은 모스크바 올림픽에 파견할 단일 팀을 구성하자는 제의도 했는데, 남한측은 대회 6개월 앞둔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한간에 총리 회담 실현을 위한 실무 대표단의 접촉도 있었으나, 남한 내에 정치적 변화가 생기고 안정을 되찾는 듯싶자, 북한은 1980년 9월 24일, “한국에서 통일에 역행하고 대화의 근본목적에 배치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지속되는 형편에서 실무대표접촉의 계속이 의의가 없다.”고 중단하고 그 이유를 밝혔다. 북한은 남한의 정치 상황에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인지할 때는 대화에 적극적인 반면에, 상황이 불리하게 바뀌거나 이득이 없다고 인지하면 대화를 중지하거나 후퇴하는 행태 유형을 보여 준다.

북한과 달리 개방 사회인 남한 내의 정치 변동은 남북한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김한교(金漢敎) 교수는, 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남한 정치 상황에 관한 인지가 북한의 대남 행태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왔음을 확인했다. 반면에, 남한은 정치적 변동기에 처할 때, 남북한 대화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1972년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인상을 주었다고 김 교수는 평했다.⁸¹⁾ 북한의 대남 정책은 일관성을 보여 왔으나, 전술적으로는 북한의 내외 환경, 특히 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성을 보여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비하여, 국내 환경이 북한보다 복잡한 남한의 대북 행태가 소극적이었던 것은 이해가 간다.

북한은 1980년 10월의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

립 방안을 제시했다. 이 통일 방안은 상당히 구체적인데, 특색은 20년 전에 제안했던 '과도기적연방제'에 비해 '통일된 국가형태로서의 연방제'로 제시된 점이 주목된다. 통일 정부로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연방상설회의'를 조직하여 남과 북의 '지역정부'를 지도하며, 연방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자는 것이 요지이다. 또한, 고려 민주연방 공화국의 수립과 관련하여 '10대시정방침'을 제시했는데, 국가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의 자주 정책 실시, 경제적 합작·교류, 남북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 통일 이전의 대외 관계의 올바른 처리와 두 지역 정부 대외 활동의 통일적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⁸²⁾

이 연방제 방안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일안으로 오늘날까지 북한에 의해 계속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남한 사회의 '민주화' 실현은 논란의 대상이 되며, 과도기 체제가 아닌 '통일된 형태로서의 연방제' 주장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당 규약 전문에 명시된 내용과 비교할 때, 북한 연방제 방안이 비판과 의심을 받게 된다. 한편, 연방제 또는 연방주의 원칙들이 전세계에 걸쳐 적용되고 있으며, 1989년 9월 11일 남한측이 제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도 '남북 연합'이라는 연방주의를 수용한 과도적 통일 체제를 삽입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각각의 통일안을 어떻게 수정·보완하며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은 양측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3) 남북한 관계 전망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할지에 관해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제는 주변 환경 때문에 훨씬 어렵다고 생각되던 동·서독이 고르바초프의 개혁 및 개방 정책에 힘입어 먼저 통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남북한은 아직도 마음 속의 불신과 적대 감정을 감소시키는 작업조차 시작하여야 할 형편이다. 즉, 남북한은 통일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긴장 완화를 위한 신뢰 구축 조치들부터 취해 나가야 한다.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서로 대화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인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북한이 '남조선폭력혁명' 노선에 집착하여 남한 사회 내의 동조 세력이나 비판 세력에 침투하려 든다면, 아무리 자주와 평화 민족의 3대 원칙을 내세우며 연방제 통일 방안을 강조해도 긴장 완화나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남한으로서도 북한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행태가 특이하고 도전적이지만, 비판만 하지 말고 폭넓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대내외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북한을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접근해야 하겠다. 남한은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북한의 기본 목표들에 변함이 없다고 계속 거부 반응만을 보일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국내 사정과 급변하는 국제 환경의 영향으로 북한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진전이 있을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신사고'는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남조선혁명론'이나 당 규약의 수정이 필요하며, 교류와 협력과 신뢰 구축을 통한 긴장 완화가 절실한 과제임을 인식하여 현실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하겠다. 남한도 냉전 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 주한 미군 문제를 포함한 군비 통제 정책을 수립할 때가 되었으며, 북한에 단기적인 이익을 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남한에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양보와 타협 조치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동·서독은 남북한과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남북한이 독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

북한은 남한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 및 서울 올림픽 개최 등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남한의 성장과 국제적 지위 향상 때문에, 북한은 내심으로 불안감을 느낄지 모른다. 북한이 불안감과 경계심을 느낀다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롭지 못하다. 남한은 북한의 경제 사정, 권력 승계 문제, 고립된 국제적 위상 등의 취약점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이용하여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이 위축되거나 반발하지 않으면서, 개방과 개혁의 길로 나서도록 돕는 방안들을 강구하여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 나가야 하겠다.

1984년 9월 북한은 남한의 수재민들에게 구호 물자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했으며, 남한측은 이 제의를 현명하게 수락했다. 그 결과로 남북한은

귀중한 1985년을 맞이했었다. 즉, 분단 후 처음으로 151명씩의 이산 가족 및 예술단의 상호 방문을 성사시켰으며, 남북 경제 회담이 1984년 11월 5일부터 1985년에 걸쳐 5회나 열렸고, 적십자 본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5월, 8월, 12월에 3회 개최되었으며, 1985년 7월과 9월에 남북 국회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도 있었다. 1985년 10월에는 IOC 주재로 스위스의 로잔에서 남북한 체육 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서울 올림픽의 중요성 때문에, 1987년 7월까지 4회나 회담을 했다.⁸³⁾

남북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는 1986년 1월 20일 북한이 ‘팀 스피리트’ 군사 훈련을 이유로 대화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다시금 좌초되고 말았다. 이는, 북한이 남한 내 정치 상황을 관망하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나 통일에 대한 기대는 좌절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물론, 남한측도 대북 자세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좋은 기회를 잃고 말았다.

북한은 1986년 12월 30일 최고 인민 회의 제8기 제1차 회의에서 행한 1987년도 시정 연설에서 ‘남북 고위정치·군사회담’을 제의했으며, 1987년 1월 11일 정무원 총리 이근모(李根模)와 인민 무력부장 오진우(吳振宇) 명의의 편지를 노신영(盧信永) 국무총리와 이기백(李基白) 국방장관에게 전달했다. 내용은, ① 상호 비방 중지, ② 합작과 교류, ③ 군비 경쟁 중지 및 무력 축소, ④ 비무장 지대의 평화 지대화, ⑤ 대규모 군사 훈련의 중지, ⑥ 중립국 감시군의 조직에 관한 것 등이었다. 특기할 것은 미국의 참여에 관한 언급 없이 남북한이 직접 정치·군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총리와 총참모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회담을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의한 점이다.⁸⁴⁾ 이보다 앞서 나왔던 1986년 6월 17일 제의에서는 오진우 인민 무력부장이 이기백 국방장관과 립시 유엔군 사령관에게 군사 회담을 제의한 바 있었다.⁸⁵⁾

북한은 1987년 7월 23일자 정부 성명을 통해서 다시금 ‘다자간 군축협상’을 제의했다. 제의 내용은, ① 남북한 및 미국이 중립국 감독 위원회 대표들을 업저버로 참가시킨 가운데, 1988년 3월 제네바에서, 다자간 군축 협상을 개최하고, ② 1988년에서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남북한 병력을 감축하고, ③ 1992년까지 각각 10만 이하로 병력수를 유지하는 문제

를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이어서, 7월 30일 북한은 인민군 최고 사령부 보도를 통해, '7·23군축협상' 제의의 1단계 조치로 연내에 10만 병력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8월 6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는 군축 문제 논의를 위해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외무장관 회의를 제의했다. 이 제의의 배경으로 INF 폐기 합의와 남한에서의 '6·29선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88년 11월 16일 정무원 총리 이근모 명의의 편지를 남한의 이현재(李賢宰) 총리에게 보내 12월 중순쯤 판문점에서 '남북고위정치군사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 편지 내용에는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하고 총참모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7~9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북한이 11월 7일에 중앙 인민 위원회와 최고 인민 회의 상설 회의 및 정무원의 연합 회의에서 채택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에서 밝힌 남북한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의 완화 방안에 관하여 폭넓게 협의하자는 것이었다. 소위 '평화보장 4원칙'에 기초한 긴장 완화 방안은 ① 두 개 조선 반대 지향, ② 1991년 말까지 3단계의 미군 철수, ③ 3단계에 걸쳐 남북한 병력수를 1991년 말까지 10만 명 이하로 유지하는 문제, ④ 남북한과 미국 간의 3자 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및 남북한간의 '불가침선언'의 성사, ⑤ 남북한간의 비방 중지 및 합작·교류 실현, ⑥ 비무장 지대의 평화 지대화와 군사 연습 중지, ⑦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에 관한 내용들이었다.⁸⁶⁾

이 제의는 1986년 12월 30일자 김일성의 제의와 1987년 7월 23일 정부가 내놓은 '다자간 군축협상' 제의를 종합하고 구체화시킨 것이다. 시기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과 유엔 총회 연설(1988. 10. 18)이 나온 후이며,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또 미국의 대북한 완화 조치가 발표된 후에 제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제의가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한 포괄적으로 제시된 점은 주목을 요한다.

북한은 1988년 12월 6일에도 김영남(金永南) 외교부장 명의로 '포괄적평화방안'을 미국측에 별도로 보내 미군 철수와 남북한 간 군축을 위한 3자 회담을 제의하였다. 이어서 최고 인민 회의 제8기 제4차 회의(1988. 12.

12)에서 교체된 연형묵 총리가 1988년 12월 20일에 3차 회담을 열자는 편지를 보냈다.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 회담과 별도로 3차 회담을 제의한 것은 미국과 평화 협정 체결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⁸⁷⁾ 남한의 강영훈(姜英勳) 총리가 이에 대하여 12월 28일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 방안들을 토의할 ‘남북 고위 당국자 회담’을 제의하자, 연형묵 정무원 총리는 서한을 통해 3차 회담 개최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89년 2월 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1차 예비 회담이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제2차 예비 회담은 1989년 3월 2일 북측 ‘통일각’에서 열렸으며,⁸⁸⁾ 이어서 제4차 예비 회담이 11월 15일 통일각에서 열렸으나 아직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⁸⁹⁾ 이러한 총리 회담을 위한 예비 회담은 1980년 중단 이래 거의 9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한편 제2차 남북 고향 방문단 및 예술 공연단 교환과 제11차 남북 적십자 본회담 개최건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제5차 실무 대표 접촉이 1989년 11월 13일 오전 판문점 중립국 감독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방문단 규모가 100~250명 내에서 타결되면, 12월에 제11차 적십자 본회담이 평양에서 재개될 것이며, 그러면 적십자 본회담은 1985년 이래 4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1989년에 이 정도나마 회담이 진행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절차나 의제 결정 같은 문제들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 본회담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양측이 정말로 회담을 성사시키려면 사소한 문제로 본회담을 지연시키지 말고, 과감한 타협이나 양보들을 해야 할 것이다. 같은 1년 기간이지만,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큰 발전들을 이룩했다. 아무리 남북한이 전쟁을 치렀다고 하지만, 4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행히도 남북한 관계는 ‘저발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실에 기초하여 우호적 대외 관계를 추진하는 소련의 ‘신정치 사고’가 남북한 모두에게 필요한 때이다. 북한 사회의 개방과 개혁이 남한의 보다 착실한 민주화 실현과 접목된다면, 남북 대화나 관계 개선은 훨씬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유럽에서의 변화의 물결이 한반도에 좀더 빨리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

이 간절하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계급 투쟁론에 입각한 ‘민족해방’을 포기하고, 남한은 경직된 냉전 논리에서 벗어나, 외교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양측이 건설적인 통일의 길로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북한의 제3세계 정책과 비동맹 외교

북한의 외교 정책은 주변 4강대국과 한국과의 관계나 문제 해결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지만, 제3세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도 부단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식민지 통치를 경험했거나 외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개발 도상 국가들은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주체 사상을 전파하는 북한의 접근 대상이 된다.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경제력이나 군사력의 차이가 현격한 나라들이 많지만, 지구상의 170여 국가들 가운데 130여 국가가 제3세계의 부류에 속한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숫적으로 급증한 이들 제3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반제·반미의 성향을 띠고 있어, 반제 투쟁을 강조하는 북한의 잠재적 동맹 세력이 된다.

(1) 제3세계 정책의 목표 및 접근 방법

북한이 제3세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 부터이며, 1975년 8월 비동맹 운동에 가입함으로써 제3세계 내에서 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북한은 1964년 2월 27일 노동당 제4차 회의에서 ‘3대혁명력량강화’ 전략을 채택했는데, 이는 북한의 혁명 역량 및 ‘남조선혁명력량’과 더불어 ‘국제혁명력량의 강화’를 의미한다. 국제 혁명 역량과의 유대 강화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들 및 신흥 국가들을 포함한 반제·반미 세력들과 통일 진전을 형성하고 함께 투쟁하여, 미국 세력을 세계 도처에서 약화시킨다는 전략이다. 김일성은 이러한 전략 구상을 1965년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알리 아르함’ 사회 과학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밝힌 바

있다. 또한, 북한과 인도네시아의 공동 성명은 반동 회의의 정신과 원칙에 입각한 제국주의, 신·구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가일층 발전시킬 것을 강조했다.⁹⁰⁾

국제 혁명 역량과의 유대 강화는 반미 투쟁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한국과의 경쟁면에서나 통일 정책과 같이 대남 정책을 수행하는 데도 지지 세력의 확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북한은 반미·반한 세력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제3세계 국가들의 상황이나 형편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다. 첫째, 외교 정책 기본 이념으로서 자주, 친선, 평화를 강조한다. 둘째, 반제·반식민지 투쟁을 경제·군사적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그런 입장을 강력히 천명하고 선전한다. 셋째, 국제 기구들에 가입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한다. 넷째, 인민 외교를 적극 전개한다. 다섯째, 경제 및 문화적 교류·협력을 통해 접근한다.⁹¹⁾ 제3세계 국가들의 사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북한은 대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택하거나 보완적으로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북한은 개발 도상 국가들에 대하여 무리하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도 하며, 초청 및 방문 외교를 꾸준히 전개하여 왔으며, 무기 제공과 군사 요원 파견을 통한 훈련 및 게릴라 요원의 초치 훈련 등 적극성을 보여 왔다. 때로는, 정부 전복 활동에 개입되거나 선전 활동을 벌이다 주재국과 갈등을 빚고 추방되는 일까지 생기곤 했다. 특히, 초청·방문 외교는 '대외문화연락협회' 등의 노동당 외곽 단체들을 통하여 친선 및 문화 교류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유엔 회의나 비동맹 회의 등의 주요한 국제 회의나, 당 대회 같은 북한 내의 주요 행사를 앞두고는 당·정 고위급 인사들을 파견하여 지지를 구하거나, 평양 회의에 참석해 주도록 초청하기도 한다. 1975년부터 1982년까지 북한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국들을 대상으로, 초청 511 건, 방문 343 건을 기록했고,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527 건의 초청과 368 건의 방문으로 비슷한 횟수를 보였으며, 중남미는 그보다 적은 초청 226 건에 방문 172 건을 기록했다.⁹²⁾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인적 지원을 보면, 전투 요원과 훈련 요원 및 기술 요원으로 구분된다. 군사 요원의 파견은 1966년 월맹에 250~300 명

정도의 심리 요원과 50여 명의 공군 조종사를 보낸 것을 필두로, 주로 1970년대 이후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파견되었다. 중동·아프리카의 30개국에 1만 1,524 명이 가장 많고, 아시아 7개국 84명, 그리고 중남미 9개국에 294 명을 파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⁹³⁾

제 3세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원조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73년 10월 중동 전쟁시, 북한은 조종사 및 정비 요원 20명을 파견하기도 했다. 리비아에도 1979년 1월에 조종사 80명을 파견하고 정비사와 보급 요원까지 포함하여 280명 선으로 증원시키기도 했다.⁹⁴⁾ 1981년 중반에는 106명으로 구성된 군사 고문단이 짐바브웨 국방군 제5여단을 훈련시키기 위해 도착했으며, 1,600만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를 제공하기도 했다.⁹⁵⁾ 이 밖에, 우간다에서 활약하던 1,000여 명의 북한 군사 고문단이 오보테의 실각으로 활동을 금지당하기도 했으며, 앙골라에도 상당수를 파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⁹⁶⁾ 파리 국제 정치 대학원장 세뇌 교수는 1987년 4월 1일의 프랑스 상원 세미나에서, 북한의 해외 파견 8,000명 가량의 병력 가운데 5,000명 가량이 사하라 남부 지역에 주로 파견되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앙골라와 모잠비크 등 36개국에 상주 대사관을, 그리고 모로코와 가나 등 8개국에는 외교 대표부를 설치하였으며, 리비아와 우간다 및 에티오피아와는 군사 협정을 체결하였고, 리비아의 카다피 등 20여 명의 국가 원수가 평양을 방문했다고 지적했다.⁹⁷⁾

북한은 이렇듯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수단을 통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이 독립 초기에 직면했던 위협들이 감소 또는 사라지고 경제 건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때, 북한의 군사 지원은 차츰 매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미 수많은 제 3세계 국가들이 남북한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계속 증대될 것이다.

(2) 북한의 비동맹 운동 중시

북한은 비동맹 운동의 성격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비동맹권 국가들과의 친선·유대 강화를 특별히 중시한다. 제 6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비동맹 운동이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진보적 운동이며, 제국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혁명 역량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그는 비동맹 운동을 확대 발전시켜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신흥 세력 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⁹⁸⁾

비동맹 운동의 성격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954년 중·인(中印) 공동 성명에 나타난 평화 5원칙과 1955년 4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반동 회의 정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⁹⁹⁾ 반동 회의 이후, 1961년 6월의 카이로 예비 회담에서 제시된 비동맹 운동의 성격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상이한 정치·사회 체제를 가진 국가들간의 공존에 기초한 자주 정책이나 비동맹 또는 그러한 정책을 선호하는 경향, ② 민족 독립 운동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③ 강대국간의 분쟁과 연관된 다국적 군사 동맹에 불가입, ④ 강대국과 쌍무 군사 협정 또는 지역 방위 조약의 당사국일 경우, 강대국들의 분쟁과 무관할 것, ⑤ 외세에 군사 기지를 빌려 줄 경우, 강대국들의 분쟁과 무관한 양보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¹⁰⁰⁾ 이러한 비동맹의 성격은 1961년 9월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제1차 비동맹 정상 회의에서 더욱 확실해졌다.

1970년 9월의 루사카 회의(Lusaka conference)에서는 비동맹 운동의 기본 원칙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루사카 선언’이 채택되었다. 동 선언은 ① 자유,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침략적 행위나 무력 사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유엔 내의 비동맹 국가들의 역할 강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평화 공존을 추구하고, ② 식민주의 및 인종 차별주의에 반대하고, ③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④ 세계적 군비 축소를 통해 군비 경쟁을 종식시키며, ⑤ 강대국들의 군사 동맹 및 군사 조약을 배격하고, ⑥ 강대국간 갈등이나 식민주의 및 인종 탄압과 관련된 타국 내 군사 기지 건설 및 군대 주둔을 반대하며, ⑦ 유엔 기구의 보편성과 능률을 강화하고, ⑧ 평등과 호혜의 바탕 위에서 경제적 자립과 상호 협력을 위해 투쟁한다고 명확히 밝혔다.¹⁰¹⁾

비동맹 운동의 원칙이나 목적은 북한의 외교 정책 노선이나 이익에 잘

부합된다. 제3세계 국가의 일원으로 식민지 경험을 했고 미국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비동맹 운동을 반제 자주 역량과의 단결 또는 국제 혁명 역량과의 유대 강화라는 시각에서 중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1971년 비동맹 운동 주도국인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를 정상화시켰다. 1973년 9월의 알지예에서 개최된 제4차 비동맹 정상 회의에서 북한의 노력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회의에서 주한 외국군 철수를 비롯하여 제28차 유엔 총회에서의 유엔 사령부 철수와 ‘언커크’ 해체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한국 문제’ 결의안이 처음으로 채택되었다.¹⁰²⁾ 이 때 참가한 비동맹 세력은 75개국으로, 유엔 회원국 수의 2/3에 해당하며 90%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이었다.¹⁰³⁾

1975년 3월 쿠바의 아바나에서 열린 비동맹 조정 위원회 외상 회의에서 북한의 비동맹 가입 문제가 최초로 제기되었다. 그 해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페루의 리마에서 열린 비동맹 외상 회의에서 유고슬라비아, 쿠바, 알제리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북한은 비동맹 운동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었다.¹⁰⁴⁾ 본회의에서 채택된 리마 강령 중 한반도와 관련된 내용은, ① 북한 가입 환영, ② 외세 간섭 없는 통일 정책 지지, ③ 유엔 기치하의 주한 외국군 철수 및 정전 협정의 평화 협정으로 대체, ④ ‘7·4 공동 성명’에서 규정한 평화 통일 3대 원칙 준수 희망이었다. 참고로, 한국의 가입 신청은 좌절되었다.

북한은 1976년 8월 스리랑카에서 열린 제5차 비동맹 정상 회의에서도 외국 군대 및 기지의 철수, 유엔 사령부 해체,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는 안을 채택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¹⁰⁵⁾ 1979년 9월 3일부터 9일까지 아바나에서 열리는 제6차 비동맹 정상 회의를 앞두고, 김일성은 7월에 당 정치국과 중앙 인민 위원회 연석 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비동맹 외교의 강화를 모색했다. 아바나 정상 회의 직전의 비동맹 외상 회의(1979.8.31~9.1)에 외교부장 허담이 참석하였는데, 북한은 부의장국으로 피선되었으며, 95개국이 참석한 정상 회의에서 북한측 입장을 지지하는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었으며, 북한은 36개국으로 증대된 조정 위원국의 일원이 되는 수확을 거두었다.¹⁰⁶⁾

그러나 북한이 비동맹 회의를 이용하여 계속 성과를 거둔 것만은 아니다. 비동맹 운동의 분열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1981년 외상 회의시 북한은 결의안 채택을 포기해야 했다. 쿠바의 친소 노선, 베트남의 캄푸치아 침공, 중·월 전쟁,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등이 비동맹 운동권을 분열시켰으며, 한반도 문제는 빛을 잃었다.¹⁰⁷⁾ 1983년 3월의 뉴델리 제7차 정상 회담에서도 외군 철수에 의해서 한국인들이 염원하는 평화 통일 실현이 촉진될 것이라는 온건한 한반도 문제 조항이 삽입되었을 뿐이다.

비동맹 외교와 관련하여, 북한은 1981년 8월 평양에서 비동맹권의 식량 문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982년에는 비동맹 통신사 연합 조정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1983년에도 56개국이 참여한 '비동맹 및 개도국 교육 및 문화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1987년 6월 9~13일 기간에는 '남·남 협조(南南協調)에 관한 비동맹 장관급 특별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되고, 남·남 협조에 관한 방대한 내용의 '평양선언'과 '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¹⁰⁸⁾ 이러한 행사가 북한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비동맹 외교를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국주의 세력을 반대하고, 남한의 가입이 거부되고 있는 비동맹 운동을 통해, 북한은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고, 미군의 철수를 촉구하며, 남한 입장을 고립·약화시키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노력은 비동맹 운동의 분열, 동·서 관계의 호전, 남·북 협력의 필요성, 남한의 경제 성장 및 서울 올림픽 등을 통한 지위 향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4일부터 7일까지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된 제9차 비동맹 정상 회의의 개막식에서, 의장국인 유고슬라비아의 야네즈 드르노브스키 대통령은 전통적인 비동맹 운동의 반서방(反西方) 입장의 수정과 대 서방 화해를 시사했다. 그는 연설을 통해, "비동맹 운동은 지난 30년 동안 세계인의 열망에 부응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이제는 우리 시대의 요구와 도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대화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했으며, 이는 제9차 정상 회담이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유고슬라비아 등 온건 노선 국가들은 반제·반미 투쟁보다 외채 누적, 환경 오염, 인권 유린, 군축과 같은 절박하고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에 비동맹 운동의 노선을 맞추기를

원하였고, 쿠바나 북한 같은 나라는 반서방 노선의 고수를 주장하는 대립상을 보여 주었다.¹⁰⁹⁾ 이는 비동맹 운동이 보다 현실적이고 협력적인 노선을 지향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유고슬라비아와 인도 등 온건 국가들의 주도로 폐회시에 작성된 ‘베오그라드 선언’은 반제 노선이 아닌, 실용주의 노선을 보여 주었다. ‘베오그라드 선언’은 신데탕트의 여파로 비동맹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었다고 규정하고, 1조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제3세계의 외채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등, 1986년의 ‘하라레 선언’이 반식민 및 반패권으로 일관되었던 반서방적 내용과 큰 차이를 보여 주었다.¹¹⁰⁾

비동맹 운동에 큰 기대를 걸고 반제 혁명 역량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해 온 북한은, 전반적인 국제 정세의 변화와 이에 따른 비동맹 운동의 성격 및 목적 변화에 적응하여, 보다 유연하게 외교 정책을 수립하거나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제 안보가 더욱 중시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강경한 반제 노선만을 고수할 경우, 북한은 비동맹권 내에서도 고립되거나 영향력을 잃어갈 수 있을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와 한국 간의 수교가 조만간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만 해도 비동맹 운동의 성격이 다양하거나 온건해졌다는 좋은 예가 된다. 북한 외교는 어느 때보다도 ‘신정치 사고’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7. 결 론—평가 및 전망

북한의 외교 정책은 국내외의 다양한 환경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한 남한 및 미국과의 지속적인 대결, 미·소 또는 중·소 관계의 변화, 남한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비동맹 운동의 성격과 추구하는 목표 등의 외부 환경 요인들 외에도,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주체 사상, 북한 지도층의 세계관 및 정치 성향과 같은 심리·이념적 요인과, 북한의 경제 및 군사력, 김일성의 장기 집권과 김정일의 권력 승계와 같은 북한 특유의 국내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외교 정책 결정이 영향을 받는다.

북한의 외교 정책 목표는 체제의 보존, 정권 유지, 사회주의 경제 건설, 통일 성취, 남한과의 체제 및 정통성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 국제적 지위 향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체제 보존 및 통일로 직결되는 '미군철수' 실현 및 '중·쏘와의 긴밀한 동맹관계 유지'는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된다. 북한의 비동맹 외교 중시도 안보 태세 강화 및 통일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반제·반식민 세력인 비동맹권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공동으로 반미 투쟁을 전개하고 남한의 국제적 위치를 약화시키므로써, 미군 철수와 통일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려는 것이다.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자주, 친선, 평화의 3대 외교 정책 기본 이념을 강조한다. 즉,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외 정책은, ①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판단과 주견에 따라 외교 활동을 전개하며, ② 자주권을 존중하는 제3세계, 특히 비동맹 국가들과의 친선 관계를 선차적으로 하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친선 협조를 위해 노력하며,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친선 관계를 맺어 경제 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고, ③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저지시키며, 군비 경쟁 중지 및 군비 철폐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북한의 외교 정책 목표와 현실 사이, 또는 기본 이념과 외교 정책 행태 사이에는 엄연한 격차와 모순이 존재한다. 중·소 양국과 모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하나, 북한의 균형잡힌 대중·소 정책은 힘들다. 미·일에 대하여 북한은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표시하면서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접근하여 관계를 개선하려는 이중 행태를 보여 주기도 한다. 자주, 친선,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제3세계 국가들에 군사·경제적 수단을 통해 내정에 간섭하는 모순들이 발견되고 있다. 반제 혁명 역랑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한·미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비동맹 외교를 강화하고 있으나, 비동맹 운동권의 분열과 현실 중시 경향 때문에 북한은 좌절을 겪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단결 및 협력을 강조하지만, 이데올로기보다 국익을 우선시하여 동·서 관계의 개선을 바라며, 남한과 수교하거나 교류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수도 증가 추세에 있다.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들과 친선 및 교류를 강조하지만, 북한의 이미지와 능력의 한계 및 경쟁국인 남

한의 정치·경제 발전 때문에 진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이렇듯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환경 때문에, 북한이 추구하는 외교 정책 목표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 주된 이유는 북한이라는 자체 능력의 한계를 지닌 약소국이 복잡한 국제 환경에서 주로 강대국들을 상대로 외교 목표를 추구할 때 필연적으로 부딪치는 장애와 제약들 때문이며, 북한의 경직된 정책과 행위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북한의 외교 정책은 변화를 필요로 한다. 신데탕트를 외면한 채, '우리 식대로 살자'는 입장만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이익에 크게 도움이 안 되며, 결국은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한 예로, 대남 정책을 수정하여 남북한 관계를 크게 개선한다면, 대미·일 관계가 진전될 것이며, 그러면 미군의 철수 가능성도 증대될 것이다. 반대로, 적대적인 기존 정책을 고수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한 바와 같은 미군의 주둔은 계속될 것이며, 좌절감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좌절감이 누적되면, 랭군 사태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되면 북한의 입장은 더욱 악화되고, 미군 철수 및 통일 목표의 달성도 그만큼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의 대외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왔지만, 때로는 진술적인 유연성을 보여 주기도 했다. 북한의 체제가 활력을 지니고 발전하려면 진술 차원 이상으로 유연성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 사회에도 변화를 요구하는 세력이 존재하지만, 지도층의 엄격하고 효과적인 통제로 분출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도층에 의한 현실적 정책 수립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김일성의 유일적 지도 체제가 확고해진 북한에서 누가 먼저 감히 정치적 위험 부담이 따르는 개혁 및 개방을 선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김일성 스스로는 자기가 이끌어 온 정책 노선을 수정하여 그의 엄격마저 비판을 받게 되는 사태 발생을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인 지도자나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는 비판이나 요구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무시하거나 억압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소련과 중국 및 동유럽 국가들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지도자가 교체되거나 축출된 이후에 발생했다. 북한 사회의 경우에도, 김일성의 퇴장과 함께 비로소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주

- 1) Kenneth W. Thomson and Roy e. Macridis, "The comparative study of Foreign policy", in Roy e. Macridis ed., *Foreign Policy in World Politics*, 5th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6, pp.1~2.
- 2) Donald D. Barry and Carol Barner-Barry, *Contemporary Soviet Politics*,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82, pp.316~317; Vernon V. Aspaturian, "Soviet Foreign Policy", in macridis, ed., 앞의 책, pp.170~178.
- 3) 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을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4) Eugene J. Meehan, "The Concept of Foreign Policy", in Wolfram F. Hanrieder, ed., *Comparative Foreign Policy: Theoretical Essays*, New York, David Mckay Co., Inc., 1971, pp.267~274.
- 5) Macridis, 앞의 책, p.6; Edward A. Kolodziej and Robert E. Harkavy eds., *Security Policies of Developing Countries*, Lexington, D. C. Heath & Company, 1982, pp.15~18.
- 6) 소련은 1946년에 유상 및 무상 원조로 7,400 만 루블을, 1947년에는 1억 4,000 만 루블을 북한에 제공했으며, 정권 수립 후인 1949년 3월 7일에는 2개년 계획을 위해 2억 1,200 만 루블(4,770 만 신(新)루블, 또는 미화로 4,000 만 달러)을 원조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Ginsburg는 4.4 루블을 1 신루블로 계산하고, 5.3 구(舊)루블을 1 U.S. 달러로 계산했다.) George Ginsburgs, "Soviet Development Grants and Aid to North Korea, 1945~1950", in *Asia Pacific Community*, No.18, Fall, 1982, p.42.
- 7) 소련은 전쟁 기간 1억 4,325 만 달러의 무상 원조와 물자를 제공했으며, 전후 복구 3개년 계획을 위하여 1953년 8월에 10 억루블(2억 5,000 만 달러)의 무상 원조를 발표하고, 1949년 3월에 제공했던 유상 원조의 절반인 2,650 만 달러를 면제해 주는 호의를 베풀었다. 위의 책, pp.44~45, and Alexander Eckstein, *Communist China's Economic Growth and Foreign Trade*, New York, McGraw Hill, 1966, pp.324~325.
- 8) 북한 자료에 의하면, 1958년까지 소련은 10억 루블을, 그리고 중국은 8억 원(元) 상당의 원조를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Wayne S. Kiyosaki, *North Korea's Foreign Relations: The Politics of Accomodation*,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6, p.76.
- 9) <중·소의 대 북한 원조 및 무역 현황; 1945~1980>, 서울, 국토 통일원, 1980, p.6.
- 10) Ginsburgs, 앞의 책, pp.48~49.

- 11) 위의 책, pp. 53~57.
- 12) <내외통신>(자료판) 제 489호(1986. 6. 6), pp. 經 5c~6c.
- 13) *Time*, November 6, 1989, p. 15.
- 14) <북한 총람>, 서울, 북한 연구소, 1983, pp. 491~492.
- 15) <동아일보> 1989년 9월 9일자, 2면. 북한의 외채 사정 악화는 1970년대 전반기에 무리한 수입과 석유 파동에서 비롯되어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Stephen B. Wickman, "The Economy", in *North Korea: A Country Study*, Washington, D. C.,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pp. 155~156.
- 16) Byung Chul Koh, *The Foreign Policy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 9.
- 17) 위의 책, pp. 10~13; <북한 개요>, 서울, 국토 통일원, 1984, pp. 282~286.
- 18) <로동신문> 1980년 10월 13일자, 12면.
- 19) <로동신문> 1980년 12월 11일자, 11면.
- 20) 위와 같음.
- 21) Edward Crankshaw, *Khrushchev Remembers*, Chapter 11, New York, Bantam Books, 1970; <조선일보> 1989년 8월 25일자부터 10회 연재.
- 22) 자세한 인적 사항에 관해서는, 국토 통일원, <북한의 기관 및 단체별 인명집> (1988년 4월), 1~2장 참조; 최근의 정치국원 및 후보 위원회의 명단은 <조선일보> 1989년 9월 16일자, 2면.
- 23) Henry A. Kissinger, "Domestic Structure and Foreign Policy", in James N. Rosenau, ed.,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The Free press, 1969, pp. 270~272.
- 24) Harry Gelman, "The Sino-Soviet Conflict", in Franz Schurman and Orville Schelle eds., *Communist China*, New York, Random House, 1967, pp. 278~279.
- 25) 김일성은 1966년 10월 5일 당 대표자 회의에서 행한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이라는 연설을 통해 북한 안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인으로서 베트남에서의 미국의 증대된 침략 행위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경고했다. 이보다 앞서, 김일성은 1965년 신년사에서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느라 경제 발전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 26) 김일(金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현 과제에 대하여", <로동신문> 1966년 10월 7일자, 2면.
- 27) 김일은 관계 개선 모색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듯하며, 이는 북한이 12월 3일 다시금 소련을 비난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 총람>, p. 349.
- 28) <조선중앙연감(1966~1967)>, p. 499 참조.
- 29) K. H. Fan ed.,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Selected Documents*, New York, Grove press, 1968, pp. 178~179.
- 30) <북한 총람>, pp. 248~249; *New York Times* January 21, 1967; <동아일보> 1967년 21일, 23일, 27일자; <국제문제>, No. 88, 1967. 7, pp. 24~25.

- 31) Kim Il Sung, *Selected Works* Vol. V, Pyongyang,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72, p.489, pp.496~497.
- 32) <로동신문> 1971년 8월 7일자, 2면.
- 33) <북한 개요>, pp.285~286.
- 34) <로동신문> 1978년 12월 28일자, 1면과, 1979년 1월 13일자, 4면.
- 35) Michail S. Gorbachev, *Mandate for Peace*, New York, Paper Jacks Ltd., 1987, pp.117~119.
- 36) Robert D. Blackwell and F. Stephen Larabee, eds., *Conventional Arms Control and East-West Securit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89, pp.24~26.
- 37) 지난 10월 27일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 7개국 외상 회의는, “모든 나라가 독자적으로 운명을 결정하고 외세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사회·정치·경제 발전의 길을 택할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고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폐기를 선언하는 폐막 성명을 발표했다. <동아일보> 1989년 10월 28일자, 4면.
- 38) *Vital Speeches of the Day*, Vol. LII, No.23, September 15, 1986, pp.708~709; Michail S. Gorbachev, *Toward a Better World*, London, Hutchinson Ltd., 1987, pp.348~355.
- 39) <한국일보> 1986년 9월 25일자.
- 40) 경제 협력의 ‘정치적 의미’ 강조는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소련의 ‘극동 문제 연구소’ 소장 티타렝코 또는 ‘동방 연구소’ 소장 카피차 등에 의해서도 표명된 바 있다.
- 41) 지난 10월 IMEMO 팀과 함께 내한했던 60 만부를 발행하는 *New Times*의 편집장인 이그나 탱코의 면담 내용. <조선일보> 1989년 10월 28일자, 4면.
- 42) <한국일보> 1989년 10월 29일자, 1면.
- 43) <동아일보> 1989년 10월 27일자, 4면.
- 44) ‘푸에블로 호’ 사건과 EC-121기 사건에 관해서는, In-young Chun, “North Korea’s Foreign Policy Behavior Toward the United States”, in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I, No.1, 1981, pp.96~110.
관문점 사건에 관해서는, Richard G.Head et al., *Crisis Resolution: Presidential Decision Making in the Mayaguez and the Korean Confronta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78, pp.149~215 참조.
- 45) “On Communist Education”, in Kim Il Sung, *Selected Works*, Vol. II, Pyongyang,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71, p.257.
- 46) <로동신문> 1972년 6월 2일자, 1,2면.
- 47) <로동신문> 1974년 3월 26일자.
- 48) 3월 25일 미 국무성 대변인은 동(同) 제안과 관련하여,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일이며, 한국의 참여가 없는 한 불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49) <로동신문> 1975년 4월 19일자, 3면.
- 50) 국토 통일원, <남북 대화 연표(1970~1980)>, pp.349~352.
- 51) Michael A. Ledeen, “Trumping Asian Allies”, *Harpers*, March, 1979, p.29.

- 52) <북한 전서(1945~1980)>, 서울, 극동 문제 연구소, 1980, p.233~234.
- 53) <아사히 신문(朝日新聞)> 1977년 9월 30일자.
- 54)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April, 1979, p.26.
- 55) <동아일보> 1979년 1월 16일자, 1월 17일자, 2월 12일자.
- 56) *Baltimore Sun*, April 30, 1979.
- 57) <로동신문> 1979년 7월 23일자.
- 58) *FBIS*, Vol. IV, January 30, 1981, p.D1; <로동신문> 1981년 1월 30일자.
- 59) *FBIS*, Vol. IV, February 4, 1981, p.D1; February 19, 1981, p.D1; February 20, 1981, p.D1.
- 60) *FBIS*, Vol. IV, March 13, 1981, p.D1.
- 61) SR-71 기 사건에 관해서는, 전인영, "SR-71 기 사건을 중심으로 본 북한의 대미(對美) 적대 행태",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 4 권 제 2 호, 1982, pp.185~214 참조.
- 62) Ralph N. Clough, *Embattled Korea*, Boulder, Westview press, 1987, pp.379~386.
- 63) 유석렬, <북한 정책론>, 서울, 법문사, 1988, p.244.
- 64) <중앙일보> 1984년 9월 29일자, 4면.
- 65) <조선일보> 1986년 10월 28일자, 1면; <동아일보> 1986년 11월 13일자, 4면.
- 66) <동아일보> 1987년 9월 26일자, 4면.
- 67) <동아일보> 1987년 9월 27일자, 5면.
- 68) <로동신문> 1955년 2월 26일자.
- 69) 일본 사회당은 북한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 주한 미군 철수, 북한 통일 정책 지지, 동북아 비핵지대 창설 선언, 일본의 대 북한 정책 시정 등을 주장 또는 표명해 왔다. <북한 총람>, pp.447~448.
- 70) Ralph N. Clough, 앞의 책, p.362.
- 71) <아사히 신문(朝日新聞)> 1977년 2월 2일자; 강성윤, "북한의 대일(對日) 외교 정책과 전개", 민병천 편, <북한의 대외 정책>, 서울, 대왕사, 1987, p.199에서 재인용.
- 72) <로동신문> 1980년 10월 11일자.
- 73) <조선중앙년감(1967~1968)>, pp.7~10.
- 74)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71.
- 75) 위의 책, pp.82~109.
- 76) 국토 통일원, <남북한 통일·대화 제의 비교>, 1987. 12, pp.51~53.
- 77)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북한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인정한다면,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음을 표명했으며, 남북한간의 선의의 체제 경쟁을 제의했다.
- 78) <북한 총람>, p.455.
- 79) <동아일보> 1973년 6월 23일자; <로동신문> 1973년 6월 24일자.

- 80) '10·26' 이후, <로동신문>은 “지금이야말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효과적인방도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로동신문> 1979년 11월 19일자.
- 81) Han-Kyo Kim, “Political Change in South Korea and Its Impact on Inter-Korean Relations”, 대학 통일 문제 연구 협의회, <전환기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서울, 국토 통일원, 1987, p.253.
- 82) <로동신문> 1980년 10월 11일자; *FBIS*, Vol IV, October 15, 1980, pp.D1~D10.
- 83) 국토 통일원, <남북 대화 추진 현황>(제2기), 1988. 8, pp.1~91 참조.
- 84) 위의 책, pp.112~113.
- 85) <내외통신>(종합판) 제 33권(1986. 1. 1~6. 30), p.519.
- 86) <내외통신>(종합판) 제 38권(1988. 7.1~12. 31), pp.541~547.
- 87) 국토 통일원 남북 대화 사무국, <남북대화> 제 47호, 1989. 5, pp.30~31
- 88) 위의 책, pp.33~45 참조.
- 89) <동아일보> 1989년 11월 15일, 1면.
- 90) <북한 총람>, pp.391~392.
- 91) <북한 개요>, p.271.
- 92) 위의 책, pp.272~273.
- 93) 국토 통일원, <북한의 군사 외교 실태 연구>, 1983. 12, pp.48~87; 朴春赤, “북한의 제3세계 혁명 세력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국민윤리과 석사 학위 논문, 1985, p.71, p.81.
- 94) <북한 총람>, pp.398~400.
- 95) *Christian Science Monitor*, February 19, 1986.
- 96) 위와 같음.
- 97) <한국일보> 1987년 4월 3일자, 4면.
- 98) <로동신문> 1980년 10월 11일자.
- 99) 반등 회의는 인권 존중, 주권 및 영토 보존의 존중, 평등, 내정 불간섭, 단독 및 집단 방어권의 존중, 강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집단 방어 조치 불참여, 공격 위협 및 무력 사용 자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호혜 협력, 정의 및 국제적 책임 존중의 원칙하에 새로운 국제 질서를 제안했다. A. W. Singham and Shirley Hune, *Non-Alignments in an Age of Alignments*, London, ed Books Ltd., 1986, pp.65~66.
- 100) Peter Willets, *The Non-Aligned Movement: The Origins of a Third World Alliance*, London, Francis Pinter Ltd., 1978, pp.18~19.
- 101) 위의 책, pp.30~31.
- 102) <북한 총람>, p.422.
- 103) Singham and Hune, 앞의 책, p.119.
- 104) 1975년 6월 김일성은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여, 북한의 비동맹 가입 및 유엔 활동에 대한 지지를 얻었으며,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유고슬라비아의 지지도 얻었고, 티토의 평양 방문 초청에 대한 수락을 받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 105) 이 회의를 위해 북한은 박성철을 단장으로 하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Ralph N. Clough, *Embattled Korea: The Rivalry for International Support*, Boulder, Westview press, 1987, p.290.

106) <북한 총람>, pp.427~428.

107) Ralph N. Clough, 앞의 책, p.291.

108) <내외통신>(종합판) 제 35 권(1987.1~6.30), pp.130~134.

109) <조선일보> 1989년 9월 5일자, 4면; <국민일보> 1989년 9월 5일자, 5면.

110) <조선일보> 1989년 9월 8일자, 5면.

2. 북한의 군사 사상과 전략

이석호(국방대학원 교수)

1. 서론

공산주의 국가들의 군사 사상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사상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특히 군사적 요인보다 정치적 요인이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보는 정책의 기본 과제나 방향을 설정할 때 그 기준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이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 이데올로기의 목표에 따라서 사회 체계를 전반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추구하고 있는 바, 이는 저들의 말로 '혁명'을 한다는 것이다. 이 혁명을 한다는 목표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 문제에 관한 모든 사상과 제도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혁명의 목표에 의하여 재구성되고 실천되고 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경우는 그 이데올로기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며 혁명의 목표는 전한반도의 공산화로 세우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 전문(1980년 10월 제6차 전당 대회 개정판)에 의하면 북한은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최종 목표로 하여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 남한에서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당면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의 혁명 사상과 주체 사상을 북한에서 유일한 지도적 지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늘날 북한이 체제 목표로 남한을 혁명하여 해방시키고 전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수사학적 미사여구가 아니다. 통일과 공산화라는 목표는 북한 사회의 모든 분야의 정책에 반영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

난 약 45년 동안에 북한 사회의 모든 제도와 구조를 전반적으로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그리고 주민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도 소위 공산주의식 인간으로 개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군사 분야에서도 일어나 북한의 군사적 행태를 현대 전략의 게임적 시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배경이 되고 있다. 북한 군대는 어떻게 시작하여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배경 또는 관점에서 북한의 군사 사상과 전략을 설명하려고 한다. 북한 사회에서 군대는 어떠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 전쟁의 본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무엇인가? 북한의 대남 군사 전략의 기본 개념은 무엇이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장차전을 위하여 북한은 군사력을 어떻게 건설하여 왔는가? 등의 질문을 기초로 하여 북한의 군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려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군사 사상 군사 이론, 군사 교리, 군사 전략의 상호 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¹⁾ 군사 사상, 군사 이론, 군사 교리, 군사 전략은 모두 '군사'라는 현상을 동일체로 하여 그것이 사상적 측면이나, 이론적 측면이나, 교리적 측면이나, 운용적 측면이나에 따라 그 성격이 약간씩 달라진다.

통상, 군사(military affairs)라는 용어는 기능적 요소와 목적적 요소를 갖고 있다. 경제, 외교, 교육, 문화 등이 각기 국가 고유의 행정 기능으로 존재하듯이 '군사' 또한 국가 기능의 일부로서 군 내의 관리와 운용을 그 고유 기능으로 한다. 목적적 측면에서 볼 때 군사는 전쟁에 처해서 국가가 보유한 무력을 어떻게 준비하고 사용하여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군사적 임무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군사는 일단 전쟁을 전제로 하여 평시에는 가장 합리적으로 군사력을 건설, 유지, 관리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준비된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당면한 국가의 위협을 배제하거나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위기 관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사상(thought)'은 특정 사물에 대한 사유 작용을 통해 일정한 체계와 형식이 갖추어진 인식 내용²⁾이다. 따라서 군사 사상이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차 당면하게 될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사고 체계"라고 정

의할 수 있다.

‘이론(theory)’은 “단순한 경험이나 개개의 사실에 대한 잡다한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법칙적,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귀납적으로 법칙을 이끌어 내어 만든 논리적 지식 체계”³⁾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군사 이론은 “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평시에 어떻게 군사력을 건설하고 건설된 군사력을 전시에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법칙적,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귀납적으로 법칙을 이끌어 내는 논리적 지식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교리(doctrine)’는 “어떤 사물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지침으로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 행동 체계”⁴⁾를 말한다. 따라서 ‘군사 교리’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식적인 군사 행동의 지침으로 승인된 군사 행동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군사 전략’은 “국가 전략의 일부로서 전·평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적 제수단을 준비, 계획, 수행하는 기술과 과학”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즉, 군사 전략은 군사 사상, 군사 이론, 군사 교리를 응용하여, 만들어지는 가장 현실적인 행동 체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군사 사상은 북한이 군대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적 이론적 측면이며, 군사 전략은 현재 북한이 갖고 있으며 장차 취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들을 말한다.

2. 북한 군대의 특성

오늘날 북한의 군대는 자본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특이한 점이 있다. 정치적으로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며, 동시에 북한 정치와 사회에서 상당한 권위를 누리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북한 군대가 북한의 경제 사업에 기여하는 몫은 대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북한에 공산 정권이 세워진 이후 수차례에 걸친 권력 투쟁이 있었으며,

이 투쟁들은 파벌간 투쟁과 파벌 내 투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파벌간의 투쟁이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50년대에 있었던 국내파, 갑산파, 연안파, 소련파 간의 권력 투쟁을 말하며, 파벌 내 투쟁이란 제4차 노동당 전당 대회 이후에 있었던 갑산파 내의 숙청을 의미한다.

파벌간의 투쟁으로서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비공산주의 민족주의자들, 한국 전쟁중 무정과 허가이,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박헌영, 이승엽을 비롯한 남로당파를, 1956~1958년에 있었던 소련파·연안파 등의 숙청을 말한다.

파벌 내 투쟁이란 갑산파 내의 투쟁으로서 김일성의 권력에 도전했던 것이 아니고 김일성의 추종자들이 김일성의 정책을 잘못 수행했거나, 또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숙청이 되었던 사건들을 말한다. 1966년 10월부터 1967년 3월 사이에 경제 분야, 조직 및 선전, 대남 분야의 인물들이 강등, 또는 숙청당하고 군인들이 등장하였으며, 1969년부터 1970년 11월 사이에는 군인들이 대거 숙청됐다. 이 원인은 1962~1963년에 당 노선으로 결정된 ‘4대군사로선’, ‘국방·경제병진로선’, ‘3대혁명력량강화’를 실천함에 있어서 그 부진함에 대한 책임 추궁이었다.

초기 북한 군대의 구성 인물은 노동당 내의 파벌과 마찬가지로 갑산파(김일성 측근들), 소련파(소련 군대에 근무했고, 소련 군대와 같이 귀국한 자들), 연안파(중국 공산당 군대 또는 김두봉, 또는 무정과 같이 귀국한 자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군대는 거의 김일성과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었으므로 연안파와 소련파 소속의 군인들은 김일성에게 도전할 수 없었다.

군대와 파벌을 관련시켜 볼 때 국내파는 군대와 전혀 상관없이 권력 투쟁을 했으며 소련파들은 군사 문제보다도 정치 문제에 더 몰두하였다. 소련 군대와 같이 북한에 들어온 소련파들은 실제로 북한의 모든 당·정·군대의 조직을 일으켜 세우는 행정가와 기술자들이었고, 군을 자신들의 권력 수단으로 만드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⁵⁾ 당과 군대에서 김일성에게 위협적인 인물들은 오직 연안파였다. 그러나 연안파 계열의 군인들은 중요한 보직을 받지 못했으며, 좋은 보직을 받았어도 그 보직의 상급 또는 하급 직위에 김일성 측근들이 임명되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⁶⁾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일성이 1인 독재 체제를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군대가 직접적으로 권력 투쟁에 개입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김일성의 뒤에는 항상 강력한 군대의 지지가 있었다. 김일성과 그의 측근이 군대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는 내분이 표면화되지 않았고 숙청이 있을 때마다 같은 계보의 군인들도 자동적으로 제거되었다. 북한 정치의 전체를 볼 때 권력 수행 과정에서 군대는 점차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영향력 있는 정치 세력이 되었고, 김일성이 가장 신임하는 집단이 되었다. 군대가 김일성에게 얼마 만큼의 중요성을 차지하는 집단이 되었는가는 과거 제1차~제6차 전당 대회에서 군인이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에 선출된 비율을 보면 잘알 수 있다. 평균하여, 전기간 동안에 약 22%를 군인이 당 고위직을 점령하였다.⁷⁾

이처럼 군대가 다른 어떤 집단보다 더 많이 정치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것은 군대의 세력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김일성이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특혜를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대는 ‘김일성의 군대’, ‘수령의 군대’란 말을 종종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인민군은 수령이 조직해서 현대적 정규무력으로 강화 발전시킨 당의 책임적 무장력이며 김일성의 군대”⁸⁾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김일성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 비할 바 없이 강화되었다.”⁹⁾와 같은 내용의 주장이 북한 군대 창건일과 관련하여 기념 보고 연설문, <로동신문>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김일성이 북한 노동당의 ‘총비서’ 겸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 군사 정책 집행 방법의 결정, 군수 산업과 인민 군대와 모든 무력의 강화를 위한 사업의 조직, 군사력의 지도를 장악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당 규약 제3장 27조) 또한 북한 정권의 주석인 동시에 ‘전반적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하고 있다(북한 헌법 93조).

북한은 군대를 ‘수령의 군대’, ‘김일성의 군대’라고 하면서 동시에 ‘당의 군대’라고 한다. 노동당 규약에 의하면(1980년 제6차 전당 대회 개정판)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무장력이다.”라고 되어 있다. 1989년 4월 24일 북한 인민군 창건 57돌 기념 보고에서 최광(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대장)은 “안팎의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난관에 부딪히든지 오직 우리 당의 사상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당의 의지대로만 숨쉬고 사고하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해나가려는 일념으로 살며 투쟁하는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참다운 모습이며 숭고한 품모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북한 군대가 당에 절대적으로 예속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제도적으로도 북한 군대는 정부 부서의 행정 집행 기관인 정무원에 속해 있지 않고 중앙 인민 위원회의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다. 1980년 10월 제6차 전당 대회 이후 몇 년간은 당 중앙 위원회에 인민 무력부가 속하였다가 중앙 인민 위원회로 이전했다고 한다.

북한 군대의 또 하나 특성은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경제면에서 경영 방식으로 ‘독립채산제’와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 군대가 일반 사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이론적 배경에는 북한이 군대의 계급적 성격을 강조하고, 주민들 속에 파고들어 갈 것을 강조하는 논리가 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군대는 ‘사회주의 경쟁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에는 북한 경제 건설의 거대한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 군대는 1970년대에 평원 고속 도로, 안주 탄광 확장 공사, 평양 지하철 공사, 미림 감문 공사에 투입된 바 있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집단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예천 발전소, 금강산댐 및 발전소, 남포 감문 건설, 순천 비날론 공장, 사리원 카리 비료 공장, 상원 시멘트 공장, 북부 철도 건설, 광복 거리 및 안골 채추 공사, 능라교 건설 양각도 축구장, 능라도 경기장, 평원 외 10개 간석지 개간, 원산-금강산 고속 도로 공사, 엽전지 개발 등.

북한 군대는 이외에도 군대에 필요한 물자를 자급 자족하기 위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물론, 군에 필요한 작업 도구와 군용 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한다. 또 군대는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탄광에서 금을 채취하여 소위 외화벌이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1988년 4월 북한군 창건 56주년을 기념하는 북한의 방송과 간행물들은 오늘날 북한 군대가 군사적 임무 수행뿐만 아니라 경제 건설에 커다란 공

로를 세우고 있다고 그 업적을 찬양하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경제건설 전투에 적극 참가하므로서 또한 나라의 재부를 당과 조국의 권위를 높이는데 훌륭히 이바지하고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인민군대가 우리 인민들의 복구건설투쟁과 천리마 대진군에 발맞추어 전진하여 일어세운 대규모의 공장, 기업소들, 그리고 70년대와 80년대에 건설해놓은 많은 갑문들과 운수시설, 문화기관들과 공장들은 지금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자력 경제의 토대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¹⁰⁾

김일성은 일찍이 “조선인민군은 오직 조선로동당앞에 충실하고, 오직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혁명의 길로 전진하여 당이 채취한 혁명의 열매를 보위하며, 혁명적방법으로 낡은 사회를 전복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유일한 혁명군대”¹¹⁾ 임을 강조했다. 즉, 북한은 북한의 인민군을 혁명 군대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는 북한 군대의 주요 임무가 ‘남조선해방’이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인민군대의 임무로써 하나는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 같이 보장하는 임무이며 다른 하나는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통일하고 남반부의 로동자, 농민, 근로인민들을 미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들의 압박에서 해방할 위대한 혁명과업”¹²⁾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 혁명 과업을 체제 목표로 정해 놓고 있다. 북한 헌법 5조와 노동당 규약 전문에 의하면 북한은 사회주의가 남북한 전체를 통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야만 한다.¹³⁾

북한은 혁명 임무의 전통이 군대에 있다고 하면서 군대의 임무를 보다 더 강조한다. 그 이유는 김일성이 1932년 4월 25일에 세운 ‘인민혁명군’에 의해서 혁명 과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군대에 정치적 권위를 많이 부여하면서 그 대신 군대가 ‘남조선해방’ 임무에 항상 충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군대는 혁명 전통을 훌륭히 이어받아야 한다. 조선 인민 혁명군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해서 무장 투쟁을 벌여 그들을 쫓아냈고, 해방 후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저지하고 북반부의 사회주의 체제를 보호했다. 이제 북한 군대는 남아 있는 유일한 혁명 과업, 즉 남반부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앞잡이

들을 몰아내고 인민 대중을 해방시키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이처럼 북한의 군대는 권력의 동반자이며 동시에 하수인이나,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김일성의 군대’, ‘혁명군대’ 이면서 김일성의 체제를 유지 및 안정시켜 주고, 나아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군사 사상

(1) 변천 과정

북한의 군사 사상은 1948년 2월 8일에 북한 군대가 창설된 이후 줄곧 변화를 겪어 왔다. 1950년 12월 당 제2기 제3차 전원 회의 때까지는 소련의 재래식 전쟁에 관한 군사 사상이 북한의 군대를 지배했다. 물론 한국 전쟁 전이나 전쟁중에도 게릴라전이 있었지만 비정규전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당시 북한 군대는 소련식의 군복을 입고, 소련식의 제식 훈련, 군사 훈련을 받았으며, 소련의 군사 장비를 갖고서 한국 전쟁을 일으켰다.

김일성은 당 제2기 제3차 전원 회의에서 정치적 과오뿐만 아니라 군사적 결점도 지적하였다.

불충분한 예비대, 군 간부들의 지휘 미숙, 적을 섬멸하지 못하고 분산시켰음, 열세한 제공권하에서 전투 기술 부족, 부대의 규율이 해이, 적 후방에서 유격대 활동의 미약, 전선에 대한 병참 지원의 비효율적, 군대 내 정치 사업의 부족.

14)

이어서 김일성은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적을 섬멸하고, 충분한 예비대를 확보하고, 국제적으로 미국의 범죄를 폭로하고, 당의 기율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보고에서 김일성은 나머지 한국 전쟁을 수행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비정규전을 강조하지도 않았고, 또한 자신의 항일 투쟁시의 게릴라전 경험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마르크시즘, 레닌이즘, 스탈린이즘을 연구하여 그들의 가르침을 이 어려운 상황에 적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후 북한 군대는 한국 전쟁의 전투 경험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51년 초부터 1962년 12월까지 북한의 군사 사상의 흐름은 재래식 정규전이었지, 비정규전 또는 인민 전쟁론이 아니었다. 바꾸어 말해서 이 기간중 북한 군대는 소련의 가르침과 한국 전쟁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재래식 정규전 사상을 유지했다. 중국의 인민 해방군의 경험이나 김일성의 항일 게릴라 경험을 군사 사상에서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평가해서 북한이 한국 전쟁중 중국의 지원군으로부터 군사 사상적 측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으나, 실증적으로 양측을 연결 시키기는 불가능하다. 북한은 군사 사상과 교리에 관해서 '소련을 배우자', 특히 '스탈린으로부터 배우자'는 언급을 1950년대에 많이 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원조에 감사를 표하면서 모택동 사상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북한은 이 기간중 일본에 항거해서 싸운 자신의 전투 경험을 결코 강조한 적이 없다. 김일성과 그의 동료들의 연설문과 저서에는 항일 게릴라 투쟁을 자랑스럽게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 경험을 군사 교리의 지침 또는 기본 원리로 승화시키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정치 권력이 정통성이 있음을 과시하는데 이용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부터, 1962년 12월까지의 소련 군대로부터 도입한 사상과 교리, 그리고 한국전 경험에 의해서 약간 수정된 군사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1955년 2월 당시 민족 보위부 총정치국장인 최종학이 북한 군대 창설 7주년을 기념하는 논문을 <군로자>에 발표했다. 그는 이 글에서 북한 군대가 소련 군대의 경험과 소련의 군사학을 많이 도입했음을 솔직히 표현하고 있다.

조선인민군은 선진 소련군대의 풍부한 경험과 소련군사과학으로 무장된 현대 군대이다.……

우리 군대는 끊임없이 소련군사학과 소련군사기술을 배우고 소련군대의 풍부한 경험을 적용하고, 진보되고 혁명적인 맑스-레닌이즘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전투능력을 향상시키고있다. 모든 이러한것들은 우리가 높은 전투사기와 불패의 힘을 가질수 있게 하는 중요한 근원들이다.……

한국전쟁기간중 조선인민군은 풍부한 전투경험을 얻었고, 소련군사기술로부터 배워, 우리 군대에 창조적으로 응용한 전투형태와 기술의 모범을 보여주었다.15)

이외에도 1950년대의 <근로자>와 <로동신문>에는 북한 군대가 소련 군대의 경험과 소련 군사학을 배우고 있음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아주 대조적으로 소련의 영향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다. 1962년 12월에 '4 대군사로선'을 채택한 이후 북한은 한국 전쟁의 경험과 항일 무장 투쟁의 경험만을 강조해 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배운 것을 전체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북한이 형식적이지만 군사 사상 또는 교리(이론)에서 소련과 단절을 표방하는 배경은 소련의 대외 정책에 대한 불신과 동시에 국내적으로 '주체'를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위에서 간단히 정의한 것처럼 군사 사상, 이론, 교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차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수행하는가이다. 여기서 전쟁에 대한 인식(전쟁관)은 상대적으로 나머지 두 가지에 비하여 쉽게 변하지 않는다. 전쟁 준비와 수행에 대한 사상, 교리, 이론은 역사적 경험, 지정학적 위치, 외교 관계, 과학 기술의 발달, 지리적 상황, 국내 정치·경제 상황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양하며, 다소 용이하게 변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 소련의 커다란 영향을 배제하려고 하지만, 전쟁에 대한 기본 인식, 군대에 대한 기본적 태도에는 거의 변함이 없으며, 오직 전쟁 준비와 장차전 수행 방식(전략)에서 변신했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북한 군대의 재래식 정규전에 관한 기본 사상이나 교리는(1962년 이전에) 소련 군대의 야전 교무령과 스탈린의 다섯 가지 원칙을 받아들였다. 다섯 가지 원칙은 전쟁의 과정과 결과를 결정하는 '영구적으로 작용하는 요소'

라고 한때 불려졌다.

- ① 후방의 안정
- ② 군대의 사기
- ③ 사단의 질과 양
- ④ 군대의 무장
- ⑤ 지휘관의 조직 능력

북한은 스탈린을 위대한 정치가로 뿐만 아니라, 위대한 군사 전략가로 칭찬하면서 스탈린의 다섯 가지 원칙이 북한 군대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말한다.¹⁶⁾

소련에서 1936년 12월에 출판된 야전 교무령은 투카체프스키(M. N. Tukhachevsky) 원수의 작품이며, 1940년에 한 번 수정되었으나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이 야전 교무령이 소련 군대의 재래식 전쟁 사상을 제2차 세계 대전 전에는 결정적으로 지배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이 내려오고 있다. 이 교무령의 주요 골자는, ① 주공축선상에서 적보다 결정적인 우세권을 확보, ② 하나의 전진축선상에서 작전하는 모든 부대들의 통합된 행동, ③ 기습과 기동의 신속성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포병의 화력과 기갑의 지원을 받는 보병이 공격 전투의 결과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힘이라고 한다. 공격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보병, 포병, 기갑의 협동을 기초로 구축된 통합 조직은 북한의 남침시 빈번하게 응용되었다. 본질적으로 북한은 보병, 포병, 기갑의 3각 협동 작전을 전개하면서 야포와 탱크에 의한 공격이 매우 중요함을 배웠다. 한국 전쟁시에 소련 군사 고문관들은 북한의 군 지휘자들에게 특별히 탱크의 화력, 쇼크, 기동성을 최대로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 전쟁의 경험과 더불어 소련으로부터 받아들인 원칙, 또는 원리들이 북한의 재래식 정규전 사상과 교리의 커다란 흐름을 이루고 있다.

1962년 12월 북한은 소위 '4대군사로선'——전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군대의 현대화——을 북한 군사 정책의 하나로 채택하고부터 과거에 비해 비정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즉,

북한은 재래식 정규전과 군대의 현대화가 얼마만큼이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면서 이것을 인민 전쟁의 개념과 연계시킨다. 북한에 의하면 과거 전쟁과 달리 현대전의 중요한 특징은 정규군과 인민들이 같이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모든 인민이 바로 군인이고, 전국이 바로 전투 지역이라고 한다.¹⁷⁾

나아가 북한은, 오늘날 북한 군대를 김일성의 항일 게릴라 전투 이미지 속에서 다시 형성시키려고 노력한다. 1950년대 말까지 결코 발표되지 않았던 김일성의 전투 경험, 다른 빨치산들의 회고담 등이 격찬을 받으면서 <로동신문>과 <근로자>에 실리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게릴라 전통이 오늘날 신화가 되었고, 항일 무장 투쟁을 기념하는 사적지가 수많은 곳에 세워졌다.

현재 북한의 군사 사상에 또 하나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은 김일성의 주체 사상이다. 이 주체 사상이 북한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전쟁관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있으며, 전쟁 준비를 왜 해야 하는가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주체 사상을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하여는 남조선 해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실천 방안으로 '국방에서 자위', '4대군사료선'의 명분 아래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

(2) 전쟁관

북한은 “전쟁은 그 본질에 있어서 특별한 폭력수단에 의한 어떤 계급의 정책의 연장”이며 “일정한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서로 다른 사회 계급 또는 나라들사이에 벌어지는 조직적인 무장투쟁”이라고 정의하고, 이어서 “전쟁은 계급사회의 산물이며 계급사회의 소멸과 함께 없어진다. 일정한 계급들의 정치적·경제적 이익과 떨어진 전쟁이란 있을수 없다.”¹⁸⁾고 말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전쟁에 관한 정의는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론’ 클라우제비츠(K. V. Clausewitz)의 ‘전쟁론’에 입각하고 있다.

북한은 전쟁의 종류를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 전쟁’의 양단 논리로 구분하고, ‘정의의 전쟁’을 “반동계급들과 그들의 통치기관을 약화시키거

나 소탕하고 피압박 인민들은 제국주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사회발전을 촉진시키는 전쟁”이라고 하며, 세계의 판매 시장과 원료 공급지를 획득하기 위한 제국주의 국가들간의 전쟁과, 이러한 지역에서 독립하기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을 반대하는 전쟁을 ‘부정의 전쟁’이라고 한다.¹⁹⁾

북한의 이러한 전쟁 분류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자기들이 수행하거나 앞으로 수행할 전쟁을 모두 ‘정의의 전쟁’으로 판정짓고 있다.

우리가 수행하는 전쟁은 그 어떤 경우이거나 모두 정의의 전쟁이다. 그것은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제국주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남조선을 해방하며,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기 위한 민족해방전쟁이기 때문이다.²⁰⁾

이와 대조적으로 ‘부정의 전쟁’은 침략 전쟁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관련된 전쟁은 ‘부정의 전쟁’이며 동시에 침략 전쟁이라고 판정하고 있다.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놈들이 하는 전쟁은 남을 먹자고 하는 침략전쟁으로서 부정의 전쟁으로 되며…….”²¹⁾

북한의 전쟁관의 핵심은 전쟁 불가피론이다. 북한은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전쟁의 필요성과 전쟁의 원인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를 따라서 북한은 전쟁의 원인을 계급 제도에서 찾고 있다. 사회에서 계급이 없어질 때에만 전쟁이 없어지며, 계급 없는 사회인 공산주의 사회를 세우는 길만이 전쟁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북한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존재해 있고, 또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반제 투쟁이 필요한 이상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세계는 결코 평온할수 없으며 침략과 전쟁은 없어질수 없습니다.”²²⁾

한반도의 현시점에서 북한은 전쟁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시기 전쟁의 근원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에 있다.” 그리고 이어서 전쟁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남조선을 전초기지로 삼아

또 다시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발광하고있다. 따라서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를 지구상에서 영원히 쓸어버리기 위한 반제반미투쟁을 떠나서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킬수 없다.²³⁾

이처럼 북한은 이론적으로 제국주의와 전쟁의 상관성을 논하면서 한반도에서는 미국의 존재와 관련시켜 전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1950년대 북한의 문헌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미국을 포함한 자유주의진영 내부의 모순이 심화, 전쟁발발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간섭할 여유가 없을 때.
- ② 미국 자체내의 모순이 격화, 투쟁이 발생하여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돌릴수 없을 때.
- ③ 자본주의진영과 사회주의진영간의 전쟁발발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간섭할수 없을 때.
- ④ 한국내부에서 반미·반정부봉기가 일어나 혁명분위기가 성숙될 때.²⁴⁾

1970년대의 북한 문헌에 의하면, ① 미국이 북한에 먼저 전쟁을 개시, 이에 대해 북한이 반격, 공산화 통일을 실현, ② 미국이 세계적 규모의 전쟁에 개입, 한반도에 대한 군사력 투입이 분산될 때, ③ 서방 진영의 내부 분쟁에 미국이 개입, 한반도 문제에 간여 못할 때, ④ 한국에서 '반제·반미투쟁'이 일어나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위축·약화됐을 때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²⁵⁾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1950년대, 1970년대, 그리고 오늘날에도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원인으로 '주한미군의 군사력'과 '한국사회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고 있으며, 또 한가지는, 장차 한반도의 전쟁에는 미국이 반드시 참여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장차 어떠한 양상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위에서 본 것처럼 북한은 한반도라고 하는 주어진 지역에서 한국과 미

군을 상대로 하는 민족 해방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장차전 구상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① 장차전의 성격과 수행 방식은 민족 해방 전쟁이므로 단순한 현대적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유격전을 포함한다. ② 미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북한보다 우세한 화력, 기동력, CI, 전자전, 나아가 미국의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 등을 무력화시키는 전략과 전술을 택한다. ③ 남한의 지형과 기후에 적합한 무기 체계를 발전시킨다. 즉, 장차 한반도의 전쟁은 재래식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한 현대전이며 미군의 우세한 장비와 기술 지원을 받는 한국군에 대항하는 민족 해방 전쟁을 가상하고 있다.

전쟁에 대비해서 북한은 정신적으로 주민들에게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대해 자신을 갖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김일성의 발언과 북한의 매스 미디어에 자주 나타나는 예를 보면,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큰 싸움을 겪어 보았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든 무섭지 않다.”가 있다. 나아가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 미국의 원자탄을 겁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원자탄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지만 조금도 겁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3년동안이나 미국놈들과 전쟁을 하였으나 그들은 원자탄을 쏘지 못하였습니다.……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한번 해봅시다……절대로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놈들이 접어들면 전쟁을 하여야 합니다. 26)

이러한 정신적인 전쟁 대비와 병행하여 북한은 현실적인 전쟁 준비로서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의 병진정책 아래 평시에 전시 경제 체제 수립과 군수 산업 발전을 강조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현대 전쟁의 승리 요인으로서 항상 정치 사상적 요인을 다른 요인에 비하여 우선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군사적 요인을 무시한 적이 없다. 김일성은,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적들의 침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지킬 수도 없으며, 정치적력량과 경제적력량을 보호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더욱 강화 발전시

킬수도 없습니다.²⁷⁾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전 북한군 제1부참모총장 김철만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정치사상적요인이나 경제적요인도 결국은 군사적요인을 통해서 전쟁승리에 작용한다.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수행할수도 없으며 전쟁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²⁸⁾ 북한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정치적, 사상적, 정신적 요인을 제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쟁하고만 관련이 있는 주장이 아니라 김일성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김일성 주체 사상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은 전쟁 불가피론이라는 기본 입장에서 아직까지 그 어떤 변화를 보인 적이 없다. 장차 한반도 전쟁시, 북한은 미국을 극복할 수 있는 전쟁 수행 방식을 남한과 미국에게 강요할 것이며, 평시에는 질적·양적으로 군사력 증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4. 군사 전략

군사 전략의 핵심 개념은 군사적 행동 방법이다. 따라서 군사 전략은 행동 수단으로 ‘힘’(군사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힘’만이 전략의 전부 아니다. 군사 전략은 그 힘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하는 목적 문제, 그리고 이 힘을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북한 군사 전략의 목적, 군사력, 그리고 유사시 군사력의 운용 방법에 관해서 논의하겠다. 그러나 장차 유사시 북한이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상세히 논의하는 것은 하나의 소설, 또는 시나리오와 비슷한 것이므로 전략 운용 개념(군사 전략 개념)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1) 목적, 개념 및 특징

논리적으로 군사 전략은 국가 전략의 일부분이며, 군사 전략 목표도 국

가 목표 중의 하나이거나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 또는 중간 목표이다. 오늘날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체제 목표 중의 하나가 ‘남조선 해방’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군사 전략 목표도 이 목표에 기여해야 한다.

같은 논리로 북한의 군사 전략은 북한의 남조선 해방 전략(통일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위 전략이다. 북한의 한반도 통일 전략은 평상시에 추진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과 유사시를 대비한 ‘무력혁명’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소위 ‘결정적인 시기’²⁹⁾를 조성하여 무력 혁명을 실천하려고 한다. 즉, 북한은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결정적인 시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나서 무력으로 남조선을 해방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통일 전략과 군사 전략을 동일한 맥락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은 통일 전략에 의해서 군사력 사용의 제한칙이 서고, 군사력이 건설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군사 정책, 전략, 나아가 군사 사상과 교리도 북한이 추구하는 전반적인 대남 혁명 전략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북한이 갖고 있는 전쟁의 원인, 승리의 요건, 전쟁이 가지는 의미는 남한과는 상당히 다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군사 전략 개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군사 정책, 군사 전략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군사로선’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북한의 <조선말사전>(평양, 과학원출판사, 1962)에서 ‘군사’와 ‘정책’이란 단어를 연결하여 군사 정책의 뜻을 풀어 보면 북한의 군사 정책 개념은 “전쟁, 군대, 군비 등에 관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군사 전략의 개념을 보면 “전쟁의 전체 국면이나 일정한 권역에서의 무력의 배치, 전투의 조직 진행 등에 대한 전쟁 전반을 영도하는 작전 방침”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공식 문헌을 통해서 북한이 사용하는 ‘군사로선’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전쟁, 특히 현대전쟁의 제반요구를 전면적으로 고려하고 우리 인민자신이 직접체험한 혁명전쟁의 풍부한 경험이 토대하여 철저히 자체의 실정에 맞게 나라의 국방건설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길을 명시한 창조적이며, 자주적인 로선이다. 우리 당의 군사로선은 바로 항일무장투쟁과 조국해방전쟁의 고귀한 경험적교훈들을 일반화하였으며, 그것은 사회주의제도가 확고히 수립된 오늘의 새로운 조건과 제기되는 혁명임무에 적응하게 구현하고 발전시킨것으로써 여기에는 군대의 강화발전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방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철두철미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제방침과 방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³⁰⁾

북한의 군사 노선은 위에서 주장하는 대로 따를 때 ‘현대전쟁의 제반요구’, ‘혁명전쟁의 경험’, ‘장차 혁명의 임무’, ‘자체의 실정’을 토대로 형성되어 있고 ‘장차 혁명임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즉 군사 전략의 목적부터 군사 전략을 형성하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전쟁에서 병력과 장비를 운영하는 순수한 군사적 측면의 북한 군사 전략 개념에는 위에서 언급한(서론부터) 내용들이 상위 개념으로서, 또는 그 배경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군사 전략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첫째로, 북한 군대의 임무와 군사력은 ‘남조선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로, 한반도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발발할 것이며, 셋째로, 장차 전쟁 시기는 남한의 내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넷째로, 장차 전쟁의 양상은 전후방의 구분이 없을 것이며, 다섯째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치 사상적 무장이며, 여섯째로, 적의 양적·기술적 우세를 비정규전 수행 방식으로 극복해야 하며, 일곱째로, 한반도의 지형과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상황에 알맞게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여 북한 군사 전략은 남조선 혁명 임무, 군사 기술적 열세, 정치 사상적 무장을 기초로 하여 발전하였다.

북한은 결정적 시기가 남한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조성되었다고 판단되면 무력으로 전면 남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북한이 병력과 장비를 운용하는 개념, 즉 용병 개념은 ① 총력전, ② 배합전, ③ 전래 기습전,

④ 속전속결전이라고 예측하고 있다.³¹⁾ 이러한 군사 전략 개념을 구상하게 되는 군사적 측면의 목적은(정치적, 또는 비군사적 측면의 목적은 위에서 상세히 논의했음), ① 남한의 정규전을 한수 이복에서 섬멸, ② 남한의 전 지역을 동시에 전장화, ③ 주도권을 조기에 석권, ④ 남한 전지역을 조기에 점령하는 것이다.³²⁾ 정치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 운용 개념을 북한의 경우에 이렇게 제시했으나, 실제로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일이며,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이것은 전략 개념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 어떤 코스로, 어떻게, 언제, 군사력이 행사될 것인가를 밝혀 내는 일은 더욱 어렵다.

(2) 군사력 건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만으로는 ‘남조선해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정적시기’(혁명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려 하고 이와 동시에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다.

김일성은 1968년 2월 8일 인민군 창건 기념 연설에서 “선거놀음을 해서 정권을 잡을수 없으며……손에 무장을 들어야 정권을 잡을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같은 해 정권 수립 20주년 기념 연설(1968. 9. 9)에서 “폭력투쟁없이 그 어떤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조선인민들이 주권을 쥘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무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오직 폭력 수단에 의해서만 남한 혁명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이유는 ‘남조선해방’이 단순한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계급 혁명을 통하여 북한에 동조하는 남한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반공 세력이 제거돼야 하기 때문이다. 1989년 4월 북한 군대 창건 57돌 기념식에서 최광(북한군 총참모장)도 강력한 군사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로동계급과 그 당은 자기의 강력한 혁명무력을 가져야 반제 민족해방위업을

성취하고 승리한 혁명을 보위할수 있으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줄기찬 발전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습니다.33)

북한은 군사 전략 목표(정치적, 군사적)를 달성하고 군사 전략 개념인 총력전, 배합전, 선제 기습전, 속전속결전을 실전에서 실수 없이 작전화하기 위하여, 군사력 건설을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3대혁명력량강화', '4대군사로선', '국방경제병진') 북한은 1962년 12월 당 제4기 제5차 전원 회의에서 '4대군사로선'——전국의 요새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을 택하는 동시에 경제 건설이 제약받더라도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국방 경제 병진 정책도 결의했다. 이보다 2년 늦은 1964년 2월 당 제4기 제8차 전원 회의에서 남한 혁명의 전략 기조로 채택된 '3대혁명력량강화' 정책은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있어서 군사적 요소를 더욱 강조하였다. 군사적으로 혁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968년에는 청와대 기습, 울진, 삼척 등에 대규모 게릴라 침투 등을 시도했다.

이러한 군사 전략 개념과 군사 정책을 배경으로 하여 북한의 군사력이 증가하여 온 추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① 전후 재건기(1953~1961)
- ② 자립 및 방어 강조기(1962~1969)
- ③ 공격 능력 강조기(1970~1979)
- ④ 공세적 군사 태세 발전기(1980~현재)

1) 전후 재건기(1953~1961)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된 이후부터 1961년 말까지 북한은 급격히 팽창한 남한의 군사력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상군보다 해·공군 위주로 팽창하였다. 해군은 경비정, 공군은 MIG-15, 지상군은 특수 부대, 야포, 고사포가 증가했다.

2) 자립 및 방어 강조기(1962~1969)

기간중 북한은 대내외 군사 정책에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북한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의 북한 내정과 주변 국제 정세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① 독자적인 적절한 군사력 보유, ② 독자적 군사 전략 수립, ③ 남한과 미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 체제 확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북한은 필요할 때 대남 혁명 전략에서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가늠케 하는 수단이 필요했다.

이에 북한은 ‘국방경제병진정책’, ‘4대군사로선’, ‘3대혁명역량강화정책’을 채택하여 오늘날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1967년부터 국방비를 국가 예산의 30% 이상을 투자하면서 ‘4대군사로선’을 실현하고 있다. ‘4대군사로선’을 분석해 보면, 전인민의 무장화는 방어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즉, 군수 산업 시설 보호, 후방 침투 방어, 그리고 방어시에는 전주민을 비정규전 요원으로 전환하여 이용할 것이다. 전국토의 요새화 방침은 적의 폭격과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비하고 나아가 지구전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노선은 그 성격이 대체로 방어적이다. 반면에 전군 간부화는 전투력의 질적 향상과 유사시 부대의 증편을 위한 것이며, 전군의 현대화는 화력, 기동력, 지휘 통제력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으로 공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전군 현대화의 방침은 단순히 보다 나은 무기를 구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한국적인 지형 조건에 적합하고, 독자적인 군사 전략에 알맞는 무기, 궁극적으로 독자적으로 적합한 군수 산업을 요구한다. 1960년대에 북한은 각종 장비의 현대화 및 자체 생산을 시작하여 기술과 생산 시설의 기초를 조성하였고, 지상군의 재래식 장비는 양산 체제를 갖추었다.

이 기간에 북한의 병력은 약 7만 명이 증가했고 장비는 지상군과 해군 위주로 팽창했다. 지상군은 방사포와 고사포가 증가하였고 해군의 함정수는 거의 두 배로 증가, 공군은 신종 전투기와 수송기가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그 절대 숫자는 감소를 보였다.

3) 공격 능력 강조기(1970~1979)

북한은 1960년대에 세운 제반 국방 자립 정책을 1970년대에도 계속 실천하여, 1970년대에는 방어 위주의 준비 태세가 아니라 공격 위주의 군사적 태세를 강조하고, 군사력의 양적인 팽창을 점차적으로 대남 전략적 우세로 전환시키고 있었다. 1970년대에 북한이 공격 전략 개념을 갖게 되었다는 근거로서는, ① 대규모의 비정규전 부대의 보유와 그 중요성 강조, ② 양적인 면에서 남한보다 우세한 위치를 확보, ③ 기습 남침을 위한 땅굴 굴착, ④ 작전의 속전속결을 중요시하는 빈번한 발언, ⑤ 단기전을 시사하는 귀순자들의 증언을 열거할 수 있다.

기간중 병력이 7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지상군의 경우 특수 부대, 포병과 기갑 전력이 1960년대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1960년대에 비해 도하 능력이 급성장했다. 해군은 잠수함, 어뢰정, 상륙정 등 전투함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며, 공군은 MIG-21, SU-7이 새로 도입되었고 수송기 AN-2도 200기 이상으로 증가하여 특수 부대의 침투 능력은 급격히 향상되었다.

4) 공세적 군사 태세 발전기(1980~현재)

198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지상군 장비를 거의 모두 자체 생산하면서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해군의 경우에도 1970년대에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1980년대에는 거의 자체 생산으로 장비를 획득하고 있으며, 공군의 경우 MIG-21을 조립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에도 장비가 양적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지상군, 해군, 공군의 공통적인 특징은 공세적인 군사 태세의 발전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부대 구조를 바꾸어 보병 사단을 감소시키고, 기계화 군단, 기갑 군단, 포병 군단을 창설했으며, 동시에 전군을 평양-원산 이남 지역으로 약 60%를 이동 재배치시켰다. 무기 체계에서도 전차는 T-62를, 야포는 자주포를 증가시켜 화력과 기동력을 증대시켰으며, S형 공병 장비를 대량 도입하여 도하 능력을 향상시켰고, 특수 부대, 해군의 상륙함과 잠수정, 공군의 AN-2, MI-2, H-500MD를 증가시켜 침투 능력을 확대시켰다.

북한이 이만큼 건설된 군사력만 갖고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확립된 군사 전략 개념을 실전에서 작전화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안하는지는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제시한 '3대혁명력량' 가운데 북한의 혁명 역량만 갖고서 무력 혁명을 시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나머지 2개의 혁명 역량을 김일성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5. 결 론

결론적으로 북한의 군사 사상과 전략의 기본 성격은 정치적이다. 다시 말하여 북한의 군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한반도의 주변 군사 정세, 또는 국제 정치적 조건과 남북한의 군사력 문제만이 아니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보다 오히려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김일성의 독재 체제라는 점과, 남한의 혁명을 목표로 삼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전쟁을 가장 효과적이며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북한의 군사 사상은 김일성의 항일 투쟁 경험, 교시, 김일성의 유일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과 이론은 있을 수가 없다. 과거 1950년대나 1960년대 초와 같이 소련과 중국의 군사 사상을 언급하는 일도 없이 오직 김일성의 '주체적군사사상'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군사 사상과 전략은 순수한 군사적 요인과 대내외의 객관적 군사 정세를 무시하고 김일성이 판단하는 남한 정세관에 따라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서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고, 군사란 정치의 일부이며, 군사 정책과 전략은 남한 적화 전략의 일부이다. 따라서 김일성이 보는 남한 정세 또는 혁명의 성숙도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남북한의 군사 관계가 군사력의 차원에서만 결정될 수 없고 정치력이 더 중요한 기준과 변수가 된다.

북한은 이처럼 군사 전략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남조선 혁명 전략(통일 전략)의 전제에서 추구하기 때문에 평화시에는 주한 미군의 철수를 꾀하

고 한국 사회의 혼란 조성을 추구하여 남한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면서,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정치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전시를 대비하여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개인의 정신력을 강조하고, 미군의 개입을 전제로 기술적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유격전과 배합전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북한의 군사 사상과 전략을 단순히 군사적 차원에서 보면 안 된다. 북한의 군사 사상이 단순히 공산주의 이념 또는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서 오는 논리적 연장이든,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성을 계산한 것이든 간에 북한의 군사 전략은 첫째로 김일성의 1인 지배 체제, 둘째 남한에서 반미와 반체제 운동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남한의 상황을 절대적으로 혁명을 향한 전략적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전쟁 역지력을 높이는 최선의 길이다.

- 1) 육군 교육 사령부.
- 2) <철학대사전>, 성균관 서관, 1977, p. 479.
- 3) <한국어대사전>, 현암사, 1978.
- 4) Julian Lider, *Military Theory*, Gower, 1983, p. 337.
- 5) Lee Chong-sik and Oh Ki-won, "The Russian Faction in North Korea", *Asian Survey*, 8(4) (April 1968), pp. 270~288.
- 소련파에 속하는 군인으로서 알려진 인물은 유경수, 김해홍, 김제욱, 남일 등이다.
- 6) 연안파에 속하는 군 고위급들은 이권우, 김웅, 김을규, 장평산, 방호산, 무정, 최종학, 박효삼, 이광수, 김광덕, 최인준 등이다.
- 7) Suck-ho Lee,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Seoul, Seoul Computer press, 1989, pp. 211~221.
- 8) <로동신문> 1979. 4. 25. 북한 인민군 창건 47돌 기념 보고 대회에서 서철 보고.
- 9) <로동신문> 1983년 4월 25일자. 북한 인민군 창건 51돌 기념 오극렬 보고.
- 10) <북한중앙방송> 1988년 4월 23일자. "우리인민군대를 창조와 건설의 군대, 혁명의 군대"
- 11) 국가 안전 기획부 편, <김일성 군사 노선>, p. 31.
- 12) 국가 안전 기획부 편, 앞의 책, p. 252.
- 13) 북한 헌법 제5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공화국의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고 전국에서 외세를 축출하며 민주적 기반위에서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고 완전한 민족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 :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다.
- 14) 국가 안전 기획부 편, <북괴 군사 전략 자료집>, 1974. pp. 165~166.
 - 15) 최종하, “조선인민군은 인민리익의 진정한 보호자이다.” <근로자> 1955년 2월호, p. 93, p. 95.
 - 16) Daniel S. Stelmach, “The Influence of Russian Armoured Tactics on the North Korean Invasion of 1950”(Ph. D. dissertation, Saint Louis University, 1973 참조.
 - 17) 김철만, “현대전쟁의 특성과 그 승리의 요인”, <근로자> 1976년 8월호, pp. 34~35.
 - 18)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744~745.
 - 19) 위의 책.
 - 20)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271.
 - 21) 안전 기획부 편, <김일성 군사 노선>, p. 169.
 - 22) 위의 책, p. 170.
 - 23) <정치사전>, pp. 744~745.
 - 24) 안전 기획부 편, <김일성 군사 노선>, pp. 161~162.
 - 25) 허종호, 앞의 책, pp. 267~270.
 - 26) 안전 기획부 편, <김일성 군사 노선>, pp. 167~169.
 - 27) <김일성저작선집> 제 4 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p. 85.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 28) 김철만, 앞의 책, p. 40.
 - 29) ‘결정적 시기’란 혁명 분위기의 성숙기 또는 무력 적화의 절대적 호기를 말한다. 1966년 10월 제 2차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김일성은 “현단계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방침은 적들의 탄압으로부터 혁명이 보존하는 동시에 그것을 부단히 축적하고 성장시킴으로서…….”
 - 30) ① “우리 당 군사노선의 정당성”, <근로자> 1968년 7월호, pp. 25~33.
② “우리 당의 군사노선—인민군 창건 2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신보> 1968년 1월 17일자 참조.
 - 31) 이러한 개념이 옳고 그른 것인지, 또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현재 이에 관한 연구가 어떤지는 공개적으로 토의나, 논쟁이 되어 본 적이 없다. 여기서는 국방부 산하, 군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하였다. 육군대학, <전략 연구 : 주변국 정세와 북한의 대남 전략>, 진해, 육군대학, 1988 참조.
 - 32) 육군대학, 앞의 책, pp. 306~308.
 - 33) <로동신문> 1989년 4월 25일자.

〈표 1〉 남북한의 전투 서열 증가 추세

병력 장비	남한			북한			비고	
	1968년	1978년	1988년	1968년	1978년	1988년		
지상군	병력	550,000	560,000	567,000	345,000	440,000	750,000	남한은 해병 포함
	사단/여단	22/3	21/11	23/13	19/5	28/15	28/68	
	진차	600	1,380	1,500	800	2,100	3,300	
	장갑차	·	20	650	200	800	1,550	
	야포	720	2,000	3,200	2,000	3,000	3,900	
	대공포	·	160	600	200	5,000	8,000	
	다연장로켓포	·	·	140	·	1,300	2,500	
해군	병력	17,000	32,000	29,000	9,000	27,000	39,000	
	전투함	26	74	155	29	304	388	
	지원함	46	33	33	54	90	168	
공군	병력	23,000	30,000	33,000	30,000	45,000	53,000	
	전술기	195	276	372	590	655	765	
	지원기	29	248	298	47	350	692	

* 출처 : IISS, *Military Balance*, 1968~1969, 1978~1979, 1988~1989.

3. 북한의 통일 정책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1. 서론

북한은 그간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의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통일을 위한 수많은 방안들을 줄곧 제시해 왔다. 이러한 통일 방안은,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이 무력에 의해 통일을 시도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주적평화통일방안'으로서 제안된 것인데, 이러한 통일 방안들은 크게 보면 '남북총선안', '과도적연방제안' 또는 '연방국가안'(완전 연방제 국가안)으로 구별된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 방안들은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북한의 특정 시각을 담고 있는 동시에 객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 북한의 통일 전략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의 통일관으로서 북한이 통일 문제를 혁명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점, 그리고 통일을 무엇보다도 '외세지배로부터의 민족해방'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북한의 통일 전략은 '북한의 혁명력량에 의한 남한해방로선'(1960년대 초까지)으로부터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입각한 통일 노선(1960년대 중반~1970년대 말)을 거쳐 '민족자주정권수립'에 입각한 통일 로선(1980년 이후)으로 변경되어 왔는데, 남북 총선안, 과도적 연방제안, 연방 국가안은 이러한 각각의 통일 전략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통일관을 먼저 파악하는 기초 위에서 북한의 통일 전략의 변천 과정, 그리고 통일 전략과 통일 방안 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우리는 1980년대의 통일 방안인 연방 국가 창설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북한의 구체적 진술과 그 특징들을 밝히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북한의 통일 정책이 지닌 특징과 문제점들이 간략하게 검토될 것이다.

2. 북한의 통일관

북한의 통일 전략과 통일 방안 등은 북한 사회의 사회주의 건설 단계, 남한의 사회적·정치적 발전, 대내외적 정세의 변화 등에 따라 그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에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일관된 측면들이 있음이 발견된다. 북한의 통일관이 지닌 이러한 일관된 측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분단을 ‘미제’와 ‘미제’와 결탁한 남한 내부의 ‘매판적’ 지배 세력이라는 ‘내외의 분렬주의세력’이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절곡으로 파악한다. 북한에 의하면 분단은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제’에 의한 남반부 ‘강점’이 계속되고 ‘미제국주 의자’를 실제적 통치자로 하는 국내대리세력’들이 남반부를 계속 지배함으로써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고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북한은 통일을 분단된 국토와 갈려진 민족이 단순히 재결합하는 문제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미제’와 남한 내부의 매판 세력이라는 내외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분쇄하고 그들에 의해 강요된 분단된 조국을 다시 통일된 조국으로 만드는 문제로 파악한다. 이와 같이 북한은 통일 문제를 외세와 외세와 결탁한 매판 세력의 지배로부터의 민족 해방이라는 과제와 결부시키고 있다. 북반부는 ‘해방’되었지만 ‘미제’의 남반부 강점과 ‘국내대리세력’의 남반부 통치로 인해 민족 해방의 과업은 완성되지 못했다. 따라서 통일은 민족 해방에 복무하는 것이어야 하며 통일이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한반도 전역에 연장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민족 해방에 복무한다는 의미에서 통일은 우리 민족 전체의 최대의 당면 과제이자 절실한 염원이라는 것이다. 민족

해방은 '미제'의 국내 대리 세력에 의한 남반부 지배로 인해 생겨나는 '계급' 문제를 아울러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북한은 민족이란 인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단위로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자결권을 지니며 민족 자결만이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의 전제가 된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민족내부문제'로서의 조국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하는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하며 그밖에 다른 나라 세력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한다는것을 뜻한다."1)고 주장한다.

넷째, 북한은 남한의 실질적인 통치자를 미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남한을 미국의 '완전식민지'로 규정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은 남한을 주권을 지닌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으며, 비록 분단되었지만 한반도에는 오직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국가'만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북한은 통일을 '1 민족 2 국가'를 다시 '1 민족 1 국가'로 만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단된 1 국가'를 '통일된 1 국가'로 만드는 문제로 보며, 남한 정부에 대하여 북한과 남한 인민이 접촉하는 일 등을 주권 국가인 남한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 구성원이 향유해야 할 당연한 권리로 간주한다.

다섯째, 나아가 북한은 한반도 전역에서의 민족 해방의 완성과 그 결과로서의 조국 통일을 공산주의의 건설과 주체 사상화에 의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전제로 파악한다. 이 점은 북한이 통일 문제를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한 '계속혁명'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에 의하면 혁명은 기본적으로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또한 혁명은 민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 내부의 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급없는 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전한반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조선혁명'은 '민족해방'을 완성시키는 동시에 다음 단계의 혁명으로 발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선로동당'은 그 규약(1980년 10월에 5차 개정된 현행 규약) 속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목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²⁾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북조선의 혁명력량’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조국 통일을 이룩해 내는 ‘주동력’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분단이 고정화되는 속에서 북반부에서 혁명이 계속 진척되고 남북간의 관계가 변화되어 감에 따라 혁명의 내용, 혁명과 통일의 관계 등을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 역시 변천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통일 전략, 통일 방안 등의 변화를 북한의 ‘조선혁명론’의 변화와 관련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북한의 통일 전략과 통일 방안

북한의 통일 방안 등은 혁명과 통일의 관계에 대해 특정의 관점을 지닌 북한의 통일 전략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북한의 통일 전략 내지 통일 노선을 우선적으로 고찰하면서, 이 통일 전략에서 나온 북한의 통일 방안 등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의 통일 전략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변화 과정을 거쳐 왔다.

- ① 1945년~1960년대 초...북한의 혁명 역량에 의한 남한 해방 노선 — ‘혁명적 민주기지로선’
- ② 1960년대 중반~1970년대 말...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입각한 통일 국가 창설 노선
- ③ 1980년 이후... ‘민족자주정권수립’에 입각한 연방 국가 창설 노선

(1) 북한의 혁명 역량에 의한 남한 해방 노선 — 혁명적민주기지로선’

북한에 의하면 ‘혁명적민주기지’ 내지 ‘혁명기지’는 “혁명하는 나라의 한 지역에서 혁명을 공고히 하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담보하는 책원지”³⁾

이다. 이 때 우리는 통일 전략으로서의 혁명 기지 노선과 북한의 ‘조국통일’과 ‘조선혁명’의 총로선으로서의 혁명 기지 노선을 구분해야 한다. 통일 전략으로서의 혁명 기지 노선은 통일은 물론 남북 모두에 있어서의 혁명의 주된 역량을 북한의 혁명 역량으로 파악하는 노선으로서, “북한의 혁명 역량(정치·경제·군사역량)과 그의 역할만을 결정적인 담보로 간주하고 그를 근거로 남한 지역에 혁명을 확산하는 방법으로 조국 통일을 실현하려는”⁴⁾ 전략이다. 이에 반해 ‘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총로선으로서의 혁명 기지 노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북한은 해방 직후 미군에 의해 점령되지 않은 북반부에 혁명 기지를 건설·강화하고 이 혁명 기지에 축적된 혁명 역량에 의해 남한을 ‘해방’시키는 것이 조국을 통일시키고 전한반도에서 혁명을 진척시키는 결정적인 담보물로 파악한다. 이에 따라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북조선 5도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최초로 ‘민주기지로선’이 채택된다. 이 노선에 따라 북한은 혁명의 참모부라 할 수 있는 당을 건설하고 ‘인민민주주의정권’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며, 또한 이 정권을 통해 토지 개혁, 중요 산업의 국유화, 노동법과 남녀 평등권의 발표 등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어 북한은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인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로 나아가며, 이미 성취한 혁명의 성과를 보위하고 ‘전조선혁명’을 담보하는 무장력으로서 인민군을 창설한다. 그리고 1948년 9월 9일에는 대한 민국의 수립에 대항해 북반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다.

민주 기지의 건설과 강화를 통해 조선 혁명을 진척시키고 남한을 해방시킨다는 전략은 한국 전쟁 이후에도 계속 견지된다. 특히 한국 전쟁으로 인해 ‘혁명기지’가 완전히 파괴된 상태 속에서 북한은 1953년 휴전 협정 체결 후 다시 혁명 기지의 강화에 모든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북한은 ‘모든것을 혁명적민주기지 강화를 위한 인민경제 복구예로!’라는 구호 아래 중공업 건설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 건설에 총매진한다. 이 시기에 이르러 북한은 비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우선시하게 된다.⁵⁾ 이에 따라 김일성은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5일 ‘조선로동당 제6차전원회의’에서 “정전협정의 체결은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향한 첫걸음으로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⁶⁾고 선언했으며, 이후 북한은 ‘평화통일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적극적인 평화 공세를 취한다.

북반부에 혁명 기지를 건설하여, 이 기지에 축적된 혁명 역량에 의해 남한을 해방시킨다는 북한의 통일 노선은 북한이 1960년대 초까지 일관되게 견지한 노선이다. 이 노선에 입각해 북한은 최초 미·소 공동 위원회를 통한 통일 정부 수립을 지지했으며, 남한 단독 정부 수립 전후에는 외국군과 유엔 한국 위원단이 철수한 가운데 제정당·사회 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지도하에 ‘남북총선’을 실시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한국 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19일에는 북한의 최고 인민 회의와 남한의 국회를 단일한 입법 기관으로 연합하여 헌법을 채택하고 정부를 구성한 다음, 선거를 통해 다시 전조선 입법 기관을 구성한다는 평화 통일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 전쟁은 북한에게는 무력에 의거해 남조선을 해방하는 ‘조선해방전쟁’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던 것이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 통일은 지극히 어려운 민족적 과제가 되고 말았다. 한국 전쟁 이후에는 북한은 일관되게 남북 총선에 의한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통일 방안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제로서 북한은 주한 미군 철수와 군축, 통일 협의를 위한 남북 대표자 회의의 소집 등을 요구했다.

개괄해 보면, 북한이 최초 남북 총선에 의한 평화 통일 또는 무력 통일을 시도한 것은 객관적 정세가 혁명에 유리하며 또한 북한의 혁명 역량에 의해 남한을 해방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 전쟁 이후에 평화 공세를 강화한 것은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혁명기지’의 재건설과 강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창출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1948년 4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남북한의 제정당·사회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남북 련석회의’를 소집했는데, 이후 북한은 이러한 형식의 회의를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분열을 강화시키는 남한 당국의 ‘책동’에 대항하여 통일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회담 방식으로 보는 기본 입장을 취한다.

(2)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입각한 통일 노선

북한은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된 이후 '개인농민경지의 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화'를 핵심으로 하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에 착수한다. 북한에 의하면 생산 관계의 이 사회주의적 개조는 전진(戰前)의 준비 과정을 거쳐 전후에 급속히 추진됨으로써 1958년에 이르러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이 완성되고 이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적으로 종결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1957년부터 추진된 제1차 5개년 계획에 의해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발전이 보장됨으로써 1960년대에는 전쟁으로 인한 파괴가 완전히 복구되고 사회주의의 건설이 더 한층 촉진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튼튼히 확보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1960년대부터 사회주의 혁명 다음에 요구되는 단계로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는 단계가 설정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을 추진한다. 나아가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는 "사회의 모든 분야가 로동계급화된 사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모두 로동계급화되고 사회관계가 다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된 무계급사회"⁷⁾가 건설됨으로써 완수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은 북반부에서는 그간 혁명에 계속 진척됨으로써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 사회주의적 개조 단계를 거쳐 그 이후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반면, '미해방된' 남한에서는 '미제'에 의한 남반부 강점과 매판 세력의 지배로 인해 혁명이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에 북한은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그 이전까지 남북한 전역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서 동일한 성격과 임무를 지녔던 '조선혁명'이 이제 각각 상이한 성격과 임무를 지닌 '두개의 지역혁명'으로 분리되었다고 인식한다. 이에 북한은 북조선 혁명의 성격과 주체 등이 구분되는 '남조선혁명'을 제창하기에 이른다. 무엇보다 북한은,

해방직후 혁명발전의 첫단계에서는 북과 남의 두지역에서 같은 성격의 혁명

임무를 내걸고 다만 지역적특성에 따른 고유한 투쟁형식으로 혁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 후 북반부에서 혁명이 계속 추진되고 남조선의 식민지과정이 심화됨에 따라 남과 북의 발전단계에서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게 되었으며 통일적인 전조선혁명에 복종되는 두지역의 혁명은 마침내 성격상의 차이를 낳게 되었다.⁸⁾

라고 하면서 분단의 지속으로 인한 남과 북의 발전 단계상의 차이가 서로 별개의 혁명 과업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두 개의 지역혁명론’에 입각한 ‘남조선인민’에 의한 ‘남조선혁명’의 필요성을 조국 통일이 더 이상 북한의 혁명 역량에 의해 남한을 해방시키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지도하에 혁명 과업을 수행하던 남한 내 혁명 세력이 소멸되고, 분단의 완결로 남한에 대한 사실상의 지도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1960년의 ‘4월혁명’에서 증명되었던 것처럼 미흡하나마 새로운 혁명 역량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⁹⁾

등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북조선혁명’과 구분되는 ‘남조선혁명’을 북한에 사회주의 건설이 시작되기 이전에 전한반도에 요구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혁명으로 파악한다. 예를 들면 1965년 김일성은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남조선혁명의 기본모순은 미제와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한편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 도시소부르주아 및 민족자본가들을 다른 편으로 하는 둘사이의 모순이다. 그러므로 남조선인민들이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제국주의침략세력을 몰아내고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때려부셔야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미제국주의는 남조선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된다.”

고 지적하면서, 남조선 혁명은 “외래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을 반대하는 민

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민주주의혁명”¹⁰⁾이라고 규정한다. 북한이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한 것은 남한 사회를 여전히 ‘식민지반봉건사회’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은 그 이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불리기도 하다가 1970년 11월의 제5차 당 대회에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정식화된다.¹¹⁾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변경에 관계없이 북한이 의미하는 바의 ‘남조선혁명’은 ‘반제민족해방 반봉건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서의 기본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 점에서 북한이 말하는 ‘남조선혁명’을 ‘민족해방인민주주의혁명’으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한다. 이 ‘남조선혁명론’에서의 혁명의 주체는 남한 인민이 된다. 그리고 혁명의 역량은 ‘주력군’과 ‘보조력량’으로 구분되는데, 주력군은 노동자·농민과 그 속에 깊이 뿌리박은 노동 계급의 당으로 파악된다.¹²⁾ 나아가 이 혁명은 평화적 또는 비평화적 방법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조국 통일과는 달리 오직 비평화적 방식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또한 인민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통해서만 이 혁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¹³⁾ 1972년에는 기본 모순 중 ‘주되는 모순’이라는 규정을 삽입하여 이를 ‘미제와 남조선인민들의 모순’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모순이 풀리면 다른 모순, 즉 매판 자본가와 노동 계급 사이의 모순, 지주와 농민 사이의 모순, 매판 자본가와 소부르주아 및 민족 자본가들의 모순은 쉽게 풀린다고 주장하였다.¹⁴⁾

그런데 북한은 1964년 2월에 개최된 조선 노동당 중앙 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 회의에서 ‘남조선혁명론’을 최초로 정식화하였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3대혁명력량강화론’을 제기하면서, 남조선 혁명 역량을 중심으로 한 ‘남조선혁명’의 필요성을 명백히 하였다. 이 때 ‘3대혁명력량강화’란,

첫째로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¹⁵⁾

을 뜻한다. 이 ‘3대혁명력량’은 혁명과 통일을 수행하는 데 상호 불가분적인 관계가 있지만, 그 중 주동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주체적 혁명 역량인 ‘북조선혁명력량’과 ‘남조선혁명력량’으로 이 주체적 혁명 역량 중에서도 주도적인 것은 ‘북조선혁명력량’이라고 한다. 이 점에서 ‘3대혁명력량강화론’은 그 이전의 ‘민주기지로선’을 계승 발전시킨 것인데, “우선 조건이 유리한 북한에서 혁명과 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여 전국적 혁명의 견고한 근거지를 구축하고, 그 적극적 지원에 의지하여 조건이 불리한 남한에서 혁명운동을 발전시켜 남북혁명력량의 전략적 배합에 의해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성취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한”¹⁶⁾ 것이다. 그러나 ‘3대혁명력량강화론’에서는 “북조선인민들은 남조선인민들을 지원할 수 있지만 그들의 투쟁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혁명’의 ‘상대적 독자성’이 인정된다. 반면 북한의 혁명 역량은 남한의 독자적인 혁명 과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다. ‘3대혁명력량강화론’이 그 이전의 ‘민주기지로선’과 구분되는 점은 바로 이 점이다.

그런데 1960년 8월 북한이 ‘과도적대책’으로서 ‘남북련방제안’을 제출하면서부터 1964년 ‘3대혁명력량강화론’이 제기되기까지의 시기는 북한의 통일 노선인 ‘북한의 혁명력량에 의한 남조선해방로선’이 ‘남조선혁명에 립각한 통일로선’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1960년에 북한은 ‘과도적남북련방제’를 제안함으로써 북한의 ‘북한혁명력량에 의한 남한해방로선’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남조선혁명에 립각한 통일로선’을 제출하는 첫 출발점을 이룬다. 왜냐하면 연방제안은 연방제를 만드는 두 개의 주체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남한의 특정세력이나 남한 정부가 연방제의 다른 한편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남한 내부에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남북조선의 련방제’ 창설안은 그 이후 ‘남조선혁명론’이 구체화되는 첫 계기가 된다. 그리고 1961년 9월 제 4차 당 대회에서는 ‘4·19 인민봉기’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남한에 ‘혁명적당’이 없는 데 기인한다고 진단하고 “남조선인민들은 광범한 군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로동자·농민의 독자적인 당을 가져야 하며 그 합법적 지위를 쟁취하여야 한다.”¹⁷⁾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970년 11월 제 5차 당 대회는 1969년 8월에 창당된 것으로 알려진

‘통일혁명당’을 남조선 혁명의 지도적 역량으로 인정했다.¹⁸⁾

북한이 ‘남조선혁명론’을 채택한 이후부터 북한의 통일 전략은 ‘선남조선혁명, 후통일’로 정식화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김일성은 1965년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함’ 사회 과학원에서 행한 연설 속에서 “남조선에서 미제가 쫓겨나고 혁명이 승리하기만 하면 우리 조국의 통일은 물론 평화적으로 실현될것이다. 우리 당의 임무는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빨리 장성시키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돕는것이다.”¹⁹⁾라고 지적한다. 또한 김일성은 196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돛기 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속에서 “미제가 쫓겨나고 남조선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하여 인민들이 자기 손에 정권을 쥐게 되면 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민주주의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위업은 성취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조국의 평화적통일에 관한 우리의 주장은 결코 미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을 배제하는것이 아니며 이것은 민족의 원수들과의 그 어떤 《타협》이나 사회제도의 이른바 《평화적이행》에 관한 《리론》과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다.”²⁰⁾고 못박는다.

그리고 1970년 제5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남조선혁명’과 조국 통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그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현군사파 쏘독제를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 참다운 인민의 정권이 서면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민주력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은 순조롭게 실현될것입니다.²¹⁾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북한은 남한에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이를 통해 노동 계급의 영도와 노농 동맹에 기초한 통일 전선체인 ‘인민민주주의정권’ 내지 ‘인민의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평화적 통일의 전제 조건으로 보았다. 이러한 입장을 북한은 대체로 1970년대 말까지 견지한다.²²⁾ 그런데 북한은 남한 인민이 주체가 되는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서의 ‘남조선혁명’을 제기하면서부터 완전 통일을 위

한 ‘과도적대책’으로서 처음에는 ‘남북연방제’, 나중에는 ‘련방공화국’을 창설하는 안을 제출하기 시작한다. 당시 북한이 통일 방안으로 제시한 이 ‘과도적연방제안’이 구체화되어 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60년 8·15 해방 15주년 경축 대회에서 김일성은, 첫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둘째, 남한이 남북 총선거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선 민족적으로 긴급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한 ‘과도적대책’으로서 ‘남북조선의 연방제’를 실시할 것, 셋째, 만일 남한 당국이 이와 같은 연방제까지도 수락할 수 없다면 남북한의 실업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순전한 ‘경제위원회’라도 조직하여 서로 협조할 것, 넷째, 주한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키고 남북한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군대를 축소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연방제를 추진하는 방식으로서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재 정치체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활동을 보존한다.”는 것과 이 원칙하에서 “두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전민족의 이익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 제시된다.²³⁾ 북한이 당시 이러한 과도적 연방제 방안을 제시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북한 경제 우위에 대한 자신감과 ‘4월 혁명’ 이후의 정세에 고무되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김일성의 이 제안은 북한이 최초로 연방제안을 제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 과도적 연방제 방안은 1960년 11월에 개최된 최고 인민 회의에서 행한 최용건의 보고 속에서도 재확인된다.²⁴⁾ 그런데 이 시기에 제출된 과도적 연방제 방안은 연방제를 추진하는 주체로서 남북 정부의 대표들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② 197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은 과도적 대책으로서의 연방제 방안을 다시 제안한다. 1970년 4월 12일 허담은 ‘평화통일 8개조항’을 발표하면서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인 중앙 정부를 세우는 전제로서 주한 미군 철수, 남북 군대의 감축, 남한의 예측적인 조약들과 협정의 파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완전한 통일에 앞서 필요하다면 현재와 같은 남북의 상이한 사회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 조선 연방제

를 실시할 것과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정당, 사회 단체들과 전체 인민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써 ‘남북조선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 것 등을 제안한다. 동시에 허담은 “박정권의 타도는 타협할수 없는 문제”²⁵⁾임을 선언한다. 그러나 1972년 7월 4일에 남북한은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으로서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에 합의한다. 이러한 사태를 배경으로 김일성은 1972년 9월 17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북한 정부와 남한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를 소집해 과도적 조치로서의 남북 연방제를 창설하자는 안을 제안한다.²⁶⁾ 그러나 남한에 유신 체제가 들어서고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정권이 ‘6·23선언’을 통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안을 제의하자 북한은 이를 ‘두개의 조선’을 영구화시키려는 ‘미제’와 ‘박정희파쇼도당’의 음모라고 격렬하게 비난한다. 같은 날 김일성은 체코슬로바키아 당 및 정부 대표 단장 ‘후사크’ 환영 평양시 군중 대회에서 ‘평화통일 5대강령’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⁷⁾

—조국통일의 전제조건으로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의 체결》이라는 그 이전의 제안을 재확인한다.

—남과 북사이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것.

—남북한 당국자들간의 논의 대신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기에 앞서 《대민족회의》에 기초한 《고려련방공화국》을 창설하고 남과 북사이의 연계와 합작을 전면적으로 실시할것.

—《두개의 조선》으로 갈라지는것을 막기 위해 유엔가입을 시도할 때에도 《고려련방공화국》의 국가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들어갈것.

이 김일성의 ‘고려련방공화국’ 제안은 그 이전의 ‘남북조선의 연방제’와는 달리 하나의 국호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국호를 가지고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1980년에 제의되는 ‘통일국가의

완성된 형태'로서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안으로 넘어가는 과도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1970년대의 제안이 지니고 있는 주요한 특징은 '7·4 남북 공동 성명' 직후를 제외한다면 '과도적 연방제'——'남북조선의 연방제'와 '고려련방공화국'——창설을 추진하는 방식으로서 남북한 정부 당국자 간의 협의 대신에 남북한의 각 정당·사회 단체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남북정치협상회의' 내지 '대민족회의'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하여 우리는 북한이 '과도적연방제'의 창설을 제안한 것이 북한의 혁명 노선과 196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통일 전략이 된 '선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후통일로선'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북한이 1960년대 초 남북 정부 대표들의 협의에 의해 과도적인 '남북조선의 연방제'를 제안한 것은 무엇보다 '4월 혁명' 이후의 남한의 사태 발전에 고무되어 남한 정부를 일단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긴급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연방제 창설로 끌어들이고 후 북한 혁명 역량 주도하에 남한을 해방하거나 또는 남한 인민의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지원함으로써 조국의 완전 통일과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완성을 성취시키려는 '전술'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이 1970년대에 대체로 '남북련석회의' 방식의 남북한간의 협의에 의한 연방제 창설안을 낸 것은 연방제 창설의 전제 조건으로서 박 정권을 타도한 후 남북한의 제정당·사회 단체들의 협의를 거쳐 연방제를 창설하고 이 연방제하에서 남한 인민의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지원함으로써 조국의 완전 통일과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완성을 성취시키려는 '전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북한이 1973년에 '남북조선의 연방제' 대신에 '고려련방공화국'의 창설을 제안한 것은 남북한의 사회적 발전의 차이로 인해 연방제하에서도 조국의 완전 통일과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3) ‘민족자주정권수립’에 입각한 연방 국가 창설 노선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세계 여러나라들사이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엉키고 련강들사이의 군사적대결이 날로 격화되고 있는 때에……우리 민족이 또 다시 외세의 희생물로, 식민지노예로 되는” 것을 막고, 미국의 ‘두개의 조선’ 조작과 남한 당국자들의 분열주의 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7·4 남북 공동 성명’의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원칙과 정신에 기초해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 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설하자고 제안했다.²⁸⁾ 그리고 이 방안은 연방 통일 국가에서 남북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 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남북 지역 정부를 지도하며 연방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한다는 것, 연방 국가의 통일 정부로서 최고 민족 연방 회의와 그 상임 기구인 연방 상설 위원회는 정치 문제, 조국 방위 문제, 기타 대내외적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는 것, 지역 정부들은 연방 정부의 지도 아래 전민족의 근본 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 연방 공화국은 어떠한 정치 군사적 동맹이나 블럭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김일성의 보고는 연방 국가가 시정해야 할 시정 방침으로서 다음의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① 자주성 견지, 자주적정책의 실시
- ② 민주주의실시와 민족대단결 도모
- ③ 남북경제합작과 교류,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 보장
- ④ 과학, 문학, 교육분야의 교류와 통일적발전 촉진
- ⑤ 교통·체신의 련결과 자유로운 리용
- ⑥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과 전체인민들의 생활안전도모와 복리증진
- ⑦ 민족련합군의 조직과 외침으로부터의 민족보위

- ⑧ 해외동포들의 권익보호
- ⑨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의 통일적조 (남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 등의 폐기, 통일되기 전에 남한에 투자한 외국자본의 이권보장)
- ⑩ 세계 모든 국가와의 우호관계 증진과 평화에호적대외정책의 실시

이 ‘고려민주련방공화국’ 통일 방안은 그 이전과는 달리 ‘과도적련방제’가 아니라 ‘통일국가의 완성된 형태’로서의 연방 국가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통일 방안으로서는 중대한 변화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통일 방안은 그 이전까지의 ‘1국가 1체제 완전통일’ 방안을 최종적으로 폐기하고 ‘1국가 2지역 자치정부련방국가 창설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북한이 이러한 연방 국가 창설 방안을 제안한 데에는 그간의 남북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 분단이 영구화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1국가 1체제’ 통일 방안을 계속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광주 항쟁’ 등에서 드러났다시피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남한의 민주 역량이 성장하는 국면 속에서 이 역랑과의 합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연한 통일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이후 북한은 연방 국가를 창설하는 데 ‘고려’라는 명칭을 반드시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고 민족 회의와 연방 상설 위원회의 의장과 위원장을 남과 북이 윤번제로 한다는 등의 보완을 가했다고 한다.²⁹⁾ 그리고 1989년 3월 말 문익환 목사의 평양 방문에서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는 점진적 방식에 의한 연방 국가 창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통일 방안도 그것이 진지한 것이라면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방 국가 창설 방안은 지금도 유효한 북한의 통일 방안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북한이 연방 국가 창설 방안을 제기한 것과 더불어 북한의 통일 전략이 ‘선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후(완전)통일로선’으로부터 ‘선민족자주정권 후련방국가창설로선’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1980년 10월 김일성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설안을 제안할 당시 통일 문제는 결국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

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³⁰⁾라고 강조하면서, 연방 국가를 창설하는 전제 조건으로서, ① 남한의 민주화와 민주 정권——“광범한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정권”——의 수립 ② 긴장 완화와 전쟁 위협의 제거를 위한 주한 미군 철수, 휴전 협정의 평화 협정으로의 대체 ③ 미국의 ‘두개의 조선’ 정책의 저지와 내정 간섭의 종식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는 연방 국가 창설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더 이상 ‘남조선혁명’(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 미군 철수와 미국 개입 저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 그리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자주적인 민주 정권, 즉 민족 자주 정권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의 이 제안이 있는 이후 북한의 모든 성명들 역시 위의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통일을 직접적으로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연결시키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1985년 7월 ‘통일혁명당’의 명칭이 “시국의 변화와 통일혁명당의 자체발전의 요구를 반영기 위해” ‘민족민주전선’으로, 그리고 같은 해 8월 ‘통혁당목소리방송’의 명칭이 ‘구국의 소리방송’으로 변경된 것은³¹⁾ 매우 시사적이다. 이와 관련해 민족 민주 전선은, 남한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기 때문에 민족 해방 투쟁이 첫째가는 과제라고 밝히고, 반미 자주화 투쟁을 선행시키면서 동시에 반파쇼 민주화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 투쟁의 목표는 ‘자주적인 민주정권’의 수립에 있으며 이 정권은 “친미 군부독재를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통일전선에 기초한 민간민주정권”³²⁾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실은 1985년에 발간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리론>에서도 확인되는데, 이 책에서는 남한의 민주화를 위해 ‘식민지군사파쇼정권’을 타도하고 광범한 인민 대중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이며 자주적인 정권’ 혹은 ‘민족적이며 자주적인 정권’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³³⁾, 그리고 통일을 위해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³⁴⁾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1987년 11월 11일자 조국 전선 중앙위와 조평통 연합회는 대남 편지 속에서 “미제의 조종을 받는 군사파쇼통치를 종식시키고 자유와 통일을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정권”을 쟁취해야 하며, 나아가 남과

북 사이의 민족적 단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 민주정권을 세우는 기초우에서”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³⁵⁾ 나아가 1988년 9월 8일 김일성은 조선 창건 40돌 중앙 경축 보고 대회에서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반파쇼민주화와 조국통일을 반미자주화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민족해방의 올바른 궤도를 따라나가고 있다.”³⁶⁾고 평가하고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는 북한의 그 이전에는 ‘(반제)민족해방’, ‘(반봉건)인민민주주의혁명’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파악하는 입장을 선택했다면, 완전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안하면서부터는 민족 해방과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분리시켜 인민 민주주의적 성격을 지닌 정권이 아닐지라도 민족 해방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통일 전선에 기초한 민간 민주 정권, 다시 말해 인민 대중에 의해 뒷받침되는 민족 부르주아적 성격의 자주적 민주 정권이 수립되면 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통일 전략에서는 혁명적 당에 의해 지도되고 노농 연맹에 기반을 둔 인민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이 통일 실현의 불가피한 전제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애국적민주인사’들과는 언제든지 통일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북한측의 발언은 그 이전에는 통일 실현의 문제와 관련해 ‘전술적’ 의미를 지녔던 것이지만, 완전 연방제 통일 방안을 제안하면서부터는 ‘전략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실제로 이러한 연관에서만 우리는 북한이 연방 국가 창설 방안을 제출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족 부르주아적 정권하에서의 남한의 사회 체제와 북한의 사회 체제를 바로 하나의 사회 체제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북한이 통일 실현의 전제 조건으로서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요구할 때의 통일 방안은 완전 통일을 목표로 하는 ‘과도적연방제안’이었다. 부연하자면 북한의 통일 전략의 전체적 변천 과정과 관련시켜 보면, ‘과도적연방제안’은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통일 전략에 기초한 통일 방안——완전 연방제 통일 방안——으로 나아가는 과도기 단계의 통일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이상의 논의로부터 북한이 그 이전에 채택한 ‘남조선혁명

론'을 포기했다고 결론내려서는 안 된다. 변한 것은 북한이 1980년대 이전에는 민족 해방과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면,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두 혁명 과정이 분리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선민족해방 후인민민주주의혁명'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혁명관으로의 이행은 남한을 미국의 완전 식민지로,, 그리고 지금까지의 남한 정권을 미국의 단순한 대리 정권으로 보는 북한의 일관된 남한 인식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부터 북한은 1945년 이후부터 일관되게 '미제주적론'을 주창해 왔으며, 또 이로부터 남한 사회의 기본 모순 중 '주되는 모순'을 '미제와 남조선인민들의 모순'으로 보고 이 '주되는 모순'이 풀리면 다른 모순들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1980년 이후부터 북한이 대변하는 '선민족해방 후인민민주주의혁명론'은 북한의 이러한 '미제주적론'과 '주되는 모순론'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통일과 혁명의 관계에 대해서 북한은 남한에서 민족 해방의 과제가 해결되면 '1국가 1체제'로의 통일은 불가능하지만, '1국가 2지역자치정부' 형태로의 통일은 가능하다고 보며, 일단 남북이 연방 국가 형태로 통일된 후 북한의 지원과 지도하에 남한에서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북한이 의미하는 바의 연방 통일 국가는 '1국가 2체제'가 아니라 '1국가 2지역자치정부'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 목표로 하는 것은 남한에서의 계속 혁명을 통해 '1국가 2체제 2지역자치정부'를 '1국가 1체제 2지역자치정부'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통일과 혁명의 총로선으로서 '혁명기지로선' 내지 '민주기지로선'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과 남한에서의 계속 혁명을 전체적으로 추동해 나가는 주된 힘으로서 북한의 혁명 역량이 상징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4. 연방 국가 창설을 위한 북한의 전술과 그 특징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의 통일 전략이 '북한의 혁명력량에 의한 남한해

방로선'으로부터 '선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후완전통일로선'을 거쳐 1980년 이후에는 '선민족자주정권, 후련방국가창설로선'으로 변경되어 왔음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의 통일 방안이 통일 전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북한이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연방 국가를 창설하기 위해 어떠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그것이 지닌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무엇보다 북한은 남한이 미국의 완전 식민지로서 미국에 의해 군사적으로 강점되어 있고 군사 문제의 해결 없이 평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자주적 평화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미국과 남한 정부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군사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은 1983년 이후부터는 주한 미군 철수를 비롯한 남북 군대의 군축, 그리고 핵무기의 철거 등 군사 문제의 해결에 관계되는 제안을 다른 모든 제안에 우선하여 집중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레이건 행정부 출범 이후의 한·미간의 군사 협력의 강화와 남한의 군 현대화 계획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나아가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북한의 인식이 또한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군사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북한의 제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³⁷⁾

- ① 주한미군철수문제를 협의하는 남북의 제정당·사회단체 련석회의 소집제의 (1983. 1. 19)
- ② 《조·미평화협정체결》과 《남북불가침선언》을 위한 남북한·미국간의 3자회담제의(1984. 1. 11)
- ③ 불가침선언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는 남북국회회담 제의(1985. 4. 9)
- ④ 남북한 군사대치상황에서의 긴박한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한·미국의 3자군사당국자회의 제의(1986. 6. 9)
- ⑤ 비핵평화지대창설협상 제의(1986. 6. 23)
- ⑥ 남북무력의 각각 10만명 이하로의 단계적감축, 미군의 《단계적》철수, 핵무기철수, 중립국 감시군의 주둔 등의 문제를 토의하는 다국적군축협상 제의 (1987. 7. 23)

- ⑦ 남북불가침선언의 합의를 위한 남북국회연석회의 제의(1988. 7. 21)
- ⑧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할 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1988. 11. 16)
- ⑨ 미군철수, 남북무력의 감축, 남북간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를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제의(1988.11.)

이상의 제의들 속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입장은 군사 문제의 해결을 남북간의 다른 모든 현안 문제보다 중요시한다는 점, 미국과는 평화 협정을 맺어야 하며 남북한은 불가침 선언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 남북 무력의 감축은 주한 미군의 철수와 반드시 결부되어야 한다는 것, 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방식으로서 남북한·미국간의 3자 회담을 중요시한다는 점 등이다. 그리고 1988년 11월에 제의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은 그 이전까지의 군사 문제 해결 방안들을 포괄적으로 집약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³⁸⁾

- ① 평화보장 4원칙... 통일지향, 외군철수, 남북군축, 당사자협상
- ② 주한미군의 단계적철수... 핵무기의 우선적철수(1990년 말까지 2단계 철수), 미군병력 1991년말까지 3단계철수, 철수와 더불어 새로운 무력투입과 군사장비제공 불허, 철수무기의 남한당국 이양불허
- ③ 북남무력의 단계적감축... 병력 1991년말까지 3단계 감축, 병력감축과 함께 군사장비 단계적감축, 핵무기·화학무기 등 특수무기는 1단계에서 완전폐기, 감축과 더불어 외부로부터의 군사장비의 반입금지, 무력감축과 더불어 6개월 내에 민간군사조직의 해체
- ④ 미군철수·남북무력감축에 대한 통보와 검증... 미군철수는 북측에 통보, 남북무력감축은 상호통지 및 공개, 중립국 감독위원회에 의한 검증
- ⑤ 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남북무력 감축을 위한 남북한·미국의 3자회담
- ⑥ 남북간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정치적·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를 위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개최.

둘째, 북한은 현재의 남한 정부를 무엇보다도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통일을 위한 다른 한편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이 남한 정부가 요구하는 ‘남북정상회담’ 등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최근에 북한은 주한 미군 철수를 포함한 군사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 제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그러한 회담이 현재의 남한 당국을 사실상 인정하고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남한 당국과의 교섭은 북한에 대해 통일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통일의 ‘여건’을 마련하거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를 가질 따름이다.

셋째, 이와 관련해 북한은 남한 정부와의 공식적 접촉이나 국회 회담보다는 남북한의 제정당·사회 단체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 연석 회의 방식의 회의를 통일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회담 방식으로 생각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그간 여러 형태의 남북 연석 회의를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1989년 1월 김일성은 남한의 4당 총재와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백기완 소장 등과의 정치 협상 회의의 소집을 제의했다. 북한은 이러한 회의에 남한 정부와 여당 대표자의 참석을 상황에 따라 제외시키거나 또는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참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남한에 대한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징적이다.

넷째, 남한이 북방 정책과 유엔 가입 노력을 본격화하자, 북한은 이를 ‘두개의 한국’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아 영구화시키려는 미국과 남한 당국의 음모로 간주한다. 이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북한은 남북 연석 회의 소집 제의나 남한 민간인들의 북한 초청 등을 통해 남한의 민간인과 민간 단체들과의 ‘공동선채택’에 더 한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남한 정권에 대항하는 남한 민간인들과의 ‘직접적인 동맹추구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남한 정부에 의해서는 그것이 ‘체제전복’과 ‘내부교란’을 위한 책동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태 전개는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 등을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5.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의 통일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통일관, 북한의 통일 전략과 통일 방안, 연방제 통일을 실현시키려는 북한의 통일 전술 등을 살펴보았다. 이로부터 우리는 1980년대의 북한의 통일 정책이 지닌 특징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북한은 통일과 혁명의 총노선으로서 혁명 기지 노선 내지 혁명적 민주 기지 노선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완전 식민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남한 사회를 국가적 실체를 지닌 사회로 보지 않는다.

—이로부터 북한은 통일과 관련하여 ‘미제주적론’을 채택하고 있으며 의세로부터의 ‘민족해방’의 계기를 가장 중요시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남한 민중에게 반미 자주화 투쟁을 우선 과제로 하면서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와 남한에서 민중의 지지를 받는 민족 부르주아적 성격의 자주적 민주 정권(민족 자주 정권)이 수립되는 것을 연방 통일 국가 수립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민간인 세력들과의 직접적인 동맹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군사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끝으로 북한의 통일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북한이 남한 사회를 국가적 실체를 지닌 사회로 보고 있지 않는 점, 혁명 기지 노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점, 그리고 남한의 민간인 세력과의 직접적인 동맹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이 문제가 된다. 무엇보다 북한은——남한이 북한 당국을 단순한 ‘반국가단체’로 보아서 안 되는 것처럼——싫든 좋든 오늘날 한반도에 ‘두개의 국가’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하나

의 국가'가 되는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은 '국가'를 대표하는 남한 정부와의 교섭을 진지하게 시도함으로써 무엇보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 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외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 남한이 북한 체제 와해의 기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 지금까지 고수해 온 혁명 기지 노선을 명백히 포기해야 한다. 북한의 혁명 기지 노선은 남한 사회 내부의 민주화 과정에 역작용을 미칠 따름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남한 민간인 세력과의 직접적인 동맹 노선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한 시도는 남북 관계의 개선을 방해하고 남북간의 대결을 첨예화시킨다. 남한과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만이 남북민간의 폭넓은 교류와 상호 이해의 증진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함으로써 통일을 전민족적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각 주

- 1) 일본 <마이니치 신문>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김일성의 답변. 이한 위음, <북한의 통일 정책 변천사>(下), 서울, 온누리, 1988, p. 375.
- 2) <원자료로 본 북한>, <신동아> 1989년 1월호 별책 부록, p. 341.
- 3) 이에 대해서는 북한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서울, 1988, pp. 1235~1236)을 참조할 것.
- 4) 김남식, "북한의 통일 전략과 통일 방안", <사회와 사상> 창간호, 1988. 9, p. 110.
- 5) 이에 대해서는 "조선혁명의 '두가지전도' — 평화적방법을 통한 통일과 비평화적방법을 통한 통일"과 '평화적방법에 의한 통일우선'에 관해 언급한 1955년의 김일성 연설을 참조하라. (백두산연구소 위음, "사상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주체 사상의 형성 과정>, 서울, 1988, pp. 52~54.
- 6)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6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이한 위음, <북한의 통일 정책 변천사>(上), 서울, 온누리, 1988, p. 675.
- 7)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원자료로 본 북한> <신동아> 1989년 1월호 별책부록.
- 8) 김남식, "북한의 통일 전략과 통일 방안", <사회와 사상> 창간호, 1988. 9. p. 110에서 재인용.
- 9) 정대화, "북한의 통일 정책사 — 연방제 통일 방안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제 3호, 1988, p. 298.
- 10) 김일성, "인도네시아「알리·아르함」사회과학원에서 한 연설", 이한 위음, <북한의 통일 정책 변천사>(上), p. 263.

- 11) 김남식, 앞의 글, p.111 참조.
- 12) 김남식, 앞의 글, p.112 참조.
- 13)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북한의 ‘남조선혁명론’과 ‘조국통일론’에 관한 연구”, p.47 이하 참조.
- 14) 위의 글, p.57 이하 참조.
- 15) 이한 위음, 앞의 책, p.267. 그리고 pp.245~256을 아울러 참조할 것.
- 16) 태백 편집부 위음, 〈북한의 사상〉, 서울, 태백, 1988, p.278.
- 17) 김남식, 앞의 글, p.112에서 재인용.
- 18) 위의 글, p.112.
- 19) 이한 위음, 앞의 책, p.266.
- 20) 이한 위음, 앞의 책, p.317 이하.
- 21) 이한 위음, 앞의 책, p.343.
- 2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학생회, 앞의 책, p.46 이하 참조.
- 23) 이한 위음, 앞의 책, pp.109~115 참조.
- 24) 위의 책, p.139 이하 참조.
- 25) 정대화, 앞의 글, p.309 참조.
- 26) 이한 위음, 〈북한의 통일 정책 변천사〉(下), 서울, 온누리, 1988, p.377 이하 참조.
- 27) 위의 책, pp.400~408.
- 28) 위의 책, pp.615~627 참조.
- 29) 김남식, 앞의 글, p.118 참조.
- 30) 이한 위음, 앞의 책, p.620.
- 31) 김남식, 앞의 글, p.112 이하.
- 32) 김남식, 앞의 글, p.112 이하 참조.
- 33)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학생회, 앞의 글, p.51에서 재인용.
- 34) 위의 글, p.61에서 재인용.
- 35) “중앙위·조평통”, 〈사회와 사상〉 1989년 1월호, p.349 이하.
- 36) “1988년 9월 8일 조선창건 40돐 중앙경축보고대회에서의 김일성 연설문”, 위의 책, p.361.
- 37) 이에 대해서는 〈사회와 사상〉, 1989년 1월호에 실린 “특별 기획 자료”를 참조할 것. pp.299~370.
- 38) 위의 책, p.298, pp.368~370 참조.